제428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25년8월23일(토) 오전 9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8월23일 개의하여 8월25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상정된 안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 2
- 무제한토론 의원(김형동) ····· 3
- 무제한토론 의원(김주영) ····· 67
- 무제한토론 의원(우재준) ····· 111
- 무제한토론 의원(신장식) ····· 159
- 무제한토론 의원(김위상) ····· 191
- 무제한토론 의원(박해철) ····· 218
- 무제한토론 의원(김소희) ····· 269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 29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 292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293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 294
- 무제한토론 의원(오기형) ····· 326
- 무제한토론 의원(조배숙) ····· 357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 403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 450
- 무제한토론 의원(김현정) ····· 512
- 무제한토론 의원(주진우) ····· 540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 609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610

(09시03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주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형동)

(09시09분)

○의장 우원식 먼저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져오셨네요.

○김형동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입니다.

주말 아침인데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시작하겠습니다.

PT 먼저 올려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게 꼭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노동법은 항상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노조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노동법이 형법하고 거의 같이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법률인데 언제나 노사가 합의를 하고 거기에 정부가 중재를 하고 국회가 입법을 해 온 그런 헌법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또한 절차적으로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김형동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9시 10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토론하시지요.

○김형동 의원 얘기하기도 전에 그래 버리면, 김을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장 우원식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김형동 의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PT를 올려 주실래요? PT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저께지요. 3일 됐습니다만 또 안타까운 중대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청도까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무궁화 열차에 안타까운 청년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지금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만으로 서른 살, 서른일곱 살이었는데 한 분은 아직 결혼을 못 했고 한 분은 조문을 가 보니까 아직 아빠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엄마하고 놀고 있던데요.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사고의 크기와 중대함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고의 진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조 모모 고인이었는데요 아버님께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텔레비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랬을 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제 서른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고로 갈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국가의 존재 이유라고도 합니다—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정치적 발언 그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여기도 코레일의 외청이더라고요. 도급을 준 원청-하청 관계인데, 하청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국가기관부터 그걸 다 해 왔는지……

저는 노동부장관께서 코레일 출신이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장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노동권, 그다음에 회사 운영, 그 난맥상이 코레일만큼 큰 데가 있나. 코레일만 잘 정리하고 그 코레일 안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평화로운 교섭 그리고 일한 만큼 받아 가고 차별받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장관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3대 목표가 일한 만큼 받아 가고 차별받지 않고 일터에 가서 살아서 돌아오고, 이게 김영훈 장관의 3대 지표인데 코레일 안에서만 그게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에 진짜 노동환경, 노동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흔히 말하는 배달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운전하다가 자빠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또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도 계속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왜 이 말씀을 또 꺼내냐 하면 노조법 2조·3조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더 많이 부여하자는 취지고 교섭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 김영훈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의 페이(pay), 인컴(income)이 많아지기 위해서 교섭권을 갖는 거고 요즘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사업장에서의 안정, 안전, 생명 이 부분을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 그리고 같은 일을 했는데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것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확대시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2조·3조, 제도가 허술해서 이렇게 사업장에서의 중대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 차별이 많이 생겼느냐 좀 따져 볼 그런 계제입니다.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가의 보도인가, 또 노동제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 특히 최근에 노동위원회 사건 건수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갑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그 갑질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곳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회. 저도 자성하고 반성하고, 우리 방에서 웃는 낯으로 그냥 '우리 방에도 그런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라고 했는데 저조차도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인데, 과연 2·3조가 개정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도와 한계를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권이 없는 것인 양…… 노동권은 축적의 역사고 75년 동안 쌓여 왔고 이 법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인데 가장 시급한 것,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생명, 배달라이더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 직접적인 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2·3조가 지금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의문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데 정도와 한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계제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조에 대해서 다 읽어 보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기 전문가 이용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와 한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조부터 하고 2조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사실 이것은 사용자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고 해당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사용자를 찾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이 더 손쉬운 문제겠지요. 사용자 찾다가 볼 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흔히 말해서 장식적인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 계시지만 법을 만들어서 입법해 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할 도리는 다했다. 손 털고 나가자'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그네들에

게, n차 하도급이라고 그러지요, 하청 노동조합에게 무한한 숙제를 던져 주고 우리는 입법적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지수가 잘못 됐다.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진작, 이제는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사용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청 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나한테 교섭을 요구한다 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겠지요. 노동위원회 가겠지요. 법원 가겠지요. 조합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더 주는 것이 훨씬 유효한 방법이고. 저 뒤에 우리 박홍배 위원장님 계시지만 금융노조, 의료산업노조, 보건노조 이런 데서는 그렇게 교섭권을 내가 계약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교섭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풀지 않고 마치 공무원 같으면 나의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데 나는 대통령을 내 사용자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번져 간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같으면 하청업체가 한 3000개 된다면서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으면 수백여 개의 아마 3·4차 벤더까지 내려갑니다. 4차 벤더에 있는 조합원이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해야 되느냐,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에서 이 법이 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최근에……

한 장 더 넘겨 봐 주실래요. PT 넘겨 봐 주세요.

이게 국회 앞에 가면 지금 '대미 조공 바치러 간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 심각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무식해서 그런데 사인하고…… 지금 있는 것만 따져도 현재 환율이 1400원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 얼마 기간 동안에 갖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마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약정을 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밖에 외환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방송법, 상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가 최고의 선진국,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렇게 외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하고 정상외교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줘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 주말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현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주말에.)

김현 의원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좀 들어 주세요. 숫자가 잘못됐으면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잘 안 들려요, 여기 있으면.

또 하나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나는 기업인들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대리 스피커를 통해서는 상법 개정안이든 노동법 개정안이든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 비행기 타고 미국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만의 기업이 아니고 국내 노동시장이나 경제환경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가자고 하니까 미국 가겠다고 손 들고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게 투자네, 역대급 성과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태선 의원 계시지만 한화는 지금 필리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HD현대중공업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예가 많았잖아요. 한진중공업 탑에도 김진숙 고문이었나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결국 필리핀 갔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만은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지연 의원, 경북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2차·3차 벤더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국내의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오히려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청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한다. 다시 말해서 원청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 문을,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아예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지요. 그 핑곗거리를 굳이 왜 만들어 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못살게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특히 대기업들에게 해외로 도망갈 명분을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다음 PT 한번 넘겨 주시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노동법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고도화된 것도 있지만 국회의 역할이 잘못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법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법이라고 그럴까요, 추이는 상대적으로 이 조합원 수 보면 아시겠지만 13%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2500만 내지 2700만 되는데, 거기에 물론 내가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통닭집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입니까, 노동자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또한 답이 애매할 수 있는

데 2500만 중에 한 270만 정도가 노동조합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노조법 2·3조는 좀 협소하게 얘기하면 230만 내지 250만의 노동조합 구성돼 있는 분들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수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을 여하히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노조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전에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대부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이른바 노동시간과 임금의 역사인데 이미 좀 실패한 정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마는 총 노동시간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간, 주간 정도로 카운팅을 하는데 연간, 반기, 분기 이런 식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얼마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1700, 독일이면 뭐 1500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윤석열 정권 때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켰고 제도화 못 했는데요. 오히려 전체 노동자들에게, 27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더 연구하고 입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노동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더 보태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노동법 제도 안에서도 임금과 시간 이 부분을 더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치상으로, 실제 법은 일반적 효를 미쳐야 되는데 특정 노동조합, 저도 한국노총에 있었습니다마는 2700만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나누어서 일반적 효를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의 우선순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제도를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특히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또 하나 노동시간도 내가 연간 노동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최소한 분기, 반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같이 선진국에서 그런 제도가 안 갖추어진 것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페이지 더 봐 주실래요.

저게 13% 올라간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뭐 100만이라고도 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상당한 분들이 이미 노조를 조직해 있고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조직률은 거의 정체돼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내외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좀 옮겨 봐 주실래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노동이 불안하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노동위원회 사건 수가, 그다음에 사건 처리하는 케이스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노동쟁의 조정이 한 1000여 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히 저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당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일 많고요. 부당노동행위도, 우리가 지금 2조·3조를 개정하려 하는 게 이 부당노동행위 문제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의 주체가 된다라는 게 최근의 하급심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요. 이 또한 81조 4호에 대한 판단이었지 노조법 2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조 2호 내지 5호를 개정하겠다라는 취지로까지 이어지지는 논리적으로 않는다. 이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778건이지요. 기타 그다음에 복수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조법과 관련돼서 흔히 말해서 노사 간의 쟁의 문제나 갈등 때문에 노동위원회, 중노위에 오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노사갈등 문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두 달 됐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6억으로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정부 정책에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값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또한 정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이건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2조가 그다음에 3조가 개정이 안 돼서 노동사건의 분쟁이 해결이 더디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해산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는 거의…… 제도의 완결성을 묻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제도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규모나 기능을 키우면 이 또한 더 원활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통계 숫자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노동위원회에 흔히 말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사용자가 엄청 많아서 부노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들이 감옥에 가 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아마 진작에 이 법을 개정했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표로.

그다음 하나 또 넘겨 봐 주실래요.

많은 정부, 특히 우리 정부 때 격차 해소, 지방소멸 방지, 노동약자 보호에 상당히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누구는 법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한쪽 면만 본 것 같고요. 법이라는 것은 잣대가 명확하면 강자보다는 약자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맞고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이중구조가 심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큰 이 상황에서 법의 잣대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설득을 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좌초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그다음에 법의 목표는 언제나 약자 보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n차 하청의 노동자들이 그 보호를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도를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21대 때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 만들어지면 임차인들의 천국이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서 힘 있는 자들은 누구였냐 하면 임대인이었고 집주인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집주인을 제가 매도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누구한테 전가됐냐 하면 임차인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그 뒤의 집행 과정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마는 결국에는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졌고 많은 편법 내지 탈법을 시도했었지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n차 하도급 노동조합이 사용자 찾는 것도 어렵지만 정작 찾더라도 교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원청의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 아마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희망고문이지요. 나는 이런 것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돌아온 게 없다라는 비난과 비판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넘겨 봐 주실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정부 아파트값인데 최근에, 아마 이게 서울일 겁니다. 평균 10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분양가도 비슷한데 서울의 집값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아파트값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입니까? 아파트값이 만약에 지금 평당 1000만 원 밑이다. 서초동의 좋은 아파트 새로 생긴 것 뭐지요? 나 거기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가 뭐지요, 이기헌 의원님?

(○이기헌 의원 의석에서 — 나도 안 살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산보다는 많이 비싸요, 일산보다 많이 비싼데.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게 기본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식주의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주변 환경의 의식주가 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어느 특정 정부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 1000만 원, 닥터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 직장이지만 월급 부부가 받아 가도 강남에 집을 못 사요. 이른바 가치의 역전이지요. 물욕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베일리, 서초동에 있는 것. 아마 자기들 내부로는 한 3억 정도 친대요,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이. 그렇게 집값을 올려 놓고 급여를 더 받아 가라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내부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노동계가 아니면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에게 요만한 권리를 준다고 이렇게 법전에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값은 강남에 한 평에 1억 5000, 2억, 3억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연코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마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가장 살기 어려워졌다. 그때 비빔밥 값이 5000원 올랐고 떡국 값이 1만 3000원 됐다. 이것 역설적이고도 굉장히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만 도와줄 게 아니고 정말 노동자들의 주거환경만 다운시켜 줘도 그렇게 급여 투쟁이 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전세계약 2년, 3년 해 놨는데 3년 만에 나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어려워 가지고 계약 연장하려면 변호사 써야 되고 안 쓰려고 하면 올려 줘야 되고 급여 받은 것은 다 은행이나 집주인한테 반납하는 그런 생활환경에 지금 놔둬 놓고 노조법 2·3조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선전은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많아 가지고 적어 봤습니다.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아마 분양가격인데 3000만 원 적어 놨는데 시가는 아까 원베일리 같은 데는 이삼억 가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실래요.

저는 모든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들의 삶을 얼마나 더 낫게 해 주느냐라는 것이 제도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아까 격차 해소 이런 부분도 했지만요. 노동제도 안에서만 본다면 노조법 2·3조는 싸우는 칼, 무기를 하나 더 장착시켜 주는 거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빨리 성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여야 공히, 저도 21대 때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약간의 내용상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기준도 올려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평을 갖춰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무조건 배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 현장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이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선하고 4선 의원님들 계시는데 급여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똑같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원칙이 말로만 하고 잘 실천되지 않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현재 우리나라가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 형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임금체계의 변화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아까 김영훈 장관의 어떤 3대 철학, 그건 제가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에 가서 죽지 않고 임금 제대로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차별받지 않고,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까지 들어가는데 이 차별의 핵심이 임금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다른 임금을 주느냐 이것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n차 하청, 하도급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마진을 남겨 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하청을 줘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가—도급비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직접 고용하든 간접 고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 하면 그렇게 n차 도급 안 내려가지요. 원래

는 n차 도급이나 파견이나 하청이나 도급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전문 능력, 인력을 쓰기 위한 것이지 돈 중간에 따먹으려고 하청 주는 거 아닙니다. 제도가 이게 바뀌었는데 거기의 시작이 저는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걷어 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64세인가요,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아마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채용…… 지금 그러더라고요, 생체학적 리듬이 옛날 나이에 곱하기 0.7 하면 현행 나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고향에 가도 70대 80대, 60대는 청년이고요. 정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노동 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고용하는 데 왜 벽이나 한계에 부딪히냐 하면 적어도 최고점 임금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 수준의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낮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이 커브가…… 뭐라 합니까? S자 커브가 아니고 이렇게, 이게 로그라 합니까? 로그함수처럼 커브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숙련도가 형성되면 비슷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면 아마 고령자에 대한 차별도 줄어들 거고요. 사회에서…… 고령자가 아니지요, 한 80 넘어야 고령자 아닙니까? 60·70대의 흔히 말하는 왕성한 노동력도 우리 사회가 흡수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한 면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거고 고용시장, 노동시장에서 보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어떤 기저, 제도적 시스템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성범 의원님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성범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한참 내가 이제 급여가 올라갈 그런 과거 호봉제로 따지면 50대 가까이 된 분들이 동의를 안 하지요. 우리 사회의 주력입니다. 특히 기성 노동조합의 주력입니다.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월급을 더 받아 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바꾸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아마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일가치 동일노동, 직무급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게 한 번 시도가 됐던 게 박근혜정부 때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때도 사회적 합의까지 해 놓고 다들 아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좌초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참, 장관님 나오셨나?

이번 정부에서 이 부분을 힘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일을 하고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임금 체불이고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듣는 분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 어떡하지요?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밖에서 듣고 있습니까? 강의는 아니지만 제 멘트의 목표는 제가 끝날 때 시작했던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민수 의원님, 어디 가지 마시고 거기 계셔 주십시오.

동일, 제가 동일 동일 이게…… 이것은 2021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것 21

년 때 것이고요.

뒤에 하나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이후 동일하게 균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저는 꽤 희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제도적 완비를 그리고 임금체계를 그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안에서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우선순위에 밀려서 흔히 말하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를 왜 우선적으로 하느냐?

넘겨 봐 주실래요.

요즘 시중에서 많이 유행하는 건데 청구서지요, 청구서. 정작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 저는 한국노총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양대 노총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요. 평등 세상에 대한 구현을 많이 얘기하고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이미 양대 노총이 부르짖어 왔습니다.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야말로 노사정이 생각만 하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동 기조가 아닌가, 사회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콕 집어서 2·3조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가히 양대 노총이 진정으로 n차 하도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약간 말씀을 더 드려 볼까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500 월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200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그러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눠 줘도 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3조 개정을 통해서 '네가 교섭을 해서 따 가지고 가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행 노조법 안에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업장 내에 다수가 점하는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장 전체에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 사업장 안에 거기가……

김태선 의원 가 버렸네요.

3000개 정도의 하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같이 두드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넘어가는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었지요? 맺은 그 단협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 안에 다 미쳐야 돼요. 탈법이지요. 제가 위법이라는 말은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2·3조 줬으니까 할 대로 해라'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지지난해 국감입니까? 유최안 씨입니까? 유최안 씨지요. 작은 상자, 1입방미터 안에서 투쟁을 했던 유최안 씨가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 오셨고, 원청의 노동조합도 왔습니다. 유최안 씨가 최저임금을 받지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한화에 팔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필리로 가니 막 그러는데. 그때 아마 산업은행으로부터, 제가 숫자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받아 간 돈이 무려 13조인가 그렇습니다. 13조면 5만 원짜리로 뿌려 놓으면 이것 다 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국감에서 파악했지요. 그것 n차 하도급 아닙니까? 조선업이 하청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하청이 가장 많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받은 돈을 왜 유최안 씨가 저기에 들어갈 정도로 놔뒀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원청의 담합입니다. 노사가 다 닦아 먹어 버렸어요. 그 밑에는 안 줘요. 그리고 말하자면 최저 도급비만 내려 주는 거예요, 도급비를.

의장님!

○의장 우원식 예.

○김형동 의원 그때 확인했던 것 맞지요?

○의장 우원식 뭐?

○김형동 의원 대우조선해양,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의장 우원식 예, 제가 갔었지요.

○김형동 의원 의장님도 그때 우리 멤버셨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n차 하도급, 거기의 최상위의—흔히 말하는 민주노총 금속 소속인데요—원청 노동조합이 노사 간의 담합을 통해서 자기들 먹을 것, 그것도 자기들이 벌어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회사를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떼인 것이지요. 국민 세금 아닙니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 못 들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다 닦아 먹고 유최안 씨는 유최안 씨대로 1입방미터입니까, 그 케이지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양대 노총이 무슨 낯짝으로 2·3조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하청노동자들이…… 그것 턱도 아닌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저것 하면, 흔히 말하는 연대라고 하는데 자기 급여를 좀 줄이면 돼요. 그리고 정당하게, 단가연동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때 중기부 이영 장관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했었습니다. 한 80% 되든 70% 되든 그것 하회해서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입법을 하든지 그런 것이 우선이지 2·3조 줬다고 해 가지고 다 해결된다? 좀 과하게 말하면 그냥 광 파는 것이지 실제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가 누리는 그것을 조금 내려놔야 될 문제지,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돼서, 하청노동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서.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연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국회 앞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제가 장관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코레일 안에서,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이 강철입니까? 이름이 멋진데, 강철인데, 강철 위원장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정말, 좀 나쁜 말로 하면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 노조인데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섭권을 지금은 다수 노조가, 대표 노조가 갖지 않습니까? 자기 조직 안에,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몇 개인지 몰라요.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네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구 단일화하지 말고 그냥 개별 교섭하는 게 나아요. 그게 오히려 그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더 나아요. 지금은 대표 노조가 '내가 다 해 줄게'. 아마 이 법이 통과돼도 창구 단일화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태선 의원 없

으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3000개 조직이 있는데 3000개가 창구 단일화를 해야 돼요, HD 현대중공업.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표 노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정하든지 간에 HD 현재 있는 원청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것 챙기지 그 밑에 3000개 다 챙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럴 수는 있지요. 벤더를 1·2차, 3차까지 안 가고 1·2차만 쓰고 그 벤더 안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것은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지났네요. 물 한 모금 먹고 해야겠네.

거의 다 나가 버렸네요. 이기헌 선배님 역시 의리가 있으시네요.

○의장 우원식 내가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웃음소리)

○김형동 의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재작년에 한 것도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총기가 그래 가지고 국회의장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의장 우원식 내가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김형동 의원 혹시 또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실래요?

제가 이것은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만든 PT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 행태가, 규모가 상황이 어떤지 통계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아마 오랜만에 현대자동차가 파업한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6년, 7년.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동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거기에 한 칠팔백 개 하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조용했다는 것은 세계 시장이 좋았다는 것도 되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노사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노총 같으면, 박홍배 위원장님 계시지만 금융권이 파업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왔었는데 최근에 한 사오 년 동안에 파업했다는 소식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김영훈 장관 계시지만…… 가셔 버렸네.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코레일 노조 3년 주기설. 3년마다 파업해요. 그만큼 파업이 심했고. 김장겸 사장님 계신데, 방송국도 파업이 빈번했었습니다.

(「정치 파업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치 파업이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랬었는데요. 이게 보면 노동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 정부라고 써 놨는데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맘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국민소득도 3만 불 이상 올라갔고 여러모로 좋은 신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조법이 더 급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영훈 장관하고 비슷한 3대 지표 그다음에 노동법 안에서 짧게 얘기하면 노동시간과 임금, 특히 최저임금을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노사분규 일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노동선진국, 한 5만 불, 6만 불 받아 가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분규가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가, 분규보다 더 중요한 게 노동자들 간에 차이·차별, 임금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고.

많은 대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노동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노동법이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를 푸는 부분, 개별적 근로관계·노동관계를 푸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법전 자체도 그래요, 법전 자체도. 제도 자체도 그렇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는 이미 굉장히 성숙돼 있어서 툭 하면 약속대련 비슷하게 아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문제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담합을 통해서 훔쳐 먹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사관계가 매우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국가와 정부와 법률이 개입해서 물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칸막이를 열어 줘야 되고 n차 하도급을 제한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간에 노동가치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에만 맡겨 놔서 되지 않는 문제다. 이것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서 그거야말로 가이드를 잡아 줘야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보장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장했을 때 최고 힘센 최상위 포식자가 밑의 것을 다 가져가더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회가 개입해야 되지 거기에다 2개, 2·3조 더 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바뀔 것 같아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고기 던져 주면 맨 그것 다 받아먹어 가고, 우리가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 만들어 놨더니만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돈 없는 임차인이더라. 제도 설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노동시장이 정말 두 달 전에 아파트값 급등해서 6억으로 대출을 제한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 이것 필버를 하면서 주말을 반납하고 해야 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김준혁 의원이 계시지만 문화·역사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문화 그런 부분에 더 토론하고 역사교과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바깥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알아먹지 못하는 간판들,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병기를 하든지, 그게 저는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사업장 규모별로 파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면 회색지대에 있는 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인데요. 여기는 노동조합도 잘,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노동조합이 많이 구성돼 있으면 노사분규, 파업·쟁의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면 제일 적어요. 고도화돼 있고 안정화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더 할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노동조합에 갔어요. 굉장히 큰 노동조합에 갔는데, 요즘은 노동조합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조합원들 선발해서 해외에다가 연수시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 상대 또 아기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로 상담해 주는 게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그게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1대라고 본다 그러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상당수,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정돼 있고 급여 수준도 아시다시피 상당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3만 5000불이면 2인 가족만 해도 7만 불이고, 3인 가족이 대세라고 하면 10만 불이 넘잖아요.

1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김재섭 의원님? 10만 불이면 얼마예요?

너무하네, 진짜. 1억 한 4000 되잖아요. 그 가정당 1억 4000 그것 다 어디에 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부자가 됐는데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상당 부분 그 범주에, 한 가정의 수익이 부부 합산이 됐든 그 정도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세한 사업장의 파업이, 그러니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훨씬 많이 노사분규, 쟁의가 일어난다. 안 그래도 없고 숫자도 없고 힘도 없는데 거기서 없는 살림에 또 노사 간에 싸운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2·3조를 직접 주는 것보다…… 참, 2·3조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골간이 제도적으로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것 하청이 제일 많을 거예요.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급여를 주는 것, 휴게를 같이 주는 것, 그다음에 휴가를 같이 주는 것, 노동시간을 같게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면 이 사업장의 분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김형동 의원님 잠깐만요.

○김형동 의원 저도 좀 쉬려고요.

○의장 우원식 지금 방청석에 김대식 의원실 소개로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의 회원들과 그 자녀들이 같이 방청을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형동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 우원식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있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지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이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법안이 제출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무제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토론은 24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만 그렇게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토론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예천, 들어 봤어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외갓집이 거기입니까?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잘 들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십시오.

이게 아마 대한민국 수출금액 현황인데, 이게 684억 불인데 이만큼 들고, 1년 수출하는 돈을 들고 대통령이 미국 간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제 현황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예? 뭐라고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600억 불 아니고 6000억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그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건 적습니까, 그러면?

김영진 의원님이 조율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실력자 아닙니까? 죄짓는 일이에요, 죄짓는 일.

그다음 좀 넘겨 봐 주실래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각한 것 중에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원·하청 관계에 대한 부분, n차 도급의 최상위 원청이 담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 유지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안동시청 노조, 원주시청 노조, 경북소방 노조 이런 데서 민주노총 더 이상 못 하겠다 탈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빈번하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산별노조로 하면 탈퇴를……

원주시청을 들까요? 원주시청을 들면 원주시청지부는 조합원이 100명인데 그가 속해 있는 공무원노조라고 한다면 1만이다. 그러면 원주시청을 탈퇴시키려면 전체 1만 명의, 규약에 정해진, 보통은 3분의 2 해 놓지요.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원주시청 노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1만 명이 결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하지요.

행정해석이나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정명령은 탈퇴시켜 줘라라는 식으로 일종의 시정명령이지 법에 정한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결의권을 강화를 시켜 놓는 거지요. 그래야 노동조합 단결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외부 세력, 특히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깨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과해져 가지고, 결사의 자유지요. 내가 어떤 조직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돼서 원주시청 노조가 100명이 전부 다 민주노총 탈퇴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단결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지요. 우리 국회가 입법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새는 호적도 파는데 이것을,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 자유권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단결권 보장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삼권 보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씨가 1㎥ 케이지 안에 들어간 그 상황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13조나 끌어다 먹었으면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원주시청이든 안동시청이든 나는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도상 못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노조법이 어느 정도 고도화돼 있다. 잘 발달돼 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누리는 권한이 흔히 말하는 대주주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처럼 그 역할 책임을 다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지 계속 자기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밥값, 차비 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거기에 자꾸 더 보태 주면 보텀업(bottom up)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발상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좋은 예지요.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산별노조가 탈퇴 여부에 대한 결의권을 행사하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노예 계약입니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예가 지금 빈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런 데 우리 국회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노동조합의 절절한 성명인데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넘겨 주셨습니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실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할 일반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700만 노동자 중에 250만 내지 270만 노동조합원들이 적용받아야 할 게 노동조합법입니다. 일반법이라고 하면 노동시간하고 임금의 문제를 적용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시간, 현재 대한민국은 일간, 주간 40 플러스 12시간이지요. 주 40시간을 정해 놓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노동시간 전체는 프랑스나 독일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적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연간 단위로 반기, 분기로 관리가 돼야 전체 노동시간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중노동, 과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1시간, 오늘 30분 좀 더 쌓인 게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이 기록되고 하루에 30시간, 0.5시간 더 한 것이 열흘이 적립되면 5시간을 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반기, 분기, 연간 단위로 통계 통제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노동,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 오늘 1시간 좀 더 하고 가시지’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월이 돼서 월간이나 분기, 반기, 연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보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저분이 민주당의 최고의 실력자인데 저는 국민의힘이거든요. 여기 와 계시지요? 이렇게 의사가 합의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좋은 광경을 보셨어요.

그 앞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른바 유연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현행 있는 것이 탄근, 선택, 특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연근로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3개 제도는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탄력근로도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원 포인트로 노동시간 변경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8시간 내지 주간 40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할증임금을 줘야 됩니다, 할증임금. 그다음에 중간에 11시간 연속…… 휴게 휴식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일한 만큼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제도의, 유연 노동시간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세 가지 제도나 문재인 정권 때 보강이 된 탄력근로제와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전에 설계했던, 3년 더 됐네요. 4년 전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도입돼서, 다시 말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적 보강을 전제로 해서 유연근로제를 더 확대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비포·애프터를 한다 그러면 애프터가 훨씬 더 낫지요. 그런 차원에서, 장관도 나와 계시는데 유연근로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총 노동시간이 통제된다는 범위 내에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마구잡이로 확대하면 안 되고요. 연간 반기, 분기, 최소 분기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겠지요. 전제해서 유연근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킴벌리 아시지요,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주간 근로일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일입니다, 3.5일. 유한킴벌리 김천에도 공장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유한킴벌리가 3.5시간인데 주 40시간 내지 주 40시간에 플러스 12시간 하면 최대 52시간인데 2주간 평균을 하면 3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해요. 그러니까 4일 근무할 때는 당연히 52시간을 오버하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약간 오버하는 거지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3·4 이렇게, 3·4, 3·4, 한 주는 3일 일하고 한 주는 4일 일하고, 그래서 평균 하면 3.5일인데 이 노동 형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유연한 근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원하고 그게 건강권에 큰 문제도 없습니다, 무거운 것 들고 나르는 게 아니고 제지공장도 일종의 장치산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행대로, 그때 한 4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3일 일하고 4일 일하고, 3일 일하고 4일 일하고…… 바꿔 얘기하면 3일 쉬고 4일 쉬고, 3일 쉬고 4일 쉬고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제도가…… 정말 좋은 직장이라 자기들은 생각해요, 제조업에서는. 그런데 법이 그것을 재단해서 그걸 못 하게 한다 이거야. 사실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재단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의 하나가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SK텔레콤 툭툭 꽂아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프로젝트 회사지요. 프로젝트 회사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팀워크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 연간 휴가 일수가 한 45일 이상 갈 겁니다. 복지는 너무 잘돼 있고요. 아기들 데려와 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일하고, 평균 연령이 엄청 낮고 이러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번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것 기존 제도보다 아까 말씀드린 유한킴벌리 비슷하게 유연하게 해 주면 우리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16시간씩 일하고 거기서 씻고 자고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이

삼 일 일하고 일주일 동안 안 나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지요.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급의 문제기 때문에, 일의 완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합적인 작업 환경이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 냈을 때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 왜 안 해 줍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에서 유망한 유한킴벌리나, 제가 SK텔레콤 얘기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동시간 관리해 주는 게.

그다음에 주 4.5일 얘기가 나왔는데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 볼 만은 해요. 국립의료원 이번에 보건노조에서……

자네는 왜 자꾸 웃노? 못 알아먹으면 얘기하세요.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4.5일이 필요하느냐? 장치산업 같은 데는 3일, 4일 일해야 돼요. 장치산업 같은 데, 큰 데는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낮없이 계속 52시간 하라 하면 죽어요. 저는 그것은 교대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24시간 불 켜 놓은 데는 노동시간을 그다음에 근로일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데이타임, 워킹데이 이렇게 낮에만 일하는 분들과 관련돼서 4.5일 하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제일 먼저 할 데가 국회하고 공무원 집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종사하는 서번트(servant), 노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부터 문 닫으면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부분 그것이 우선이다, 노조법에 비해서.

그다음에 할 만한 사업장은, 특히 24시간 돌려야 되는 데는 밤낮이 바뀌는 그런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해 봄 직하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게 4.5일이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홍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없고 n차 하도급의 제일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 주는 거예요. 4.5일 일하고 나머지 2.5일도 일하러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런 제도적 기반을 안 맞춰 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했는데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대부분 제도가 들어오면 항상 좁히는 게 아니고 늘리더라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늘려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26%, 28% 올리니까 세상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 망하는 거다. 진짜 그래 했어요.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어 올라가면, 나는 1만 원 올라갔는데 아파트값은 3000만 원에서 30억이 됐어요. 맞지요, 김준혁 의원님? 수원의 광교 아파트 얼마입니까, 거기 전망 좋은 데? 이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출은 다 막아 놓고. 대출 좀 열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뭐냐? 노조법 안에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이미 고도화돼 있고 안정돼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교대제, 병원 노동자 이런 분들의 건강권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승무원들, 승무원들 비행기 타고 그 위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니까 좋지', 그것 아니지요. 그분들 서브하고 진상 고객들 케어해야 되고 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식은 밥 먹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성층권에 올라가면 파가 많이 온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되지 이미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걸 왜 거기다가 하나 더, 그것도 자기들 것도 아니고 면피용으로 그 하청노동자들보고 '너희들 교섭권 하나 더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물이 안 내려오는데 물을 더 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원청의 노사가 꽉 닫아 놓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13조 산업은행에서 끌어다 쓰고 그 하도급 단가는 계속 줄여 가지고 유최안 씨 같은 그런 케이스를 만든 것 아닙니까?

22쪽 넘겨 봐 주십시오.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여러 법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제도가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앞에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그려 줘야지 정치 잘한다고 육교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한 30년, 20년 되니까 육교를 부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거기다 안 만들고 저 옆에 만들어 놔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도, 특히 노동제도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느냐? 노동시간 위반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차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지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집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지금 여의도의 유명한 만둣집이 만두 한 그릇에 1만 8000원 됐고요. 거기가 3시 전후로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퇴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시간이거든요. 그다음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사실상 노동시간으로 카운팅을 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 맡기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엄밀하게 순수한 대기시간이냐, 아니면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저것 하느냐. '가 보니까 불 꺼 놓고 자고 있던데? 옛날에는 마늘도 까고 양파도 다듬던데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오후에 오프하는 것 같지만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대법원의 주지적인 판례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숙박음식업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만 8000원짜리 만둣국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상상도 못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쪼맨할 때 1200원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1만 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의 친구 1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메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올해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안 싸웁니까, 그렇게 적게 올렸는데? 선별적·선택적 저거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추임새 좀 넣고 해 줘야지.

(「잘 들어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팍팍 들어오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려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최저임금제도를 경고하고, 아까 전에 하나 말씀드린 1단계·2단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물가상승률이나 평균임금이나 그다음에 평균임금의 최저임금이 갖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딱 꽂아 놔야 되는 거지요. 나머지를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 100이라면 주관적 기준이 우리는 훨씬 크다. 어떤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에 26%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을과 을의 전쟁, 편의점주하고 알바생하고, 알바생이 더 대감이야. 편의점주, 제가 맨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보루바코 있지요. 깔고 부부가 교대로 잠자요. 내가 문 두드리기가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어디 가서 그냥 취직하지요. 최저임금 받으면 200만 원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먹고살아야 되지요. 어디 받는 데도 없어요. 보통 퇴직하고 편의점 하나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최저임금 문제, 노동관계법의 문제는 그만큼 일반적 효과가 넓게 미치기 때문에 정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중구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넓게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격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도 하고 하청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 간에, 그러니까 원청 간의 담합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분석이 이미 다 끝났는데 처방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대로 정리해 보겠다고 제일 먼저 나선 사람 중의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하성 정책의장을 불러들여 가지고 많은 노동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장하성 교수가 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이 1권·2권 있지요. 그것 보면 적나라하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에는 현대차, 한국노총에는 모 은행, 그때 그냥 딱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1억이었습니다. 시간당 페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연봉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당 페이로 따지면 아마 최상위급일 겁니다. 1주당 한 35시간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월 1000이라고 해도……

계산이 어떻게 되나, 김재섭?

(○김재섭 의원 의석에서 — 1억 2000.)

1200 나누기 120시간은 얼마냐, 얼추 하면. 시급 10만 원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보다 훨씬 나은데. 거기서 장하성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하청이 내려올 때 통계적으로 다 나오니까 원청 현대차가 1억을 받으면요 복지 이런 것은 뺍니다. 차 3년마다 바꿔 주는 것 아시지요? 다 빼고. 내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에 나오는 얘기니까.

1억이고, 1차 벤더는 거기의 60%를 받아요. 얼마입니까? 1억에 60% 얼마예요?

(「6000」 하는 의원 있음)

6000. 아, 죄송합니다.

○의장 우원식 시험을 자꾸 봐.

○김형동 의원 그다음에 6000에 2차 벤더는, 6000만 원의 60%는 얼마입니까?

(「3600」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3차 벤더는, 3600의 60%는 얼마입니까? 3600의 60이 얼마예요?

(「2400」 하는 의원 있음)

뭐 2400이에요?

의장님, 지금……

○의장 우원식 자꾸 시험 보지 말고 토론하세요.

○김형동 의원 사람을 내보내요.

○의장 우원식 토론을 하시라고요. 왜 자꾸 시험을 봐요.

○김형동 의원 2160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격차라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이빠이 올려 보고 그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 또 한다면서요. 그건 쳤다 뺏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 해 준다고 그랬는데 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1억 받는 사람하고—자기가 최저임금 받을 것 아닙니까—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받겠지', 그렇지요? 그래서 1억은 아니어도 내가 2160만 원 받는데—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한 5000만 원은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것 아닙니까? 덧니가 이미 굳어지면 이것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덧니 안 되면 뽑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입을, 치아를 다 망가트리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최저임금을 덜컥 이십몇 % 올리니,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켜 놨으면, 밥값을 8000원으로 묶어 놨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중구조가 격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보자. 최저임금, 밑에 봐요. 216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올리면 1억 받는 사람이 나도 10% 올리겠다고 하면 2160만 원이 더 쪼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다 먹어 버리니까. 그러면 10% 말고 5%만 하지. 그런데 그 전체 절대적 기준은 훨씬 크기 때문에 큰 놈은 눈 구르듯이 조금만 굴려도 커지는 것이고, 한 번 구르면, 작은 놈은 100바퀴 굴러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아까 장관님 계시지만…… 장관님, 제 얘기 듣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석에서)

예.

○김형동 의원 토론 중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또 특히 공기업 안에서 존재하는 차별 이런 것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그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안 내는데, 오히려 역반응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저는 그 격차가 훨씬 커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못 들었던 잘 모르는 세대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중소기업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총리님, 맞습니까? 옛날에는 중소기업 다녔다는 게 임금과 관련돼서 큰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밑의 그래프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이 채 60%가 안 됩니다. 60%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같은 노동…… 노동은 더 하지요. 이것은 결과물만 하는데 전체 노동 투입하는 시간, 작업량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까지 따지면 아마 절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

또 여기 보면 노동자조합 조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때요? 큰 작업장, 큰 사업장은 조직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거의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노동조합 조직이 돼 있는 노동자는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칼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노동조합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영세한 조직, 그러니까 급여도 적고 조직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방패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노동조합 내에서도 제도적인 혜택 차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냥 방패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투력이 훨씬 나을 거고 그분들이 누리는 결과물도 훨씬 좋을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 결과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실제 못 가지고 있는 분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안·대안을 제도적으로 고안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제 아파트값 나오니까 열받네요.

넘겨 봐 주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아파트 문제만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책위의장님 오셨네요. 민주당 정책위의장님께서 아파트값만 좀 해결해 주시지요.

강서구는 평균 아파트값이 지금 한 12~13억 되지요, 25평? 더 될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또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월평균 임금하고 지수하고 아파트 저것하고 표시해 놨는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사기가 어렵다 그런 지경에 올랐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 차를 실어 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덩달아서, 최저임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삶은 더 떨어지고, 아까 편의점 부부가 새벽에 보루바코 깔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알바 학생이 한 며칠 일하고 나가면 꼭 노동부에 고발하고,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문제다, 월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주고 나면 의미가 없다, 부부가 있으면 외벌이는 안 된다, 아들까지 벌어도 아파트에 살기가 어렵다, 이건 뭐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 지금 미국 가시는데 거기에 힘을 좀 더 보태고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닌가. 주말에 이 2·3조를 가지고 필버를 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근자의 노조법 개정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제정이, 이것 그 앞에도 있습니다. 이 노조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노동위원회법하고 조정법 2개가 있었는데 한때 얹혀 가지고 97년에 만들어져서 제정이고 노조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동법의 역사는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중에 가장 오래된 법률 중의 하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조법이나 노동위원회의 틀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노동법원과 같은 특성화법원, 특수법원을 빨리 도입한다면 노동법 체계가 일관이라 합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97년, 98년, 2001년, 2006년, 2006년 두 번, 2008년, 2010년, 2010년, 2014년, 18년, 20년, 21년,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이 법이 다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누구와의 합의? 노사 합의, 대표적으로 한국노총하고 경총. 노사 그 트윈타워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마지막에 입법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다 거쳐 왔습니다, 이 법률들이.

가장 가까이는 2020년·21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지요? 두 번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조·3조에 대한 얘기는 말만 있었지 그때도 넣지 않았어요. 두 번 개정했는데 안 넣었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특히 2조·3조는 사실 여기에 들어와야 될지 아니면 집행법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합의를 통해서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왜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거나 전체 우리 사회만 운영하는 법 제도에서도 열외고 이 노조법 안에서도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이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에 나오는데 ILO 87조·98조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3조도 ILO가 권고했던 협약 내용인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그때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됐다면 법에 넣었겠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비준할 때 우리 당은 자율 투표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다 합의를 통해서 됐다고요, 합의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6월 9일하고 2021년 1월 5일 법 넣을 때 노조법 2·3조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ILO 협약 87조·98조 됐는데 왜 그것 안 지키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에 관련된 질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철학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2019년이 ILO 100주년이었는데……

(「집값 올렸어, 그때」 하는 의원 있음)

예, 집값만 올렸지요, 뭐.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날치기라는 게 뭡니까? 합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 역사가 여기에 오롯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밀어붙이면요 김영삼 정부 때 그 후과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한 달 안 돼 가지고, 한 달 남짓인가 그때 개정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항상 균형을 맞춰 오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한쪽이 가면 지가 힘이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살아남지 못하지요, 먼저 죽지.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동법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봐 주실래요?

2010년 6월 4일, 2010년에 노조법이 여러 개가 개정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원래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은 1개만 있도록 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은 1개만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총연맹 노동조합도, 그러니까 노총이라는 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 때 들어와서 겨우 양대 노총, 총연맹을 만들어 줬는데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노동조합만 있는 게 그동안의 역사였는데 이때 2010년 와 가지고 복수노조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 노조 전임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 보실래요? 한 번만 더 앞으로 넘겨 봐 주십시오.

여기 중간에 보면 2010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 제정된 법에도 당연히 복수노조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었겠지요. 또는 복수노조는 유예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를 보장해 줬거든요. 이게 몇 번의 법률이 개정되는 동안에 계속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3년 걸렸습니다, 그것 정리하는 데. 복수노조 허용하는 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 큰 지각변동이라고 그럴까요, 가져올 가장 유력한 법률이 노조법 2·3조인데 이것을 전 정권 때 거부권을 두 번 행사했으니까, 그러면 거부권 세 번 행사한 법률은 무조건 정당합니까? 반 번 행사하면 반쯤 정당합니까?

이런 거지요. '야, 밥 먹어라' 그랬는데 애가 안 와. 두 번 불렀는데 안 오면 걔 배가 불러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핑계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을 제공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싫으면,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대로 두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노사가 합의해서 오라라는 원칙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김준혁 의원만 보게 되네요, 이상하네. 약간 틀까, 이렇게?

저는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못 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 좋은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게 현장에 있는 노사입니다.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박홍배 위원장님 계시니까 빼고요.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 중에 이 노조법 개정 전후 읽어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상임위를 신뢰하니까 안 읽어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또 사용자를 내가 근로계약, 나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 말고도 사용자를 삼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어떻게 그냥 일방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여기 표를 보여 드리는 것은 전임자, 복수노조, 복수노조가 들어오기까지 13년의, 역사적으로는 건국 이후에 계속 1노조만 허용이 됐지요. 복수노조가 말 나오고 나서, 말

이 생기고 나서 운영되기까지 13년이 걸렸고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복수노조가 들어왔는데 제도적으로 또 뭐가 들어 왔느냐 하면 창구 단일화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기껏 복수노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섭권이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어도 정작 내가 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교섭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의 사업장이 있는데 70명이라는 다수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20명, 10명짜리의 노조가 있는데 20명, 10명은 다수 노조가 교섭권을 '너도 해 봐라' 하면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지요. 결국에는 다수 노조, 그전에 유일 노조였던 70명짜리 노조만이 교섭권을 행사합니다. 줬다 뺏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공정대표의무라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은 넣어 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교섭권을 보장해 줬느냐, 복수노조를 인정해 줬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헌법소원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현명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의 결단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묻지 마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층적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으면 3000여 개의 하청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청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의 오너가 누구입니까? 현대중공업의 오너가 누구노? 정몽준이야? 현대가 정몽준 거라? 그러면 정몽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느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그러한 사용자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됐을 뿐더러 아까 노동조합 역사를 쭉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비정규직 3법을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불법 파견, 흔히 말해서 바지사장이 있어야 바지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안 하고 실제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데 바지사장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는 어디 나이트클럽도 요새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지 뭐.

저는 이것은 교섭 방식의 문제지 사용자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진짜 내 아버지 찾으러 계속 다녀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 찔렀는데 여기가, 김재섭 의원이 내 사용자인 줄 알고 가서 했더니 김재섭 의원이 '옆에 조지연 의원이 저거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박충권 얘기만 들어', 거기 가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그냥 갑니까? 변호사, 노무사 사야지요.

어제도 어느 중요한 모임에 갔더니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 시장은 노동법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하고 직접 교섭 가능합니까? 」 하는 의원 있음)

해야지요.

(「불러내야 되겠네요」 하는 의원 있음)

가장 강력한 사용자 아닙니까?

모든 제도는 정도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동시청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지만 안동시장이 채용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억울하거나 산재 당하면 대통령하고 교섭을 하거나 고

소 고발을 해야 되는 지경에 오겠지요. 그 정도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설계가 오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2010년에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문제도 13년에 노사 간에 밀고 당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 보고 안 되면, 나 같으면 법을 대안을 이렇게 만들…… 거기에서 책임을 못 지거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을 책임질 만한 원청이 교섭할 의무가 있다라는 정도로 교섭 방식, 노조법 29조 이하를 좀 손보면 될 문제지 멀쩡히 있는 사용자를 여러 명으로 만드는 것이,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이 가져가는 방향인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따왔다 그러는데 개별 사건에서, 그것도 일부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81조 4호를 판단함에 있어, 2조가 아니고 81조 4호에서 나온 얘기다. 왜 그것을 견강부회라고 합니까? 끌어 가지고 여기다가 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노조법 전체 백여 개 조문에 다 적용이 돼요. 형사처벌 조항부터 교섭, 부당노동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창구 단일화제도 적용이 됩니다. 창구 단일화할 때 교섭을 요구를 받으면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 그거 어느 놈이 공고해야 됩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를 받는 놈.

공고하는 절차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놈은 표준말입니다. 조지연이 할 거냐, 박충권이 할 거냐, 박준태가 할 거냐, 이것도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 교섭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까지 끌고 와 가지고, 절대 작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관님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 비판 하나 할게요. 아래도 중기중앙회 가서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촘촘하게 하겠다 그랬지요? 그건 위법입니다, 위헌이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법보다 더 줄어든다? 줬다 뺏는 건 똑같은 거고 제 짧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성을 그렇게 넓혀 놓고 다시 줄인다? 그것은 위법이고 위헌이지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늘 시행령, 시행규칙 통치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만 중기중앙회 가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법 통과돼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괄호 치고 괄호 닫고 시행령에서 조율할 거니까 그거는 말도 아니지요.

차라리 떳떳하게 법 통과 그냥 법대로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까, 장관님? 난 장관님의 당당한 모습이 좋았는데 아래는 신문 보고, 그거 가서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이미 끝난 거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석에서)

그 법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김형동 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32쪽 한번 봐 보실래요, 쭉 넘어가서?

이게 21년 그리고 20년…… 의원님들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거를 읽어 봐 드릴게요. 2020년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고 21대 초반입니다. 그렇지요?

노조법 이렇게 바뀠습니다.

운영비 원조 일부 행위 허용,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행위를 일부 저것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2010년에 노조법 개정하면서 사실상 편의 제공을 할 수 없게끔 해 놨었는데 10여 년 동안 이게 가장 많은 노동분쟁 중의 하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프린트 하나 갖다 줬던 것까지도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합의로 넣었던 겁니다.

양벌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개인과 노동조합, 사용자, 이렇게 법인까지 처벌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것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아예 노사 자율성 원칙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2020년 6월 9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편의 제공 부당노동행위 케이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이건 너무하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프린트 이거 누가 줬나 하면 당연히 사용자가 줬겠지요 이렇게 되면 부당노동행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개정했다는 말씀이고 여기도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2021년 1월 5일 그다음에 또 개정이 됐는데요. 기업별 근로자 개혁할 때 해고자, 미종사자도 일정 기준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해 줬는데 이거야말로 ILO가 권고했던 거고 이때 전교조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것도 거의 노동법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 부분이 들어왔던 거고 이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개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합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게 해 놨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장관께서 시행령에서 좀 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까요?

택시사업장이 조합원이 50명, 51명이 있는데 대표 노조가 51명입니다. 하룻밤 자면 한 명이 이리로 가 가지고 대표노조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상 해고를 다투거나 이런 분들이 조합원 지위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그냥 고용되지 않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상정하고 있는 거는 해고를 다투거나 초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가입을 시킨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명 되는 노동조합에서 그냥 우리 회사 일 안 하는 조지연, 박춘권, 박준태, 김형동도 가입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정도와 한계가 있는 거지 그 해당 노동조합이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까지 포함시킨다 하면 큰 혼란이 생기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구 단일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창구 단일화는 유지가 되는데 50명짜리에서 5명을 비조합원, 우리 엄마, 할아버지, 내 동생까지 조합비 만들어 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거기가 대표 노조가 되는 건가? 이게 연구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2시간 지났네요.

○의장 우원식 잠깐만요.

○김형동 의원 또 뒤에 들어오셨네요.

○의장 우원식 내가 잠깐 쉬게 해 주니까 좋지요?

방청석에 손님들이 오셔서, 김남희 의원실 소개로 경기 광명시을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이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교대로 와서 이렇게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계속하시지요.

○김형동 의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예천입니다, 지역구가. 기억해 주세요.

상당 부분 여기 보완책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2010년에 노조법이 개정돼 가지고 복수노조가 들어왔다. 복수노조가 들어오고 전임자제도가 폐지되고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들어오고 창구 단일화 제도가 되니까 10년 동안 훈련을 해 봤더니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문제점이. 그때 바꾼 것이 이 두 번의 개정안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를 케어할 의무를 지워 줬어요. 의무를 지워 줬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좀 형사처벌 조항을 낮추거나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 노조법 개정안도 13년간의 고민 끝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21대 초반에 두 번에 걸친 노조법 개정안도 2010년 개정안의 문제점을, 운영을 해 보니까 10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이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바꿨다. 이때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

모든 제도가, 특히 노동법의 이 제도는 이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가 여러 명 생겨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개정하면서 어찌 단 한 번에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 대안은 이것은 교섭 권한 방식의 문제지 사용자를,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받는 사용자를 여하히 많이 넓혔다 그래 가지고 노동권이 보장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양대 노총의 상급 조직은 아까 보셨지만 노동조합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급여 수준도 톱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n차 하도급에 대해서 저것 할 것 같으면 n차 하도급을 막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가 너무 많으면 나눠 주면 되지요, 일차적으로. 그게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제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님, 칭찬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실까요?

이게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동법의 역사, 아까 모두에 말…… 이것은 불문율이자 성문헌법은 아니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헌법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미치는 겁니

다.

주 45시간, 토요일 근무까지 저도 해 봤는데 토요일 근무 안 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노조법 한 줄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난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거예요. 그 역사,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IMF 왔었잖아요.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양대 노총에 요청을 했었고요. 이때 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현재 경사노위가 있는데 대부분 경사노위를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노사 단체가 들어 와서, 특히 노조법과 같은 매우 중요한 법률은 이 플랫폼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가이드를 주고 국회가 입법을 해 온 것이 그간의 노조법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전통을 제일 먼저 세운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그것을 약간 무시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물론 ILO에는 가입했었지만 노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사실상 정권을 뺏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3법, 양대 노총은 총력 투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기간제법 등 합의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법이 비정규직 양산을 그나마 최소화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때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도 그전에 계셨던 문진국 의원이나 장석춘 의원이나 한국노총 출신의 기라성 같은 위원장이 계시고 민주당에도 직전까지 계셨던 이용득 의원이나 여러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들이 국회에 와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식하고 이랬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단식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넘겨 봐 주세요.

문재인 정부 것을 몇 개 이렇게 제가 계속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게 12시간짜리인데 아직 100페이지가 남았는데 30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네요. 그러니까 빨리 빼겠습니다.

여기 안에, 문재인 정부 안에, 21대 아까 보여 드렸지만 여러 번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기회, 5년 내내 노조법 2조 개정은 안 했었어요. 유보했었다고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아요. 그때 10월 달에 노사정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노동개혁을 이렇게 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었던 거지요. 그런 역사,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 노조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합의인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재판 백 개 받는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합의 하나가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 법이 법을 지키는 사람, 지켜야 할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법의 수용력이라고 그러지요.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 오버되고

남용이 되는 것이지요. 작동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법이 그렇다, 임대차법이 그랬다. 임차인만 진짜 보호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과실은 임대인이 따 가더라. 초창기에는 임차인이 좋았던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 증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35쪽 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개정된 법률안 중 가장 의미 있던 것 중의 하나가 2010년에 개정했던 것 중에 편의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매수하는 행위로 평가를 해서 그것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 사소한 편의 제공까지, 프린트 그다음에 A4 종이 이런 것 제공한 것까지 편의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처벌했던 부분을 문재인 정권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10년간의 꾸준한 검토들을 통해서 사실상 가장 많이 잡음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 당시에 개정을 했다.

한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문제가 전혀 아니다. 지난 정권 때 두 번이나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노사에 물어보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에는 그렇게 여러 번 개정했으면서 왜 2조는 손 안 댔습니까? 그것은 왜 답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법이 한두 번 개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개정됐어요. 그때마다 노사의 의견을 받아서 개정해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은 일정 정도 헌법화된 규범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41쪽 좀 펴 주실래요.

이게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앞의 구분에 보면 2조 2호·4호·5호, 3조 2항·3항·4항 그다음에 3조 5항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그러면 저의 근로조건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집사람인가? 국회의장님?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노조가입자 제한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현행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삭제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저녁에 3~4초면 가입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 노조가 되냐 이 말입니다.

노조 쟁의범위 확대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그래도 좀 이해는 되지요? 두 번째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이게 체계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사과하고 과일하고 고기하고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 면제, 3조 2항인데요,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사용자

의 불법행위에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이것 흔히 말하는 다른 법률에 자력구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제한, 현재 규정이 없는데 이게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비율을 정한다. 배상액 감경 규정을 허용하고 법원은 배상 의무자별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한다.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면제규정, 현재는 없어요. 피용자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개정안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43쪽 한번 다시 봐 주실래요.

읽어 봐 드릴게요.

3조 6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현재는 없어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행사 금지.

그다음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권입니다. 현재는 없어요.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법을 바꿔 놨습니다.

한 개 한 개 좀 살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44쪽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이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빨간 것이 더 들어간 것이거든요. 앞엣것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앞엣것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후단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사용자가 외주를 통한 도급계약, 사내하청 등으로 직접고용의 비중을 줄이게 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청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들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부여하는 것이 ILO의 입장과 일치, 이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용자의 개념은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관계의 실질을 따져 사용자성 인정하고 있는 현행 판례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그중에 특히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판례를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두8881 판결인데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여기에 표현이 나옵니다—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

로…… 여기가 중요해요. 법—이 법은 노조법입니다—노조법 제81조 4호, 81조 4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제 관심이 없네, 보니까.

노조법 81조 제4호가……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81조는 뭐냐 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지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분의 2' 이거는 유니언 숍 조항이지요.

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전임자 규정—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 이게 개정이 됐다 그랬지요.

5호 그다음에 2항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판결문에 분명히,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판결문은 법 제81조 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명령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명령 이행의 상대방,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로서 판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판결문이 있었습니까? 이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81조 4호에 대한 판결입니다. 만약에 이 판결문이 2조의 사용자, 이 노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사용자다라고 평가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돼서 원청의 주체성을 인정한 예일 뿐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 판결은 사실상 그런 형사제재, 행정적 제재를 전제로 한 판결문입니다. 노조법 2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2010년에 나온 판결인데 그 이후에 이걸 벗어나는, 부당노동행위

이외에 노조법 2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내린 판결은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 다시 말해서 81조 4호의 사용자로서 처벌한다는 판례가 축적되거나 누적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갖다 쓸 수 있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 상당 부분 바지사장 형태의 기업 운영 형태는 사라졌습니다. 이걸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인용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청에 있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지 원청을 사용자로 해 달라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의 사용자성을 확대시켜 놓으면 궁극에는, 제가 아까 홍길동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 아마 불 보듯 뻔할 겁니다. 노동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청 조합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들의 급여와 근로조건 수준을 올려 주는 겁니다. 그 적절한 수단이 교섭권이라는 것이지요. 사용자성을 넓혔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라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가능한 사용자가 과연 몇이 되겠는가.

이 대법원 판례는 제가 읽어 드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판결의 하나인 것이고 그 개수조차 한두 개 찾아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유명한 CJ대한통운은, 이게 아마 현대중공업 판례인 것 같은데 3000여 개에 달하는 하도급이 빈번했던 그 사업장에 한정된 판례이고 그 이후에 똑같은 케이스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에 인용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이른바 판례법으로 법원으로 정착이 됐을 때, 통용이 될 정도가 됐을 때 끌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이 판례. 그리고 이 판례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용될 만한 그런 판례가 아니다. 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한 판례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ILO 결사의 자유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논한 자료에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요 매년 ILO가 열리는데 그것은 정권을 넘나들고 우리 정권일 때 안 한 게 아니고 전 정권일 때도 다 그랬는데 ILO는 일종의 권고지요. 물론 그것을 쫓아가고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좋겠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IL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자 및 원청은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것도 그러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전제가 뭡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게 ILO 권고였지 사용자를 넓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섭에 대한 내용을 권고한 것이지 사용자를 넓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가서 물어보지 왜 오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회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중 검토를 한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서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임이자 의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도급·파견 등 기업 간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조지연.

그럴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이 노조법 무서워 가지고 하청 주겠어요, 국내 기업에? 안 주잖아요. 또는 그냥 자기가 해 보고 치워 버리지.

‘노동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업의 해외 이탈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뭐 내일 미국 간다 그러니까…… 가면 안 오겠지요.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조정 절차, 당사자 적격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된다’, 김형동.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2조는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봅니다만 참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쪽 좀 열어 주십시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없습니다—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삭제했다는 거예요. 비포·애프터인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현행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교조나 아니면 큰 사업장에 3000명, 3만 명 조직이 있는데 해고가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없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경우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뒀는데 그 1만 명, 3000명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봐 준 게 현재의 저건데 이 법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한 발 더 나가 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창구 단일화 케이스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0명이 있는 조직이 있고 49명이 있는 조직이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는 50명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하룻밤 지나면 49명이 있는 조합에서 삼·사촌, 형제·자매, 동네 친구 집어넣어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조합원 수를 카운팅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표 노조는 바뀌게 된다.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니다.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ILO 권고 때 나왔었고, 2020년 노조법 개정 때 실질적으로 해고를 다투는 전교조 케이스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가져가 버렸지요, 그 해고자 선생님들 계시다고.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또한 ILO에서도 그런 부분은,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단결권 침해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지요.

이제 2조와 관련돼서는 그다음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사용자 문제 말씀을 드렸고, 사용자는 사용자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교섭 방식에 대한 문제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호를 한번 볼게요. 빨간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앉아 계시는 분은 얼마 안 되지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아까 85쪽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86쪽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동쟁의, 다시 말해 노동쟁의 또 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안에, 기업 안에 존재하는 게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요.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은 회사를 구조조정하거나 옮기거나 태양을, 업태를 바꾸거나 이런 게 경영상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회사 접는 것까지. 근로조건이라 하면 임금, 근로시간을 위주로 한 복지까지 이런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대한 것은 이른바 쟁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도 하고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 근로조건과 관련돼서는 지나간 근로조건이 있고 미래에 다가올 근로조건이 있겠지요. 지나간 근로조건은 이런 겁니다, 체불임금. 왜 돈 안 주냐 이거지요. 두 번째, 차별과 같은 것 그다음에 해고와 같은 것. 기발생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것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임금 몇 프로 인상하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지요. 가족수당 얼마 주자 이런 것들입니다. 휴게시간을 늘리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장래, 미래에 다가올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 이른바 쟁의 이후에 파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장래에 다가올 근로조건의 불일치와 관련된 것이 쟁의고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판단, 여기 앞에 좀 더 수식하면 고도의 경영상 판단은 사용자가 할 것이지 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고 기발생한 것, 기발생한 것은 뭐 어떻게 해요? 체불임금은 법원 가라, 부당해고도 노동위원회나 법원 가라,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쳐라라는 것이 우리 법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깨는 게 있지요. 깨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우리 법은 그동안에 기발생한 근로조건이 아니고 경영상 판단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근로조건 결정의 불일치를 가지고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빨간 글자 볼게요.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92조 2호’, 이것도 문제가 되지요. 가목부터 라목 이건 이따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경영상 판단을 어디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글자로 보면 경영상 판단 모두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자 최근에 일어나는 케이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스가라고 합니까? 말도 참 잘 지어내던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화만 콕 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화가 미국으로 가는 것 대통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파업해야 돼요. 파업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왜 파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업이 안 될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것, 자기 페이, 다 파업되지 않나요? 배당하는 것도 파업 되고요 사업 문 닫는 것도 파업 되고요.

기재부장관이, 내가 영상이 되면 영상도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로 기재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이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자기 회사 공장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취지로 구윤철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까? 자기 기업을 해외로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할 사람…… 현대나 글로벌 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어디서 돈 벌든지 간에. 오히려 밖에 나가면 공장 짓기 편한데. 그렇지요? 하면 훨씬 낫지요, 러시아나.

장관님, 제가 필버는 하지만…… 아니,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 가지고 리쇼어링이라고 해 가지고 나갔던 기업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판국에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아이고, 노동자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행하는 말로 진짜 어느 나라의 장관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른바 IMF 이후에 정리해고를 무분별하게 한 적이 많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법원에서 엄청나게 완화시켜 줘 가지고 구조조정을 쉽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특별히 희생을 당했었지요. 나는 그거는 파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업할배라도 해야지요,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HBM으로 잘 나가는…… 어디지요? 하이닉스. 2000년대 초반에 하이닉스가 현대 뭐였지요? 현대반도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넘어가 가지고, 공장이 안 되니까, MBC나 KBS 다큐멘터리 보면 있습니다. 회사를 막 팔려고 그랬어요. 회사를 그만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회사를 지킨 분들이 누구냐 하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역할은 저는 어디 가면 그때 하이닉스 예를 드는데요. 그때 주 5일 근무인데 돌아가면서, 순환 휴직 그걸 해 가면서 회사 매각을 반대하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하이닉스 주식은 국민주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보유하는 그런 주식이 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여튼 저는 그쪽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가장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섰지요. 무분별한 정리해고, 국가가 나서는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삶터를 지키겠다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저는 보장·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기업 판단, 경영 판단…… 아까 배당 문제, 임원의 급여 문제, 고도의 이른바—앞에 수식어를 붙이겠습니다—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이 된다, 쟁의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하이닉스 케이스 정도는 보장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추상적인 언어로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과연 이 한계가 어디인지 범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조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률의 대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또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이, 쟁의행위가—파업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어도—단체협상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차포 다 떼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률의 명확성에도 반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 노동쟁의의 대상,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불임금이 많다, 체불임금이 많은 사업장이다, 파업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발생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도 체불임금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해소 방법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는 이 문구 자체가 워낙 명확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하도록 해석되기 때문에 법이 그 자체적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 단결권…… 경영권은 단결권에 비하여, 단결권이 훨씬 더 보장·보호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도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 하면…… 지금도 단체협약, 최근 분위기라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들고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0억 불, 십억, 몇 억 불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것을 다 충당한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투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왜 내 급여로 안 주고 해외에다 빼돌리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난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투자해서 남는 게, 수익이 나면 무조건 우리한테 배당을 해 줘야 된다 또는 보험상품 있잖아요, 원금 보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의장 우원식 김형동 의원님 잠깐만 중단……

○김형동 의원 왜 1시간마다 자꾸 불러 세우십니까?

○의장 우원식 손님들이 오셔서요.

○김형동 의원 좋아서요.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빨간펜의 학생들,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신데요. 송기헌 의원실이 소개한 빨간펜 원주센터 또 곽규택 의원실이 소개한 빨간펜 부산센터, 김종양 의원실에서 소개한 빨간펜 창원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아주 커서 좋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이 모습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인 토론의 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제기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데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안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토론 중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조를 정해서 24시간 동안 교대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김형동 의원님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의원 반갑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이 지역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에—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하이닉스 케이스나 이런 정도로 보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좁았다,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 법문으로 본다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파업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만큼 노동조합에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는 이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넣고 싶은 것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92조 2호 가목부터 라목이 있는데요. 찾아봐야겠지요. 읽어 봐 드릴게요.

노조법입니다. 노조법 92조, 92조.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조법 92조가 뭐냐 하면 벌칙조항인데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호는 뭐냐 하면 '3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안에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가입니다.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잖아요.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라 목인데 밑의 편의제공하고 쟁의행위 이것은 뺐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내용을 그냥 이해하면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쟁의행위까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데 우리 법은 '벌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 위반하면 그대로 벌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벌은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기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쟁의행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법이론 체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효력기간이 지금은 3년이지요. 2년에서 3년, 3년 동안은 평화 의무라고 있습니다. 체결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노사의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단체교섭까지는 지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까지 나가는 것은 이론 체계나 현행법에서 이미 벌칙조항까지 두고 실질적으로 일반법에서 구제 수단까지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두 의견이 있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넓혀야 된다, 지금 개정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현행법이 노사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사항 중 일부만을 노동쟁의에 포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이 임금을 위한 교섭, 쟁의행위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넓혀야 된다는 것이지요—현행법상의 협소한 노동쟁의 정의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노사 간의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풍토를 조장하여 산업 현장에 노사관계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권리 분쟁은—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기발생한 임금체불이나 기발생한 해고 문제 등은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아까 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넓힐 필요는 있는데 이 조문 가지고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를 좀 해 드리면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미국은 임금·근로시간·교섭과 관련한 모든 분쟁, 프랑스는 직업적 요구와 관련된 쟁의행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보다는 좀 넓고요.

하이닉스 사례, 20년도 더 됐지만 사례를 봤을 때 자기 직장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 지키겠다는 정도의 노동쟁의는 이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저것이고. 신중 검토할 때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아까 법원 등의 분쟁해결기관이 있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법원이 없습니다. 노동법원 같은 특수법원, 이것만 전담,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원 같은 경우를 갖춰 준다면 쟁의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좀 예방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후에도 구제가 신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47쪽 한번 펴 주실래요?

경제단체 글 중에 1개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8월 달, 지난주네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있냐고요, 없지. 회장 출퇴근 시간도 미치지. 투자도 미치지. 왜 대통령 따라서 미국 가냐고, 일해야지.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분분한 것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각살우라고 그러지요. 소뿔이 좀 삐딱하다 그래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소를 잡아 버려요.

우리가 노동기본권을 현시점에, 현 수준에 맞게 선진화·고도화시켜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문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7년 만에 현대차가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파업권을 확보해 뒀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미국에 가면 앨라배마 공장이 있다면서요? 아마 이번에 미국에 딱 갔는데 투자 결정을 하면 내가 현대차 위원장이라고 하면 파업 들어갈 것 같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노동법 이론상과 관련돼서도 구십몇 조입니까? 92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의 ‘사업경영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많아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선이 될

지 모르지만 진짜 고도의 경영상 판단 결정까지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표현이 러프합니다마는 자기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파업은 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열어 봐 주실래요?

제 개인적으로 2조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노조법 2조는 헌법과 민법 등 기본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다. 특히 재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대,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자유와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 경영이 어렵다면 기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커졌을 때 그 결과의 부담은,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 노동약자가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행 노동조합법·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단체교섭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법 29조 이하에서 교섭의 방식으로 정하면 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이 나온 현대중공업 판례나—10년 전이지만 벌써—그런 판례들도 2조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 처벌 대상이다', 81조 4호를 판단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받는 자가 사용자다', 노조법의 사용자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 처벌을 받을 의무를 질 주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ILO의 권유도 방해하지 마라는 얘기지 2조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 현장 노사 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 노조법 개정, 지금 2025년이 됐는데요. 2010년 노조법이 그 틀을 바꿀 때 복수노조를 도입하고 전임자 제도를 타임오프로 바꾸고 이렇게 할 때도 무려 13년에 걸쳐서 세 번의 유예지요. 유예를 거쳐 가지고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 노조법을 개정할 때 특히 타임오프 문제나 창구단일화 문제를 운영을 해 보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사이에 노사가 합의를 했고 정부가 중재를 했고 국회가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절차까지 무시하고 현재 사용자 측은 좀 전에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우려를 감안해서 법을 성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2호나 5호는 그 어떤 면에서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사업 경영상의 판단,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어디까지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저 위에, 이해가 안 돼요? '쟤가 왜 저래 떠드노' 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제가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권오성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노동조합법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안 썼고 2022년, 23년 이쯤에 쓴 글인데 제목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넘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작년에, 24년 7월에 쓴 글인데요. 이 원고의 마지막 맺음말을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의견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이르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취지의 환노위 대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사용자 정의 조항의 개정만으로 원·하청 교섭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여기서 김 의원은 저를 말합니다—특히 단체교섭 방식을 넓히거나 단체협약의 효력의 구속력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를 해소해 보자라는 김 의원의 제안은 필자의 생각에 거의 부합한다’, 여기서 김 의원은 저입니다.

단체교섭 방식을 넓히자,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요. 단체협약 효력의 구속력을 확대하자, 이게 법에 있거든요. 법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원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하청, 현대중공업의 원청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구속력을 하청 노조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중구조가 해소되겠지요. 초기업 단위의 교섭 방식, 단위 교섭을 하자. 아까 효력을 넓히는 게 아니고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을 원청의 조합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초기업별로.

그게 원청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지요. 하청 조합원들을 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있대요. 복지관, 회사에 만든 복지관에 왜 하청 조합원들이 드나들도록 하냐라는 얘기를 원청에서 한대요. 뭐 볼 장 다 본 거지요.

장관님, 권오성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만 동의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체교섭 방식을 넓히자. 그다음에 단협의 효력의 구속력을 확대하자.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를 해소해 보자.

가시네요. 잘 가십시오.

○부의장 주호영 김형동 의원님, 사회가 교체된 거 알고 있습니까?

○김형동 의원 숨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부의장 주호영 하실 만 합니까?

○김형동 의원 허리가 좀 아픈데 괜찮습니다.

○부의장 주호영 잘 그래 해서 하십시오.

○김형동 의원 ‘22대 의원 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22일 의결된 환노위 대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이때 정부는 아직 안 바뀌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21대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핵심논거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었다. 그런데 환노위 대안에서 추가된 2조 2호 후단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는 21대 국회의 노란봉투법과 동일하다. 지난 2년간 지켜본……”, 이건 끝났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작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여당에 남아 있는 선택으로는 국회법, 작년이지요.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대안의 내용 중 정

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의 본칙을 작성하고 부칙으로 기한을 정해 정부에 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는 환노위 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환노위 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법, 권 교수님 취지는 결국에는 단체교섭 방식의 문제인데 사용자성을 극도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일부 우리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부가되어야 될 것이 단체교섭의 방식을 추가하고 일반적 구속력을 확대하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의 격차,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제도적 보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2조 필리버스터 하면서 마무리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으로 권오성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50쪽 넘어가서는 3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3조에 대한 부분인데, 3조와 관련돼서는 환노위 안에서 의견을 상당 부분 일치를 봤었습니다. 가까운 공통점을 더했는데, 또 그럴 줄 알았지요.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한 3조는 합의 내용을 좀 법률안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2조하고 결부를 시켜서 2조가 합의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3조도 그냥 민주당 원안대로 밀어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좀 해 보면요 3조는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뭡니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도대체 뭔 활동인지 알기가 어렵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노조법은 대부분 형사처벌 조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자체로 모호하다. 이른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냥 해석을 해 보더라도 조합활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에 노동조합 복장을 입고 아니면 과하게 얘기하면 머리띠를 매고 아니면 근조 꼬리표를 달고 근무를 하겠다, 그것은 일상적인 조합활동 아니냐, 경계상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고 파업을 했을 때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노위에서 논의했을 때 상당 부분 거리감을 좁혔던 것은 조금 더 조합활동을, 그러니까 총량이 이만큼 하다면 불법의 양이, 불법으로 정한 게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줄여 주자, 바꿔 얘기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활동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 주자, 이런 경우가…… 그런 초점은 있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이런 게 있지요. 과거에 많이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가 노동쟁의로 나아가는데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총투표를 하든 말든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지 그 내부적 의결사항을 왜 법의 잣대로 들이대느냐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정당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표결행위에 대해서 표결

을 했든 안 했든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면 그게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인데 파업행위, 쟁의행위 결의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 결의까지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은 법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내야겠지요.

과거에는 그랬었지요. 사실 굉장히 어두운 시절에는 파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총파업 결의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유지했던 것이 오히려 요즘은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내부 결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행위 요건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한다면 조합 활동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면책이 되는, 인과관계를 좀 따져야겠습니다만 면책이 되는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이 법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법 3조 3항이 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 책임 비율을 정한다 그랬어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에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이른바 재작년의 현대자동차 판결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세부 각호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에서 일응 채택하는 기준입니다. 판단 표지지요.

그래서 새로울 게 없는데, 우리가 문제 됐던 게 공동 불법행위 아닙니까, 파업이 된다고 하면? 여러 명이 이른바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건데, 그동안 이른바 민법의 불법행위 논리상 부진정 연대책임이라 해 가지고 여러 명, 10명이 있으면 10억이 손해가 났으면 연대해서 10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법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판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명 순서를 세워 가지고 각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른바 공동 불법행위 논리가 아니고 개별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문에 집어넣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인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대자동차 그 판결 케이스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10억에 1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회사가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몇 명하고는 합의 취하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10명을 n분의 1로 하면 1억씩인데, 1억 내외로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4명 남으니까, 5명이라 해도 좋습니다, 2억씩 청구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분담해야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불합리하지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곶감 빼먹듯이 하나둘 빼서 결국에는 남은 사람이 합의를 통해서 5명이 됐으면 그 경위

까지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참여 정도를 확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이지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민법의 대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깬 게 아니다. 설사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 하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문을 잠깐 뜯어보면, 제가 노조법 2조 2호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용자를 찾으러 가는 것만 해도 무진장 에너지가 들고 무진장 많은 법률 비용이 들겠지요, 진짜 사용자냐 아니냐. 김용태, 내가 사용자라고 얘기했는데 용태가 아니라 하면서 우재준을 찌르면 우재준한테 가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것은 교섭 방식의 문제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고요.

이 또한 비슷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주면…… 지금도 그렇게 해요, 법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서 책임 비율을 정하면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은, 아까 10억에 10명이라 그랬지요?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마지막에 투쟁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지위와 역할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기여도가? 그러면 10억 손해 중에 9억 정도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의롭습니까?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한 법률이 사실상 더 근본적으로 노조법이 가지고 있는 노동삼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원래 시작된 것은 그저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전에 하는 가압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힘들어 했고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삼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입법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압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냈었는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른바 민사집행법이나 또는 실체법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임금에 대해서 도시 노동자의 5할을 보장한다든지, 가압류 제한, 이런 식으로 입법적 고안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어디 간데없고 손해배상 제한하는 책임면책범위를 한없이 늘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달리 해석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입법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성을 극대로 극대화하는 법률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본질은 간데없고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사용자성 확대 법률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책임 비율 이것은 굳이 여기까지 적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조 논의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찬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들어 보

시고, 이해를 도와 보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용자의 노동삼권 제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헌법상 노동삼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도 이에 대응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해서만 정당한 쟁의 요건 결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하고 균형성을 주장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파업은 민법상 불법행위인 단순 부작위에 불과하며—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민법 750조의 위법행위에 포섭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과도하다’. 그런데 파업이라는 게 원래 일터에 안 나오고 급여를 안 받는 게 파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걸 통해 사용자를 협박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때 하는 얘기지 단순하게 출근 안 하는 걸 가지고 노동조합이 제재를 하거나 현행까지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장 반박을 해서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근대국가의 재산권, 자유권이 양 축이라고 들었는데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각종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법률이 필요 없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도 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제가 아까 지적했지요, ‘의미가 불분명하여 불법 쟁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므로 이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처벌이나 민사는 같이 가는 거지요.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개인이라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렸지요. 이 법이 오작동해서 사실상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등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노동조합위원장이나 집행부에 과도한 책임이 몰리면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 중의 핵심인 파업권, 쟁의행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57쪽 한번 열어 주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법을 접근할 때 현행의 과도한 가압류·손배를 때리는 것, 이미 사용자가 두드려 놓고 시작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압류와 관련된 규정을—그게 집행법이 됐든 우리 법이 됐든, 노조법 말입니다—넣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 먼저 하고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졌지요.

이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이 있는데 불법의 범위를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넓혀 주자,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였어요.

아까 쟁의행위의 대상, 2조 5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법원에 가면 다 해석해 줄 거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정도와 범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원칙은 뭐냐 하면, 헌재의 결정을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노동삼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그 보호 범위로 하고 있어 단체행동권이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이 부분은 계속 모두에 쓰는 저건데 그 정당한 범위를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디까지 해 줄 거냐라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든 노동조합 내부 절차까지, ‘총파업하는 데 표결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것은 현 시대에서는, 그건 구시대 유물이고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는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겨 봐 주실래요?

‘총괄적 입장’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적어 놨는데요. 사용자의 재산권 보장하고 노동기본권하고의 균형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추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또 그 3조의 기준에 따른다면 과연 노동기본권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원활해지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봐 주실래요?

59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까지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원칙의 예외를 두어 특정 집단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법체계가 맞지 않고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까 자구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 법체계적으로도, 51쪽에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노조법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 면책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형법상으로는 자력구제입니까, 민법상은 자구행위인가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거든요. 예외는 가장 최소화돼야 되는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어디까지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부득이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자

력구제 내지 자구행위인데 이것은 예외를 일반법에 적어둔 것을, 일반법에 있기 때문에 특수법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가장 컸는데요, 예외는 그야말로 예외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두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작동한다 하더라도, 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범위를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형사상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만이 불법행위입니까? 이견이 상당히 존재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행위 자체를 집어넣은 것도 무리일뿐더러 중언부언이지요. 다른 조에서, 다른 노동법 안에서의, 노조법 안에서의 다른 조문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고 이 조문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59페이지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반한다, 민법에 반한다는 취지가 다른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력구제·자구행위와 관련된 코멘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외국 사례 말씀을 몇 개만, 주요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미국 연방 노동관계법 규정과 계약위반을 이유로 개별근로자, 노동조합에 손배 가능하다.

영국은 계약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불법쟁의 참가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파업 주도한 노동조합은 계약위반 사유인 사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두 개 다 부담하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청구권 제한 법 규정이 없다. 어떤 사람은 '독일은 아예 면책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평화의무 위반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노조법 92조였습니까? 각 호가 이른바 평화의무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으로 이 법은 삼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조 2호, 영국·독일 같은 경우는 평화의무 위반, 오히려 평화의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지도록 돼 있는데 우리 법의 취지는 2조 5호 후단을 보면 평화의무 조항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깨는 취지가 들어 있어서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는 개별 근로자가 그가 직접 한 불법행위에 대해 중대하고 의도적인 경우 배상책임 부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하고 조합원들을 구분하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한번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면 책임 자체를 면책을, 불법 자체를 면책하거나 기준을 없애거나 하지는 않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 초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불법 자체를 용인하는 방식은, 면책되는 방식은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시지요, 61쪽.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의 확정 절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 이거 유심히 봐 두세요. 사용자 공고해야 됩니다. 타 노조가 교섭 참여(공고기간 중), 교섭 요구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 수정 공고,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결정,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교섭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참여 노조가 확정된 후에 진행이 돼요. 참여 노조 확정 공고 그 위에 보면 ‘3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의가 있으면 수정 공고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간다는 그런 취지예요.

지루할 수 있지만 읽어 봐 드릴게요.

‘개별교섭 동의 또는 자율 단일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자, 합의하면.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10년에 이른바 복수노조가 들어오면서 그 보완책으로 창구 단일화 제도를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중간에 괄호로 돼 있는 바를 볼게요. 과반수 이의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과반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확인하여……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가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세어 보니까 51명이고 50명이더라 그러면 51명이 되는 거지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조합 구성이 4 대 3 대 3이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합종연횡이 가능해 가지고 3, 3이 붙으면 4는 아웃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노조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된다’, 이걸 제가 왜 읽어 드리느냐 하면, 노조법이 다시 3조에서 2조로 한번 넘어가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으면 하청업체가 3000개라면서요. 그리고 3000개가 아니고 3개라고 하더라도, 10개라고 하더라도 교섭이 엄청 어렵지요.

68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모비스, 제가 재작년에 리서치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모비스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듈통합 계열사도 있고요. 부품통합 계열사도 있고요 HL그린파워도 있고요 현대HL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지만 모비스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그 하청도 노동조합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현대모비스가 있잖아요 정몽구, 정의선—그냥 그려 놔 봤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지금 계시지요—기아, 현대차, 지분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모듈통합 계열사는 보면 울산, 화성, 광주에 있고요. 부품통합 계열사는 에어백, 램프, 제동, 조향, 전동화, 저도 백미러 만드는 공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대모비스……

70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모비스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 아까 본 창구 단일화 절차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과연 창구 단일화가,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과연 창구 단일화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장관님, 창구 단일화 절차 정비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석에서)

곧 개정되면 정비하겠습니다.

○김형동 의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석에서)

개정되면 정비하겠습니다.

○김형동 의원 아, 개정되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행일이요.

자꾸 코레일, 코레일 얘기해서 그런데 코레일 안에 자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강철 위원장 왔을 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노조 본조 원청 위원장이 교섭을 하실 건데, 물론 하청은 직접 안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것 다 케어해야 되는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석에서)

케어하겠습니다.

○김형동 의원 나는 그것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에 이것 모비스만 해 놨잖아요. 모비스에 있는 노동조합도 이제는 정의선한테 가겠지요. 안 하면 탄핵당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작년 신문이고, 이게 22일이니까 어제 신문이네요. 봐 봐요. 창구 단일화가 먼저 들어온 것은 국가공무원법 2006년에 개정할 때 들어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가공무원 복지 대폭 확대, 행정부 교섭 4년 만에 타결'. 4년 만에 타결했는데 장관님 계시지만 중앙정부 부처에도 공무원노조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일 난관이 뭐냐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돼요. 맞습니까?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데 행안부 같으면 맹형규 장관 계실 때 장관 몇 명,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창구 단일화됐어요. 10년 끌었던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으면 '7개 노조 교섭대표단 구성', 이게 이걸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4년 7월 달에 7개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해서 1년 동안 교섭해서 복지포인트 뭐 했다는 거예요. 총 몇 년 걸렸다고요? 4년 만에. 어떤 분은 퇴직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것 삐치다 조지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것.

69쪽 다시 한번 주세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 교섭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선도 공고를 해야 되고 모비스 대표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부 노조가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받으면 의무적으로 교섭 요구 왔다고 공고를 해야 돼요. 맞지요? 법 위반입니다, 안 하면.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당부는 누가 판단한다고? 아까 나오잖아요, 노동위원회. 그런데 사실 지금 거기는 대표노조가……

죄송합니다. 아까 그 표 몇 쪽이지요? 교섭 요구 표 있잖아요.

저 표에서 사용자가 공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 저기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받는 사용자가 공고 안 하면 법 위반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1차 벤더나 하청 노동조합이다, 포스코건설 지금 작살났지만 노동조합이다, 난 무조건 원청 가지. 원청 안 가면 그 위원장은 잘리겠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는데 공무원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국방부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교섭 그 노동조합위원장은 이 절차에 따른다면 그 선형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국군통수권자한테도 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공무원 같으면 일단 국무총리 들어가야 되고 다 넣어야 돼요. 지방공무원 같으면 도지사, 맞지요?

이게 뭐 하다가 뭐 한다고, 내가 딱 신문 찾아왔잖아요. 4년 만에 타결됐는데 그것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창구 단일화 하다가 1년 만에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신문에 냈더라고요.

공무원 노조도 이제 좀 안정이 돼서 그런데, 맹형규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창구 단일화를 못 했어요. 중앙공무원 노동조합 조금, 지금은 저렇지만 시간 지나면 무조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차관, 장관, 실국장 다 선형에 있는, 이제 대통령까지 교섭 요구할 것이고, 아닙니까? 인사처장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니까 6개월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혼란,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교섭의 문제이지 현재 보건노조 그다음에 금융노조, 금속노조까지 포함한다면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이 하는 방식을 더 연구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모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 받는 게 구분될 수 있다. 산업안전과 같은 경우는 원청이 책임져야 되지만 급여와 복지는 하청, 직접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청에서 다 저거 하는데.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배 만드는 데, 조선사 100%입니다. 거기에 왜 그게 많으냐, 작업 지시하는 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하청 조합원들은 조합 조끼 입고 원청 조합원들은 하얀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차이지요. 그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합당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 뭐냐? 이 법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큰 혼란 사항 보여 드렸고, 공무원 노조 4년 만에 타결했다고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4년, 3000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3000개를? 그다음에 장관님들도 노동위원회 자주 가야 되고. 이게 희한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64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힘주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 중에 아까 권오성 교수가 얘기했던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른바 단체협약의 효력 확대 그다음에 초기업단위 교섭의 확대라 그럴까요.

또 하나는 노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간에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조합원 간에. 원청의 노동조합이 하청의 노동조합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아무런 문제

가 없어요. 장려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가입 안 시키려면 단체협약을 그 사업장에 다 적용시키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케어를 해 주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재작년에 우리가 국감에서 불렀어요. 10조입니까, 13조입니까? 산업은행 돈 끌어다가 원청만 임단협 해서 다 닦아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최안 같은, 3차 벤더입니까? 최저임금 받는 그분이 나무 창살,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진짜 원청의 산업적 담합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됐고, 그분들의 노동기본권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런 담합을 통해서 자기 급여는 올리고 밑에 도급금 주는 것은 늦추고 어음 끊어 주는 것 눈감고 그런 걸 다 묵시적 단협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담합?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원·하청 교섭은 해도 단협 안 돼, 공개된 중노위…… 이것은 뭐 글에 대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조를 깨 주지 않으면 그리고 원청의 적극적인 초기업별 단위 교섭을 그리고 초기업 노조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것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 돈을, 500 받는 사람이 200 받는 사람한테 100을 나눠 주기 싫으면 우리 식구로라도 들여 가지고 그들의 기본권을,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을 케어할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노조법 2·3조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하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그림상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창구 단일화, 10년 가도 그것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용자를 엄청나게 막 만들어 놨어요. 내 사용자가 국방부장관입니까, 사단장입니까, 연대장입니까, 대대장입니까, 소대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 지위선상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것 아니야, 나를? 명령에 복종하라면서요.

이병이 먼저지요? 이병 일병 급여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한 게 그것 아닙니까? 강제노동 시키지 마라, 그게 ILO 권장이고 협약인데요. 그래서 병장 급여가 200만 원 올라간 겁니다.

그 상황을 따져 보면 지금 이등병이 급여를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 하면 ILO에 제소를 하고 단체교섭을 요구를 해서 휴가 나와 가지고 안 들어가고 소통관에 와 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도의 고안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아까 저때는 정의선이나 그룹 회장은 1명이어서 다행이지 지금은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온 동네 사용자 곱하기 사용자 하면 이게 승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것을 또, 장관 가 버렸나? 그걸 또 시행령을 통해서 제한한대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인정해 줬으면 법 따라 해야지, 그것을 주어진 권리를 권한을 또 빠뜨리면 위헌 아닙니까? 위헌이잖아요, 위법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행령을 통해서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맞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꼭 바뀌면 뭔 통치, 시행령 통치하지 마라 하면서 하면 시행령 통치하려고, 600조를 그냥 대통령 한마디 말로 미국에 갖다 주는 정부니까, 뭐.

65쪽 한번 볼까요.

노동조합 수예요, 노동조합원 수가 아니고. 노동조합 개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삼천 몇백 개 되고 이천몇백 개 되잖아요. 그렇지요? 몇백 개 되잖아요. 그거 미가입이 되잖아요. 미가입인데, 한국노총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조합원 수가. 1노총인데. 이 많은 숫자들이 개별 지부나 분회 다 있는데, 민주노총은 산별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산별로 묶여 있던 조직도 나 뛰쳐나가겠다 해 가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산별을 통해서 총연맹이 통제를 하겠지요. '너는 교섭권 없어' 또는 그중에 대빵을 하나 세워 가지고 '내 태어나서 소원이 국방부장관하고 교섭하는 거다', 끝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등병 두 명 튀어나와 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교섭하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국방부나, 저도 병장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너무나 이게 흔히 말하는 얼척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섭 방식의 문제를, 왜 벌통을 건드냐고요. 꼭 벌통을 건드려 봐야 벌이 있는 걸 압니까?

이렇게 면책·면피하는 것은 안 된다. 원청이, 양대 노총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나서서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 중에 하청 조합원들을 원청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일거에 해소될 문제예요. 자기 떡고물이 아까우니까 안 주는 것을 왜 이 제도의 문제로 돌립니까? 답도 아닌 걸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원래 노란봉투법은 그런 거잖아요, 과도한 가압류하지 말자.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가압류 어느 정도 제한하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법에 보면 임금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 데가 없고 면책 범위를 극대화시키고 또 쟁의행위 범위를 완전히 무분별하게 기준 없게 하고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작 노란봉투법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압류 제한하자면서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없지 않습니까? 원래 노란봉투법은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성을 찾고 정말 이 노조법이 정쟁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내가 대우조선해양 너무 욕을 하는데 이미 사라진 회사기 때문에, 그 원청의 노사의 담합이 있는 한 하청노동자들이 아까 교섭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무원노조 7개가 3년 동안 창구 단일화해서 1년 했는데 정의선 상대로 교섭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아웃됐다, 리젝트됐다,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안 그래요? 집행정지 시켜 놓고.

이거는 또 한 번, 그 기간에 그러면 원청의 담합은 안 없어집니까? 계속 유지되지요. 죽으라는 거는 노동약자다.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2조, 3조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면책이다. 내가 월급을 500 받으면 200 받는 하청노동자한테 내 100을 나눠 줄 생각을 해야지 입법청원해서 법 만들어지면, 그거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조합원 간에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먼저 안 하고 참……

67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이건 정부 자료니까. 재작년 기준인가, 22년이네요.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파업과 관련된 겁니다, 쟁의행위에 관련된 것. 151건이네요. 151건인데 청구액이 2752억입니다. 그중에 326억이 인용이 됐으니까 10%가 좀 넘네요.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회사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해서—전체 소송의 94%,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이 상위부터 했겠지요, 56건. 전체 청구액의 80%, 인용액의 93.6. 나머지는 19%, 인용액의 6.4%인데요.

이거 그때 저희가 민주노총 공격하려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데이터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 민주노총이에요.

사용자가 과도하게 청구했다라는 부분은, 변호사를 잘 썼어야지. 2700억을 이렇게 청구했는데 인용액은 그만큼 안 됐지요. 저도 한국노총의 변호사로 있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노사는 소송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야지요,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이 일상화돼 있어요, 치고받는 게.

여기서 노조 측에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그러면 소송하지 않느냐? 제가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에 선배 변호사들도 계시지만 데이터가 그래 나와 있는데, 소송은 최후이고 필요 최소한이지 그거 무턱대고 자꾸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전이나 현 당선인이나 직무에 들어가셨거나 계속 세 번 얘기했던 게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을 법제화를 하자,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전체 2700만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민주노총만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총 청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작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 3차 벤더에서 창구 단일화하다가 5년, 10년 우예 기다립니까?

좀 백으로 가서, 실패한 정책 중에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반쯤밖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규직 되면 옆에 일하는 친구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맨날 다니는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그래서 소송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김천IC 같은 데는 거기에 농한기나 애도 키워 놨고 잠깐 나와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길게 안 하잖아요. 소송비만 떼인 거예요.

소송한 결과가 뭐냐 하면, 두 가지지요. 근속은 유지해라, 계속 계약을 끊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대신 급여는 그대로다. 그게 김천 사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것을…… 김천에 가면 도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선명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예견 가능성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때 변호사들만 배 불리는 결과가 됐다.

최근에 이 법이 통과되면, 큰 로펌에서 이미 준비돼 있고 팀을 만듭니다. 아까 봤잖아요. 글자 자체도 어려워. 사용자라는 말을 내가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어,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나는 사장님이라 그랬지 왜 사용자라 그러냐. 그것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드느냐. 법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회가, 법을 해석해야 되는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거야말로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꿔 얘기하면 비싼 변호사, 전문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맞지요? 어디 장관님이시지만 행정서사 써 가지고 써야 등기…… 내가 등기가 보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접 하니까.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묻는 거예요, 법무사 들어오라고. 제가 법무사 직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법을 어렵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해보니까 전부 민주노총입니다. 청부입법 맞지요.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넘겨 봐 주실래요?

아까 본 그림이고, 모비스와 관계있는 분한테는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더 길게 하려 그랬는데 한 삼사십 분 하고, 여러 분들한테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지연 의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71쪽 펴 보세요.

장관 어디 가셨어요? 여기에 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의장 주호영 의사국에서 연락하셔 가지고, 장관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데 찾아봐 주세요.

○김형동 의원 완전히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진짜……

장관 오면 이것 하겠습니다.

(「장관이 와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것은 노동부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요」 하는 의원 있음)

저라도 안 가야지요. 그래야 더 떳떳하지.

○부의장 주호영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계세요.

(장내 소란)

○김형동 의원 국회가 좀 시끄러워야……

진짜 어디 가셨나? 누구 대참이라도 시켜 놓지.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아무도……」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나가신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이석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거지.

(「장관 올 때까지 최대한……」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은 장관 들으시라고 하는……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을 좀 챙겨 봐 주세요.

현대차 판결은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2023년 여름에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사실상 입장이 바뀐 듯한……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현대차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1. 사용자범위의 확대, 실질적·구체적 지배·영향이 있으면 단체교섭 의무 등 노조법상의 모든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함.

2.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행정·사법적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

3번이 중요한데요. 책임범위의 개별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조합별로 일일이 산정.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목 자체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대법원 판결은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최근에 이 손해법, 노조법 3조를 개정하면서는 이 부분을 꼭 넣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흔히 말해서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부는 그대로인데 생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는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따져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매번 ILO가 열리면 이렇게 이사회에서 권고를 많이 합니다. ILO 협약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아까 법률 개정 사항에서 권고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권고 내용이 잘못되었고 권고는 협약이 아니에요. 권고는 권고일 뿐인데 그 권고가 사용자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할 때 방해할 의무가 없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취지였지 사용자성을 넓히겠다라는 취지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에도 이게 실질적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민주노총하고 공공운수하고 가 가지고 주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진정인들은 정부가 예산, 경영 및—정부 예산 지침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기관과 그 노조가 자율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여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한다'.

이게 23년인데 22년, 21년 똑같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지침 관련해 가지고 항상 ILO에 가서 주장을 하는데 ILO 위원회는 권고를 하지. '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메커니즘 수립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돼 추진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거나 집행할 때 ILO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권고, 수백 가지 권고하거든요. 수백 가지 권고하는데, 권고는 규범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뿐더러 역대 정부 매년 이런 권고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권고 때문에…… 이 권고를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생각할 것 같으면 또 ILO의 권고를 그렇게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 기재부에 재정준칙이나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공이나 토공이나 도공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예산지침, 임금지침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교섭에 임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임금테이블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났지요. 코레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100% 정부 지분이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정부가, 국무총리가, 내각이, 대통령이 교섭에 응해야 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넘겨 봐요.

또 읽어 봐 드릴게요. 내가 아까 했던 말, ILO의 권고는 매년 나온다, 우리 정부 때만 나온 것도 아니고.

73쪽입니까? 그 밑에 돼 있지요. 이것 날짜를 먼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22년 5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LO 제소 기자회견 진행'했고, 앞에 보면 '21년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비준 및 기탁하여 1년이 지난 22년 4월 20일부터 ILO 협약 제98호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법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정부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ILO 협약 98호를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기자회견 내용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때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 지침이 흔히 말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소지가 있다, 빼라 이런 내용을 ILO가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도 누누이 확인이 되지만 정부가 지침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맞습니까? 임추위가 있다고 하지만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정부가 한다라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넘겨 주실래요?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노동시간과 임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 격차가 너무나 확대가 많이 돼 있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표를 보면 월간 노동시간이 300인 이상하고 그 미만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고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간호업무나 장치산업 이런 데는 사실 총노동시간을 관리하되 노동일수는 3.5일이 됐든 4일이 됐든 그렇게 줄여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조합이 있고 300인 이상,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사실상 노동시간이 거의 국제기준을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아직 1000시간 후반대인데 이 표를 보더라도 그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주 4.5일을 주장하는 분들

이 계시지만 4.5일 하고 나머지 시간에 2.5일 그분은 투잡 뛰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4.5일 하자고 하면 그것은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75쪽 봐 주실래요.

우리가 참 잘했던 것 중의 하나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 담당이 중기부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층적인 다단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자. 그다음에 다단계를 하더라도 단가연동제를 하자. 또 그것을 묶어서 80% 룰이 됐든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1차 벤더가 1차에 60%를 받고 2차가 1차의 60%를 받고 3차가 2차의 60%를 받으니까 마침맞게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필요최소한에서 하청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단가, 하도급법 개정했을 때 그때 100% 이게 다 통과되었나? 그렇지요. 중소기업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난 정부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76쪽, 77쪽 넘겨 주세요.

재해도, 시작할 때 좀 안타까운 뉴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장관님이 일터에서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허를 해서 한다든지 처벌로 무조건 간다든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은 법은 형평성인데 왜 포스코는 그렇게 조지면서 다른 회사는 가만두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법집행에 있어서 엄정한 형평을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도 정부나 여당과 함께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

김주영 간사님 나오셨지만 저는 이번에 코레일 사건과 관련되어서 상임위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재발 방지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가 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실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법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되어 왔는데 저는 휴게, 휴가, 노동시간 이런 부분은, 특히 휴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산재 가입률이나 국민연금 가입률,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그룹핑이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저는 이것을 책임을 묻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거지요.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이게 2022년이었는데 시간당임금을 한번 봐 주시면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급여도 말할 것 없고요. 근속연수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노조법 2·3조만 틱

던져 주면 가능하냐?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문제지만, 80쪽 열어 봐 주실래요. 보면 2023년까지밖에는 저걸 안 했는데 5분위로 나눴을 때 엄청나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배율이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5분위 소득으로 했을 때 우리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아파트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넘어가는 변곡점인 것 같은데 소득의 원천이 아파트 있거나 부동산 있는 사람이 일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어떻게 끌어올려 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그 방안을 해 보자.

8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중간 정리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정 합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어떤 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경험칙상 김영삼 대통령 때의 예를 말씀을 드렸고 가장 가차운 예는 공무원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다가 창구 단일화,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데 3000여 개…… 3개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원청을 사용자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를 여러 개로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섭 방식의 문제를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원래의 노란봉투법을 찾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82쪽 한번 열어 봐 주세요.

손해배상 면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80%예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67%예요. 노조법상 쟁의행위 개념 확대는 반대가 63%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문을 해 보면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오전에 노동손실일수 보여 드렸지요. 파업일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파업을 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휴가일수를 어떻게 늘릴지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총이 조사했기 때문에 경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가 한번 조사해 보지요. 경총에서 설문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할 만하고.

아마 경제 6단체, 8단체가 이제껏 많은 경제적 변곡점이 있었지만 이 문제만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나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복수노조 도입할 때는 이른바 노총과 경총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반대 논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이게 정의 규정이거든요, 정의 규정. 정의 규정은 노조법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노조법이 정확하게는 96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 어디 하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없고 81조 4호를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29조, 89조까지 사용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2조 2호의 정의 규정을 반드시 대입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노동위원회 가야 됩니다. 그 무용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맞을까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85쪽 넘겨 봐 주실래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법원의 판결문은 판결번호가 '두'로 돼 있지 않습니까? 3월 25일 날 선고됐는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뭐의 주체냐면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명령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것도 2010년에 1건입니다. 이게 일반화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81조 4호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것을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에 어떻게 어떤 논리로 끌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의 부분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거냐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나 노동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권리 구제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현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해외투자 하는 부분까지도 당연히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지금 같으면 기업 회장이 전세기 타는 것도 아마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약간 농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급여가 지방직공무원들은 최저임금, 더 낮습니까? 하여튼 공무원 입직하면 지방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다른 데, 국방예산을 더 많이 썼다는 이유로 파업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을 드렸고.

87쪽 봐 주실래요.

이것 표를 이쁘게 임이자 의원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빌려 왔습니다.

원·하청 이게 참 엄청 복잡하지요. 제가 제조기준만 했지만 이 표의 오른쪽의 중간에 보면 하청 노조 중에 운송하청이 있습니다, 운송. 화물노조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특정 업의 운송만 담당하는 분들도 아마 정의선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끊어 줘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성을 고쳐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건기법까지도 영향이 미친다고 얘기했었고 정작 교섭이 안 돼요. 교섭 방식의 문제로 푸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른쪽 읽어 봐 드릴게요. 제가 노조법 전체를 건드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단체교섭·협약에서 단체교섭의 주체, 창구 단일화 여부, 교섭단위 결정 이런 것 다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쟁의행위의 상대방, 쟁의 조정이지요. 파업찬반투표 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 대체근로 제한 범위. 제일 중요한 것은 창구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모비스 말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사용자 의무를 지우는 게 이것 말고도 노조법 2조부터 98조까지 계속해서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경고’ 이것 넘겨 봐 주실래요.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제가 올려 놨는데 여기서 짚을 게 있는데요. EU는 한국이 노동법 후진국이거나 통용되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통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끌어들여서 유럽상의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지요. 그랬을 것 같으면 EU가 근자에 그 말을 했겠지요. 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 초반이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87조하고 98조를 비준한 나라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문제 될 게 없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98조, 87조 비준과 동시에 해고를 다투는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 인정,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교조 문제, 이런 것들이지 현행법에서 이 법이 이른바 ILO 협약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몇 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한 예가 없다니까요. EU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암참하고 ECCK(주한유럽상의)가 자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내 기업보다 덜 아쉬울 것 아닙니까? 철수하면 그만이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국내 회사 철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 또 몇 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고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제 6단체, 90쪽입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용도 들을 만해서 한 번만 더 읽어 봐 드릴게요. 91쪽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읽어 드린 이유는 내가 대변인도 아닌데 여기에 자기들이 대안, 특히 세 개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뭐랄까, 후퇴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 못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강조를 했지만 노사관계법의 역사는 언제나 노사자치의 산물이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위상 의원님 오셨네요.

경제계 공동성명 8월 19일 것도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앞에만, 그 취지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걸 읽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자 범위는 현행을 유지하고 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최근에 나온 거는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 같은 이유로 경제계의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논의할 수 있다,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법률안이 하나 만들어질 때 어떤 경우는 오늘 발의해서도 내일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수년에 걸쳐서 논의를 거쳐 가는 경우가 있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특히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법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역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ILO 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을 여러 번 개정했습니다만 ILO 권고에는 사용자성을 부당히 넓히거나 불법파업까지 손해배상에서 면책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뀐 환경에 따라서 쟁의행위나 쟁의의 대상을 넓히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 불법의 영역보다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영역을 넓혀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구 단일화가 포함된 현행 제도에서 차라리 개별적으로 다 교섭을 하라든지 선택적으로 하든지 교섭의 방법으로 우리 하청 조합원들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현행과 같이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둬서 나의 진짜 사용자 찾기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노동자들을, 특히 n차 하도급에서 시달리는 가장 말단의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두 번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과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논리가 안 됩니다. 적어도 노사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왔을 때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그야말로 아까 급여 차나 노동시간, 급여와 시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분위 소득만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컸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시급은 중소기업과 노조가 있는, 유노조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시급 기준만 해도 50%가 되지 않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격차를 해소하고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 관심이 있을 건데 저는 이 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될 수 있으면 더 숙고하고 후순위에 미뤄 둬도 충분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법 내에서, 노조법 법 내에서 본다면 이른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거나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늘리거나 더 중요한 것은 원청의 노동조합이 하청의 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케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대라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기에는 하청 조합원들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원청이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에서 보셨지만 산업은행의 돈 13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노사가 단합해서 사실상 어설프게 얘기하면 다 닦아 먹었어요. 하청 하도급금은 옛날로 묶어 놨기 때문에 유최안 씨가 그 케이지 안에서 저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도적 골간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자라는 대원칙 그리고 급여체계는 직무급제로 완만하게 가자라는 그런 제도적 설계가 이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마침 이재명 정부가 수차례 또 그전에도 그랬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 근자에는 노동부장관께서 직무급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이 가야 된다, 임금체계를 개편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호봉제에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 막 급격히 임금 피크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배려도 필요하고 또 이해도 요구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양극화된 이 격차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국민들의 삶을 좋게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값 평당 3억 만들어 놓고 노조법 하나 개정했다고 평당 3억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회구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아까 단가 연동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층적 하도급을 제한하고 임금도 원청의 몇 %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식의 가이드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본 것, 배운 것, 짧은 머리에서 많은 것을 짜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노조법 2·3조 그리고 잘못된 법률안을, 저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밥을 우리 아기들한테 먹일 수 없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이었다는 것이 이 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밥, 제대로 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른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그게 정쟁이고 그게 무책임한 입법 아닌가라고 반성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여야가 그냥 될 대로 돼라가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배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에 성실히 한 번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필리버스터 제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김형동 의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주영)

(14시04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서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86년에 한국전력에 대졸 공채로 입사를 해서 34년 2개월 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와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새벽 공부도 해 보고 또 법도 만들어 보고 많은 토론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0년 이후에 70년, 80년, 90년, 지금 2025년까지 압축 성장을 해 오는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기록에 의하면 61년부터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전력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800명 이상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2000명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정을 받은, 질병으로 판정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영계 경영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IMF 강물 속에 목이 떠내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해고 사태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IMF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3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현장에서 산업재해는 빈발하고 있고 빈부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와 현대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F 위기 때 모두 다 한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고 그 금 모으기에 나섰던 국민들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정말 불편하고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들 돌반지 또 기념품으로 받았던, 이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고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공세, 무한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만 남겨 놓고 전부 외주화, 아웃소싱 도급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관련해서 찬성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굴곡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 통과하면서 저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었고 정말 그때 발전, 철도, 한국통신, 포스코 또 그 당시 전매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수많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국무위원석에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철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전력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민영화라는, 사유화라는 그런 화두를 던졌지만 거기에 저항했던 노동자들은 엄청난 손배·가압류 폭탄을 맞게 됐고 해고와 또 구속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가까운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의원들이 나선다고 할 정도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심화되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계화·자동화 또 AI의 등장으로 고용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양질의 일자리는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서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도 무한 경쟁 속에서도 점점 숨 막히는 경쟁이 지속되어 한동안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조어가 생겨났고 또 사오정, 오륙도 같은 웃지 못할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입니다. 사오정, 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45세가 정년이다. 오륙도, 56세까지 다니면 도둑놈이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또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들, 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아니,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원청과 하청 기업 사이에는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어지는 n차 하도급 형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좀먹는 구조로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 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수 효과, 분수 효과 그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해 봤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봐야 되겠지요.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방법, 중간 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헌법 33조에는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입니다. 2조 개정 내용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도급, 사내 하청의 경우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제는 교섭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한 경우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6개월 뒤부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절차들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다면 지금껏 원청은 나 몰라라 했던 하청 노사 간의 교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마지막 도급 업체와 하도급 노동자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고 책임 있는 원청이 나섬으로써 경제적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게 되어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중간 착취가 줄어들게 되어 우리 사회가 선진 노사관계로 접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9조,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듯이 중간 착취의 원·하청 구조는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해가 다를 뿐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직접 교섭을 하지 말고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명의대여를 통하여 중간 착취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 노조법 2·3조,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시민 배춘환 씨가 4만 7000원을 담은 노란봉투를 '시사IN'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했습니다.

2015년 4월 6일,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입니다—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손배소송을 가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께서 사진을 보여 줬었지요? 저도 그날 내려가서 자기 몸을 스스로 0.3평 철창 안에 가뒀던 유최안 하청 노동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동계·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날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청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 2심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민주당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을 했고요. 그해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다시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고 저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많이들 말씀은 들으셨지만 과연 노조법 2·3조가 어떤 것인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은 들으셨지만 실제 노란봉투법이 어떤 것인가, 본 의원이 한번

법률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두 번째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세 번째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네 번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다섯 번째 손해의 원인과 성격, 여섯 번째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두에 여러 말씀,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표현으로 발언을 했는데 최근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7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다섯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 대한민국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합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경쟁 구조가 국민들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북유럽은 개인의 행복과 균형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은 성공 이퀄 행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심각하게 워라밸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근무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퇴근 후에도 카톡 근무, 잦은 회식 문화 등으로 인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주 37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며 야간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값은 매우 높아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아비용도 높아 출산율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면 북유럽은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 주거 부담이 낮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높은 사기 범죄율, 정치적 불신, 부정부패 등의 영향도 있는데요. 반면 북유럽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부정부패가 적은 사회입니다.

불안한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노후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유럽은 국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어 노년층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야 됩니다. 학벌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성공 모델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가 강화돼야 합니다. 연금제도 개혁 및 안정적 노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실천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노조법 2·3조는 분배 개선 문제도 또 중간 착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북유럽과 같은 행복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노조법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처음 회부된 이후에 세 번째 상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해와 우려하는 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2·3조를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

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한화오션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하청 노조에서 노조원이 스스로 케이지 안에 몸을 가두고 그렇게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청 사용자 측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화 본사 앞에서 97일간 통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던 김형수 지회장 건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원·하청 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제안 내용을 일부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 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원·하청이 협력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청인 대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 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7월 25일 현대제철, 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며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세 번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암참은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한 이슈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7·2018년 ILO 핵심협약 87호·98호 비준을 하지 않으면 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87호, 바로 단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8호, 단체교섭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ILO 핵심협약에 담은 것입니다.

ILO는 노사정 3자가 만든 기구입니다. 노동자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EU에서는 왜 우리 대한민국에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을까요? 바로 그것은 'EU에서는 이미 노동에 대한 비용들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대

한민국은 노동에 대한 비용을 충분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공정 계약이다. 불공정 거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ILO 핵심협약 87호·98호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U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동권 보호는 한·EU FTA 협약 내용에도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 이후에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의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면서 정부는 세부적인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2조 4호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으며 단지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분류로 인해서 가짜 3.3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업소득자로 분류를 한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불법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하는 과정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 증설, 해외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을 소규모로 쪼개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 노무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 포운이라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하청회사였는데요 2020년도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5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한 회사로 몰아넣어서, 여기 국회 앞에 와서 단식도 하고 집단 농성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광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지금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위원장이 원·하청 간, 아니 하청·노사 간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양에 내려갔습니다. 사용자도 만나고 중재의 노력을 참 부단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를 퇴사한 포운이라는 기업의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영 그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김만재 금속노련 전 위원장이 망루를 쌓

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경찰들이 새벽에 닥칠 것에 대비해서 망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잠자고 있을 새벽 동 트는 무렵에 경찰들이 집단으로 몰려왔지요. 정말 김준영 지금 금속노련 위원장은 아주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밖에 트럭을 대고 체포를 하려고 하니 약간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봉으로 무차별 구타를 했었고, 김만재 당시 금속노련 위원장은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서 팔을 뒤로 꺾고 정말 미국의 경찰이 흑인을 제압해서 목을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던 거의 그런 정도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속노련 당시 사무처장, 현 위원장인 김준영 위원장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현장에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있던 노동자들을 만났고 병원에 가서 김준영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를 쪼개서 노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든지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를 5개로 쪼갠다든지 이런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과장된 우려입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제3조제1항,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경우입니다. 즉 현재도 단체교섭·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인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취지이며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PPT로 넘겨 주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761조 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서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시지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으로 개별 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되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두 차례 법안이 거부되는 동안 많은 노동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당했고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소송 폭탄을 맞았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한화오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한화오션에서 만들고 있던 배에 자기 몸을 가두고 거기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의 손배 폭탄을 5명의 노동자에게 때렸습니다. 유최안이라는 노동자가 스스로 창살에 몸을 가두고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울부짖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스스로 몸을 가두었던 행위가 끝나고 서울녹색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본 의원과 현재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유최안 동지를 만났습니다. 470억 손해배상 폭탄 때문에 장모님과 처가 앓아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손배소 폭탄을 던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대한 오해와 우려들을 일문일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손배·가압류라는 천문학적 영수증 청구가 쏟아지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시작된 법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노동자들은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계약당사자인 하청에게 교섭책임을 넘기고 하청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자인 원청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행동에 나서면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응답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이런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던 2003년 1월 9일 배달호 열사의 유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와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억울함을 하소했던 노동자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적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대화 한 번 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탈법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거부되기를 반복한 지난 2년간 쌍용자동차 파업의 손해배상 20억 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현대자동차가 2021년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와 하청노동자 등 4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35억 원 배상이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치하는 동안 노동자의 일상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법조문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호소드립니다. 이 법은 결코 노동자만의 법, 노동조합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배노동자 김사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배기사로서 저희는 매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신 동료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원청의 과도한 경쟁이 만들어 낸 주 7일 배송과 새벽배송, 제한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당한 계약,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불공정한 계약, 이러한 열악한 택배 노동시장에서 저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에도 저희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현재 노조법 2·3조는 저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배달 플랫폼 없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민생을 대변하는 노동자입니

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형편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부업으로 배달 대행, 택배 알바, 대리운전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퇴근 후 휴식도 없이 가족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미뤄 가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업에 나섰을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일하는 시간과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으며 좌절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시간과 땀으로 원청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이 상황,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거대한 원청에 당당한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외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에게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우리 이웃의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2007년 기간제법을 개정했을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기간제가 만연하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IMF 이후에 정말 기간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년 연속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2년 되기 전에 미리 잘랐습니다마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11개월이 지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은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 법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이 노조법 2·3조 개정, 내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정말 대형 로펌들을 앞세워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노조법 2·3조라도 개정을 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찾아 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을 막아 내는 일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경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노조법 개정 관련해서, 특히 이 3조에 관해서는 사용자단체들도 그동안 손배·가압류 부분이 너무 과했다는 그런 인정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이 3조에 관해서는 환노위에서 실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간에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을 요

구하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 근로자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대표적인 경영자단체인 경총의 제안안을 언급하면서 경총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손해배상 제한에 대한 기여도 책임 부분이 들어와 있고 상한 제한이 들어와 있다며, 이런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근접해 있다고도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못 하고 표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수많은 토론들을 했었고 노동자단체, 경영자단체를 만났었고 또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대회도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에 시민의 염원이 담긴 4만 7000원이 모일 때부터 노동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2013년 12월 법원의 판결에 맞서서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성금을 보내면서 사회적 법안으로, 국민의 법안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등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된 이 법안은 논의 한 번 제대로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호 열사가 쓰러져 간 지 20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만에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청문회, 법안소위 논의와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 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시급합니다. 한시가 시급합니다. 점점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측이 노조 간부나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배소는 151건인데요 그 청구액은 무려 2752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손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가정이 파탄나며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노동은 있는데 노동자는 없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질 사용자는 없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늘어

놓은 것뿐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불안을 이용해 정쟁을 일삼고 차별과 격차,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불안이라는 허상을 앞세워서 회사의 과실과 불법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근거 없는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쟁의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청인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이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다라고 정의 규정만 바꿔도 회사는 교섭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줄여 교섭에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 목적은 투쟁이 아니라 더 나은 일터, 나와 동료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만 1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4%가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회사 노동자의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차별이 34%, 인사개입 27.4%, 업무 지휘 감독 26.4%, 괴롭힘·성희롱이 20.1%, 노조활동 개입 18.9% 순으로 답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원·하청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감정을 그리고 국민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사용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고 격차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가 해소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 착취 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에 하청노동자로 조직된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하청업체 수십, 수백 곳이 단체교섭을 요구해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즉 원청기업일지라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의무도 없습니다.

경영계가 비판하는 실질적 지배력 판결이 처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2010년입니다. 2003년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를 폐업시

켰고 하청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현대중공업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리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 미래전략실, 경총이 공모해 하청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삼성노조 와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에게 하청노조가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최종심은 아닙니다마는 법원이 제시한 사용자 판단기준은 하청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결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현재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원청기업은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도급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근무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원청기업에 전속돼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도 없고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청노조가 하청업체와 교섭해 봤자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없기에 원청기업과 교섭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원청기업이 정말로 내가 사용자인지 몰라 교섭을 거부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한 언론사가 2017년에서 2023년 선고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1심 판결 168건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15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3건은 선고유예였습니다. 1년 동안 유죄 선고 건수가 2건 남짓일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냅니다.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서 빨리 교섭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조법 일부개정안은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 자체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장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일부개정안의 노동쟁의 대상 확대는 불법파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단체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불법파업을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때 노조가 반대해서 파업을 벌였지만 정리해고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이 됐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손배소 때문에 노동자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가슴 한 켠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종종 집회를 합니다. 직장에 익숙했던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좀 할 만한데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저축해 놓은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애매하게 되면 사실 재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아 놨던 그런 돈들이 다 바닥이 나게 되면 결국은 그다음 순서는 적금을 깨고 보험을 깨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다면 아이들 학원 보내던 그 학원을 끊게 되는 게 아마 마지막 수순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으로서 자존심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자존심 무너진 가장은 스스로의 정말 험한 선택, 유명을 달리해 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중에 30명 넘는 그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런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학원마저 보낼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사실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 정말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포함돼서 정리해고나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는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해서 노사교섭과 합법파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류 회사 몇 군데서는 직장 폐쇄를 서슴없이 하고 또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류 회사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는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이번 노조법 일부개정안은 손배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를 청구했을 때 법원이 노동자의 책임비율을 고려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즉 개별 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되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비율을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책임을 노조에게 부여하고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기업들은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소를 내고 노동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 왔습니다.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이 아니라 노조, 노동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손배소를 활용해 온 것입니다.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으로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에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힐 목적의 손배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노조할 권리 침해 목적으로 제기했던 손배소를 막을 목적인 것이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거나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해서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하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 증설, 해외 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 부분도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때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에 따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연기자에 대해서도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하였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했고 더 나아가 구직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이들이 결성한 단체에 정당한 행동권과 교섭권을 부여해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동삼권은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노동삼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노동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 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경제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단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노동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삼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노동삼권의 보장 의미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실질적인 자치 보장, 근로조건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 제33조제1항은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노동삼권이 노동조합법 등 하위법령으로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에 국민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적극적 실현 의무에 따라 법령과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노동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인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해 노동삼권 실현과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로관계가 복잡·다양화하고 있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직선적·단일적이지 않고 중층적·다면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사내 하청, 파견, 위탁계약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받는 특수·간접 고용 형태가 전 산업 업종으로 확산됐습니다.

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지요. 물론 이때가 신자유주의가 아주 광풍을 일으켰던 그런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8년 2월 6일 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3금 3제, 세 가지 금했던 것을 풀고 세 가지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던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외 단체로 있던 민주노총이 그때부터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6일 이후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제삼자가 개입했던 제임스리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노조를 파괴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었는데, 제삼자 개입 금지 조항도 이때 풀렸습니다. 대신 노동계에는 재앙이 불어닥쳤지요. 바로 이때부터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 법으로 허용이 됐고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제가 이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이 세 가지 금지됐던 것을 푸는, 허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 세 가지 없던 제도들,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가 새롭게 도입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몰려왔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최저시급도 겨우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직접고용과 정규직의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어 가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제약 및 노동조건의 악화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양산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고 현재 노동관계에서는 첨예한 모순인 동시에 노사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닥친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업주나 원청이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미리 결정하고 이에 맞춰 입찰공고를 내거나 계약을 맺기 때문에 힘이 없는 하청과 노동자는 원청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할 때, 실제 IMF가 끝나고 곧바로였지만 사내 비정규직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절규는 사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많은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념일 날 기념품 하나 받지 못하고 여러 불평등, 불이익한 조치들이 있었지요.

대기업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합원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교섭을 통하여 무기계약이 아닌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년을 근무해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호칭 하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누구 씨, 누구 씨 하던 그런 호칭들에 이제 호칭이 부여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정년은 차별이 되었습니다. 정년을 동일하게 하고 또 기본급 수준을 일정 부분 늘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제삼자를 매개하거나 근로계약이 아닌 형식의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나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부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나 원청을 상대로 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사례 토론회를 하면서 증언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노동자들의 고충이 담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이트진로 주류 운송 화물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하이트진로 청원공장에 주류제품과 공병 등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5년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및 할부 등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밑바닥 운임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병 운임 및 공회전 비용을 포함한 운송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조합원 130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파업 104일 동안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며 17회에 걸친 교섭을 거부하고 화물연대조합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들은 차량 할부가 연체되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택배노동자의 발언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넘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청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원청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택배기사들도 대표적인 하청사업장에 속한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부당한 계약 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짜 사용자, 즉 원청과의 단체교섭입니다.

택배노동자는 말합니다. 택배 일을 하루라도 한 사람이면 원청 택배사가 노동조건의 대부분을 좌우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인 간선차 배차 문제, 급지 수수료, 터미널 작업환경, 주 5일제 등 모든 문제에 원청 CJ대한통운의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청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가 없다고 하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2020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과로로 인해 쓰러진 노동자까지 하면 40명에 육박합니다. 택배노조는 당연히 이 문제는 과로를 유발하는 택배 시스템을 구축한 원청 택배사만이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원청 택배사는 노조법 제2조의 한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현재의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노동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는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로서 저희는 매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신 동료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원청의 과도한 경쟁이 만들어 낸 주 7일 배송과 새벽배송, 제한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당한 계약, 작은 실

수도 용납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불공정계약, 이러한 열악한 택배노동 시장에서 저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에도 저희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현재의 노조법 2·3조는 저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 플랫폼 없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민생을 대변하는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는 여러분의 가족의 가장입니다. 가족의 형편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부업으로 배달대행, 택배 알바, 대리운전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퇴근 후 휴식도 없이 가족과 따뜻한 저녁 한 끼 미뤄 가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업에 나섰을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일하는 시간과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으며 좌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시간과 땀으로 원청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이 상황,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해 주십시오. 거대한 원청에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외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에게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영업사원의 증언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다들 대기업 다닌다고 부러워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복리후생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대자동차를 판매하지만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모두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직접고용된 정규직 판매노동자만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외환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노동자에게 돈 몇 푼 집어 주고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정규직 영업사원을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점과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지점은 전국에 350여 개가 되며 정규직 판매노동자는 6000여 명이 됩니다.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대리점은 전국에 370여 개 되며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또한 6000여 명이 됩니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50 대 50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있을 때와 업무의 구분이 없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원청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원청의 승인 없이 대리점에 입사할 수도 없으며 판매가 부진하면 원청에 끌려가 부진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많은 교육도 원청이 직접 시키며 업무

감사 역시 직접 원청이 진행하고 업무지침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청에서 직접 징계합니다. 직급 부여 또한 원청이 합니다. 이처럼 대리점 대표는 원청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진짜 사장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영업점의 사장이 직접 사장인 줄 알았는데 직접 사장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리점의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현대자동차가 제조한 자동차만을 판매하고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대자동차가 지급한 계약서와 태블릿 PC, 현대자동차 명함을 들고 현대자동차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규직 영업사원의 일과 동일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받습니다. 기본급도 없고 4대보험도 안 들어 주며 10년을 성실하게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강제로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대리점 사장이 기분 나쁘다며 하루아침에 해고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부당한 대우, 비인격적인 대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해고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현대판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여 년 동안 차별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와 4대보험조차 들어 주지 않는 지옥 같은 노동환경을 바꿔 보려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민주적,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15년 9월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들에게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대표들은 대리점 판매노동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지노위, 중노위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판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했지만 대리점 대표들은 노동위 결정에도 계속 불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했지만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일관되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였고 2019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대표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단체교섭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60여 명의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들을 노동부에 형사 고소를 하면서 그제서야 단체교섭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 노조법 2·3조, 2조에 이 사용자성에 관해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해태를 한다든지 대형 로펌을 들이댄다든지 해서 미룬다면 참 부지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차

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에 혼란이 없고 이 노동법 개정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100개가 넘는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대리점 대표들은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에서 1개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단협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하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지만 대리점 대표들과의 단체교섭에서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가 나와야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전국의 대리점 대표들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백 명의 조합원 해고 통보였습니다.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당시 수백 명의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집단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ILO 핵심협약 87호 단결권 그리고 98호 단체교섭권에 관한 사항인데 다 비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4대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집단적으로 해고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악랄하고 잔인한 노조 탄압은 2022년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전국 370개 대리점 중 1년에 40여 개 대리점을 순차적으로 강제 폐업시키고 동일한 장소나 인근 장소에 2, 3개월 안에 똑같은 대리점을 다시 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전원 고용승계를 해 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7년째 1명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모두 솎아 내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입니다.

검찰과 노동부에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3년 내에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두 해고되어 노동조합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번 악랄하고 잔인하게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삼성역 3번 출구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투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이 10년, 20년 일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고된 판매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동원해 천막농

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24시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현대자동차는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저 또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시위금지가처분 역시 2022년 10월 14일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취지는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집단해고, 원직복직 등의 문구를 현수막, 피켓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연설을 하거나 구호도 못 하게 법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현대자동차에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원청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판사만 모르는 것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옥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단체교섭은 모두 거부당했고 대법원을 통하여 노동자성을 4년 만에 확정판결 받았지만 실질적인 진짜 사장,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결국 7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이며 간접고용 노동자인 비정규직 판매사원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동자의 말대로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용자들은 또 어떤 법률적 분석과 지원을 통하여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경영자, 경영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노동자들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화여대병원 청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서울병원 미화용역업체의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근무형태가 1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원청인 이화의료원이 1일 7시간 6일 근무를 도급계약으로 맺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2019년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에서 해 줄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1일 8시간 주 5일제 시행,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병원 근속기간 인정, 기준에 맞는 휴게실 및 노조사무실 제공은 용역업체와의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병원 직원이 아니다, 용역업체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국민은행 하청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 소속으로 현재 국민은행 상암동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국민은행 고객상담 부서는 고객과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 하청 소속이지? 계약직이지?' 하면서 무시하고 영업점 원청 직원은 정확한 고객상담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관련 업무를 물어보거나 업무 확인을 위해 하청 상담사가 통화 요청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멸적인

훈계를 하곤 합니다. 빈번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훈계를 들어 가면서까지 원청에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문의에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청 직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헤치고 스쳐 지나가는 등 초라해진 자기 모습에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만약 원청 직원 간에 모멸감을 느끼도록 훈계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갑질로 고발을 당했겠지요.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인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속 회사가 불이익을 받고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청의 고객은 동시에 하청업체 고객이기도 합니다. 같은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자존감에 상처나며 훈계받을 것을 각오하며 콜백을 요청하는 우리의 심정은 누가 알아줄까요? 상처받지 않고 원청 직원에게 업무를 물어볼 우리의 인권 또한 원청에서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인공지능 콜센터 도입으로 고용도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콜센터 상담사들은 보통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습니다. 업무도 다양해서 대출 상담, 사고 신고, 각종 예금 상담 그리고 채권 추심과 퇴직연금 등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최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AI 상담사를 미리 만나는데 대부분의 첫 번째 발생하는 민원은 AI가 안내하는 ARS 멘트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변경되는 업무를 숙지해야 하고 영업점 직원과 수시로 소통하면서도 실적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으며 AI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후속 민원까지도 사람 상담사가 처리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처럼 감정노동은 AI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사, 통신사, 보험사에서는 앞다투어 구축하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AI 상담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원청이 계약 단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소속 노동자들이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과 노동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AI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질 것을 한마음으로 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증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LG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LG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입니다. LG 하이케어솔루션은 약 4700명의 매니저들을 고용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그중 약 1200명 이상의 매니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급,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이 정한 임금은 전혀 없고 오직 제품에 대한 점검 수수료가 거의 유일한 수입입니다.

4대보험도 아예 없다가 2년 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겨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매년 나오는 LG전자의 성과급 잔치도 우리 매니저에게는 단 1원도 해당 사

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매니저들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주된 업무 장소는 고객의 집안입니다. 고객 갑질, 개 물림 등 각종 사고, 성희롱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고객의 갑질·성희롱에 대해 회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프리랜서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이 정말 LG전자와 대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점검하는 가전제품을 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회사는 우리 매니저들의 계정에 대해 매우 집요하게 개입을 합니다. 내가 가진 계정을 남에게 넘길 수도 없고 계정의 개수도 회사가 통제합니다. 회사는 늘 내가 관리하는 계정의 처리율을 모니터링하고 처리율이 낮을 경우 곧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노조가 생기고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니저가 속한 사무소에서 소장의 갑질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고 1~2주마다 매니저들을 모아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제품의 점검 및 관리매뉴얼 역시 회사가 철저히 통제했고 수시로 바뀌는 매뉴얼에 매니저들은 무조건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매니저들의 업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회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것은 이동하면서 일하다 어디서 화장실을 갈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뿐입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23년·24년 교섭이 모두 해를 넘겼습니다. 24년 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년 교섭에서 저희가 원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을 하며 내 돈으로 넣는 기름값에 대한 보상 5만~10만 원, 전임자 3명 인정, 제품별 수수료 500원 인상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매번 교섭 때마다 우리 교섭위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허수아비랑 교섭하는 것 같다고요. 사측 교섭대표는 늘 똑같은 말만 합니다, ‘LG전자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분명합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노동조건·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LG 하이케어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아니라 LG전자입니다.

LG 하이케어솔루션이 허수아비인 이유는 계약관계에서 드러납니다. LG전자는 고객과 렌털계약을 맺고 LG 케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고객이 내는 렌털료는 LG전자의 매출로 들어가고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의 일부만 LG 하이케어솔루션으로 내려 줍니다. 자회사는 고객과의 렌털계약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자회사는 모회사인 LG전자가 내려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G 마크가 찍힌 유니폼을 입고 LG 가전제품을 점검하지만 LG전자는 우리의 노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왜 LG전자는 우리 매니저들에게 일을 시킬 권리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자회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LG전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왜 법은 LG전자를 교섭 자리에 불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십 년 된 낡은 노동법으로는 회사들의 꼼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 나라 최고 대기업이라 자부하는 LG전자가 벌이는 특수고용, 자회사 장난질을 잡아내기에는 노동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성깁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조법이 개정되어

야 합니다.

이어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의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에는 저를 포함하여 69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습니다. 원청인 학교가 진짜 사용자, 진짜 사장입니다. 2년마다 진행하는 그들만의 입찰, 낙찰, 비용 절감, 중간 착취 업장에서 우리의 임금과 청소 면적, 필요 인원이 결정됩니다. 원청 학교는 용역비를 쥐고 흔들며 우리의 노동조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덕성여대는 이윤을 0%로 제시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의무가 된 휴게실도 원청이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까지도 진짜 사장이 결정합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총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용역비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급을 올리려면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학교는 그간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했던 단축근무 관행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교직원마저 떠난 건물을 홀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형식은 도급·위탁이지만 원청이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거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청이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임금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미리 결정하고 이에 맞춰 입찰공고를 내거나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하청과 노동자는 원청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제삼자를 매개시키거나 근로계약이 아닌 형식의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노동력 활용이 핵심이다 보니 우월한 지위의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교섭을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증언 당시의 발언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용역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300여 개 전철역 중에서 절반인 150역의 전철역 역무 업무와 철도 고객상담과 광역철도 기동팀 전체 업무, KTX 서울역 등 주요 역사의 승차권 발매 업무와 155개가 넘는 철도 주차장 관리 업무를 용역과 영업료 방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1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노동시간, 노동인원, 시설물 등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2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경영, 인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지배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KTX 셔틀버스라는 적자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가 떠안거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적자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역무원, 상담사,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었어야 할 임금을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간 착취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뺏어 갑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원청 정규직의 50% 임금에 3조 2교대로 더 장시간 일을 하면서 사람이 부족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 ‘권한이 없다. 코레일에서 승인해야 한다. 위탁계약도 빼앗길 판이다’라며 은근히 고용불안을 암시하며 차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실제 코레일은 2024년 자신들은 4조 2교대 근무 체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서화성에서 홍성까지 서해선 구간 개통을 앞두고 3조 2교대도 아닌 변형 비숙박 형태의 4조 3교대제를 코레일네트웍스에 받을 것을 요구하다가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민간업체에 위탁했고, 같은 이유로 2025년 1월 1일 자로 2022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코레일네트웍스로 전환 운영하고 있던 백석·주엽·마두·원흥역, 4개 역을 민간 위탁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 공동화를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데도 코레일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일터를 빼앗아 민간에 위탁한 것입니다.

이러니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코레일이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금과 노동권은 물론 하루아침에 일자리마저 제멋대로 빼앗는 코레일 말고 누구와 교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진짜 사장인 코레일과 교섭하고 손배·가압류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세상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는 것을 차별받는 우리 삶이 증명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관련하여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그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삼권 중 쟁의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는 있지만 원청의 하청사 바꿔치기로 대체근로가 합법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행사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포스코보고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면 하청사 노사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한다. 그러면 하청사 쟁의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 차질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온전하지 않은 노동삼권이 이 투쟁을 400일 넘게 만든 근원적 이유다’.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400일 넘게 천막농성과 투쟁을 했지만 하청업체는 노조를 무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김준영 위원장은 광양에 내려와 사측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23년 5월 29일 밤 11시 김준영 위원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7m 망루에 오른 이유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은 김만재 금속노련 전 위원장을 폭력 연행했습니다. 5월 31일 새벽 5시 15분, 경찰은 망루에 올라 진압봉으로 김준영의 신체와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경찰봉으로 폭행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것이 2023년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갔던 상급단체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성을 문제 삼으면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간 노동삼권을 유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관계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호받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손배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화면에 나오는 것이, 노란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십니다. 얼굴을 내밀고 왼쪽에 있는 노동자가 유최안이라는 당시 하청 노동자 부지회장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의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소속이 바뀌고 나서 470억 손배소와 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게 잘 안 되자 한화 본사 앞에 있는 통신탑, 저기 높은 통신탑 보일 겁니다. 거기에 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97일 농성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노위 여러 위원님들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중재를 하고 또 원청에서 그 단체협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해결을 해 줬기 때문에 김형수 지회장은 97일 만에 저기 높은 통신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은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 단체교섭의 근본 목적을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필수적이나 원청은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형해화되어 그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설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개별 사건에 국한되는 것일 겁니다.

2022년 하청지회에서 파업할 당시에 급여명세서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7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큰 배에 올라가서 참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받았던 급여였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 550%를 50%로 축소해 버리고 그것을 다시 50%를 인상해 달라는 그 요구를 그동안 묵살을 해 왔고 그래서 저 통신탑에 노동자가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6년 이후 줄곧 깎인 임금을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서 원상복구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의 도장과 발판 작업은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일로 꼽힙니다. 그들은 조선산업 핵심 인력이지만, 수십 년간 숙련공으로 일을 했지만 이들의 임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70만 원 정도로 턱없이 낮았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은 하청업체 기성금 3% 인상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정규직들의 삶은 또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그 철탑에 올라가서, 통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는 동안 번개가 떨어져서 CCTV 카메라를 때렸다고 합니다.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97일간 농성했던 김형수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노동력 중심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지역민의 모든 활동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라는 세계적인 조선소 2개

가 있는 거제는 특히나 조선소의 생존이 지역의 생존이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조선소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 희생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016년부터 지난 7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임금을 내놓고 회사가 하는 불법들을 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쉴 때도 유급이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쉬어야 했고, 그렇게 쉴 수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급기야 코로나 감염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임과 고통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폭포수처럼 떨어졌고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금도 하청 노동자들은 일 시킬 때만 대우조선의 구성원이지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어느새 하청 노동자들은 외부인이 되고 도구가 되고 일회용품 취급을 받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청 노동자는 대우조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두선 사장이 필요하다는 하청 노동자는 어떤 하청 노동자일까요? 아마 기술이 뛰어나고 근태가 좋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자 권리 의식이 결여된 노동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는 박두선 사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노동자의 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리 의식이 없는 노동자·시민이 만드는 세상,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가둬 둔 우리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암시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우조선 원청이 자신들은 책임 없다 하고 파견법이나 하도급법이나 이야기하지만 생산 관계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픈 배와 입은 상관없다고 해도 아픈 배와 입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지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곧 그 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을 위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찾아 입증할 일이 아니라 생산 관계에 대한 논리적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관계를 거부할 수 있게 한 법률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노조법 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어떠한 것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손배 청구를 안 하면 노동자들이 매일 파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노동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파업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법과 원칙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법과 원칙이라는 두 단어만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법이 지키려고 하는 세상과 그 원칙을 수행해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과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법과 원칙은 그 가치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손배·가압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빵을 훔치는 자를 욕하기 전에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욕해야 합니다. 빵은 배고픈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이 작동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법은 민주주의 법이 아니라 황건적이 일어났던 황제나 왕이 통치하던 봉건시대의 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가리고 막아도 안 될 것이다. 때리고 죽이고 가두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길이 훨씬 더 고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기에 저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우리 목에 목줄을 매려는 자들과의 싸움이기에 절대로 물러설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이 외침이 더 나은 세상과 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메아리가 되길 바라고 노조법 개정을 넘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청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목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해 피해를 봤다며 지회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갚아야 할 금액은 94억, 2024년 기준 한국 노동자 평균 연봉은 4371만 원으로 개인이 218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을 원청으로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7월 31일,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손배소 취하, 노조에 유감 표시 및 재발 방지 약속, 원청 사업장 내 하청노조 활동 보장,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노력 등 4개 항에 합의에 가까운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현대차 등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취하할 경우 경영자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사 측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관계에서 예측가능한 생산 환경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화오션의 사례는 노조법 개정안이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수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파업과 손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약 1만 5000명의 노동자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중 정규직은 대략 4000명이었고, 비정규직은 1차 하청과 2차 하청, 외주,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해 모두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사내 협력업체 자회사 소속이라고 분류된 상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의 지시를 받아 제철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대한 처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도 여름경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 방침을 밝히고 사내 하청업체들의 폐업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자회사로 하청노동자를 옮기기 위한 조건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임금 등의 다른 여러 이슈들과 맞물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대제철과 사내 하청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반발하여 집회를 진행했고 통제 센터에 진입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투쟁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길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파업이었지만 파업은 53일 동안 유지되었고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피눈물을 삼키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배신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양산된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파업 천막을 지키던 노동자들도 차마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경찰력의 위협은 이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성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통제센터 로비에 앉아서 대화를 호소하였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센터의 기능은 노동자들이 그저 앉아 있던 로비 이외에는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동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딱딱하고 추운 로비에서 불안과 상처에 떨며 잠들었을 노동자들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회답했습니다.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배소를 두 차례 제기했는데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노조와의 단체 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으며 노조의 쟁의행위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현대제철이 적시한 불법행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내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제센터에 진입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두규 변호사는 현대제철의 손배소에 이러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업을 규탄하며 이미 오랜 기간 싸워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금전 요구로 무마해 버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대화라도 좀 하자는 요구는 모두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법리를 떠나 현대제철이 보여 주는 태도는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자신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있으나 무엇 하나 받아들일 수 없고 노동자들이 대화를 하자며 통제센터에 그저 앉아 있었던 것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파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된다면 과연 사회가 정의롭게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같은 청구가 받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 사용자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두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조합만이 사업장 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토론회 증언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수십 년간 사내하청 간접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장 하도급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착취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허용치 않은 불법파견의 사용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하며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어 온 현대제철은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 가짜사장 뒤에 숨은 채 하청업체와의 계약·재계약, 폐업을 기획하며 마치 일회용품처럼 아무 데나 쓰다 버려도 되는 듯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로 내몰렸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위험과 죽음의 공장이라는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현대제철에서 죽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였다. 더 위험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감독, 그러면서도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선도 할 수 없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마냥 팔려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힘들다 토로하거나 거부하는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는 데만 정신이 팔린 현대제철, 이것이 죽음의 외주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의 고통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독한 차별과 착취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지회에 결합하였으며 지회는 오랜 시간 싸워 일정 성과를 얻어 가는 중이었다. 그러다 현대제철의 모든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니 탄압은 더욱 거세졌으며 치밀해졌다.

2021년 여름경 현대제철은 자회사전환방침을 밝히고 사내 하청 업체들 폐업을 시작했다.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향해 해고 위협까지 서슴지 않게 진행했으며 자회사로 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불법 파견 소송취하서 작성 및 부제소동의서 작성, 시정지시 이행 확약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봉쇄시키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불법 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현대제철의 계획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화를 하자, 노동 탄압 중단하라, 평생 노예로 사느니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며 투쟁을 시작하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공정한 전환 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 중단의 세 가지 요구를 걸고 마지막 수단으로 점거 농성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칼럼을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대법관 김선수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님의 글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노조, 노동쟁의의 각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3조 등 개정안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노조와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노동삼권에 관한 기본협약인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채 파업권 행사에 탄압 일변도로 대응했다. 불법 쟁의라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물론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박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2009년 5월부터 3개월 이상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이유로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47억 원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2014년 시민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고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으로 발전했다.

2017년 6월 ILO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10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ILO 가입 뒤 30년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각계는 2022년 9월 14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안이 2023년 11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 결과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8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됐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이행 방법 중 하나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환노위 대안은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 정의 조항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절실한 과제에 부응한 것이다.

간접고용은 도급·위탁·용역 등 여러 명칭에도 제삼자를 매개로 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와의 사이에 중간업자를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로 개입시킴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이용된다.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동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과 이익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권과 가치,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 조건의 법정, 노동기본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직접고용 원칙 또는 사용자책임 회피 방지의 원칙이 도출된다. 근로 관계의 영역에서는 책임과 이익을 일치시키고 노동자 보호에 충실한 직접고용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필요 때문에 중간착취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 2월 28일 아사히방송 판결에서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대해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력설의 견해를 채택하고 부분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6개 노동·시민단체는 2000년 6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정규직 공대위는 2000년 9월 19일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필자가 법 개정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 아사히 사건 판결을 참고해서 사용자 정의 조항인 노조법 2조 2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350차 보고서에서 원청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 인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불법파업이 되지 않으며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ILO 98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에서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며 사업주의 판단 기준으로 지배력설을 취했고 부분적·중첩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실제적 장애물을 검토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환노위 대안은 25년 전 비정규 공대위가 요구한 사항 중 일부분만 수용하고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입법한 것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운동본부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라고 표현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삼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 및 노조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이 있으면 사용자 지위에 있도록 명시했으나 환노위 대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운동본부 개정안은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원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으나 환노위 대안에는 이 부분도 빠졌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밖에 없다.

환노위 대안은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 범위에서만 사용자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수준으로 규율한 것이다. 원사업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익은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특수계급을 설정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헌법 11조 2항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이고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로마법 격언에도 반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간접고용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원사업주가 그러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돼야 비로소 원사업주가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익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전 대법관 김선수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님께서 두 번째 칼럼을 쓰셨는데요 그것도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협소하게 인정된 주된 이유는 노조법 2조 5호가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과 노조법 1조와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노동삼권의 목적에 관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정하고 노조법 1조는 노조법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2조 5호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노조법 2조 6호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는 노조법 5장 노동쟁의의 조정 규정의 적용대상이고 쟁의행위는 노조법 4장 쟁의행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양자를 달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각 정의 조항의 주장을 동일한 것으로 봐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른바 경영전권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실시 등을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노동자와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연합 기본권협약 등은 노동자와 모든 사람의 노조 결성권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모든 사람의 노조 결성권 목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역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노동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 사항인 사업체가 직면한 문제와 경제적·사회적 정책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권이 행사된 사안에서 그 목적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들을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는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확대했는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던 지난해 환노위 대안보다는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 유럽연합 기본권협약, ILO 등 국제기준에 비춰 보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여전히 현저히 협소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미흡한 수준의 환노위 대안조차 반대하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쟁의의 대상, 즉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노사자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 대신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쟁의행위가 사후에 조금이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되면 법원은 참가한 조합원 모두에게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최근에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비춰 단체인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라는 점,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의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환노위 대안 3조 3항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노위 대안 3조 2항은 민법상 정당방위 조항의 예를 따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했다.

환노위 대안 3조 4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의 경감 청구에 관한 민법 765조의 예에 준해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 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했다.

환노위 대안은 감경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한 민법과 달리 법원에 감면 여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환노위 대안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사용자가 노조와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부 사용자가 그렇게 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확인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환노위 대안에는 운동본부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로 발생한 손해와 노조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손해배상으로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등이다.

환노위 대안은 영국과 같이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선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근로계약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이지 노동자가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을 실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책임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노동자가 노무제공을 개인적으로 거부했든 집단적으로 거부했든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이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상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환노위 대안에서 빠졌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환노위 대안은 파업과 관련해 그간 법원이 축적한 판례를 성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운동본부 개정안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도 재계와 일부 정치권 언론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투자 급감, 한국시장 철수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두 차례 증명한 대한민국에 대해 ILO 기본협약도 준수하지 않는 미개한 노동 후진국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인가.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각 본국 정부에 엄중 항의할 사안이다.

대한민국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이 필자 한 사람뿐일까. 이제 대한민국은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후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가 됐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그 받침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있듯이 노동인권의 측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환노위 대안은 2000년 비정규공대위가 요구했던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늦어도 2021년 ILO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할 때에는 입법을 완료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늦어도 한참 늦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김선수 변호사의 기고를 두 편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23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도공사는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를 고

소했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1심은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영훈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영훈 장관님의 '빅라이'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2심도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2심은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불법파업 주장과 고소로 파업 이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당시 23일에 철도파업 기억을 토대로 '빅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를 억압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일부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때 철도공사에는 사장이 없었다. 2013년 6월 박근혜정부가 수서 KTX 분할을 결정할 때도 그랬다. 철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은 정작 철도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기에는 모두 철도에 없었다. 오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철도 노동자뿐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철도공사 분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무관한 문제를 가지고 불법파업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대우라는 시대착오적인 기획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폭로할 것이다. 그 방식은 인위적으로 경영상 위기를 발생시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한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매뉴얼과 동일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회계 조작을 통해 부채비율을 급증시켰다. 한진중공업은 영도공장 철수를 위해 수년간 선박 수주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철도 부채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철도공사로부터 알짜배기 노선인 수서발 KTX를 분할해 경영상의 위기를 창조했다. 기획된 정리해고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하여 돈을 갈취하는 자해공갈과 같은 범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고 이를 독일식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에는 없는 독일식, 영국제 독일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독일의 철도 구조 개편은 독일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무려 4년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나온 결과이다. 독일철도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3만㎞ 이상의 광

대한 철도망을 운영한다. 회사 지배구조는 독일 사회의 오랜 전통인 노사 공동 의사결정 시스템을 따른다. 노동조합 대표가 주주 대표와 함께 이사회에 동수로 참여한다. 독일 고속철도 이체(ICE) 역시 프랑스 고속철도 테제베(TGV)와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복수의 운영자가 경쟁하지 않는다. 독일 철도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은 엄청난 탄압을 받지도 않는다.

2023년 8월 방한한 독일 철도 전문가와 국제운수노련 지도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자신들의 철도 정책을 독일식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이런 독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독일에는 낙하산도 없고 동일한 고속철도 노선에 복수의 운영자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유로 수백 명이 해고되고 수백억 원이 압류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물류운송 업무, 차량관리 업무, 시설관리 업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업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의 변화를 철도공사 출신과 분할된 자회사에 신규 채용되는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달지만 모든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와 같은 일이 공공부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 아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입됐던 정리해고제는 외환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조기에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오늘날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정리해고와 동일노동 차별대우를 공공부문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공공부분에서 어떻게 기획되는지를 파헤칠 것이다.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또한 정권과 보수 언론이 노동자 파업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법과 원칙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증명할 것이다.

철도 파업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보수언론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자유를 위한 소중한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자신들만이 법과 원칙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일제 치하에서 제정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업무방해죄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허상과의 싸움이었다. 사적 자본이 공공부분보다 효율적이며 시장경쟁은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그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가설은 이론과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맹신은 극단적인 불평등인 1 대 99의 사회를 만들었다. 공공부분에서 시장 기능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영화의 가설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지만 민영화의 대가는 현실에서 존재했다.

이 글을 통해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철도 민영화가 어떻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지를 증명할 것이다.

민영화 신봉자들은 철도의 부채 원인을 철도 노동자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사도 차장도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민영 철도,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파산 위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철도파업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이 있을까? 하물며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정치 영역이 아니면 대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변질된 것은 우리의 삶과 정치가 무관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이다.

수서 KTX 분할과 그 과정 분석을 통해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의료 민영화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매뉴얼로 작동한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동안 비대해진 것은 국가권력과 시장 권력이다. 새 정치는 의회 권력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특권으로 통제받지 않는 국가권력과 시장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전 세계를 전쟁과 학살이라는 파시즘의 광기로 몰고 간 나치 정권에 독일인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히틀러의 큰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히틀러의 빅라이 이론은 대중은 지도자의 큰 거짓말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

나치 독일은 패망했고 히틀러도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에서 빅라이는 과연 사라졌는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서 KTX 민영화 계획은 노무현 정부부터 입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급기야 정치 개입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발전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공기업 낙하산을 내려 보낸 박근혜 정부는 공공 부분 방만경영의 책임을 공기업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이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는 범죄자로 만들었다.

히틀러의 오른팔 괴벨스는 '만약 거짓이 들통나면 그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덮어씌워라. 그리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를 만들어 주마'라고 말했다.

지난 1년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갔던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익에 반하는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지만 외교문제로 비화된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을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이라고 강변한다. 그들이 말하는 국익과 명예는 무엇일까.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했지만 이것 역시 우리 내부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둔갑을 했다.

이 철도 파업 당시, 제가 이렇게 지금 낭독을 해 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손배·가압류가 가해지고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에 노조법 3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전력 민영화를 앞두고 정말 파업 직전까지 세 차례 갔었었고 실제 파업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도 있지만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병원, 수많은 공장, 이런 부분들이 멈췄을 때 정말 국가의 여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해서, 사실 저도 그때 파업을 계획하면서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 부분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아주 제한됐기 때문에 국회나 당시의 청와대를, 둘 중의 하나 불을 꺼야 되겠다, 그래야 민영화를 멈춰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사실은 세웠습니다.

발전 분할 이후에 38일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IMF 이후에 정말 알짜 공기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적어도 이런 씻나락을 팔아서 다음에 농사를 못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강한 저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 발전 5개사 그리고 원자력, 수력원자력 포함해서 6개 자회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영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미 투자협정에 관해서 폭로를 한 문건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그때 미국 기업들, AES라든지 엘파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이 38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에는, 사실 그 이후에 노조가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도를 민간에 넘겼다면, 발전소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지금도 정말 이 시장화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알려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법 2·3조 관련한 사례로 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이 그 당시에 민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아주 엄청나게 몰아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었지요. 한국통신은 기간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3사 체계로 분리가 되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과 전력 또 철도는 그 상황들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통신은 과거에 모스부호에서부터 멀티미디어까지 또 지금은 위성,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전기는 아직도 저장이 사실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끼치는 폐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02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정전이 있었었지요.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소환이 되고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60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철도도 만약에 민영화가 사유화가 됐다면 지금 요금은 정말 엄청나게 폭등했을 겁니

다. 여러분들 일본 가서 기차여행 한번 해 보시면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도 이 손배·가압류,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해서 손배·가압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또 산업전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까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서 기계파괴운동, 러다이트운동이 진행이 됐었지요. 그래서 거의 한 6년 동안, 1811년부터 1817년까지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산업화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고용 없는 성장, 대한민국은 성장엔진도 사실은 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또 자동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단계 하도급이라든지 중간 착취 구조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현장에서 정말 후진국형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선산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청노동자들은 교섭해야 될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으로 떠넘기고 하청에서는 원청으로 떠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다. 또 특히 안전을 이렇게 비용으로 생각하고 또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인식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동안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그게 바로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이 테크산업들이 급하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동안 이 노동자들의 노력들을, 정말 피와 땀을 다 갈아 넣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또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해 보자고 계속해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장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돼야 대한민국이 저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료 노동자들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의료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지만 그 배달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플랫폼, 특히 택배 관련해서 여러 곳을 현장점검을 하고 방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과 그런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일부 개선해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

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그리고 긱(gig) 노동이라는 그런 신종, 사실 듣지 못한 그런 노동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정형 노동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는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가짜 3.3들도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대 보험을 누락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을 누락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기업들, 배달업체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노동존중 사회가,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저는 노동존중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일수록 또 모두가 팍팍한 삶을 살수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30년대 스웨덴에서는 사상자가 날 정도로 큰 노사분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살트셰바덴 협약을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에서 정부와 노동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기들이 얻는 부의 85%를 세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스웨덴도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못합니다마는 살트셰바덴 협약을 통해서 노사정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82년도에는 네덜란드에서 빔 코크 수상이 중심이 되어서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냈지요. 이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됐습니다.

1987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아일랜드는 사회연대 협약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 때 정부에, 청와대에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고 결국은 완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돼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8자 회담을 요구했고 그 8자 회담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만들어 가자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를 소집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 경총과 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8자 회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 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대화가 멈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하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에 대화를 원활하게 만들고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뒤에 하실 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서 조금 시간들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떠한 세상을 물려줘야 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34년이라는 세월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들 또 제 대를 이어서 노동자로 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하는 분들도 영원히 대를 이어서 기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역할이 전환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한전 민영화를, 분할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정년 연장을 이뤄 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 내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제도 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승자독식의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는 많은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꿔 왔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정치인이 되어서 노동조합에서 했던 주장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로소득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이 된다면 과연 그 세상이 옳은 세상일까요? 청년 실업, 노년 실업, 연금과 소득 단절 또 웰다잉, 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현재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 자살률 이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 준비를 하고 왔는데 빨리 끝내라고 해 가지고 빨리 끝냅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우재준)

(17시56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이

렇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가는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방송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토론을 속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루종일, 새벽 중에도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소중한 말들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 주시는 속기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를 지켜 주시는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률의 위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또한 나라의 미래가, 우리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선배들께서 만들어 주신 훌륭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논쟁입니다. 많은 근로자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바라셨고 또한 경제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이 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해 왔습니다. 논의는 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내놨고 계속해서 타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협안들 중에는 저도 놀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상식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헌성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조차도 재계에서는 이제 논의해 보겠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해 왔고 그리고 기업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나는 반기업주의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주축은 기업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고 돈 뜯지 말고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적으로 허들 만들지 말고, 그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추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강행을 멈추고 조금 다시 우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들도 노동자일 수 있고 기업가의 아들도 또한 노동자일 수 있고 또한 노동자의 아들도 기업가일 수 있다. 그러니 조금 역지사지해서 보자'. 너무 기업을 적대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그러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조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

분을,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조항들이 있고요 그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로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조금씩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노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반대로 기업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우려들은 어떤 부분들이 들을 만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조금 살피면서, 짚으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쌍용자동차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용자동차, 지금은 KG모빌리티입니다. 과거의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예전에 아버지께서 체어맨을 타셨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친근한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는 IMF 당시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법정관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법정관리 중에 다행히 상하이자동차라는 외국계기업에 인수가 되어서 조금 성장을 하나 싶었더니 어느새 다시 너무나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2007년 대량의 정리해고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경 정리해고를 하자 약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장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또한 각종 너트나 공구류를 던지고 새총을 만들어 발사를 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회사 주장을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그 당시 불법파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이 해고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 분께서 어떤 주간지에 그 47억의 일정 부분이라도 본인이 기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노란봉투가 상징이 되어서 마치 이 손해배상을, 조금 고통을 덜어 주는 그런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근로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4만 7000원씩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내 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이게 그 유명한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때 당시에 4만 7000원 이렇게 보내 주신 게 있고요. 아마 정말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4만 7000원씩 이렇게 모금을 해서 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던 게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아무리 불법파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 주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걸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 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비슷한 유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에 재직 중인 유최안 씨는 본인을 배를 만드는 도크에, 거기서 점거하는 형태의 그런 불법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22일 동안 아주 좁은 곳에 들어가서 본인이 불법파업을 하고 농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회사 차원에서는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때 불법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최안 씨의 이후 사정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유최안 씨 같은 경우는 22년 차 용접공이었습니다. 22년 차 용접공이었는데 월급이 약 200만 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일을 했고 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어떻게 22년 동안 숙련되게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밝혀졌습니다.

유최안 씨 같은 경우는 하청근로자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의 근로자였는데요. 먼저 하청업체에 본인의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또 단체교섭을 했겠지요, 단체교섭을 해서 돈을 올렸습니다. 급여를 올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가 파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와서 '이제는 지난 업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고용주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단체협상은 무효라고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협상을 했던 유최안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임금이 올라간 게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유최안 씨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와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여기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과 임금협상을 하려 했고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본인은 직접고용 관계가 없는 유최안 씨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런 태도로 나왔고 그래서 유최안 씨는 부득이하게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드는 도크를 점거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물론 불법파업이었고 수많은 손해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최안 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청업체가 형해화될 그럴 경우에는 이런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이제는 원청업체에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접 사업주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의 주장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두 번째로 오늘 논의될 노란봉투법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지식을 기점으로요, 제가 오늘 노란봉투법의 조항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노조법 제2·3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조법 제2·3조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바꾸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조항별로 그 파급효가 다를 수 있고 개별 조항별로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2조 4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도 2조 4호로 띄워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바뀌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의 개념은,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몇 가지 목적 범위가 있습니다, 정의 규정. 그중에 노동조합의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노동조합은 그 뿌리상 두 가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자기의 노동조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용 노동조합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을 보시면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은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원래 위협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 노동조합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근로자의 개념 안에는 그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두 번째, 재직됐다 해고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구직 희망자도,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개념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기업에 다니지 않고 그 기업에 다닐 생각도 없고 그 기업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그 기업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항은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목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입해서 뭐 하려고요? 아니, 나는 그 기업에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다닐 거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 기업 노동조합을 왜 가입해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가입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운동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활동 운동가분들. 그런 분들이 좀 노조에 가입하려고 지금 이런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방송법 관련해서 많이 다퉜습니다. 그

렇게 해서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방송노조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노조에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 같이 그냥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우스운 꼴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입을 하면요 민주당도 가입하겠지요. 또 MBC 노조에 다 같이 가입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MBC 근로 조건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고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이 조항 하나는 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랑 연결되는 조항인데요. 원래 근로자의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였는데요.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로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고. 노동조합에 아무나 가입할 수 있게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면 근로자가 된다, 이 부분도 이상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무런 일을 할 생각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어도 그냥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근로자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동운동만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명백히 근로자 개념을 형해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현실에서도 그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꽤나 나오더라고요. 노동 관련된 드라마들이나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을 외부에서 조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필요도 하고 일정 부분 이상 우리 건전한 노조 활동에 기여를 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외부에서 조력하는 것과 또한 그 노조에 직접 가입하는 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씩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 자체를 바꿔 버리면요 이게 추후에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MBC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서 존재해야지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조항은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논쟁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항입니다.

사용자 개념에 대한 조항입니다. 기존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후단을 신설하는 게 두 번째 개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씨의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원청업체 자체가

유최안 씨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서 일정 부분 직접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가지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판결만 알려 드릴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의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해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인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요 현재 가장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가장 논쟁이 있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 왔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최안 씨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사실 일정 부분 이거는 진짜로 이분의 근로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우조선해양 아닌가라고 볼 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에 있어서는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호한 경우.

우리의 하청업체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결정권이 진짜로 있고 그다음에 원청과의 관계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직접계약 관계가 있는 하청업체랑 근로자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또한 원청과는 직접계약 관계가 있는 하청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중간에 하청업체를 건너뛰고 바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대화를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에 그렇게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하청업체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나. 만약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직접 원청업체와 계약을 해 온다면 그러면 그 월급은 누가 어떻게 줘야 하나. 하청업체가 주는 건가 원청업체가 주는 건가. 하청업체와 관계가, 원청업체와 계약이 다양한 형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최안 씨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그 사례만 우리가 고민한다면 생각해 보면 '그러네.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어떻게 유최안 씨에게 뭔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예외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의 그런 경영자들, 기업가들은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단체교섭 협상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바로 원청업체와 교섭을 하기 시작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것인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

히 우리가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당장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정말 할 수 있는가. 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건가. 어느 정도 관계에 있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주에 해당하는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 사장님한테 임금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원청에 임금협상을 하러 매번 매년, 매 연말이 되면 뛰어갈 겁니다. 그러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아니, 나도 월급 올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하나하나 판단해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법에서는, 저는 판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업주에 해당한다 한 건 사실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씨의 사례처럼 정말 예외적으로 하청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들이 노동법상 해야 할 그런 의무를 해태한 기업들을 방지하고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록 직접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쟁의 등 노동법상 그런 의무를 해야 하도록 강제 지운 그런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의 판례들을 이제 법으로 직접 가져왔을 때 혼란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정 부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게 혼란 없이 지역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사례집도 내야 하고요, 어떠한 행동으로 이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직접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걸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예외적인 악용하는 사례들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제로 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하고 파업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재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다면 저는 설득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이 조항을 그냥 통과시켜서 향후에 모든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서 그것을 직접 판단받게 그렇게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에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 개념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근로자가 맞는가'. 많은 사업주들은 이 사람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수많은 의무를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제한되고요 각종 보험이나 여러 가지 배려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늘 '이 사람은 나의 근로자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프리랜서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MBC, 방송계에 있는 수많은 아나운서들·프리랜서들이 과연 근로자인가, 아닌가.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 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정된 급여를 받고 출근 시간을 지키고 지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용자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회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정의 범위를 넓혀서 그런 분들도 모두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주에 해당되도록 그런 식으로 많은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보면요 오히려 정의 규정보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본인들이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면 그러면 1심에서 2년, 3년 걸린 다음에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 그런 식으로 판단받으면 2심·3심 갑니다. 그러면 5~10년 걸립니다. 5~10년 걸려서 10년 만에 내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그러면 비로소 퇴직금 받고 그렇습니다. 그 소송은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 변호사였고 한때는 미용사 사건을 해 본 적 있습니다. 미용사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생각해 보면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은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도 근로자가 아닌가? 나 실질적으로 그 미용실에 출근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데요? 우리 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저도 퇴직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해서 그런 소송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해서 돈 받아 내는 데 5년, 10년 걸립니다. 그사이에 변호사 비용, 수많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그런 비용들은 다 별개입니다. 너무나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조금 쉽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 정의 규정을 넓혀 주지 않더라도요 정말 빨리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사실 꼭 법원에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요 고용노동부, 저는 훌륭하고 똑똑한 공무원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개별 근로자들이 그렇게 법원에 가서 힘들게 한 명 한 명이 소송하지 않더라도 더 쉽게 근로자 판단될 수 있게 그렇게 빠른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씨, 본인이 그렇게 원청에 자기도 단체교섭 할 수 있게 해 달라 주장해서, 안 돼서 본인이 22일 동안 정말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농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농성을 할 게 아니라 빨리 본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직접 근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 정말 하도급이 악용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지금 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막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 이야기하시

는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도급이 악용되고 정말 노동법상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협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부분 너무나도 많고요. 정말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고려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멈추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3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정말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대안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지금은 조금 많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냥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노동쟁의, 우리가 흔히 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쟁의의 목적에 대해서 바꾼 조항입니다.

PPT를 좀 띄워 주세요.

기존에는 노동쟁의에 있어서 원래 임금·근로시간·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즉 이 목적 범위가, 파업의 목적 범위가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었으면 이제는 해고·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고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 한 번 통과가 됐고 다만 정부의 거부권 때문에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이번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조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조항입니다.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환노위 소속이고 심지어 노동소위 소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의 정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정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마치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도 가능해지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의 해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 중대한 변경으로 할 거면 저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하고 이 법률이

왜 들어왔는지, 어떤 의도인지, 여기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어떠한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가 입법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법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것은 저는 추정하는 의도들은 있습니다. 저도 추정하는 의도들과 어떤 경우까지 파업의 목적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국회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리고 속기록에는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향후에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 버리고 내일 통과시켜 버리고 모든 해석을 사법부에 맡겨 두면요 정말 수많은 파업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수많은 현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런 소송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조항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작년에 통과됐던 부분은 이 조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원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부분을 파업의 대상으로 하다가 '의 결정'을 뺐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결정'을 빼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익분쟁이라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단체교섭도 하고 임금 결정이 합의가 안 되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가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 경우에 돈을 안 준다, 사장님께서 돈을 안 준다 그럴 때도 돈 달라고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권리분쟁입니다. 기존에는 권리분쟁,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노동위원회나 법원 가서 하라는 거예요. 파업이라는 건 업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업장을 당장 멈춰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로 안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해서 월급 받아 가시는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월급을 받아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파업을 안 하고 다른 형태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형태로 해결하자는 게 노동법 정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 기존의 노동법은 이익 분쟁, 즉 우리가 장래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파업은 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임금을 달라고 파업을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작년에는 조금 더 넓혀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실현을 위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 안이에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로 가서 구제를 더 쉽게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졌어요. 이게 더 세졌는데, 해고·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논쟁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위험하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저는 강행하시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을 하시더라도 적어도 공청회 정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청회 정도를 해서 이게 정말 현실에서, 법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적어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도 당연히 협력을 할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재통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기습적으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새로운 조항이 단지 작은 조항도 아니고요 정말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춰 세우고 다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이거 틀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새로운 개정안하고 내용이 달라요」 하는 의원 있음)

이거 아니에요?

(「‘해고’ 그 부분은 원래 들어가 있었고」 하는 의원 있음)

(「해고는 현행 내용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각목이 가에서 라까지예요, 전체가」 하는 의원 있음)

일단 ‘사업경영상 결정’은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그건 맞는데……」 하는 의원 있음)

사업경영상 결정이 이번에 들어왔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왜곡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까지 전당대회 하고……

(「고생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조항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다음 조항으로 PPT를 넘겨 주세요.

그다음 조항은 원래 우리가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한 축이면요 두 번째는 불법 파업이 됐을 때 그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들어온 조항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한', 그러니 합법적인 단체교섭,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 너무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을 해 보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까지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넣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실에서 노조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여쭤보면 그래도 노조활동이 조금 더 장려되도록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노조활동이라는 게 꼭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조끼도 입고 다니시고 좀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히 내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손해배상 당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 그다음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법상 정당방위 조항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민법상 정당방위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렇게 민법에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형사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형사책임이라고 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밀쳤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다치거나 해도 무슨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일반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형사책임의 면제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면제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밀쳤을 때, 밀쳐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이런 조항이 이미 민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법에 이것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조법에 아주 비슷한 조항이에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민법에도 있는 거고 하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도 만들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왜 만들지요?'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것은 배경을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일 거예요. 부당해고 같은 경우가 있으면 부당해고를 막는 차원에서, 원래 부당해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가야 되고, 노동위원회로 가서 그것을 구제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어? 불법 해고야. 그러면 불법 해고를 막는 방법으로 나도 이번에 불법파업한다. 불법파업한 거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 이걸 사실 하는 게 지금 조항의 그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정당방위, 민법에 있는 정당방위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도 그렇고 민법에서도 있는 그런 정당방위 조항의 핵심은 긴급성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현대국가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를 가했으면요, 때렸으면요 '어, 당신 나 때렸어. 나도 당신 한 대 때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대 이렇게 누가 위해를 가했으면 경찰로 가야 됩니다. 경찰로 가서 그 사람들을 고소를 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내 차를 때려 부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해서 재산상 손해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막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 집에 있는 돈 그냥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서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들이 있어요. 긴급한 경우들, 직접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려고 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그거를 경찰을 부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그냥 직접 바로 자력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긴급한 경우에 자력구제를 할 수 있게 해 준 게 그게 형법과 민법의 정신입니다.

자, 노동조합법 다시 볼게요.

부당해고를 하는 게 긴급합니까? 부당해고를 하고 임금체불하고 이게 긴급합니까? 임금체불하면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돈 받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번잡하다면 우리가 노동위원회를 조금 더 잘 보완해서 긴급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부당해고가 잘못됐다면 그 해고도 해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가서 막 점거하고 그럴 게 아니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나 또는 법원으로 가서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고 구제해 주는 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현대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반대로 가는 조항이에요. 사실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바람직한 방향의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제가 파업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파업의 본질이 뭐냐면요 파업은 원래 서로 고통을 버티는 절차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민사계약에 있어서는요,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협상이 안 되면 그냥 결렬이면 끝입니다.

내가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 월급 100만 원 올려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싫어요’. 예를 들어서 싫으면 나가면 끝이에요. ‘사장님, 나 계약 안 해’ 그러면 끝입니다, 원래는.

또는 경쟁하는 근로자가 있잖아요, 경쟁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어, 이 친구는 50만 원만 올려 줘도 된다는데? 난 너 말고 저 사람 쓸래’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원래. 엄격한 민사계약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협상에서,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단체로 모아서 파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업가는, 사업주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도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 파업의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그냥 사업장이 멈춰 있는 것 그 상태 자체가 파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둘 다 고통스럽겠지요.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수익을 내야지요. 그렇게 기업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을 위해서, 정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서로 조금 고통을 감내하는 절차를, 기간을 가지는 것 그게 사실은 파업의 본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파업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파업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파업을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요. 꼭 파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만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아니, 월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고 월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굳이 사업장을 멈춰 세우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이윤을 창출 안 하는 게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둘 다,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이왕이면 파업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부당해고가 있거나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파업 이외의 수단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면 그 방향을 더 강화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전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당시 2007년경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를 했고 그 해고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해고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제가. 불법해고였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계속 다른 일하면서요, 불법해고 됐어도 일단은 외부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빠르게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불법해고였음을 확인받으면 다시 바로 복직하고요. 그 휴직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까지 다 받으면 됩니다. 그 절차를 더 탄탄하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나라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쌍용자동차 사건 때처럼 다시 불법해고를 했다고 해서 나도 불법파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가야 할 옳은 방향입니까?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건.

저는 그때 당시에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오죽 희망이 없고 그랬으면 그렇게 불법파업을 했을까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 되는 건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불법파업해도 되게 해 줄게요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게, 그런 절차를 더 최대한 보장해 주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도, 이 조항도 저는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다음 조항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조 3항이지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진정 연대책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민법상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2명의 공범이 있다고 할게요. 2명의 공범이 있어서 어떤 손해를 입혔어요. 누가 어떤 집에 불법,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또는 어떤 차량을 같이 파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함에 있어서…… 2명이었다고 할게요. 2명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그 피해자가 정확히 한 명 한 명이 얼마의 손해를 입힌 것인가, 한 명당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한 경위를 모르거든요. 그냥 ‘어, 우리 집 창문이 깨졌네’라는 것만 알지 사실 A나 B 둘 중에 누가 정확하게 깬 건지 몰라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저는 창문 안 깼는데요’ 이러고 B 입장에서도 ‘저도 창문 안 깼는데요’ 이러면 분명히 창문은 누군가가 깼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민법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A, B 모두 합쳐서 그냥 깨진 창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나, A나 B 둘 중에 한 명한테 가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본인이 50 대 50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그냥 돈이 많아 보이는 A한테 100%를 청구해도 되고요.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진정 연대책임의 핵심이고 이 원칙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해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가해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받아 가기 가장 쉬운 사람에게 청구해서 돈을 받아 가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A가 모두 다 갚아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 A는 ‘아니, 사실은 내가

안 깨고 네가 깼잖아’ 하면 본인들끼리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가해자들끼리 최후에는 정산을 한다 그게 이 부진정 연대책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법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이런 부진정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정확히 누가 얼마나 그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파업 장소에서 누가 뭘 한지를 알 수 없거든요. 때로는 기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누가 기물을 파손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진정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그 파업에 참여한 누구한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악용됐냐면, 손해배상이 한 30억 나왔다고 할게요. 제일 미운 사람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제일 미운 사람. 노조 활동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전부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몇 명한테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노조 하지 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너는 청구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노조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용도로 또는 노조를 이렇게 사업주가 장악하는 용도로 활용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부진정 연대책임을 없애고 개별 책임으로 다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해 주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의 버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없애 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대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파업장에서 복면을 쓰고 있으면 누가 어떤 파업을 한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게 법원에서 먼저 나온 논리인데요. 법원에서 먼저 나온 논리인데, 기존의 부진정 연대책임은 인정을 하되 그 판결 안에, 이유 중 판단 안에, 이유 중 판단 안에 정확하게 A는 몇 프로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누구는 몇 프로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조금씩 적어 주는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어 주는 판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판결문에 어느 정도 적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악용되지 않는 그런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이미 있었고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부분을 적시하도록, 적어도 개별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조금 적시해 주도록, 총합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러면서도 개별 근로자의 책임을 적시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여러 부분을 들어 봤을 때도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걸 사실상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산업계도 일정 부분은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는 조금 괜찮은 부분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3조 4항입니다. 3조 4항에도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마찬가지 민사상으로도 여전히 이런 법리는 있어 왔습니다. 민사책임에서도 판사들이 민법의 대원칙 중에도 이렇게 감면에 대해서, 생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면하는 조항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조법에 이번에 명문화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사들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법파업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손해는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여 주기는 합니다.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줄여 주는데 그것도 개별 근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지나치게 노조 활동을 제약한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경제 상태, 부양의무,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등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로 저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조항인데요, 3조 6항 보겠습니다.

3조 6항, 원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좀 많이 해 오기는 했어요. 많이 해 오기는 했습니다. 기업들이 한 번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마치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다 봐주고 안 듣는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왔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원래도 그 부분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는 원칙으로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이것을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3조의2(책임면제)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한 번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잖아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파업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를 괴롭히는 용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협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파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노조 간부들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저번에 그것 있는 것 좀 면제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파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우리 김 위원장 사정도 알고 다 우리 회사 잘되자고 했던 것도 알고, 살다 보면 손해배상책임이 좀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나도 이해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것을 면제해 주면 배임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참 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은 얄밉게, 일정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파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격히 보면 노조법의 범위에는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노조법…… 지금 노조들이 바라는 건 이걸 명문화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해서 그래서 기업이 이제 '아니, 우리가 배임에 걸릴 수 있어서 손해배상은 못 하는 거야'라는 그 말을 못 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항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조항에 있어서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 근로자가 질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땐 노조가 져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했던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47억이었습니다, 47억. 민주노총 1년 수입이 4000억입니다. 민주노총 마음먹었으면 갚아 주는 것 일도 아니었어요. 1%가 안 돼요, 1%밖에 안 됩니다, 본인들 예산의. 지금까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다 합쳐도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민주노총 갚아 주는 것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갚아 준 거예요, 사실. 안 갚아 준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왜 안 갚아 주냐? 배임,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좋다, 이 조항을 받겠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받겠다. 대신에 신설 조항을 하나 더 넣자. '노동조합은 개별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이걸 넣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쌍용자동차 파업처럼 개별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현실적인 책임을 지자. 그리고 질 수 있는 힘이 있다. 힘도 있고 자금도 있다. 민주노총이 1년에 4000억인데, 받는 돈이 4000억인데 왜 그걸 못 갚아 주냐 했는데 그 조항은 안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서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홀로 남겨 둔 노동조합의 책임도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쌍용자동차가 그렇게 민주노총과 함께 2007년 강성파업을 하고 이후에 민주노총 탈퇴했습니다. 저는 본인들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왜 분담해 주지 않았나?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갈 거면 저는 적어도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조항입니다.

신원보증법입니다. 이것은 사실 별건 아니고요.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신원보증제도라는 게 최근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신원보증 이런 걸 제가 서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서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과거에는 이게 많이 좀 활용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활용이 됐고,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나중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전근대적이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신원보증인에게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꼭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신원보증법 자체를 고치자, 신원보증법 자체를 고쳐서 노동조합활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이제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건 없애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이고 오히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었던 게 조금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2004년인가 보니까 당시 오세훈 의원님이, 지금 시장님이시지요. 오세훈 의원께서 당시에 이것을 발의했는데 그때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잘 안 됐더라고요.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봅니다.

이렇게 제가 조항을 1개씩 봤는데요. 다시 1개씩 하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1개씩, 항목씩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합의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저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부분을 바꾸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이게 합의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어차피 대화도 안 될 건데 그냥 24시간 지나면 필리버스터 빨리 종결시키고 표결해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정착이 잘 안 될 거예요. 정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불신도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씩 조금씩 정리하면서 제가 어떤 조항들은 우리가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조항들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조 4호부터 PPT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2조 4호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넣은 것이지 엄청나게 바라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노동

조합에 혼란을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 마찬가지로……

(「삭제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삭제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로자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조항, 저는 이것은 우리가 향후에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서 알려 주면 좋겠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모습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실질적·구체적 관계에 있는 건지 그리고 하청·원청이 교섭을 할 때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교섭을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께 그리고 기업들에게 정말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업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라는 말 안에는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부분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할 때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요. 물론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텀을 주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를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혼란을 줄일 여지가 있지 않나, 재계의 목소리를 조금은 듣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2조 5호 솔직히 이것은 이번에 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너무 기습적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요. 이 법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데, 쟁의행위의 목적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입법자의 해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통과되면 저는 정말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항은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하고 적어도 이번에는 빠져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활동을 포함하는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법상 정당방위를 노조법으로 가져오는 조항 이 부분은 우리 현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력구제를 장려하는 조항인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더 노력하는 대신에 근로자분들께서도 파업하지 않고 자기 직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조 3항,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책임에 있어 내부 책임 분담 비율을 나누는 조항, 저는 동의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조 4항,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감면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만드는 조항,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인적 규정이지만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면제 조항이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취지 자체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저는 적어도 노동조합 또한 그 개별 근로자의 손해를 대위변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개별 근로자의 부담은 줄여 주되 노동조합과 기업이 그 책임을 조금 더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신원보증인에 대한 조항, 이것은 전근대적 조항이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조항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아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 추상적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조항을 하나씩 짚어 볼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조항 조항들을 보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양보해 온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나씩 예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문제점만 많이 말씀드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쁜 짓을 했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최초에 있었던 노란봉투법보다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만큼 왔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해서 적어도 조금 몇 가지를 조정하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통과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계에서도 일정 부분은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기사들을 조금 읽어 드리면요.

며칠 전 기사 내용 하나 읽어 드리면 제목은 '1년 유예해 달라. 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에 속도조절 공식제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경영계가 시행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대해 현행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 설명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2조 2항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이야기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3조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재계가 조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에 좀 현실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있어서도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경영상 결정을 파업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조금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업주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도 되어 온 부분이고, 두 번째 경영계가 1년 유예해 달라라는 이 말 안에는 사실 조금 대비할 시간을 주면 사업주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도 저는 읽힙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여전히 재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두 달 세 달 됐잖아요. 두 달 세 달 됐고 우리 김영훈 장관님께서 들어오신 지도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것은 앞으로 약 3년간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잘하려고 해도, 적어도 한 2년 몇 개월 되지요.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최다 석을 가지고 있는, 절대다수 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렇다면 너무 노란봉투법 이것을 마치 빨리 해내야 될 과제처럼 이렇게 그냥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분명히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는 기업가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업가들에 대한 인식이 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것들에 있어서 최근에 지나치게 조금 그런 측면들이 있었지요, 무슨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것들.

사실 누가 산업재해 일어나는 걸 바라겠어요, 소중한 자기 직원이 그렇게 다치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기업가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번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도 기업가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대화할 여지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급한 게 아니…… 다른 법안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국민들께 어떤 피해가 가는 그런 법안이라면 저희도 긴급한 통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몇 달이 늦어진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법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번 그래도 협상의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사건이 진행되게 된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할 때는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쌍용자동차 사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쌍용자동차를 타셨어요. 아버지는 체어맨을 타셨고 어머니가 렉스턴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은 쌍용차는, 딱 제가 학창시절이지요. 2000년 전후에 그때 두 분 다 쌍용차를 탈 만큼 저한테는 제일 애정이 깊은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자동차기도 하고 애정이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름만 조금 들었다가 제가 노란봉투법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예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원래 쌍용자동차가 자동차 기업 중에 우리나라 가장 장수 기업이더라고요.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당시에 하동환자동차였더라고요, 하동환자동차. 하동환자동차라고 해서 1954년에 현대차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무슨 버스를 가져오고 했더라고요. 해외에서 가지고 오고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다가 쌍용그룹에 인수된 건 1988년이었습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쌍용자동차에 인수가 되어서 사실 쌍용자동차가 쌍용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던 건 실질적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쌍용자동차 70년 80년 역사 동안 쌍용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던 건 사실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가 98년도에 이렇게 인수가 되어서 당시에 재미있는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었지요. 저도 여러 가지 그때 과거에 전설로만 듣던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무쏘, 코란도 그다음에 2인승 차량도 있고 캘리스타인가 칼리스타인가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IMF 시절 쌍용자동차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도산이 됐지요. 도산이 돼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2000년대에 쌍용자동차는 생각보다 잘나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시절인 2000년 전후가 사실상 쌍용차의 전성기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2000년대에 쌍용차는 잘나가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렇게 매출이 오르고 하니까 2004년에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차가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쌍용차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상하이자동차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쌍용차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기술 유출 의도로 쌍용차를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투자 없이 기술만 유출되고 사실상 기업은 방치된 상태로 2004년부터 쌍용차가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쌍용차는 2000년 후반에, 2009년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총 976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약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그때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쇠파이프, 새총,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사측 인원들을 막아 냅니다.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화염병도 있고요 새총도 막 날아다니고요 쇠파이프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는 결국 남부경찰청에서 3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이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의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 드리면, 흑백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불도 엄청 나 있고 이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갔던 사진들이 다 생생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는 결국 462명이 무급휴직되고 353명이 희망퇴직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파업을 했던 165명이 해고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시 손해액으로 3000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들의 10년 동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 쌍용차는 이분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그 손해배상액이 4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싸우는 기간 동안 22명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자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020년에 모두 복직되셨어요. 모두 복직되셨고 중간에 불법 해고다 아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당시에 정부가 주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에서 화해를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2020년 모든 근로자들이 결국 복직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파업 그 자체보다 그리고 손해배상 자체보다 저는 이후에 쌍용차 근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쌍용차 사람들은 그때 그 파업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 그렇게 파업을 했을까. 그냥 파업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좀 억울해도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일 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스물두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들도 다 후회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 사람들의 인터뷰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릴게요. 2009년 9월 8일날 인터뷰예요.

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주도한 조운상 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조합원 조운상 씨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조 씨는 쌍용차 조합원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별 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상급단체가 개입해 도움을 줘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며 민노총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일문일답이네요.

민노총 탈퇴와 선관위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사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운 게 아니라 쌍용차 문제를 정치파업으로 끌고 가 장기화하여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조와 회사 간의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며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지도부를 빨리 차기 지도부로 교체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급단체가 정치투쟁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노사가 정리해고 등을 놓고 싸우는 속에서 상급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상급단체가 개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산 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하는 수준의 투쟁이었지 공장 안에 있던 976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 없는 싸움만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래서 불법파업이 과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까? 오히려 저

는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용당했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법이 가야 할 방향은 이분들이 파업하지 않고 파업 이외의 수단으로도 본인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법파업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파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게.

당시의 기사들을 좀 더 보면요 조합원 73.1% 민주노총 탈퇴 찬성, 조운상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원 22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8일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올라온 안건은 민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 형태 변경 건과 차기 노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 2건이었다.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AS지회 등 사업장별로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3508명의 재적 조합원 가운데 2642명이 참여했다. 조직형태 변경 건 개표 결과 투표 참여자 중 1931명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고 264명은 반대했으며 436명은 기권했다. 나머지 11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차기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건도 조합원 2777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노총 탈퇴의 결심은 폭력 오간 총파업 때문인가?

조합원의 70% 이상이 민주노총 탈퇴를 선택한 배경에는 총파업으로부터 깊이 박힌 지도부와 상급단체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노사 상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 마련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 한쪽 편만 들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선 조합원들은 자연스레 민주노총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는 노조의 투쟁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 조합원들은 결국 민주노총에 등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 회사가 민주노총 탈퇴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한몫 더했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파업 끝난 지난달 1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평택공장을 방문해 협력업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 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쌍용차 도장팀에 근무하는 조합원 이 모 씨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파업 기간 동안 노사 간 상생을 모색하기보다는 선두에 서서 폭력을 조장해 같은 조합원을 갈라놓고 조합원만 편파적으로 챙겼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조합원 지 모 씨도 솔직히 민주노총 탈퇴가 옳은 일인지 반신반의한다면서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 나선 것은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를 주축으로 한 폭력투쟁 방식을 보며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상급단체 민주노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투표 절차와 과정을 위반했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탈퇴 투표를 추진했던 조합원이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 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해 쌍용차지부의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퇴 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본인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쌍용차 조합원들이 탈퇴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은 차마 부인을 못 하고 그냥 절차상 탈퇴 못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러니까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된 쌍용차 불법파업 사건에 대해서 과연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한다. 그러면 적어도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은 더욱더 후회할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저는 민주노총에 가장 비판적인 점은 이렇게 본인들이 상급단체로 이것을 진두지휘했으면 손해배상금은 갚아 줘야지요. 본인들이 갚아 줘야지요. 이것을 왜 민주노총에서 갚아 주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손해배상금은 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위노조가 되든 아니면 상급단체가 되든 그 부분은 힘 있는 노조가 갚아야지요. 노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왜 그것을 개별 근로자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서 막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지 여전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데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직원들 이참에 민노총 탈퇴를’에서 실제로 이날 쌍용차 직원들의 인터넷 카페인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는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댓글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이디 I 뭐를 쓰는 직원은 지금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민주노총 탈퇴다, 민주노총 탈퇴만 이뤄지면 정부도 고객도 우리 쌍용차를 다른 눈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도로 오히려 당시에 쌍용차 직원 분들은 쌍용차라는 것 자체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아끼고 단지 사측과 노측이 대립 구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상생해서 좀 잘 가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렇게 불법파업을 했던 쌍용차 조합원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이후에 취직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쌍용차에서 근무하다가 잘렸다라는, 해고당했다라는 그게 주홍글씨처럼 남아서 이후에 각종 다른 곳에도 취업이 어렵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와중에 계속 시위하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안타깝게 목숨도 끊으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2020년에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 전원이 복직되셨어요. 전원이 복직되셨고 이후에는 KG모빌리티가 됐지요. KG모빌리티가 됐고 KG모빌리티가……

지난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IMF라는 게 정말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역사 속에서 들은 느낌의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1988년에 태어났고 IMF가 1996년, 1997년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듣지는 못했던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에는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고 우리가 많이 극복하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가장 오랫동안 IMF의 수렁 속에 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처음 97년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상하이자동차에 인수가 됐다가 거기서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10년을 전전하면

서 살다가 여러 분이 돌아가시고 2020년이 돼서야 모두 복직을 하고,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최근에는 몇 년 동안 계속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게, 제가 이 기사도 그때 가져왔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106억 원이라고, 내수도 좀 부진하고 해서 일정 부분 감소도 됐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혹시 그사이에 적자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3년 연속 상반기 흑자' 이렇게 나왔어요. 상반기 흑자 이렇게 해서 21년 만에 쌍용자동차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KG모빌리티가 지난 상반기에 판매 5만 3272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9432억 원, 영업이익 285억 원, 당기순이익 111억 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글로벌 시장 신차 론칭 확대와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과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흑자는 2023년 상반기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002년,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은 이산화탄소 페널티 환입 효과가 반영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이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순수 영업실적만으로 이익을 실현하며 신제품 출시 및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상반기 판매에 내수는 1만 8321대, 수출 3만 4951대 등 총 5만 3272대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분기 판매가 1분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매출 역시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분기 1조 원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며 10년 만에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증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전망을 밝게 했다. 상반기 수출은 2014년 상반기 이후 11년 만에 상반기 최대 기록이다.

KG모빌리티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면 판매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흑자 규모 확대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외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구매 여정을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구독서비스인 KGM 모빌링을 지난해 새롭게 론칭했으며 이달 하순 익스피리언스센터 부산 개관을 앞두고 다양한 시승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출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핀다드사와 렉스턴 KD 공급 물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6월에는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을 시작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내수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상승세와 함께 환율 효과와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순수 영업실적만으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출은 물론 KGM 모빌링 및 익스피리언스센터 확대를 통

한 고객 접점 확대 등 내수 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 증대와 함께 수익성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원래 국회에서 특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저희 세대에게는 거의 역사 같은 IMF의 아픔을 가장 오랫동안 겪은 기업이 쌍용자동차였고 그리고 그 쌍용자동차가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IMF를 딛고 일어나는 기업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KGM을 응원하고 있고 근로자들께서 정말 더 승승장구하시고 더 행복한 가정도 이루시고 정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아픔이 없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늘 보면 길을 가도 저는 KG모빌리티 차량들이 지나가면 참 반갑더라고요. 마치 이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됐던 그 아픈 역사가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 이야기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축에 해당합니다.

제가 조금 앞에서는 한 개 한 개 개별 조항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어떤 파업이 합법파업인가,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게 그게 한 가지 축이고요.

두 번째는 합법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후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셨지요.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조금씩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 사건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도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통상협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조선이 되게 좋아, 선박이 좋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경쟁력으로 우리가 대미협상에서도 그리고 외교관계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선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조선소의 현실은 어떻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시에 협력업체가 한 200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수가 한 1만 1000여 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2022년 6월에 처음에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350여 명 정도 파업에 참여를 하셨고 그중에 도크를 직접 점거하신 분들은 일곱 분이셨습니다. 일곱 분이 도크를 점거를 했고 그중에서 유최안 지회장은 안에서 본인이 아주 작은 철창 안에 들어가서, 정말 0.3평의 철창 안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본인이 점거하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되었고, 당시에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아냐? 파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파업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근무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거부하고 대신에 대체근로를 못 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도 사업을 못 하든지 아니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만 데리고 같이 사업을 하든지 그게 원래 파업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그렇게 파업을 왜 하느냐 이런 비난들이 당시에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스스로 주장하던 손실액이 약 57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기업 측에서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에 약 20일 정도 기업이 다 멈추어 서면 그 손해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유최안 지회장과 그에 참여한 하도급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분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2년 차 용접공이었는데 시급이 1만 원이더라고요. 시급이 1만 원, 1만 300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22년 차 숙련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 강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조선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겠다고 하면서 20년 차 숙련공에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충분히 괜찮은 근로자들을, 숙련공들을 예우하면서 그분들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고액 연봉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그 경쟁력이 유지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숙련공들 다 떠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배를 만들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유최안 씨가, 왜 22년 차 숙련공이 최저임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어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은 꽤나 괜찮은 근로환경에 있지만 하청업체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일정 부분 임금이 올라도 다시 그 업체가 폐업해 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버리면 기존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악순환, 그런 것들에서 이분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런 현실이 우리 조선업체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최안 씨의 당시 치료 중에 인터뷰를 받으신 기사인데요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사였기 때문에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22년 차 용접공 시급 1만 350원. 조선소 하청의 현실을 알렸지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상징.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병원서 첫 인터뷰. 임금 대폭 인상은 못 했지만 집단교섭 성과. 푹푹 찌는 여름 1㎥, 즉 0.3평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이가 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팻말과 함께.

178㎝의 장신의 몸을 1㎥ 접어 넣으니 목이 굽고 무릎과 허리는 시큰거렸다. 스스로 만들어 들어갔으나 진짜 감옥보다 못 한 환경이었다. 오랫만에 몸을 죽 편 것은 시원했는데 희한하게 누우면 아파요. 휴일이라 아직 MRI를 못 찍었는데 뼈·관절·골반이 아파서 누웠다 앉았다 합니다. 제 건강 때문에 조합원들이 투쟁을 너무 빨리 끝낸 게 아닐까 싶어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들것에 실려 철제 구조물에서 나온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23일 경남 거제 대우병원에서 한겨레 기자를 만나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투쟁을 접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협상타결 소식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조합원 총회 끝날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아시다시피 엄청 아쉬운 안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22일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과 업체별 평균 4.5%의 임금 인상, 내년도 상여금 140만 원 지급, 폐업한 하청업체의 노동자 최우선 고용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박 속에 51일간의 긴 파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법과 원칙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파업의 상징이었던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의 업무방해 수사와 원·하청의 손배소 압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 부지회장을 만나 파업을 끝낸 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2년 차 용접공 월급 207만 원. '사랑합니다, 투쟁!', 노사 합의 이후 유 부지회장이 구조물 밖으로 나오자 100여 명의 조합원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가림막을 위로 높이 펼쳐 들었다. 그의 지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구조물 밖으로 나온 순간 눈물로 기억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안해서 많이 울었지요. 투쟁을 접고 싶어 접은 게 아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22일까지도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림막을 든 동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인 듯 눈물을 흘렸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조선업 불황 이후 악화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6월 22일부터 유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바닥의 철제구조물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노동자 여섯 명은 15m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배를 만드는 진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선박 건조작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조선업 원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긴 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이 배 띄우는 작업마저 막으며 위력적으로 투쟁한 첫 사례였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대대적 임금 삭감을 겪었다. 상여금 가운데 400%가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퉁쳐졌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30m 높이 선박에 매달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한 대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급 1만 원 안팎이었다. 22년 차 용접공인 유 부지회장도 시급 1만 350원을 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겨우 넘기는 금액이다. 그는 그렇게 한 달 꼬박 일하고 각종 세금을 내면 200만 원 남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1월 그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7만 5910원, 동료들이 시급 2만 원 인상을 받는 육상 플랜트나 건설업 쪽으로 떠나면서 남은 이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파업 내내 30%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30%의 임금 인상은 애초 깎인 급여의 원상회복이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파업 전 하청업체가 제안한 임금 4.5% 인상 수준에 그쳤다. 엄청 아쉬운 합의지요. 그래도 이번 싸움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윤장혁 금속노조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0.3평이라는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둔 31일간의 모습이 하청노동자들의 삶 그 자체였다. 이번 투쟁은 그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삭감을 받아들였는데 하루는 누가 하청업체의 사장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짝짝짝 박수를 쳤는데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의 노동조합 활동은 2017년 조선하청지회 결성 초기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이번 투쟁을 이끈 김형수 지회장이었다. 처음에는 김형수 지회장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해서 안 가려 했는데 사람들한테 같이 막아내자고 설득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가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업체는 용접사인 그에게 청소일을 시키고 힘들고 먼 곳으로 일을 보내기 일쑤였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홍보물을 뿌리다가 현장 소장에게 얻어맞는 일이 생겼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1년 버티니 조합원이 한 명씩 늘기 시작했다. 그래도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때 처음 만나봤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유 부지회장이 가입할 때만 해도 60여 명에 지나지 않던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지난 5월 현재 647명으로 늘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수년간 정체됐던 임금을 올리길 원했다. 지회도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해 지난 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파업 거점을 8개를 세웠는데 회사 직반장 관리자들이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현수막을 뜯어내 거점이 4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 노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노노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고 갈등만 재생산되니까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유 부지회장의 감옥 농성과 6명의 조합원 15m 고공

농성을 결정한 이유다. ‘감옥에는 내가 들어갈 테니 다들 탐내지 마라 그랬지요. 내가 용접사니까. 그리고 동료들 위해 희생하고 싶었고요’.

유 부지회장은 원청노조가 금속노조 탈퇴안을 총회 찬반 투표에 부치고 양쪽의 갈등으로 다음 날 8일 법원 결정이 될 때까지 개표가 중단된 데 대해 하청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원청노동자 처우도 개선될 텐데 회사가 노노 갈등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은 회사뿐인데 안타깝다 말했다.

자원한 일이었지만 0.3평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첫 일주일은 무릎이 아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 관절이 시려 1시간마다 깨고 찬 바닥 냉기에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아침이 밝으면 그는 감옥 밖에 바를 정 자를 한 획씩 그으며 날짜를 셌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동료들의 눈물이었다. 끼니를 챙기러 오는 동료들은 그와 눈을 맞추지 못하며 울었다. 고공농성 하는 동지들은 그를 향해 괜찮나 소리쳐 물으면 그는 평소보다 더욱 또박또박 큰소리로 괜찮다 대답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공권력 투입 소식이 처음 들려온 날엔 무서워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벽 한쪽에 매직으로 단호한 결의라고 썼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오면 저항하겠다.

지회가 주목하는 이번 합의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하청업체 대표와 집단교섭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청업체들은 집단교섭을 하자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해 왔다. 유 부지회장에겐 하청업체와 개별교섭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2016년 유 부지회장이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해 150여 개 하청 가운데 유일하게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 냈다. 하지만 3개월 뒤 업체는 폐업을 선언했다. 새로 온 하청업체 대표는 전보다 더 열악한 취업규칙을 내밀었고 노동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규모가 영세한 사내 하청업체는 쉽게 폐업하고 임금 체납도 잦았다. 그런데도 파업 43일째이던 지난 14일 정부는 첫 담화문을 내고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하라며 조선하청지회를 압박했다. ‘개별 하청업체하고 투쟁해 봤자 폐업하면 끝인데 그런 대화만 하라는 건 그건 투쟁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섭이 진행 중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회사 쪽이 더 기세등등하거든요’.

외부에서는 하청노동자가 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집단교섭으로 합의안을 끌어낸 것 자체가 하청노동자들에겐 큰 수확이다. ‘우리가 극단적 투쟁을 한다고들 하는데 극단적 투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쉽게 안 바뀐다는 걸 이번에 본 것 아닌가요?’.

투쟁은 끝났고 옥포조선소도 다시 배 생산을 시작한다. 유 부지회장도 이제 다른 싸움을 준비 중이다. 손배소 등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지만 그는 다시 노동조합에서 싸움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상황이 항상 있어요. 투쟁이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언젠가 또 한 번 터질 텐데 그때 대비해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 드린 건,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꽤나 많습니다. 제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투쟁이라는 접근을 아주 공감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의 사연이 너무 간절함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본인께서도 오랫동안 일을 한 근로자인데 하청업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이중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자들 중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들은 잘살고 그 아래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잘 못사는 구조를 말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정도에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우조선해양의 본사 직원들의 연봉은 상당할 겁니다. 아마 꽤나 고연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청업체에 있었던 유최안 씨 같은 분들은 숙련공의 연봉이 거의 1년에 3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문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뭘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자는 부분 못지않게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도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해법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왜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하고 직접 단체교섭도 하고 직접 쟁의행위, 즉 파업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고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돈 없는 하청업체 대표님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우리가 대기업 원청업체한테 단체교섭을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바로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법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 번째, 복잡합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물론 저는 일정 부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교하게 제도를 잘 개발하고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일정 부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나중에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엄청 혼란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겠지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접 대기업 원청하고 협상을 한다, 교섭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청업체 대표는 들어줘야 됩니까? 하청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협상은 원청이랑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되게 모호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지라는 부분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봤으면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여야가 같습니다. 여야가 같고,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잘살고 형편이 괜찮고 격차가 벌어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이 상황의 격차를 조금 줄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꼭 단체교섭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협상하지 않더라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청 자체가 조금 더 협상력이 강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

로자들을 고용시키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현재 법상으로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냥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하청업체를 시켜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페이퍼 컴퍼니 하청업체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사실상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동법만 볼 게 아니라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도 봐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더 신장시키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러면 대기업들이 굳이 직접 근로를 피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청근로자가 직접 원청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올려 주는 것 그게 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이야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통과되지 않은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해법들도 동시에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비록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노란봉투법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도 저는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는 상임위부터 조금 수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 오셔서 제가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우원식 의장님께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 진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작용을 해야 이중구조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중구조 개선이 환경노동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안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산자부도 불러 보고 싶고 중소기업청도 불러 보고 싶고 공정위도 불러 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노동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너무 무리한 법안이 나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히려 먼저 이중구조 개선 특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일정 부분 수정해서 다시 중소기업이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그런 부처들과 또 노동 관련된 부처를 묶어서 뭐 '노동중소기업위원회' 이렇게 만들든지 그래서 좀 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도 한 번씩 이렇게 섞어 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렇게 있는데 환경과 노동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또 시너지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르게 묶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환경과 산업도 한 번씩 묶어 볼 수 있고 있고 환경·농업 쪽도 묶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동은 반대로 또 중소기업 이런 쪽도 묶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 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회 상임위나 특위의 구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좀 강하게 두고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노란봉투법의 통과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는 노란봉투법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몇 가지 조항은 양보를 할 수 있고 몇 가지 조항은 오늘 진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 특히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데 이 노조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중구조 문제가 바로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아마 제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의장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지도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제가 챗GPT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최근에 챗GPT를 이용해서 뭐라고 나올까, 이중구조 개선 방법에 있어서 노란봉투법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죽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꽤나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는 읽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난제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 제도적 개혁,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주요 접근 해법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금·복지 격차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같은 일을 하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유사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 선도. 공공기관부터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고용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규직 고용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 강화, 경직된 해고 제도 개선. 기업이 정규직 해고에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듭니다. 일정한 절차와 보상금을 조건으로 합리적 구조조정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전직 지원 제도 강화. 해고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취업 교육, 전직 컨설팅, 실업급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남용 억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원칙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개선. 원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성 격차 완화 지원. 세제 혜택, 기술 투자,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도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임금 격차 완화 유인. 상생협력 임금펀드와 같은 제도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차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노동 이동성 제고, 전직 재교육 체계 강화.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이직·승진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간 이동이 쉬워집니다.

노동시장 이중화 완화. 청년·여성·고령층이 비정규직에 머물지 않고 정규직·전문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대타협 모델, 노사정 대화 복원.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구조로 전환하고 임금·고용 유연성, 사회안전망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합니다.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 해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강력한 실업보조, 재취업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대 계층 간 균형. 청년층은 진입 기회 확대하고 기성세대는 고용 안정, 기업은 합리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균형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챗GPT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대부분 매우 동의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점 또는 이런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나 각종 혜택에 있어서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는 있지만 정규직의 너무 강한 고용 경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한다는 점.

우리가 과거에는 해고라는 게 아주 청천벽력 같고 무서운 일이었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씩 더 선진국이 되고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해고에 대한 부담이나 해고에 대한 부분을 개인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가 부담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해고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요 조금 더 고용하거나 하는 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그렇게 만약에 혹시나 해고된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냥 완전히 사회의 광야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상당히 두터운 보장책으로, 재교육으로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두텁게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고된 분들도 다시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양보도 하고 일정 부분은 함께하면 저는 새로운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의 성공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빨리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씩은 그런 부분도 한 발짝씩 나아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슷한 접근이기도 하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문제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많은 이슈들 중에는……

잠시만요, 자료가 조금……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청도에서 철도 선로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신 우리 철도 근로자들 제가 조문도 다녀왔는데요.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고 너무나도 참 슬프더라고요. 참 슬프고…… 한 분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리시고 한 분은 저보다 한 일곱 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유가족들이 펑펑 울면서 진짜 너무 슬퍼하시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야가 한마음일 거예요. 한마음일 거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 또한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조금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사건들을 정리를 해 봤어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2025년 2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고속도로가 붕괴돼서 사망사고가 났고 6명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토부에서 보니까 현대ENG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5월 19일에는 SPC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께서 기계 끼임 사고로 또 사망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반복된다는 문제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질책도 많았고 장시간 저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사고도 있었지요. 그래서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에서, 같은 회사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면허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또 8월에는 DL건설에서 의정부에서 50대 노동자가 그물망 해체하다가 또 추락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고 보고 직후에는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해당 체계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8월 19일에는 청도군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철도 근로자들이 기차가 오는 걸 모르고, 기차가 그렇게 덮쳐 버려서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레일 한문희 사장께서 지금 사표를 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산업재해가 아직까지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800여 명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해 사고 사망자 말고 질병 사망자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십니다. 참 너무 참담한 사고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없앨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많이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관님도 계시지만 장관님께는 '오너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오히려 그러면 코레일 사고는 대통령 책임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말의 진의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기업 탓만 하기보다 진짜로 산업재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사실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건 정말 여러 명의 산업재해 현장의 플레이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중에는 사업주가 있겠지요. 사업주가 있고 오너도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너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너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오너만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동료 근로자들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근로자들이 그 현장의 어려운 점 또는 위험한 점을 가장 먼저 발굴하는 사람들이 또한 동료 근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료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남 일처럼 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움직이게 할 것인가. 내가 옆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 내 동료 근로자인데 오늘 점심 때 술을 한 잔 먹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렇게 못 하도록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자중하자,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덥다고 안전장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에 적정한 상벌은 무엇인가,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채찍과 당근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보험사와 같은 데들입니다, 보험사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 부분을 산재보험을 다룹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보통은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도 확실하게 보장도 해 주고요. 사고가 나면 그래도 너무 가혹하게 막 가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피해보상금을 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예방 기능에 있어서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이 현장은 위험성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매긴다든지 또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현장에는 보험료를 매우 적게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보험료의 차등으로 일정 부분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정 부분의 교육도 할 수가 있겠지요. 보험사에 상당 부분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능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근로복지공단의 공보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가 사고 예방 기능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말고도 많습니다. 발주자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는 상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발주하는 사람, 도급인이지요. 도급인이 너무 공사 기간을 짧게 한다거나 또는 공사의 가혹한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에 대해서 발주자가 특별한 위험을 지거나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도 사실은 사고의 원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발주자가 고용하는 감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서 감리가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발주자가 지는 형태로 해서 또한 일정 부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발주자도 함께 지면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고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각종 노력들을 조금씩 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사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 위험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완전히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고통을 그 근로자들, 피해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최대한 많은 보상금도 줘야 되고요. 최대한 많은 보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상체계도, 보장도 충분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 혹시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혹시나 돌아가신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유족들이 남은 삶은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청도에서 돌아가신 우리 근로자 분에게 제가 갔는데 아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가 있으신데 너무 어린 아이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망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참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부담해 줘야지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님 오늘 오셨지만 피해보상금 이런 것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저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그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하는 대신에 너무 이렇게 기업을 좀 약간 못살게 구는 그런 행동은 또 좀 줄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겁을 내고 있고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또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노란봉투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또한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이앤씨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래서 면허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DL건설 사건에서도 모든 산업재해의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업이라고 사실 자기 근로자가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제가 알려 드리면 2021년 대통령께서, 당시 지사 시절이었지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질문은 '이 지사에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 주축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고 돈 뜯지 말고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적으로 허들 만들지 말고 그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때 또 이야기를 해요. '반기업적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업 임원들이 뽑은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는 친노동 반기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한 분들은 경험으로 안다'. 실제로 그러네요. 이 지사는 2019년 7월 매일경제가 대기업 50곳과 중소기업 50곳 등 1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네요. '2017년 대선에서 재벌 해체를 주장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불합리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 그렇게 표현했는데 재벌 해체로 또는 기업 해체로 와전됐다.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 같다. 지금부터는 기업들을 자유로운 합리적 경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관세 협상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관세 협상도 참 어렵고 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법인세 인상도 하셨고 지금 노란봉투법도 통과한다고 하고 계시고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관세 협상 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결국 제일 앞에 나섰던 게 또 기업들 아닙니까? 기사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기사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몇 개 보면 '한미 관세 협상 앞두고 총수들 미 집결. 삼성, 현대차, 한화 전면 지원 나서', 제가 좀 짧으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재계 1위와 3위를 포함한 주요 그룹 수장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례적 행보는 이번 협상의 중요성과 긴박함을 반영한다. 이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재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방미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닌 기업들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진짜 자발적으로 가기야 했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니까 갔겠지요,

그래도.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미국 자동차 관세로 인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한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앞세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구체화에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협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현지에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5조 9000억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대미 공급망 협력에 가세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미국 내 대형 원료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미국 제약 클러스터 내 입지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도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협상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간 기업이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협상의 중요성을 미국에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총수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이번 협상은 절박한 사안이라며 이번 방미는 단순한 경영 행보를 넘어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사활적 지원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이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대통령께서 또 미국도 가시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시는데 저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많이 느끼시고, 사실 관세 협상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관세 협상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정책실장…… 다시 읽어 드리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방미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닌 기업들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저는 완전히 자발적이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 건 오히려 정부 못지않게 기업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조금 하셨어요, 기업인들께 고맙다. ‘이 대통령, 기업인들에 관세 협상에 애써 줘 감사, 방미 성과 많이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업들에게 저는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업들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요. 배제하지 말고 노조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협의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게요 최근 재계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3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생각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오히려 그런 입장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도 전향적입니다. 저는 어떻게 노란봉투법은 협의가 되기가 참 어려운 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재계에서 먼저 조금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조 안에도, 2조의 2항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노란봉투법은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고 이게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혹시나 불법적인 파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법률은 적어도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도 그 정도 협상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소리를 마치 지나치게 배제하고 그냥 기업을 악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들을 할게요,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이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유용한 부분은 저는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갔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가 비록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졌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비판과 비난도 하시지만 그중에는 괜찮았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정책들은 저는 이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의 성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사 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 불법파업도 용납하지 않고 대신에 불법적인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했던 방향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초반에. 보면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 강성 노조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세금 지원을 받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대로 302억 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회

사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유통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는 등 불법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의 몇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정부의 근로 손실일수는 56만 일 정도 됩니다. 그 전 문재인 정부의 근로 손실일수 150만 일의 약 36% 정도가 됐습니다. 노사분규 지속 일수는 9일 정도로 20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파업은 적은 게 좋습니다, 파업은 적은 게. 이거는 그냥 친기업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원래 노사관계에서는 교섭이 잘돼야 합니다. 교섭이 잘돼서 타협이 잘돼야 되는 거고요. 그 교섭과 타협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노동쟁의, 파업입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을 멈추는 거지요. 사업장을 멈추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대신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출은 계속해서 있겠지요. 장비대여료, 각종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지출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소비되는 기간 그게 파업입니다. 그게 쟁의행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월급을 안 받을 필요가 없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굳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업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을 못 하는 게 답답하면 조금 더 성실히 협상에 임하게 될 거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월급을 못 받는 게 답답하면 조금 더 성실히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서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성실히 협상에 임해서 서로 교섭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것 그게 결국 노사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파업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없이 파업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교섭이 더 잘되면 그게 훨씬 나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업은 안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56만 회로 문재인 정부 150만 회의 36%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요 고용률은 70%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 정부에 있었던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저는 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불법파업에 대해 우리가 엄단함으로써 일정 부분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이 방향은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불법파업을 너무 안타깝게 보기보다는 다소 엄정하더라도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노사관계를 맺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논의로 프리랜서 이야기들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산적한 현안 중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가 프리랜서 문제입니

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요, 특수고용노동자.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법상 또는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배달라이더 같은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달업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플랫폼업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그렇다고 음식점에 직접 속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시키는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주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업주가 없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업주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다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우리 당의 기댈 언덕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논의가 앞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노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을 열어 보면요 이분들 대부분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법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꽤나 많고요 이들을 위한 일정한 특별법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업체에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소와 일반 다른 업체들, 다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결국에는 그 조선소로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근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이 함께 일해야 되고 사실상 원청에 상당 부분 지시를 받는 형태의 그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조업의 경우 또는 아니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청의 지배관계에 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선소가 제조에 있어서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소의 경우에는 하청과 원청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제조업에 있어서는 하청과 원청 관계가 조선소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모든 노동조합 관계에 있어서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기보다 조선소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제조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선소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번에는 조선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일하는 노동자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특수하게 다들 다른 것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각각이 겪는 어려움들도 그 산업군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참 많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걸 너무 하나로 묶기보다 그 산업군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우리가 개발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사회와 조금 더 소통하고 합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저는 결코 무시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업장들, 다른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당장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 혼란들을 감내하기에는 정말 사회가 큰 홍역을 겪게 될 겁니다. 홍역을 겪게 되고 그게 안착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조선소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면 오히려 조선소 근로자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서 먼저 시행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도 일단 많이 줄어들고 두 번째, 그 현장에 더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어떤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근로자들이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로자들이 더 잘살고 누락되는 사람 없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점을 더 정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가 오히려 사회가 무너지면 그 또한 저희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본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대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상황에 맞는 좀 특수한 그런 직군에 맞는 형태의 법안들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조선소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조선소는 하나가 덩치가 커요. 한 물건 안에 충분히 하청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에 들어갈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올려 달라라는 그런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건설업일 겁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라고 하지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어떤 항목별로 모두가 세밀하게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얼마나 더 올린다, 하청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얼마나 더 올린다라는 부분이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볼펜을 들어 보이며)

다만 일반 제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런 볼펜을 만들거나 하는 현장에 가면요 이것 하나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걸 원청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협상한다는 게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강행하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 혼란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조금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처음이고요. 이제 처음이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총선 때까지 3년 남았고요. 3년 남았으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이자 다수당인 상태가 지금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부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고 도산했지요. 무너지고 도산하고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당시에 기아차·현대차가 합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쌍용자동차, 우리의 쌍용자동차,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기업 쌍용자동차도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던 2000년대가 오히려 쌍용차에는 황금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체어맨과 렉스턴 같은 당시에는 히트작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쌍용차였지요.

그런데 그런 쌍용차가 2004년에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를 매입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에만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고 2009년에는 대량 해고를 하는, 1000여 명을 대량 해고하는, 2600명이네요. 2600명을 대량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반대했던 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그때 당시에 파업에 돌입했고, 폭력적인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쇠파이프, 새총, 지게차를 이용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 그런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산적 피해가 약 300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회사 측은 그 불법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때 47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후에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이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강성노조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어디에서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22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자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이분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고 다행히 2020년에 문재인 정부의 주재를 통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복직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까지 모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들이, 그래도 KG모빌리티는 이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시 흑자전환을 했고요. 이러한 오랜 수렁에서 벗어나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으로 살아났습니다.

IMF로부터 시작된 이 수렁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기업이 KG모빌리티, 우리가 아는 그 쌍용차, 너무나도 반가운 그 쌍용차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후의 생각입니다. 그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요 다들 후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들 후회했고, 파업에 참여한 이후에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고요 아직까지도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파업에 참여한 걸 반대했고 지금까지도 거의 파업이 없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 보장된 파업이 저는 안 좋다,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그때의 트라우마가 강했고 오히려 그때의 불법파업이 결코 그분들에게도 정말 유리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때 당시의 파업은 일정 부분 그 근로자들뿐 아니라 상급단체였던 민주노총의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사실 그 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죽기도 하고 힘들었던 순간 동안 왜 그 돈을 갚아 주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저는 민주노총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어떻게 갚아 주냐 웃으시는데 갚아 줄 근거는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우리가 바로 즉석에서 입법안의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환노위에서 상당 부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의 입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그리고 쌍용차 판결에서 나왔던 손해배상금은 47억입니다. 1%입니다, 1%.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손해배상금을 면제시키는 게 과연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불법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있어서는 그걸 더 한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신장식 의원님, 저 다음이시지요?

(○신장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있어서는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문제의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여러 가지 중의 아주 작은 한 가지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명확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의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번에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혼란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일정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전부 다 이번 관세협상을 이재명 정부보다도 더 먼저 앞서 나서서 정말 잘 이끌어 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먼저 지금 협의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태도로 나오는데 그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조금 더 대화가 있고 협의가 있고 타협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우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장식)

(21시58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신장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의원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를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2003년 10월 22일 '정은임의 영화음악'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정은임 씨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85호 크레인 위에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익 노조위원장을 기리며 생각하며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은임 씨는 그다음 해인 2004년 3월 18일 이렇게 김주익을 소개합니다.

19만 3000원, 한 정치인에게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일하는 아버지 고 김주익 씨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 19만 3000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9만 3000원, 인라인 스케이트 세 켤레 값입니다.

35m 상공에서 100여 일도 혼자 꿋꿋하게 버텼지만 세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 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일하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의 그 힐리스 대목에 목이 멘 이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힐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를 잃은,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노동귀족이라고 지탄받는 대기업 한진중공업의 노조 지부장이었지요, 고 김주익 씨. 고 김주익 씨가 남긴 지갑 한번 볼까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재산을 다 가압류당하고요. 그에게 남은 돈은요 세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 줄 수 없는 돈, 13만 5080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귀족다운가요?

2003년 10월 스스로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김주익, 그보다 아홉 달 전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호루라기 아저씨로 불리며 조합 활동을 하다가 분신 자결한 고 배달호가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더 이상 부인을 자식들을 눈을 마주치며 바라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죽음 앞에 모든 법적 논쟁은 무용합니다. 모든 법적 주장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법리도 이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손배·가압류 이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분, 그리고 혹독한 손배·가압류를 이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쌍용자동

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추모하며 오늘 발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정부 때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기업은 구속·수배 등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묶어 두는 방법에서 손배·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으로 노동자 압박의 방식을 바꿉니다. 형법으로 때려잡다 이제는 민법을 앞세워 돈으로 말려 죽이겠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그리고 한진중공업 김주익을 시작으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기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거나 목을 매는 등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며 절망했고 또 싸웠습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죽음 앞에 모든 법적 주장은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법률가들, 국회의원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격하게 얘기하면 법리를 앞세운 입바른 소리는 잠시 침묵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최소한의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진행한 손해배상 가압류, 해당 노동자 본인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예금, 부동산, 심지어는 신용보증인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상 노동자, 가압류 걸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자식을 앞세운 그의 70대 노모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자 현대자동차는 그제서야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이 손배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고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관계망까지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가압류는 빠르게 일단 통장과 재산을 묶어 두고 본재판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노동자 개인의 목줄을 죄어 왔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실시한 기업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 그래서 개별 노동자가 더 이상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기업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과 수배가 노동자들의 현재의 삶을 부수는 것이었다면 손해배상 가압류는 현재의 삶을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삶의 미래, 그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일입니다. 미래를 잃어 버린 많은 노동자들이 좌절하고 목숨마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노조를 혐오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효한 방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개정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국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배달호와 김주익이 손배·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0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법을 지켜서 비정규직 노동을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고용 의무 또는 의제 조항을 적용해

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정규직 의제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공장을 점거하여 파업을 하게 됩니다. 파업 이후 현대자동차는 당연하게도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느냐? 466명. 손배소송 금액 가액은 213억 5000만 원.

과연 현대자동차는 46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13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후에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배소송 취하의 조건을 내겁니다. 노조를 탈퇴하라. 실제 파업에 참가한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213억 원은 불가능한 돈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노조 밖으로 내모는 데 이것만큼 유용한 도구가 사측의 입장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 2014년에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해서 2년 넘었으니까 직접 고용 의제한다, 이거 직접 고용한 거다. 이 의무를 확인하고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대자동차는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했던, 손배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했던 현대자동차는 이제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와 손배소송 취하를 교환하자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입니다라고 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손해배상 213억 5000만 원 그 중에 당신 몫 얼마 이거 취하해 주겠다 한 겁니다. 기업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을 걸어 놓으면 대상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 압박하고 몰아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손배 청구하는 기업의 목적은 돈을 받아 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 낼 수 없으면 노조 활동하지 마라, 그 고통을 이겨 낼 수 없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같은 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다 취하해라. 즉 보복 조치입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을 앞세워서 법원을 해킹해서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말라 죽지 않으려면 노조를 탈퇴해라, 말라 죽지 않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해라.

2014년으로 가 볼까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7억 손배 판결을 합니다, 회사에 33억, 경찰에 14억. 물론 그 전에 가압류도 걸었습니다. 가압류 29억 먼저 걸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것도 부족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퇴직금도 빼앗겼습니다. 치킨집 열 수 있는 자금마저 다 탈탈 털어서 빼앗아간 겁니다. 평생 모아 달랑 하나 있는 부동산도 묶여 버립니다. 가족의 문제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끝나지 않는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만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명, 두 명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합니다. 미래조차 잃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항거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호

소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가족을 포함해서 무려 삼십여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들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법리는 잠시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는 것이 최소한 법률가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 투쟁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다단계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중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다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자 원청을 끌어내기 위한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파업까지 이어집니다. 주로 파업을 하면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진짜 사장 나와랍니다. 제발 진짜 사장이랑 교섭 좀 해보자.

법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대다수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교섭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파업을 하고 쟁의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손해배상이 되돌아옵니다.

특수고용 하면 생각나는 분들 택배, 화물노동자들 계시지요? CJ대한통운에서 20억, 하이트진로에서 28억, 제조업 하청노동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무려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영진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로서. 받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송달료가 몇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위해서 몇 억의 돈을 인지송달료로만 허비한 겁니다. 순전히 돈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몇십 명 몇백 명을 상대로 해서 470억 손배 청구한 사람들 돈만 놓고 따져보면 배임 아닙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옥죄자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이 손배 청구하면 노동조합을 넘어서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기업들 대부분이 조합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면서 전액을 개인에게 다 청구를 합니다. 손배 목적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따라서 노동자 개개인을 괴롭힘으로써 개인이 기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2022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유최안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와 함께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간접·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불러일으켰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및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된 조선소 노동 하면서도,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조선소 노동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업 영역 굉장히 많고요 정말 고됩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

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소 노동자들 수없이 저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이런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을 알게 된 국민들도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하청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업과 제대로 교섭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건 뭔가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또한 당사자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회사와 교섭을 통해 파업을 풀고 다시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4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액, 가압류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교섭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위가 원청이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꼬투리 잡기 식 법리적 주장은 잠시 침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절박함을 호소하고 투쟁하고 하는 동안 법원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도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2조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된 판례인데요. 먼저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97누3644 판결 그리고 2006다40935 판결 등을 통해서 사용자를……

노조법 제2조 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판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사용자가 학교장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냐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학교장이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또 임금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장이다라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재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

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노조법 제2조 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를 교장선생님이랑 체결했어도 실제 사용자는 누구다? 지방자치단체,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다라는 판결입니다. 진짜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주체인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자동차 딜러들, 이 사람들은 현대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팔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판결을 했나요? 카마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카마스터들이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현대자동차입니다—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 판매자, 판매인들, 판매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다. 사용자성을 확대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에서의 사용자성의 확대는 대법원 판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억지로 기업을 악마화하고 노조를 편들어서, 법리를 구부려서 만드는 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조법 3조와 관련된 판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다30610 판결입니다. 태광산업 관련된 판결인데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작업을 중지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나아갔을 때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법리인데 이걸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일이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측이.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들의 사용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노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노조법 3조 개정하는 것 잘 보세요, 거기에. 다시 보세요. 판례 번호 다시 알려 드릴까요?

즉 노조법 2조·3조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왔던 결정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제화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낭비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24시간 이상 우리가 시간을, 하루하루 1분 1초가 급한데 찬반토론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2003년부터 하더라도 22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간에 거부권으로 법안이 되돌아오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로 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 그리고 ILO 2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는 기업의 손배 청구가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뭐라고 권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워낙 많거든요. 이게 이만큼인데 제가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축약을 하고 축약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양입니다. 워낙 꼼꼼하게 권고해 두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관련한 얘기, 특히 비정규직 고용에 관해서 유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단기·임시 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상태라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한다가 아니라요 한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원회는 또한 대기업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하청·파견·특수고용에 의지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권 보호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한민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형태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위원회는 '(a)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기간제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두1729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저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하라는 권고를 우리가 2017년에 받았어요.

'(c)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38항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복 조치는 형사적 보복 조치와 민사적 보복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에는 사용자성을 극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법 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는 파업권 행사가 합법 파업 요건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저해되고 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 당시의 제도로 인해서 저해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의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에 의한 합법적인 파업권 침해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독립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조사 실시를 권유해 왔던 것입니다. 유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 왔고요.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접요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관련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요청을 공개했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실태, 아무래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체되지 않았으면 또 어떤 보고를 해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까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보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ILO의 직접요청은 전문가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에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ILO는 한국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87호 협약, 98호 협약에 대해서 작년 3월 달에 직접요청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 요청에 제대로 답이 오지 않으니까 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24년에 그러면 어떤 요청을 했느냐? 노조법 2·3조, 그것도 요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꼼꼼해요. 국제노동기구가 정말 꼼꼼한데 그중에서 노조법 2·3조 관련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과 관련된 요청사항 중에서 노조법 2·3조 관련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라는 권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서 검토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진술했다'. 노조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노조법 2·3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우리 상황이지요.

'정부는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와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쟁점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노사단체와 완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아래 제시한 권고사항에 맞춰 국내법이 협약에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쟁점 사안이 있다면 노사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협의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협의 좀 해라.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협의는커녕 건폭몰이 해서 2000명을 수사했습니다. 700

명이 기소됐고요. 4명이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 8·15 사면에서 감옥에 있던 건설노동자 네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했습니다. 무슨…… 완전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권고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지요.

저는 이런 권고를 받았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까 우재준 의원도 '귀 기울여 들어 볼 부분이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2023년, 2024년 ILO 권고를 받았을 때 대통령을 향해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만큼 유엔에서, 이만큼 노동자들이 제발 이 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자고 할 때는 '건폭이다'라고 해서 노동자들 때려잡는 데 몰두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의 진정성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ILO는 87호 협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떠한 구분도 없이 단체를 설립·가입할 노동자·사용자의 권리, '위원회는 앞서 노조법 제2조제1항 근로자 정의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이 독립적 자영인,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 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동자가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 우리 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일 아침이면 개정될 그 법의 통과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부는 실제로는 노조법의 폭넓은 근로자 정의와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프리랜서 또는 독립적 자영노동자, 택배노동자, 경마장 기수,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유지·보수 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배우, 골프장 경기보조원, 매점운영노동자, 자동차 판매노동자,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이 이미 자신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스로 노무제공자, 특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지요.

'정부는 종속적 자영노동자 및 노무제공자가 포함되도록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거 누가 추진해서 계류되어 있던 겁니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추진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자신들이 추진한 것처럼 정부는 ILO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한국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맞잖아요.

이에 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과 레미콘 노동자, 당국은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그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트럭 차주 겸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의 규제 감시 대상인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사업자단체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가지고 교섭하는 것을 담합행위라고 해서 공정거래법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법 그 해당 사항에 사업자단체(노동조합 설립필증 받은 노동자·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라고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노동자들, 특고 노동자들 때려잡으라고 공정거래법을 사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서 화물연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 방해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노동자들 기소하고 감옥 보내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그래요, 독립적 자영업자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화물연대 그 조직이 사업자단체고 그들이 안전운임제를 교섭하는 것이 담합행위입니까? 이런 몰상식·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ILO에서도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작년에 권고했어요. 그 권고를 듣고 정부 여당에서 뭐 했냐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뭘 했다고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말 안 들어 주세요?'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뭐라도 목소리를 내시고 이제 와서 '조금 더 토론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같이 한번 토론합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국제기구에다가 거짓 보고하고 마치 자신들이 야당이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윤석열 씨가 거부했던 그 법안을 마치 자신들이 추진한 것처럼 ILO에 거짓 보고나 하고…… 그때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논의를 위해서 시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ILO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독립계약자인 화물 운전기사와 같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과 관련 행정소송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자영 화물차주 겸 운전기사의 조직에 대한 인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정부가 이들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동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법과 실제에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노조법을 개정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모든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드디어 제공할 게, 내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드디어 제공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계류 중입니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드디어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8월…… 내일이면 24일인가요? 8월 24일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물론 저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보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보고해 주십시오. 드디어 보고할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전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ILO가 권고한 내용의 제목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자영 노동자 또는 비전형 고용노동자 관련 몇몇 사안에서 설립신고 심사 관행이 구성원 모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당국이 결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노조는 설립신고를 하면 신고가 돼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로 따져 보겠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태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설립필증이 나오는 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화물연대 이런 데들, 특고 노동자들은 설립필증 받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에 관한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했다. '제발 법 개정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한테 비수가 돼서 날아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노조 설립신고 제도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구성원이 근로자로 간주될지 여부는 고도의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사실확인으로 인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구성원이 법상 정의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설립신고가 지연된 사례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설립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허가, 노조는 사전허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전허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근로자 정의와 관련된 이전 의견을 참고하여 이 부분에 관해 정부가 취할 조치들이 자영 노동자 및 비전형 노동자로 구성된 조직의 설립신고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누구는 근기법상 근로자고 누구는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아니고 누구는 산재보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제발 이런 이상한 제도 좀 고쳐 달라는 거 아닙니까? 1971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몸에 불을 댕겼습니다. 만약 전태일 열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현실을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무 종사자를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그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근로기준법을 불태워 버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변화된 노동 현실에 맞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아닙니까?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법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그거라도 해 왔기는 합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해결해 오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을 보고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래 독일법의 정신은 노동자들의 선반, 테이블 옆에 법전이 있고 그 법전을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시민 누구나 살펴보면 내가 이 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무슨 페널티를, 벌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법률가지만 모든 법 중에서 노동법 체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첫 단추가 저는 노동자가 누구고 사용자가 누군지를 제발 간명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요, 특히 2조 개정은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다. 첫걸음이다. 조금 늦었지만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LO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제한, 위원회는 이전 직접 요청에서 법률이 노동쟁의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이것도 이번 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문제, 정부 정책 및 연대파업과 관련된 파업을 포함하도록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노사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누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야당이 했지, 정부가 했습니까? 정부는 거부권 행사만 했지, 야당이 올리면.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게 노동쟁의의 목적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철도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에 관한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징계를 예로 설명했다.

노동부장관님, 너무나도 잘 아는 사례지요? 민주노총은 또한 노조법 제2조제5항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경총의 우려에 주목하면서도 파업의 정당한 목적을 노동쟁의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와 그 조직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 수단을 박탈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쟁의와 직접 관련한 사항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파업, 연대파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임금, 근로조건 말고는 파업하면 안 된다라고 기본 원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파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에서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넓히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ILO가 권고하는 내용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ILO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이번 노조법 2·3조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대상을 딱 한 발짝, 반 발짝 넓히는 겁니다. 아직 ILO 권고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ILO는 연대파업까지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노동자들이 다 감옥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하지 마세요' 하고 노동자는 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밥상을 들어 엎고 집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야, 그거는 너는 항의할 수 없어. 네가 항의할 수 있는 거는 밥상에 김치를 올릴지 고기를 올릴지 두부를 올릴지 이거에 대해서만 쟁의행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에 반찬을 뭘로 할지만 쟁의행위의 대상이야. 밥상을 누군가 들어 엎거나 집에서 밥상 앞에서 쫓겨날 때는 쟁의행위 할 수 없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정리해고 때문에 반대하면서 파업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가고. 불법파업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감히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이 ILO 권고에 따라서 근로자성의 범위를 제대로 다시 재규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주면 교섭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교섭을 할 상대방이 분명해지고요 교섭을 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장 나와라, 정리해고 반대한다라고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파업이 되는데 불법 파업 그 파업에 나아가기 전에 교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교섭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섭이 활성화되나 불법파업이 더 많아지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ILO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가해지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원청 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또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내법적 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노조법 2·3조 개정하지 않겠다, 첫발도 떼지 않겠다라고 ILO에 얘기를 한 거지요.

경총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사용자 정의 확대가 자유계약과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억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확대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기 보세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 계속.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실을 다시 말해 줘야 돼요. 법 개정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다, 법 개정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했다. 이거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와 정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다 보고를 안 해요, 국제기구에. 이거는 어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떠나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기만하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만하는 전술을 쓰면 안 되지요. 국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은 계약 당사자의 대체근로 투입 등, 이건 민주노총이 ILO에 얘기한 겁니다.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은 계약 당사자의 대체근로 투입 등 하청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부재가 종종 폭력적 충돌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또한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실상 사용자로 간주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이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하청 노동자가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가해지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민형사상 제재에 대해서도 ILO는 한국 정부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전 직접 요청에서 파업권의 평화로운 행사에 대한 형사 제재로부터 보호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4조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거 보호하라고. 파업권 행사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행사한 파업권은 보호하라고 돼 있지요. 그러나 형법과 노조법 모두 여러 유형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거 법률상에 상충이 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에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부여되지만 폭력·파괴 또는 전면적 직장 점거가 수반되는 경우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정부는 노조법 제4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보장하며 업무방해는 포함되지 않고 폭력이나 파괴가 있는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고 확인을 했습니다. 즉 정부가 이렇게 ILO에 얘기를 했네요.

위의 내용에 주목하면서도 ILO는 민주노총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를 제약하며 정부의 설명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파업에 형법 제314조, 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진술했음을 확인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가지고 파업 노동자들을 규제했던 거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거는 지나치게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이것은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합니다.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방해, 법 일반을 삭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는 형법, 일본법 베껴 왔는데 일본도 없앤 이 형법의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보란듯이 짓밟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사 법치주의가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너무 많이 짓밟았어요,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법률로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이러한 일들은 저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가 전격성,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지요. 업무방해 할 때 업무방해 판례를 보면 전격성 얘기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심각성,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기준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개념을 좁혔다. 사실 이거 막 쓰기는 어려웠나 봐요, 조금 좁히긴 했어요. 하지만 좁혔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좁힌 개념 안에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마구 사용하고 있어요. 형법 한 조항 가지고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개념을 좁혔다고 언급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한 파업 등에 대한 민사상 면책의 근거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지요.

위원회는 노조법의 최종 조항이…… 올해도 있었나요? 헷갈리네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위원회는, ILO는 노조법의 최종 조항이 평화적 성격과 관계없이 여러 유형의 파업에 대해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이 폭력적인 쟁의행위나 법률이 협약에 부합하는 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폭력 행위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ILO도.

그러나 평화적 파업을 수행한 노동자에게 형사 처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따라서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노동자와 그 조직이 평화로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로 형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LO는 또 정부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인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파업 참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 참가로 인해 노동조합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보유하고 있지 않다니.

노동부장관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철저한 무관심. 때려잡았으면 됐지. 파업해서 감옥 간 노동자들 안중에 없다라는 철저한 무관심 내지는 새빨간 거짓말.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 소송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거는 조사를 했어요. 2009년부터 2022년 사이에 151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그중 142건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딱 집어서 또 민주노총을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소송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점거로 인한 생산 라인 중단이었으며, 업무방해 민사 소송했다는 거지요. 종종 협박이나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동반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 조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과도한 청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까지만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자기들이 제출한 것처럼.

경총은 해당 법 개정안이 특정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며 불법 파업만 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도 경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민주노총은 파업 관련 손해배상을 명령한 200건의 법원 판결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는 151건이라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도 200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업의 이유가 대부분 사용자의 단체 교섭 참여 거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파업했다는 거예요. 또는 임단협 하는데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하니까 쟁의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불법 파견 및 부당해고, 노조 파괴 및 기타 법 위반이었으며 이는 파업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보호가 불충분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ILO는 손해배상 민사 청구에 관한 노조법 개정 진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개정 법률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드디어 올해는 사본을 보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 윤석열은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렇게 기만했어요, 국제기구를.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알려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내일 통과되면 드디어 ILO에 '우리는 여기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사본을 보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또 굉장히 긴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루는 노조법 2조·3조에 관한 내용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조 단체교섭 촉진, 협약 적용 대상 및 교섭 수준이라고 하는 항목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ILO의,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소규모 기업 비정형 형태의 고용노동자,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 플랫폼 기업에서 고용된 분들이지요. 라이더 이런 분들이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

자지요. 배민에서도 일하고 쿠팡에서도 일하고 하니까요. 그런 노동자 및 하청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간 자발적 협상을 위한 기재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ILO는 또한 정부의 노조법 제30조 3항,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 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나 채택한 정책 및 자발적 조정과 합의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간의 단체교섭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자도 다수고 노동자도 다수고 고용 형태도 다수인 이런 사람들이 빠르게 교섭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거지요. 그래야 경총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1년 내내 n차 교섭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지금 법 개정으로 1년 내내 n차 교섭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노동자도 있고 다수의 고용 형태를 가진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단일한 사용자가 여러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지 않습니까? 다수 대 다수가 됐어요. 우리가 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평생 먹고사는 이런 고용 형태가 사라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고용 형태, 새로운 기업 형태에 맞는 교섭 방법을 제발 좀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에 대해 이전에 제공한 정보를 반복하며 교섭 수준의 결정은 당사자들의 몫이며 정부는 대화 제공 및 현장 지도를 포함하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랬나요? 건폭몰이하고 다 때려잡았으면서.

그러나 민주노총은 특정 범주의 노동자, 소규모 기업, 비정형 고용 형태. 소규모 기업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비정형 고용 형태,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 및 하청 노동자—배달 라이더들입니다. 다수의 사용자, 대표적으로—의 단체교섭 참여에 관한 계속되는 여러 어려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첫 번째, 정부는 소규모 기업 사업장 노동자의 초기업 수준의 교섭 참여 촉진과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다. 단사에서 그 단사에 고용된 노동자들하고만 교섭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노동자 절반하고도 교섭 못 합니다.

두 번째,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산별교섭의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현행 제도에서 산별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노조 지위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기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교섭창구 단일화도 너무 어렵다.

세 번째, 현행 교섭제도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친사용자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거나 단협 체결을 연기하고 종업원 수를 위조하는 등 교섭대표 노조 지위 확립 또는 단체교섭 자체를 방해하는 사례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건설회사와 식품회사의 최근 사례처럼 비정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기운 불균형한 권력 구조에 취약하다.

네 번째,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형 고용 형태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표명했고—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그런 견해를 표명을 했지요—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한 방송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정규직원에 대한 교섭은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방송 작가에 대한 교섭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기업 단위가 아닌 수준의 교섭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적합한 교섭 수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반복했다.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것을 초기업 단위 교섭을 보장하고 촉진하지 않는 한 기업은 초기업 단위 교섭을 먼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교섭하지 않고 억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갑자기 노사 자율에 맡겼대요. 건폭 때려잡을 때는 노사 법치주의, 공정거래법까지 동원하면서, 당연히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바뀐 산업 구조, 고용 구조에서 초기업 단위 교섭 없이는 교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노사 교섭에 맡겼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또한 기업 단위 교섭에 비해 비기업 단위 교섭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민주노총이 비판한 사용자의 교섭 제도에 대한 간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사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는데 공식적인 근로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종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와 교섭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의 내용에 주목하며 윤석열 정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보호하는, ILO 협약이 보호하는 단체교섭의 혜택을 완전히 받기 위한 특정 범주의 노동자, 특히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5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얘기하겠지요. 비정형 고용 형태의 노동자, 단기·알바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겠지요.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 배민·쿠팡과 일하는 라이더들 및 하청 노동자에게 많은 난점이 있음을 확인하며 위원회는 위의 범주의 노동자에 초기업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단체교섭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조건에 적합한 추가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에 제발 좀 응답해 달라.

위원회는, ILO는 정부의 노조법 제30조제3항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 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나 채택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장관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ILO전문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법,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서두르냐', '왜 우리와 대화하지 않느냐'…… 그 말씀, '항상 대화는 좋고 서두르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작년에, 재작년에 대통령을 향해서 했어야 할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와서 발목 잡기 하면서 대화를 하자, 왜 서두르냐 그런 것은 발목 잡기, 딴지 걸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화를 촉구하는 얘기라고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형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에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조, 3조를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 ILO가 권고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이들을 고용한 사람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중대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굉장히 큰 걸음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환영한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사실 국회가 노동자들한테 박수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박수를 받는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는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법이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까지가 우리가 이번에 한 발짝 전진한 내용입니다.

유엔과 ILO가 이미 한국 정부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노조법과 노동권에 대한 권고 혹은 직접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노동권이 아직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애써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ILO와 유엔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유엔과 ILO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GANHRI라고 하는 국제인권위원회 기구에서도 우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인권 상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K-컬처, K-팝, K-푸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서 K-민주주의, K-데모크라시라고 국격을 높이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권도, 노동자의 권리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길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겨우겨우 유엔과 ILO가 권고했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요구했던, 죽음으로 자신의 절망을 호소했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겠다는 이 법에 내놓고 반대하

고 저주하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조차도 와서 더 대화해야 한다라는 말로 발목을 잡는 일 그것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주익과 배달호의 죽음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 30여 명의 죽음 앞에 하찮은 법리 주장은 침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계의 반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영계에서야 지금까지가 좋았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합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는 것 싫을 수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뺏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께서도 경제 5단체, 6단체 다 찾아가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동부장관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기 전에 경영자단체 먼저 찾아가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원 사주, 고발 사주는 봐 왔는데 경제단체 한 군데가 미국 상공회의소한테 논평 사주도 막 하셨더라고요.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이후에 국회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이용해서 사업영역 확장하고 이윤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갑질 그리고 괴롭히기 소송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카툰북을 보니까 노조법 2·3조의 위험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괴담 수준의 선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게 한다', '1년 내내 n차 파업이 일어난다', '수십, 수백 곳이 넘는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해야 된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소멸한다'.

자, 이런 괴담과 악담 맞는지 봅시다.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조, 3조 개정된다고 해서 나라 안 망하고요. 2조, 3조 개정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한꺼번에 확 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화끈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큰 첫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담을 해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써 놓은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업권이 보장되면 불법 파업이 합법화되고 매일매일 파업할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파업 공화국 될 거다 이런 얘기지요. 봅시다. 한국에서 제일 힘센 노조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곳은 현대자동차 노조, 정확히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힘세고 강성 노조면…… 현행 노동법이 파업권

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정규직 노조가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하청 노조는 파업하고 싶어도 못 해요. 공공기관 노조도 파업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밥 먹듯이 파업해서 경제 다 말아먹을 것 같고 울산 경제 나락 보냈을 것 같지요? 현대자동차요,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을 진행하고 서로 생산과 분배의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상해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고…… 서로에게 엄청난 손해가 벌어진다는 걸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냐? 교섭을 해 보고 파업도 해 보고 하니까 서로 학습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섭권은 물론 실질적으로 단결권조차도 부정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건설현장하고 조선소인데요.

조선소 살펴보면 매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조 파업, 태업, 작업 거부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옛날 대우조선이지요—한화오션 비정규직 파업, 아까 보셨던 유최안 씨,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이분들. 워낙 많이 알려져서 잘 알고 계시지만 2022년에는 삼성중공업, 거제도에 있지요. 2023년 현대삼호중공업, 호남 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파업 또는 작업거부, 태업합니다. 노조가 없으니까 정식으로 파업 절차도 못 거치고 태업해 버려요, 그냥. 이러면 더 일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요.

'근로조건 이것 너무한 것 아니야', '우리 너무 더운데 쉴 수 있게 해 줘' 내지는 '이것 단가 좀 올려 줘.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청 업체 사장님이 '야, 나는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원청에서 다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원청 업체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하다가 파업해요. 그러면 불법 파업이 돼. 그러면 손배·가압류가 돼. 형사처벌을 받아.

이것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노조법,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노조법 통과시켜서 실제 사용주인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도 대표 노조를 통해서,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 노조 통해서 교섭하자는 게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예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섭하면…… 지금처럼 교섭 자체가 목표인 파업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회적 낭비입니까? 아니, 교섭 좀 하자고 파업을 해. 교섭을 하면서 교섭이 잘 안 돼서 파업을 하면 모르겠어요. 교섭 좀 하자고 파업을 해요. 이런 파업이라도 줄어든다면 사업장의 위기요인은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교섭을 진행하면 파업의 규모와 횟수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만큼 생산성 증가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럴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장담 못 해요.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대표 노조도 선정해서 교섭단체 단일화하고, 그래서 사측이랑 교섭을 하는 이런 교섭의 관행과 노하우가 세부 시행령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관행으로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거짓말했다', '민주당 무책임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정말, 시행령과 시행 세칙을 어떻게 교섭해야 되는지를 잘 만들고 현장에서도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하는 현장에서의 교섭의 관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잠시만 견디면 파업은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장관님, 이것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려면 고생 좀 하실 텐데요.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두 번째, 파업 공화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n차 교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기업이 원하면 창구 단일화할 수 있고 일대일 교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요.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노동부가 일해 주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좋은 관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것 재밌다. 자백하셨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비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사장 나와', '나 진짜 사장 아닌데. 진짜 사장은 너네 하청업체 사장이야'라고 하면서 교섭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딱 나오면 '원청 업체와 일대일 교섭하자고,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뭐야, 지금까지 했던 말은?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됐던 것들이 이번에 법제화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법제화되면 자기들이 다 원청, 진짜 사업주 범위 안에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계신 거지. 그 전에 미리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우리나라 노조법에는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제도는 실제로 노조 민주화를 하면서 복수 노조가 들어왔는데 그때 어용노조가 하도 많아서 민주 노조 만들기 위해서 복수 노조를 허용해 달라라고 노동계에서 요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고, 복수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누구랑 교섭해야 되느냐? 교섭단체 단일화를 이런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노조법에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법상에 있는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복수 노조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총이 주장하는 모든 하청기업 노조들이 일대일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소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부풀리기 하시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사용자들이 '창구 단일화하세요'라고 요구하면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되는데 그 요구를 안 할 생각이신가요? 스스로 교섭단체 단일화 요구를 안 하시고 모든 노조와 일대일 교섭을 하실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물론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고 모든 하청기업 노조들과 일대일 교섭을 주장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노동부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될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청 노조들은 '야, 우리는 교섭단체 교섭 창구 단일화 안 해. 다 일대일로 붙어. 일대일로 교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대다수 하청 노조들은 오히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노조들 간의 일대일 교섭을 여러 차례 하기보다는 원청 회사와 단일하게 교섭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도 복잡…… 회사는 HR이 있잖아요. 회사는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노무 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 노조나 노동자들은 이것 할 사람도 없어요. 매일 교섭하러 나갈 사람도 없습니다. 크게 뭉쳐서 크게, 그리고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섭력도 떨어져요, 일대일로 하면. 그러니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력도 높이고 교섭할 수 있는 실무능력도 거기서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를까요, 사용자들께서? 왜 몰라요, 아시지요. 아시면서 과장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n차 교섭해야 된다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경영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려를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대책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담 수준의 현실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라, 과장하지 마시라'라는 험한 말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시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같이 발전해 나가자는 것을 원하지 사용자들 다 때려잡고 기업을 거꾸러트리려고 하는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인 것처럼 이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노동조합을 그렇게 비난하시면 현장에서 실제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1년 내내 무한 하청업체와 교섭을 합니까.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기업이 원한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에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한화오션 이전에요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조합들은 업체별로 교섭 진행하기보다는 원청업체 혹은 하청업체 기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와 교섭할 것을 주장했고 그렇게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 비정규직 포괄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노조법 통과되면 현재 20개 하청업체와 일일이 개별 교섭하고 있는데 원청기업과 단일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서 '참, 우리 교섭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겠구나,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20개랑 교섭해야 돼.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하나로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20개니까 20개랑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조법 통과되고 나면 원청업체 한화오션이랑 한 번만 교섭하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현장이 훨씬 더 교섭이 용이해지는 법입니까.

현재와 같이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생산을 저해하는 파업, 태업, 작업 거부 등에 사측이 시달리기보다는요 오히려 하청 노조와 노동자들을 생산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일하게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상생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총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6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카툰북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카툰북에 나온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을 조장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이고 괴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정안은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즉 노동자가 불법노동행위,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방어적 파업,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손배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항 가지고 불법 조장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도합니다.

개정 노동법도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다른 저항할 수단이 없어서 사용자가 불법행위, 1번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것저것 '아, 이거 불법행위인데요. 그것 이런 건데요. 저런 거예요', 교섭도 해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법,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는 정시 운행을 한다든지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 많이 하잖아요. 정시 운행을 일상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시 운행을 한다든지 합법 운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도 안 됐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가 대항을 한 경우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법문에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첫 번째, 사측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 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조가 막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어서 한 파업에 대해서만 손배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면하기, 제가 현장에서를 생각해 보면 노동조합이 여기까지 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장의 관행상. 그런데 이런 경우에까지 손배를 물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성찰적 고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정당방위로 벌어진 파업에서 발생한 손해는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대우조선에서—한화오션이지요—유최안이라는 노동자가 회사 구사대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서 이 파업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한 거냐, 자기를—용접하는 분이니까—쇠감옥 안에 구겨 넣었잖아요. 구사대한테 두드려 맞았거든요. 맞지 않으려고 그 안에 자기의 몸을 구부려 넣은 겁니다. 당시 상황은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행위에 대우조선의 원청관리자와 구사대가 실질적인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보도나 그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저항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최안 씨는 스스로를 폭력에 맞서 가둔 거지요. 즉 불법행위에 맞선 최소한의 정당방위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무척 높은 행위

라는 겁니다.

유최안 씨의 행동이 불법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 그래서 정당방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존의 법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유최안 씨가 정당방위다, 불법적인 폭력에 맞선 정당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최안 씨를 비롯해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잖아요, 최저임금 조금 넘게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유최안의 행위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손배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법원이 따져 볼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즉 아주아주 긴급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정당방위적 행위에 대해서만 법원 가서 따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과장이 심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네요. 또 한 가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법입니다.

보세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9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무파업으로 교섭 진행했습니다. 노사 간에 양보하고 상생하는 사례를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현대자동차 무파업을 지난 19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야, 너네 정리해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리해고하겠다는데?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 미국은 그보다 더, 유 아 파이어드(you are fired) 하면 다 잘리더라,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고 싶으신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 잘리면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IMF 때 많은 가장들이 직장 출근하는 척 하면서 양복 입고 산에서 김밥 한 줄에 배고픈 것 때워 가면서,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명예, 자존감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리해고하겠다라고 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불법파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 개별 기업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같이 임금 인상이나 개별 복지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밥상에 두부를 올릴 거냐, 김치를 올릴 거냐, 왜 고기반찬 안 주냐 이런 걸 가지고는 쟁의를 할 수 있는데 밥상을 엎어 버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라고 쟁의하면 불법이 돼요.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노조가 쟁의행위할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사실 사람 1명 자르는 건 되게 어려운데 왕창 자르는 건 쉬워',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임금, 노동시간, 복지 등 개별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넘어서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이라는 조항을 넣

어 가지고 노동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쟁의의 범위를 요만큼 넓혔습니다.

ILO는 사회적인 의제, 연대 파업까지를 노동자들의 권리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 갔고 안 갔습니다. 이것 요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법이다, 불법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과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영계는 경영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조항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권리가 경영권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존중해 왔는데 우리 법상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회화돼 버렸어요. 뭔가 경영권이 헌법적 권리인 것 같아, 그런 것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헌법적 권리지만 경영권은 헌법적 권리는 아닙니다. 그런 권리가 법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공장 폐업, 구조조정, 통폐합, 정리해고, 이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산권이다, 경영권이다라는 말로 논의조차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불법파업을 조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영계에서는 정리해고를 1년 내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극단적인 투쟁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좀 과격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이런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공장 이전, 정리해고…… 옵티칼이라고 해서 지금 옥상에서 수년째 농성하고 있는 이런 데가 공장 이전, 정리해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어진 투쟁이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목숨을 내걸고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장기화되는 이런 투쟁들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근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넣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법 통과되면 외국기업 철수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송곳’이라는 웹툰 또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명의 고장 프랑스,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장한다는 프랑스 기업이 왜 도대체 한국에 와서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유럽연합은 과거 한국 정부를 향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이 미진하다 이러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상의 관문으로 삼겠다, 통상의 허들로 삼겠다, ‘노동권 보장 안 하면 너네 관세 물릴 거야. 탄소 감축 안 하면 관세 물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지난 2019년도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에, 한·유럽, 한·EU FTA 있잖아요. 이것 노동권 ILO 협약 존중하지 않았다고 FTA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어요. 한국 상대로

무역 분쟁 일으켰거든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9년에,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 보면.

이랬는데 갑자기 EU가 한국의 노동권 보장 여부를 이유로 한국과…… '2·3조 되면 우리가 철수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논평 사주였다라는 점이 드러났지요.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고 유럽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쪽에 논평을 사주했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 EU가 이렇게 한국의 노동권 보장 여부를 이유로 한국과 무역 분쟁까지 빚었던 이유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인 노동권을 제외한 국가와 FTA를 맺고 무역하는 것 자체가 EU가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부담이냐? EU 국내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노동권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제적 명분이 되기 때문인 거지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관점만으로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동 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따라 배우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에이 설마 그것만 갖고 했겠어요?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곧 무역장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예고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특히 EU는 그러합니다.

2021년 1월 발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보면요 한국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은 FTA 위반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노조법의 실질적인 개선 부족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EU에서. 특히 근로자 개념이 좁아서 노동자 개념이 좁아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노조 임원의 자격을 조합원으로만 제한하는 점, 노조 설립신고 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사전승인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등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EU는 우리를 비판했고 이것을 관세장벽의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는 2021년 4월 ILO 가입 30년 만에 그 EU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ILO 핵심 협약 제29호·87호·98호를 비준하면서 통상 분쟁 위험에서 그제서야 벗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EU가 때가 되면 또 이것을 들고 나올 게 뻔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그분들이 노동의 권리, 인권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게 국제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 불씨를 없애는 것이 바로 오늘 통과시켜야 될 노조법 2·3조입니다. 과도한 손배청구와 가압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과도한 손배청구와 가압류가 저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손배·가압류 제한하고 ILO 경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용자 정의 확대 통해서 하청 구조 남용이 노동삼권 침해한다는 문제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결국 EU와 ILO가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한 각종 사항을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럽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EU의 오래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자본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런 거냐?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노동자의 인권을 단호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 주면 ‘아, 여기도 유럽만큼 노동자의 권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경영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 기업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신들의 요구대로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EU도 그런데’, 논평 사주해 놓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됐어’라고 손가락질하고 망하길 바라고 EU 기업이 철수하기를 바라는 게 정치의 태도, 대한민국 경영인들의 태도여야 할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EU가 요구했던 통상 압력으로까지 통상 장벽으로까지 얘기했던 노동권, 그 ILO 조항 우리가 이제야 지켜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치인의 태도로서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노조법 개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향을 분명히 틀어서 큰 걸음을, 첫걸음인데 크게 걸었다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8월23일 24시 경과)

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우리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싶은 아쉬운 점은 남겨 두고 가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서 원청 자본과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이게 현장에서 정말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자주 사용하는 일인데요. 노동자들이 뭘 요구를 하면 도급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도급계약을 타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갑자기 원청업체랑도 얘기할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업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자들이 또 일을 합니다. 그런 중간 업체들을 자꾸만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도급계약 같은 경우 도급계약 타절할 때 손해배상만 조금 감수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조금 감수하고 계약을 타절해 버리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원청기업 하청기업 계약 타절하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하청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합의해 놓은 게 있다면 그 기존의 합의 중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승계하는, 일정한 핵심 사항은 승계할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청업체가 빠져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계약 타절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 이르는 다리를 아예 끊어 버리는 건데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이왕 이렇게 법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한은 핵심적으로 이미 교섭이 타

결된 부분은 다른 하청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교섭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하면서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노동부 등 행정부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 가서 길게 다퉈야 됩니다.

이 사용자 정의,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를 두고 노동자들이 법원 가서 3년을, 4년을, 5년을 다퉈야 됩니다. 이런 법정 다툼을 해 보면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에 다 녹아나요. 먹고살아야 되거든요. 비싼 변호사 못 쓰거든요. 이러다가 지레 지쳐서 소송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90%입니다. 90%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용자 정의 규정이 법원에 가서야 그 범위가 확정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노동부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규정을 해도 사측에서는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저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보다 더 노동부가 이 규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적어도 그 숫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시간에 녹아내리는 노동자들의 애간장, 사측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사실은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가 법적인 정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 앞에 최대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측도 빠르게 본인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경영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동부와 관계 부처와 함께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셋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법률가로서 불을 켜고 살펴보면 조금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통한 집단적 행위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소위 노조법,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돼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노동자가 불법행위하고 파괴행위를 하고 이유 없이 하면 노동조합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까지 불법을 다 옹호하고 여기는 백만 년 까방권을 노조에 줄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조한테만 물으라는 거지요. 저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정된 노동법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후 쟁의행위의 책임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법이 그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게 노동자에게 유리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를 구분하고 있는, 그래서 국가에게 헌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야 된다,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리 그리고 그 조항과 다른 노동삼권이 별도의 조항으로 있다라는 점을,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는 원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다,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집단적 노사관계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일치시키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한발 한발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대과가 없는 한 큰 사고가 없는 한 내일 아침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괴담 수준의 반대 논리를 가지고 반대했던 분들, 일부 기업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이 법의 틈새를 찾아서 현장의 변화를 더디게 하거나 변화가 오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급계약을 타절하는 방법으로 하청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처럼 지속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조법 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노사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삼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노조법 2조의 적용을 받는 분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주 독특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집에서, 제가 아마 라이더와 택배가 없었으면 코로나 시절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격리생활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이 라이더유니온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는 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사업장인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쿠팡과 배민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배달 중에 열여섯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1/4분기에만 배민과 쿠팡이츠, 이 두 사업장에서 약 8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산재 인정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 1·2위 기업은 이제 건설 현장이 아닙니다. 배달라이더들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 통계로 잡힌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달라이더들은 실제로 배달 중에 다쳐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보세요, 산재 승인 사업장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 여기가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입니다. 거기가 배달의민족이지요. 배달의민족인 줄 알았더니 1368건, 산재의 민족, 산재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474건인데요. 압도적으로 많지요. 이렇게 라이더들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3위는 쿠팡이츠입니다. 여기도 배달라이더들입니다. 이만큼 여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데가 조선소, 산재 많이 일어나는 곳 건설회사 조선소인지 알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산재 1위는 배달라이더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산재는 배달라이더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단순 교통사고,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났어요 하고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간 산재 났던 거 지금 보셨는데요. 16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중대재해가 16명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만이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우아한청년들이나 쿠팡이츠가 직접 지배·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라이더의 사업장이 어디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배달라이더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달라이더들의 사업장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쿠팡이츠와 우아한청년들이 책임지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6명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알고리즘이 정해 주는 대로 배달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달라이더는 자기 뜻대로 배달 경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해 준 알고리즘대로 그 경로대로 가야 됩니다. 그 경로를 이탈하면 경고·벌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도로는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이 아닌가요? 지배 범위가 아닐까요? 그리고 보통 1시간에 3건 정도 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달 건수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몇몇 배달업체는 3시간에 13건을 해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게 배달수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 1시간에 3건인데 3시간에 13건을 배달하지 않으면 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달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3시간에 13건 배달을 위해서 이들이 도로에서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받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알고리즘과 그러한 배달 목표를 정해 준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기 때문에 산재 관련된 조사가 철저히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플랫폼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비계,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 둔 비계가 국민들의…… 또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타설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어떤 기계를 사용해야, 어떤 건설장비를 사용해야 산재가 덜 나는가, 더 나는가 이건 조사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배달라이더들은 그러한 배달 목표 설정, 인센티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1분 안에 콜을 받지 않으면 벌점이 쌓이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중에도 핸드폰을 2개 3개 놓고 계속해서, 운전 중에 콜이 왔는지, 콜을 수령을 할 것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이 알고리즘은 배달라이더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아직까지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어마어마한 배달라이더들의 산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새로운 노동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재해, 그 원인을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논의를 하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배달라이더 한 분이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는 시작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노동자들이 오늘은 국회의원님들께 음식 대신 편지를 배달합니다. 하루 14시간이었습니다. 배달노동자 고 김용진 님의 하루 노동시간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이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온종일 오토바이를 탔다는 겁니다.

올 여름 폭염은 살인적이었습니다. 김용진 님은 하늘의 땡볕, 발밑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복사열, 지나가는 차량에서 뿜어내는 열기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버텼던 이유는 쿠팡이츠, 배민의 프로모션 기준을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400건의 배달, 콜 수락률 90%를 채우면 그나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모션 기준에서 단 1건이라도, 단 1%라도 미달되면 급여의 30%가 날아갑니다. 그러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김용진 님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용진 님은 지난 8월 5일 버스와 추돌해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용진 님은 동네에서 서행 운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고를 냈다는 것에, 사고가 났다는 것에 동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쿠팡과 배민은 책임이 없답니다. 도로에서 난 사고이니 회사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겁니다. 운전자 본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용진 조합원은 배달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에서 14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과 배민이 배달료를 삭감하지 않았다면, 배달노동자의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는 사고 유발 프로모션, 사고 유발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폭염에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쿠팡과 배민에 있습니다.

올해 벌써 16명입니다.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입니다. 2주에 1명 꼴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실제로는 16명보다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산재 발생 건수 1위가 배달의민족, 3위가 쿠팡이츠입니다. 건설업, 조선업 다 제쳤습니다. 배민은 올해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런데도 배민, 쿠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상 배달노동자의 생명을 연료로 배달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우리 배달노동자들도 손가락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칙 지키겠습니다. 영업용 보험, 교통안전교육, 이륜차 면허 보유에 대한 의무를 차라리 우리에게도 부과해 주십시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에도 의무를 부여해 주십시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이더들도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교통법규 지키고 과속과 과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노동자도 시민도 회사도 모두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13일째입니다. 대통령실 앞에 배달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동료들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와 주십시오.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저에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오늘의 노란봉투법 개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서 파업공화국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권 보장을 통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드는 교섭촉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기업이 교섭을 하느라 진땀을 빼게 만드는 법 아닙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진행하고 그래서 현재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는 법이다, 오히려 노사 교섭의 효율화·촉진을 통해서 노동자와 사업자 간에 현장을 더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다소간의 낯섦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빌미로 이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킹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최대한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최소한의 범주,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이 민사상의 손배 청구에서 면책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만들어 주는, 이제 겨우 작은 보호막 하나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자본의 경영권은 존중하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막대한 사실상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서야 겨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진전을 위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한국경제를 기업과 노동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되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만 9000원이 담겨 있던 노란봉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우리가 한번 손잡고 해결해 보자라면서 4만 9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셨던 그 시민의 마음을, 그 주부의 마음을 십수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노와 사가 손잡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조법 2조·3조, 이 노란봉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위상)

(00시27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위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필리버스터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 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2·3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춰 가며 부당한 부분들을 지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 정부가 이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도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한 노조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2·3조를 밀어붙인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노동자로서 37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첩첩산골에서 70년도에 서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서울 창신초등학교, 서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를 졸업한 것은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중학교에 다니다가 또 돈이 없어서 자퇴를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떠한 시기를 겪은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스물일곱에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고 스물여덟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고 서른에 방송대를 다니고 2004년도에 4년제 3학년에 편입을 하고—개인 프로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2017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떠한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70년대에 연탄 한 장 사기 위해서 연탄공장까지 가서 새끼줄로 중간을 둘러메고 한 2㎞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는데 몇십 전을 아끼고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 결국에 산업 전선에 일찍 뛰어들게 되고 또한 그 당시 시대의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저와 함께 살아온 그 시기의 분들은 그런 일을 다 했겠습니다만,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구두도 청계극장 앞에서 닦아 보고 또한 신문도 팔아도 보고 돌려도 보고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80년대 초에 대우조선 협력업체에서도 일을 해 보고 또한 포항제철 철골 일도 협력업체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

그런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에 조금이라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갖고 나서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오랫동안 근무한 곳이 89년 11월 10일 날 택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직장생활 오랫동안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택시는 굉장히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택시를 하기 위해서 실지로 회사에 돈을 줘 가며 입사를 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떠한 시기를 거치면서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바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새롭게 직업이 생긴 배달노동자 또 플랫폼노동자 정말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공헌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 사회에 기여도가 굉장히 많은 이 택시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 가지고 또 택시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루 13시간, 14시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정치권이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 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그런 노동자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떠한 직업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또한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고생한다고 찬사 또 격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은 존귀하다 그리고 귀중하다. 그렇다라면 지나온 어떠한 노동 인력들도 이 사회에 공헌도가 있으면 그만큼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아침마다 우리 문 앞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달해 주는 배달노동자들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찬성하는 찬성론자였습니다. 노조법 2·3조가 분명히 개정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 오고 또 노동조합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노사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서로 고통받는 그런 우리 노동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어떠한 세력에 또 고통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살펴봤을 때 조금은 이 2·3조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노조법 2·3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정치권의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현장을 알고 이야기하느냐, 현장에 내려가 봤느냐,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는가, 이 부분이 통과되도록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대한민국 임금노동자가 2300만인데 그 2300만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얽혀서 한 300만 조합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밀어붙일 정도로 그렇게 급한 부분이었나, 2·3조를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의 어려운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정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서 저는 똑똑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나마 보수가, 임금이 그 고생한 만큼 또 열악하게 고통받고 일하는 만큼 주어지느냐?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3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곳곳의 어려운 곳에 우리가 파고들어서 이 정치권이 같이 고민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 것이 이 국회가 할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2·3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밀어붙인 이 법이 과연 똑바른 법이 되겠는가, 이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되겠는가. 그리고 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용자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우리 동지들 정말 이 부분 2·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는가. 우선 현장의 정서는 2·3조보다는 정말 정치권이 살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가 평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조 대표자 생활을 하면서 사용자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구속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별의 움직임 그리고 어느 산별들이, 어느 노동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탓하지 말고 정말 그만큼 연봉이 세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들과 그 고통을 함께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어려운 일은 전부 하청으로 다 떠넘기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단계 하청 천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나마 이 땅 위의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다운 삶을 지금 조금이라도 영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과 또 정치권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이 정치권에서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굉장히 탄압받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가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서로 자율에 맡겨져 있고 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이고 그 역할이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다 보니 사용자성 확대, 노동자성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달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입법화시킨 예는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왜 22대 국회에서만 유독 이런 것을 강제로 밀고 나가느냐? 뭔가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3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만 더 숙의를 하면 합의가 될 것이고 또한 2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좀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이 부분도 합의가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합의가 안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2·3조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다수당의 어떠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좀 소거시켜 주고 그 뒤에 현장에 내려갔을 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더라면 여야가 분명히 합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 28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로 다루다가 왜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수당인 민주당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절차적 하자와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정부와 여당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입법에 나서고 있는지, 여러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을 강행 처리하면 어떠한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경제에 나타날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며 남긴 이 호소들은 10년, 20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한 것인지, 어떤 사건이 결정적 단초였는지 확인해 주는 증언들로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28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강행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끝내 저지하지 못한 야당까지도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노조법 개정안의 과도한 독소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국민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간절히 바라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법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그날 밤 곧장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산업 현장, 기업의 생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의 본질, 즉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숙의를 거치고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민의를 대변하고 품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은 이런 정도 대신 그저 쉬운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 그리고 중도층·기업·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저는 오늘 이 법안이 결국 힘으로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 과정과 내용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노사 상생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입법자로서

그 누구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우리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외 선진국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조정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확장과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독소 조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이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을 대거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취지·의도가 선할지 몰라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채 입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노동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법안이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깊은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힘으로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과연 취약계층 노동자, 천문학적인 체불임금 해결,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제쳐 두고 이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서라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1호 노동정책이 노조법 개정안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오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직장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당장 통과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꽃가마를 타고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대로 잘 안착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법은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지 거꾸로 키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현실을 법안에 담아내야 하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천만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저성장으로 해외에서는 공급망 재편 파고로 일분일초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경영계 함께 숙의에 돌입합시다. 이 자리에 노동부장관님도 나오셨는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독소 조항을 걸러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기업도 노동계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모두 살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년 뒤 폐허가 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은 책 속의 이상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을 남겨 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직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촉박하게 기한을 못 박아 두고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도 일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의지를 갖는다면 노사가 상생하고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로 급한 것은 노조법 개정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아닙니다. 매해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인 임금 체불, 코앞까지 닥쳐 온 고령층의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종사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우리 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따로 있습니다. 갈등의 법이 아니라 상생의 법을, 파국의 법이 아니라 희망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어떤 법안도 그 중요성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에, 노동자에게 진정 급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여당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활동을 할 때 대구지역 노총 의장을 10년 이상 맡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고 공단은 노후화되어 있고 대기업 하나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구은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산업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임금노동자가 105만이 넘었습니다. 250만 인구 중에 105만이 임금노동자였고 조금 환경이 괜찮은 노동자들은 1차 벤더에,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2차·3차 벤더에 전부 근무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보다 대구지역의 노동자 임금이 50만 원이 적었습니다. 매년 GRDP가 30년간 16개 광역단체 중에 끝에서 1, 2위를 차지한 도시입니다.

그래도 이 도시에 중견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이 도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사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노총 의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슬로건을 노사 평화의 도시로 걸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내걸었습니다.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노사정이 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 다닌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2014년 9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대회를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부장관도 오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오고 오래된,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임금체계 개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그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도시였기에, 너무나 지금까지 산업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언 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대로보틱스 등 여러 회사들이 대구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걱정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끝나는 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노사 평화의 전당을 대구에 건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문진국 의원, 이용득 의원, 한정애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환노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 평화의 전당은 1년에 1만여 명

이상이 그 자리를 참관하고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단체에서 노사 평화의 전당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 상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산업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나가고 조금이라도 나은 중견기업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 근로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노사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노사의 합의 정신이고 또한 노사가 대화성 교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전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80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투쟁성 교섭보다는 대화성 교섭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 했고 또한 현재의 노조활동 하는 우리 동지들이 그래 했고, 하지만 그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제1노총으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정권에 머리 조아리고 구둣발에 짓밟히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노사정 대화로써 합의 정신으로 노조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 합의가 없더라면 국회는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들의 합의 정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합의 정신은 우리 후배들이 면면히 이어 오고 있고 투쟁과 대화성 교섭을 택하라면 많은 우리 동지들이 대화성 교섭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투쟁성 교섭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투쟁성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사가 원활히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일터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노동 형제가 정말 많다. 그 속에서 우리는 3만 불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강행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전에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민국의 우리 근로자 그러면 노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이 있기에 그나마 인간다운 어떠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역할을 한 부분에 저도 인정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야 합의로 조금의 독소조항만 걷어 내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박해철 의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한국노총에서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실제로 이 2·3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유연한 생각들이 전혀 사라져 버리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로서, 노사 상생을 위해 활동한 노동운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법안으로 정말 노사갈등이 해결되고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대화 촉진법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찬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동현장과 노사관계의 생리만큼은 여기 계신 그 어떤 의원님들보다 밝다고 자부하는 제가 있는 그대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짚어 드리면 그렇게 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법안이 의도한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감당조차 어려운 극심한 혼란과 극한의 분쟁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유럽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됐다라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하나만 알고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들 나라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또 사용자성과 쟁의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관계 전체 균형을 잘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매우 대립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상호협력, 상생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평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용자 방어권도 전무합니다. 애초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얼마 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럽상의는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설명대로 이 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유럽 선진국 모델이라면 그 유럽 선진국에서 온 수백 개의 기업들이 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유럽 기업들이 눈으로 봐도 이 법안은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와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유럽의 고용 경직성 차이가 사회안전망 구축 수준 그리고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체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외면한 채 좋은 점만 톡 떼다가 비교를 하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단편에만 집착하면 노조법 개정으로 모든 노사분쟁을 힘으로 해결할 경우 결과는 뻔합니다. 그 후폭풍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하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없이 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붕괴되면 결국 기업이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현장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

조업 일자리 수천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극한의 위기감, 두려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걸러 내 합리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나아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도 많은 독소조항이 있었던 것을 여야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과 다르게 불법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제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여당에서조차 도저히 불가능한 입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이지만 잘못된 입법임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반영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거꾸로 작년에 통과됐던 노조법 개정안에도 없었지만 갑자기 새로 추가된 더 강력한 독소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추가된 독소조항은 심지어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상정됐던 7건의 법안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로 추가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소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노조법 개정안 중에서도 처음 보는 문구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당 문구는 제대로 된 국회 심사 과정 중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당일 오전에 추가되고 저녁에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간 이 어떤 노조법 개정안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문구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에 나설지, 사측과 얼마나 해석에 이견을 보일지, 사업경영상의 결정 어디까지 포섭되는 개념인지 가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산업 현장에 얼마나 어디까지 파급이 미칠지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켜 주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풀었지만 조선사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거나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투자하는 과정에는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 불가피하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산업 자체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체의 구조조정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앞서 20일,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의 국내 에틸렌 설비용량의 25% 규모를 줄이는 자구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조금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합법적인 파업 요건이 됩니다.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디테일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개정안이 얼마든지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석유화학업계의 자구책 시도가 시작도 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해석 여지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숙의 과정 한 번 없이 힘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급이, 법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 목전까지 도달하게 한 국회의 암담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힘에 의한 접근은 민주주의적 절차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이며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의무가 있는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선대에서 이러한 것처럼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정이 함께 숙의하고 협상해 더 나은 대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처럼 답을 정해 둔 채 단 하루 기한을 못 박고 의견을 내면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형태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통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정이 함께 제대로 토의해 봅시다. 각계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오늘날 노조법은 여야,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사회갈등의 표어가 되어 버렸지만 한때는 노사정 상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대한민국 법률 중에 유일무이하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정됐고 주요 개정 역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노사협의체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97년 3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의장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여 노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노조법은 제정 이후 11차에 걸쳐 개정까지 노사정 타협을 통해 주요 법 개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노사가 대립하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노조법 개정만큼은 노사정이 타협해 개정해 왔고 이는 우리 노사관계가 극한으로 치닫지 않게끔 해 주는 안전벨트이자 상생의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노조법이 가지는 노사정 대화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 대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 선대가 일궈 놓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상상하기도 힘든 지경으로,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사 간 갈등만 증폭하고 우리 제조산업이 안에서부터 곪아 간다면 이것이 어찌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성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유연한 실용주의를 강조한 정부 여당의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인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최후의 수단인 노동쟁의를 적극 조장하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노동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른다 하시면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직시해야 할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번 정부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만병의 근원인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천장을 뚫을 기세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 개선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입니다. 고령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를 해결할 합리적 고용 연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과업들을 뒤로 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노동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 자신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자신합니까?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에게 맡겼던 중간재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해외에서 수입해 오게끔 하고 생산기지를 바다 건너로 옮기도록 내모는 역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협력업체 일자리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라진 일자리 수만큼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내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깊은 우려를 나타낸 여러 독소조항들은 향후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실상 사법부가 입법을 하는 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노사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러면 갈등과 대립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주당은 다소 억척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약자를 위해 투쟁하는 호기롭고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께서 한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던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을 통과시켜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국론을 두 쪽으로 양분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지어 진보성향의 법학자들마저 노조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지지가 가장 높은 정권 초기임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왜 36%에 불과한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 이로 발생할 일자리 감소와 최종 피해자가 누구일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노조법 개정안이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고 우리 양심

이 찬성하는 법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뒤 역사는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피 토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 사람들과 진실을 듣고도 끝까지 귀를 막고 법안을 강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진영과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힘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살리고 체계화돼 있는 조직적인 300만 노동조합, 그 이외에 1800만 임금노동자들도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여야정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향한 노조법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원체 노조법에 대해서 심한 포장을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노조법에 대해 많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대 정부의 노사정 합의, 왜 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도 통과시키지 않고 노사정 합의를 이 국회가 기다렸는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의 어떠한 문제점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개정문별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며 노사 상생 역사에 얼마나 역행하는지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은 실지로 환경 개선이나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이나 정말 괜찮은 중견기업들은 자금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수의 기업들, 중소기업들,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 봐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래도 묵묵히 현장에서 노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는 타협으로 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떼장 쓰면서도 기다려 줍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돌출될 수가 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조보다 급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찾아보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이 부분에 목을 매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산더미처럼 논의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고 이 부분은, 노조법 2·3조는 정말 여야 맞대면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부분을 느끼는 바입니다. 논의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국회가 민생법안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노조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법안심사 일정을 뭉개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하는 것은 평

생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운동을 해 온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왜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자 확대 규정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정안의 사용자 지위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해석 여지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뜻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대한 여러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를 정의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자인 줄도 몰랐던 많은 기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판례로 설시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인용하는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어디까지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범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안으로 해당 법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정된 것입니다.

또 흔히 현대제철 판결이라 불리는 2024년 3월 12일 선고된 판결 역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지 원·하청 사이 교섭 지위 확인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사용자성 자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건으로 확대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섭 지위에 있어 사용자성 확대 적용에 관하여는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오히려 현재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2심까지는 위와 같은 법리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성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외면한 채 사용자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식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통과시킨다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법적 분쟁만 더욱 극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 판단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며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분쟁이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법관이 곧 입법자가 되어 노동관계 당사자성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쟁송이 하나 등장할 때마다 구체적인 사용자 요건이 줄어들거나 확대되지 않을 시에 불확실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조문으로 그 조문 아래 각 항 각 호 규정을 법원이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된다

면 법률과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이외에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 당사자가 아니거나 결정 권한과 이행 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 사용자의 성실 교섭 의무와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 이른바 작위행위를 해야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당사자는 근로조건 등 교섭 대상에 대해 처분권이 있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로 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사업주나 도급·파견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도급·파견 업체 등 타 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해지 등의 처분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사실상 영향력이 존재하는 도급관계의 경우에도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능력만 있을 뿐 임금 지급 및 휴일·휴가 부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의 이행은 하청업체 사업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무를 무시하고 사용자성을 강제로 확장할 경우에 도급·파견 등 기업 간 계약을 통한 경제적 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형해화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민법·파견법 등 각종 법률과 노조법이 충돌하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대기업의 외주·하도급 업무를 수주하거나 근로자파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해체를 초래하는 결과를 분명히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 도리어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한다면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생태계가 붕괴되어 우리 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조선·건설 산업은 다층적인 협력업체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맺어야 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과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를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규율한다면 각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주회사를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소속 정부 부처나 기획재정부가 교섭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다수일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함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이 다층적 구조일 경우에 교섭 단위 및 절차에 관하여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교섭대표노조는 누구인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며 현행 법과의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는 도급 시스템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원·하청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영 주체로서 의사결정 권한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많은 하청업체를 도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를 돕겠다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과연 하청 노동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한다면, 추상적인 사용자 요건 확대로 원·하청 간 법적 분쟁이 연중 내내 끊이지 않는다면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노동자가 아니라 과도한 노사 간 법적 분쟁으로 법률 시장만 훈풍을 타고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법 개정안이 현장 노동자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례에서 실시될 구체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독소조항을 걷어 내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인정한 부분을 참고해 노사 당사자 사이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사용자 개념을 분명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노사정이 합의하고 전문가가 검증한 부분부터 현장에 잘 안착시킨 이후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분명히 됩니다. 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현장에 극심한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눈에 흔히 보이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 야당이 건넨 손을 민주당은 뿌리치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야정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면 더 나은 길로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쟁의행위 출범을, 쟁의행위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에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만 노동쟁의로 보며 이미 확정된 사항을 다투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지요.

그리고 권리분쟁 사항은 이행청구소송,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도 보호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리분쟁 사항 중 임금 인상률 미반영, 단체협약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노동삼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하며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리분쟁 사항을 노동분쟁화하여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다는 것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법률 분쟁의 해결은 관할 법원에 맡겨야 하며 해당 사안에 관한 파업을 금지하는 것 등은 ILO 결사의 자유 조항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요건을 이번에 추가로 노동쟁의 범위에 넣어 놨습니다. 이는 해석에 따라 근로조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어떤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미국의 조선을 부활시켜 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 삼아 관세협상을 이끌어 냈지만 막상 국내 조선사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합법적 쟁의행위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호한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밝힐 때 설명드렸지만 해당 문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 논의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가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때 처음 등장한 문구입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하는 검토보고서나 소위자료가 아니라 회의 중간에 임의로 삽입된 문장입니다. 즉 단 한 번도 국회의 정식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해당 문구가 얼마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누군가는 고용노동부처럼 정리해고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해고뿐만 아니라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비롯한 사실상의 모든 인사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맥상 후자처럼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현장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처럼 정리해고로 대상을 한정하려 한다면 열거규정 등으로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했어야 맞습니다. 지금 제 설명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합법적인 파업 요건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외국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거꾸로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친다면 과연 그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판례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확장, 축소, 전환 등 변경하거나 폐지, 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났지요.

경영계는 쟁의행위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 개선 및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등 노사관계 법질서 체계 전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독일의 경우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쟁의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에 의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파업할 수 없고 파업에 의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판례를 통한 쟁의행위의 범위 판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은 규약상 가능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예컨대 투자 또는 가격에 관한 기업의 정책 결정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산기지의 폐쇄 또는 해외 이전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정당한지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경영상의 결정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합니다.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안과 같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과 같은 포괄적 사항을 사용자 대항권 없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서 저는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체계, 노사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여 유럽에서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는 차이가 기저에 존재합니다. 또 노사관계도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상생협력적인 모델로 잘 구축돼 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훨씬 적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 때 참고했다던 그 유럽 선진국에서 온 기업들이 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지,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우리에겐 아직 일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얼

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숙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부디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 소수 야당이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걷어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 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합법적인 정당한 파업은 현행법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으로 새롭게 넣은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합법적인 정당한 활동 외에도 위법, 탈법, 편법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서 벗어난 사실상의 모든 노조 활동이 포함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뛰어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적법하지 않은 활동까지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체, 목적, 수단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 편법, 탈법적인 쟁의행위까지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평소 노사 간의 사안에 있어 노동계를 약자, 경영계 사용자를 강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용자는 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즉 개정안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질러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자력구제 형태의 대응을 법과 제도가 사실상 용인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정당방위 규정을 입법하는 취지인데 민법 제761조는 폭력, 살해, 위협 등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에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침해행위에 대해 가해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이는 정당행위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여야 하는데 당해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유일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사용자 불법행위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인데 이는 현재성 있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배상책임 면제로 작동하기도 어렵고 자력구제만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법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노사 간 현장 갈등만 더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사용자 측의 사소한 배임혐의만 있더라도 노동조합 측의 모든 자력구제가 사실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이 설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문제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안심사 며칠 전 이와 같은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당일 날 고용노동부는 자력구제를 용인하는 개정문에 동의했고 그 뒤에 아래와 같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며 개정안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궤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사용자 측이 폭력, 살해, 위협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가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정당방위가 적용됩니다. 굳이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 민법체계에 포섭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해고, 배임 등과 같이 현재성과 긴급성이 전혀 없는 불법행위가 해당 개정문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마치 법원인 양 노동쟁의 범위를 매우 자의적으로 무책임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바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도 재차 확인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문을 그대로 읽으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폭력, 살해, 위협 등 위급한 상황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긴급한 내용은 민법으로 이미 규율되니 그 외에 긴급성이 없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포섭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현장은 더 이상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이 스스로 힘으로 대응하는 서부극 시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법 해석도 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검토와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자의적인 해

석으로 너무나 위험한 조문들을 찍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를 구성하는 부처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측성으로 최악의 상황은 배제하면서 현장에서 왜곡될 개연성이 큰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입니까? 왜 자꾸 권한도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인지 도통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2300만 노동자의 팔자가 피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오늘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곤경에 처하고 수렁에 빠지는 노동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국회의 법안심사와 검토 기능까지 마비시키고 고용노동부가 정부 부처로서의 최소한의 발언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까? 누군가의 청부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 중 하나는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개인의 사적제재, 복수하려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사회는 무정부 상태인 서부극 시대가 됩니다. 법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법과 제도, 국가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행히 빠졌지만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마지막까지 부진정연대책임 제안을 넣으려 했던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된 대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개인별 입증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원칙을 허물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입증하여 입증한 부분만 배상을 받으라는 것은 법치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각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불법파업 대다수가 복면, 마스크에 모자를 착용하거나 CCTV를 가리고 진행이 되는데 이런 현실에서 개개인의 손해와 귀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 여당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입법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독소조항들도 여야정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소조항 하나하나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여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힘으로 누르고 속도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부작용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까지 주요 개정문별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김영훈 장관님도 아직까지 계시는데 걱정 좀 많이 되시지요? 살펴보니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이 제일 좋은 것은 정말로 현장에 안착하는 그런 법을 만들

어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혼란스럽고 노사가 싸움을 하고 또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교섭창구 단일화의 번거로움 속에서 누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면 언제 서로 노사협력…… 그다음에 서로 화합하고 또 노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가 성장이 되면 노동자의 성장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은 노사 간에 균형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또한 단체협약을 지키고 또한 임금협상에 따른 회사의 어려움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치가 실제로 노동조합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타협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섭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많은 곳을 보아 왔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정말 사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는 회사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양보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럼없이 고민하고 토해 내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사를 발전, 성장시켜 나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또 정치가 너무 이 부분에 개입을 한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상황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은 지금도 돈독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 사용자들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노조법 2·3조에 대한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아무리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된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살판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교섭권에 있어 가지고 우위를 차지하고 또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근로조건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든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눈앞에 놓여지면 노사 간에 대화성 교섭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투쟁성 교섭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이런 노조법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적이 없다. 절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거쳐 왔을 때 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가 95년도입니까, 노조법 개정할 당시에 얼마나…… 96년도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노동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노사정 합의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을 법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노조법 2·3조 이 부분을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로 통과시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노사정이 합의를 봐라, 결국에는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국회의 입법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사소한 사회적 합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할

때 박근혜정부에서도 큼직한 이런 사회적 합의는 많이 이루어 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이르는 큰 합의까지, 굵직한 합의까지 전부 노사정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합의가 되었을 때 국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3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노사정 합의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숙의를 더 가지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서로가 양보를 한다면, 두서너 가지만 서로 양보가 된다면 오늘이라도 이 부분이 합의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작정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 국회가 책임집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은 현장의 너희가 져라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현장에 있을 때 찬성하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조금 개선, 개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어떤 절차도 없이 올라와서 그 문구가 삽입되고 이런 형태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인다면 여야 합의로 이 국회에서 박수치며 통과될 수 있는 그런 2·3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노사 상생을 위해 활동한 부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숙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노조법은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극한 갈등의 표어가 되어 버렸지만 얼마 전까지 노사정 상생의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7년 최초의 노사협의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 3당 정책위의장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가 대립하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노조법 개정만큼은 노사정이 타협해 개정해 왔고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노사관계를 한층 더 선진화하고 상생토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노조법이 가지는 노사정 대화의 역사와 의미를 우리 대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법의 11차 개정까지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기구 발족과 합의안 도출까지의 경과를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4월 24일 정부는 노사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13일 정부는 14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5명, 학계 10명, 공익 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 계열 3명, 민주노총 계열 2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치권에서는 노사 양쪽의 눈치를 보며 노동법 개정을 기피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 여당은 마침내 12월 26일 새벽 노동관계법 개정안 4개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12월 31일 공포했습니다.

국회 통과 절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 21일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여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고 여야는 재개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논의를 거쳐 3월 10일 여야 합의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 설정, 노동쟁의의 개념 정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단체협약 체결권자 명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명시, 노동위 해석 제도 도입, 대체근로 금지,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이 때문에 민주노총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도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조법 1차 개정 경위입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 이행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약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 제도의 즉시 도입과 노동기본권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노사정은 외환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결국 1998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정리해고 즉시 도입,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내용으로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경쟁력 제고의 내용인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과 물가안정, 고용보험 사업 확충 및 적용 확대, 퇴직·실직 근로자의 생계지원, 취업알선 활성화,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 차원의 고용안정 노력, 외국인력 규모 축소 및 관리제도 개선, 소요재원 확충의 내용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국민 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사정이 만나면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편향적인 어떠한 합의에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제2차 개정의 경위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계속 불참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노사정 논의가 재개되었지만 합의에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자는 데 노사가 동의해 합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예하자는 데 노사가 합의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2001년 3월 28일 노조법 부칙이 개정되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2년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다시 5년간 유예가 됩니다.

3차 개정은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정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제4차 개정 경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2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의 원칙은 유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것과 복수노조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노동조합들이 우선 자율적으로 단일화하고 그것이 무산될 경우에 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06년 9월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시행을 다시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로 3년간 또 연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노사정은 대타협 선언문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 최소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고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0월 19일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제40차 본회의에서는 9월 11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이후로 새로 구성되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노사정위원회 이쪽으로 넘겨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국회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5차 개정은 노조법상 차별금지 조항이어서 국적을 삭제하는 개정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정 합의는 없었습니다.

6차 개정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이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합의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부처가 6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12월 4일까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집중 논의를 거쳐 12월 4일 결국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많은 연기 끝에. 그래도 국회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연기하고 연기하고 수년 동안 연기하고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운 게 국회였습니다.

위 기간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신설과 전임자 급여 등의 지급 목적,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제도,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이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7차·8차·9차 개정은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정 합의는 없었습니다.

10차 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정 합의는 없었습

니다.

11차 개정입니다.

2018년 7월 20일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중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이 되었으며 노사관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노조법 재개정에서 역대 노사정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 관계로 서로를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만 결심하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다시 한번 많은 논의를 통해서, 내일 아침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차까지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했지만 또 정부가 시행해도 되지만 노사정 합의를 기다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했고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동법 개정만큼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노사정 합의로 이루었습니다. 방금 전의 문재인 정부 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 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노조법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개정될 수가 있고 서로가 균형 잡힌 노조법을 만들어서 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어떠한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주지하다시피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공급망 재편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자유무역시대의 종언을 뜻합니다. 이는 자유무역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고 캄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은 적시 생산과 최적 가격이라는 기준 아래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나라에 부를 가져다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타결로 앞으로 물건을 팔고 싶다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이 코앞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큰 도전입니다. 국내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만 고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법안은 노조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조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밖에서는 무역전쟁 속에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업들이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한다면, 해당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기업만 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은 서로 대립되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이 경제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노조법을 검토하고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에게 더 이상 칼을 쓰우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통과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독소조항을 걸러 내고 노사정이 힘을 합쳐 관세 지진과 그로 인해 닥쳐올 경제의 쓰나미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사 간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기업인이 언제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일하게 만드는 노조법 개정안은 반드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노조법 개정안이 우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기업과 경제는 물론 심지어 노동자에게까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점을 여당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차근차근 쌓아 온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근간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며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 파고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를 더욱 망가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웃돈을 주더라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들여와 최소한의 조립만 하려 할 것이고 이전이 가능한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는 자국에 물건을 팔려면 자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치는 노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면 과연 일자리가 남아날지, 그 최종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당장 힘으로 찍어 누르면, 강행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

라도 수년 뒤 무너진 우리 산업생태계와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배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대 국회가 전 세계가 생존을 걸고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오히려 전장의 장수인 기업에게 칼과 족쇄를 채운 무도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도록,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파와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해철)

(03시04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해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벽 3시 넘은 시간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시청하고 계신 우리 노동동지 여러분!

경기 안산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입니다.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힘에 계신 몇몇 의원님들과 또 보수언론 쪽 그리고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동조합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태생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고……

○부의장 주호영 박해철 의원,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교대됐습니다. 알고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휴게실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밖에 의원님들 계시면 좀 들어오라고 그래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박해철 의원 먼저 노조법 2·3조를 다루기 전에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알고 노조법 2조와 3조를 다루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를 거고 또 왜 노조법 2·3조가 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32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에는,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조 1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책무를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게 됐던 근거가 됩니다.

다음 장, 대한민국헌법 3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33조 1항이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유념해서 보실 내용은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인 단결권이라는 것은 주변의 간섭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인 단결권으로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단결권은 바로 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상급 단체인 연맹 그리고 한국노총·민노총을 포함한 총연맹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단결권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권이란 이 단결권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함께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 또한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예를 들면 태업이나 파업이 이 단체행동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본다면 무조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명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어떨까요? ITUC, 바로 국제노총입니다. 국제노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국제연맹입니다. 160여 개국에 300여 개의 산별·

산하 노동조합 연맹이 가입돼 있고 조합원 수가 1억 7000명에 달합니다. 국제노총에서는 매년 160개국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권을 평가합니다. 올해 6월 2일 날 평가했던 결과를 보면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 국제 노동단체가 최하위라고 얘기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라고 ITUC, 국제노총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TUC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서 1등급은 간헐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된다, 2등급은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3등급은 정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4등급은 체계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5등급은 아예 노동권 보장 자체가 없다, 5+등급은 법체계 붕괴로 인해 보장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속한 5등급은 내전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는 5+등급을 빼면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한국과 같이 5등급에 속한 나라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ITUC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바로 고용주들이 약한 법과 부실한 감독을 악용해서 지연 전술, 협상 거부, 고용주를 지지하는 노조나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단체협상을 회피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151국에 달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헌법 33조, 노동삼권은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기초로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법 영역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동조합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총 다섯 가지의 주요한 꼭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할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비교해 봐서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집단적 교섭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단결을 통해서 실질적 권익을 확보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안전 등 노동조건의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노사 간 힘의 균형 유지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자본·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실제 노동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 32조와 33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균형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통해서, 노동조합·단체교섭·파업권을 통해서 교섭력의 균형을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 유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평화와 조정 기능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노사 갈등의 제도적 해결 장치 역할을 하고 이 갈등이 무제한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고 합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의 실현 부분입니다. 노사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를 넘어 산업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요소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를 대변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노사정 협의 구조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제기준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LO 98호, 87호 이런 여러 가지 ILO 협약은 바로 국제기준과 연계하고 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도에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국제규범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은 19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군사·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 관련 규정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리면 노동조합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조합은 자그마치 72년이나 지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법의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72년이나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2023년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동조합법은 53년도, 72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을 말해 주는가 하면 그만큼 노동조합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의, 당장에 만들었을 때의 이득보다는 만들었을 때의 피해가 더 크다 보니까 이미 그런 많은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또는 팩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000년 이후의 노조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중요 항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ILO 및 국제사회 요구를 반영해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부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바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1년 유예를 거쳐서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바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양대 노총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간에는 1사 1노조 원칙이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복수노조가 설립됨으로써 1사 2노조, 3노조, 4노조, 5노조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복수노조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조합 운동의 자율권이 많이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 사항으로 복수노조는 설립되었으나 바로 사용자 측의 요구로 인해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창구 단일화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교섭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바로 창구 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만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복수노조를 설립·허용하는 그런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받아 준 반면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섭권은 대표노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다시 암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노조법 일부 조항 위헌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교원과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에 대한 것을 새롭게 또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9일 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노조법은, 한번 그간에 노조를 해 보신 분들은 또 노조를 직접적으로 설립을 해 보신 분들까지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 300명의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절차와 이런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파업은 함부로 할 수 없고 파업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폭력 집단 또는 불법 집단, 파업이 그렇게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파업은 결코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전해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때는 저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또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서, 조정과 또 중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께도 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파업한 순간부터는 급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할 때는 바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할 때, 교섭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교섭의 영향권에서, 교섭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부득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노동자들이, 실제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그런 무노동 무임금까지 인식을 하고도 파업을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절박하면 파업을 할까라는 그런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의 목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에 노조법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문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노조법의 모든 것이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조건의 유지를 하고 개선시키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바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그리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어느 일방에, 한쪽에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파업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투표를 해서 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파업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

다. 그리고 또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과 중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내용을 거침으로써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있고 노동조합만 보면 마치 빨갱이 또는 노동조합만 보면 불법 집단, 조폭 집단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2조(정의)에 노동조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은 노동조합 부분만 발라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방송으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나 바깥에서 듣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을 노동 현장에서 직접 뛰고 느꼈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로만,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법 2조의 정의에 노동조합이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바로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합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바로 그 근로자가 주체라는 부분은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단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도 사용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독자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노조법상에 노동조합 정의는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실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애써 이 내용들은 굳이 읽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절차입니다. 노동조합은 만들어야지 해서 그냥 만들 수 있다, 없다?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인가제 또는 승인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조에 있는 설립의 신고를 보시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를 해서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광역시장이나 시·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신고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된 때가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설립신고서와 규약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데가 크게 노동청이 있고 또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청은 노조법에 대해서, 이 법 자구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립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절차가 굉장히, 그분들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업무 파악이 되고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청장에 갔을 경우에는 그 부서는 노동조합을 전담하고 있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문구 하나를 보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고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방노동청이 시군구만큼의 많은 행정관청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용이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군구청장에게도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설립 신고를 하면 할수록, 시군구청에 할 경우에는 더 많은 피로도와 문제와 절차상의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개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설립신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한번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쉬워 보입니다만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1953년도에 노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첫째, 명칭, 노동조합의 명칭.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주소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또 연합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죽죽죽죽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뒷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서 4번,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나옵니다. 임원이 나오려면 임원 선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창립총회를 해야 되고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만들고 임원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내용들을 갖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설립신고서에는 신고서와 규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 또한 노조법 11조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노조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사항들입니다. 빠지면 다시입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명칭, 둘째 목적과 사업, 셋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네 번째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섯 번째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라면 회의체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다음 장을 볼까요?

여덟 번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자를 뽑아야 되고 감사를 뽑아야 되고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각의 노동조합에 맞는, 직제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비는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열 번째는 규약 변경. 규약은 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이 규약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다음에는 그 규약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해산에 대한 사항, 열두 번째는 쟁의행위. 바로 열두 번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는 파업 부분입니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 보시면 쟁의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열다섯 번째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만큼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 단체도 없습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은 이 규약 하나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냥 쉽게 함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인데 이런 노동조합을 마치 불법적 폭력적, 기타 다른 형태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노동조합이 어떤 데인지만큼은 분명히 알려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노동조합은 총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총회 개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면 그냥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고 전년도 사용 실적은 어떻게 돼서 그래서 결산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각 노동조합별로도 다양한 기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발전기금도 있고 투쟁기금도 있고 또 희생자구제기금도 있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 만약에 일반 기업별 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할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여기서 말하는 조직 형태 변경이라는 것은 기업별 노조를 초기업별 노조로 바꾼다거나 초기업별 노조…… 그렇게 되는 거고.

기타 중요한 사항도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심지어 노조법에는 또 임원의 자격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 또는 2년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라는 게 나옵니다. 노동조합 업무만 전념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

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합니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서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하길래 근로시간 면제를 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단체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교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나 기타 사용자와의 다양한 형태의 교섭과 협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섭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노조법 25조에는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과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1회 총회의 의결 사항 중의 하나도 바로 예산과 결산 부분이 나옵니다. 그 결산에 뒷받침되는 부분이 바로 회계 부분입니다. 이 회계 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 처리가 부조리가 많다, 불법적으로 한다. 마치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회계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는 시스템에 입력하라라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결체입니다.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만들었던 노동조합을 누가 외부에서 이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렇게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은 없습니다. 또한 법에도 이 회계감사의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조법 26조입니다. 운영 상황의 공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총회 의결 사항에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영 상황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은 당연히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열람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양대 노총에서 노동권 침해라고 해서 노동

회계공시 제도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섭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삼권이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제는 단결권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노동조합의 주요한 활동 부분이 이런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은 바로 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법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교섭대표 체결 권한이 바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있고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연 뭐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한편으로 또 교섭 창구 단일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우리가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걸 주면서 재계의 입장을 받아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결국은 노조가 아무리 많아도 교섭대표로, 결국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대표노동조합 하나만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창구 단일화 절차도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수노조를 만들고도 실제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교섭대표권을 가지지 못한 노동조합은 결국은 소수노조로 전락하고 이 소수노조의 목소리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또는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기업에 노동조합 1·2·3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협 만료 3개월 전에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합니다. 교섭 요구를 하면 사용자 측에서는 일주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합니다. 1번이라는 노동조합에서 이런 교섭 요구 사실이 있으니 다른 노조들도 교섭할 사람들이 있으면 교섭을 해라라고 일주일 동안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3번 노동조합도 '아, 그러면 우리도 교섭을 할게' 해서 다른 노조도 교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 노조가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용자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참여 노조를 확정공고를 합니다. 5일 동안 확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단일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의, 이 각각의 노동조합이 교섭단을 꾸려서 같이 들어오면 좋기는 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다수가 과반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과반수 노조가 자율적 단일화를 2주 동안, 14일 동안 1·2·3 노조로 하여금 '자, 그러면 너희들 3개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세요. 14일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꽤 많은 노동현장을 다녔고 제가 상급단체 연맹 위원장을 해 보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일화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과반노조 중심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3·4 이런 식의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거나 또 아니면 합종연횡을 해서 꾸리거나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협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단협의 유효기한만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용자와 노사교섭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교섭도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노조법 30조에는 교섭의 원칙을 담아 놨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히 교섭을 해야 합니다. 또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생각만큼 신의성실에 따라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노사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 교섭 원칙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자는 바로 자본과 경영권을 갖고 있고 노동자는 바로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32조와 33조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30조 2항에 따라서 살펴보면 정말 악덕 사업주 많습니다.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교섭 해태하거나 단협 체결 거부하거나 중노위 결정을 하거나 행정소송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 사

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한 의무 사항입니다.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에는 교섭의 원칙을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업, 정식 명칭은 쟁의행위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도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37조에는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하는 파업이 마치 불법이다, 조폭이다, 뭐다 뭐다 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그런 기사를 보면 저도 노조를 했던 당사자로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조법에 대한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이 내용들을 실상은 잘 모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항 한두 조항만 가지고 그걸 이슈화를 하다 보니까, 또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큰 그림하의 조각조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이 그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도 살펴보면 첫 번째, ‘쟁의행위는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과 방법과 절차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파업을 하느냐, 파업의 방법은 뭘로 할 것이냐,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 기본 원칙으로 담겨져 있다.

두 번째,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파업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하게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법 41조 또한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의 원칙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1항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되고 조합원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현장은 파업 찬반 투표를 물었는데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행부는 보통 다 그만두고 내려옵니다, 일반적으로.

또 두 번째 조항을 살펴보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법에서는 국가의 필수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나 용수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쪽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산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산물자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몇몇 개 특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기업들이 부품을 또 일부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방위산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을 모아 놓은 곳은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노조법 42조입니다. '폭력행위등의 금지'라고 나옵니다.

1항을 살펴보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네 번째,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2조 1항을 살펴보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가기반시설, 중요시설, 국민에 필수 공익적 또는 필수 공공재적 성격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을 제가 지금 여기 담아내지 못했는데 법 시행령에 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현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파업을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같이 또 파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철도 파업하면 철도가 전 구간 다 파업할 것같이 또 한전이 파업하면 아예 전기 송출이 안 되는 것같이, 발전소가 파업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같이,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이미 법으로 점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업체의 전산실 같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스톱될 경우에 그 회사는 굉장히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쟁의행위로 유지·운영을 정지든 폐지든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이미 법으로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역할 또한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

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후승인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 42조의 폭력행위 금지를 보면 정말 보수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나 또 국힘의 일부 의원님들의 표현을 빌려 보면 제가 섬뜩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결코 이 법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담아 두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쉽게 함부로 또 노조가 아닌 어떤 주체들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좀 비하하거나 또 노동조합을 마치 폄훼하거나 마치 불법 집단이거나 마치 대한민국에 왜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어 내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대한민국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만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볼까요?

42조의2 부분입니다.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항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필수유지업무나 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해서 주요한 시설 또는 안전보호시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 법은 명확하게 그 입장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만 새벽 4시가 넘어도 제가 이 노동조합에서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다 보니까 오히려 심장이 더 벌렁벌렁 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45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정의 전치'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쟁의가 발생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2항을 살펴보면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의행위는 일단 쟁의 절차와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투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45조에 따라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쟁의행위다, 파업이다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것,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모여 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투쟁가 부르고 주먹 구호하고, 쉽게들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수단이 파업입니다.

자기들도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파업을 한다?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사용자와의 교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한편으로 사용자의 교섭 해태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단결권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단이 단체행동권밖에 없다. 이

게 여기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헌법 33조 1항에서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줬다는 거지요.

왜 헌법에서 줬느냐?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단체교섭할 때 주는 사람은 사용자지 노조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도 '그냥 파업은 안 돼, 이런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 반드시 거치지 않고는 파업을 못 해'라고 법으로도 이 조정은 반드시 거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54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산하에. 사용자와 노조를 부릅니다. 조정위원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임금, 사용자 몇 프로?' '우리는 2프로입니다' '노조 몇 프로?' '6%입니다', 이것 서로 개입이 너무 크니까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2%는 중간 반타작이 4%니까 4% 안 돼?' 그러면 '3%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안 돼?' 그러면 '5%까지 해 보겠습니다' 또 결렬되고 조정위원이 오전에 한 번 하고 결렬되면 오후에 또 부릅니다. 또 부르고 그다음 날까지 또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들이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당사자가 제 머리를 못 깎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정위원들이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칩니다.

왜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겠습니까? 결국은 쟁의의 행위까지는 가지 못하게 최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왜? 정말 파업은, 저도 노조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만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일점을 찾아내면 좋은데 도저히 그 갭을 합치를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조정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조합으로서는 파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뒷장 한번 보실까요?

노사 교섭을 합니다. 노사 교섭을 하는데, 쟁의행위 절차도입니다. 교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법 2조 4호에 보면 쟁의행위에 이런 문구가 나오지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입니다, 노동쟁의가 발생되면. 그래서 조정절차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넣고 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절차와 무관하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조정에서 끝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안 해도 되고요 조정절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파업에 들어가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반 정도, 55% 정도 얻어서 파업을 하기에는 동력을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반 이상 못 끌어내면 그 집행부는 자진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행부가 이끌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의 찬성이 나왔다 그러면 쟁의행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측에 쟁의행위 발생 통보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는 쟁의행위를 합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에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쟁의행위의 원칙이나 또는 폭력행위의 금지나 기타 일련의 그런 부분들에 준해서 쟁의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해야 됩니다. 쟁의의 주체·목적·방법·절차가 쟁의행위의 요건에 정당해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다. 쟁의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삼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노조법이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노동조합 그러면 감이 좀 오십니까? 처음 들으셔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노동조합이 조직 내에서는, 각 기업별 내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들입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내부에서 노동이사가 참여함으로써 각종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입장이나 또 한편으로 경영진들의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각 기업체 내의 노동조합은 순기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순기능의 부분들을 보면 실제 열심히 일한 땀 흘린 노동자에게 일정의 성과가 돌아가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치고 서로 상호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그 기업체가 목표로 한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들과 경영진들이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서로 간에 원팀이 되고 그럴 때 그 조직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3년도에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고, 1970년도 11월 13일 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라고 분신을 할 때에 그때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다만 단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53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이 17년이 지난 1970년도 11월 13일 날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할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루 8시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6시간 그 미싱방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거기다가 넣어 놓고 거기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시키는, 그런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뽑아서 사용자들은 이익을 창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다,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김위상 의원님께서도 어릴 때 그런 과정 거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강국에 또 5대 무기 강국에, 정말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점이 없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53년도의 또는 70년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고혈로써 이윤을 챙기고 또 그것으로써 기업을 이끌어 가겠다. 아마 지금은 그런

기업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은 노와 사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이 잘돼야 구성원들도 잘되는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사기가 올라야 일의 효율도 올라서 더 많은 성과도 낸다고 봅니다.

노와 사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상생과 신뢰의 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과 같은,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처음에 기업체 이 정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의 산재사고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재사고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성남 SPC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서 목숨을 잃었던 사고입니다. 거기는 12시간 맞교대의 교대제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 설비가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입니다. 그런 노후설비에 기계 작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 없이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일례의 사고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말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를 좀 가볍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재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근로기준법은 주 48시간이지요. 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포함해서 48시간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그때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습니다.

보통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공통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의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3년도에 주 48시간에 최대 주 60시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웃고 넘어가는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년도에 국내총생산이 1인당 몇 달러쯤 될까요? 53년도에는 67달러입니다, 1인당 67달러. 정말 대한민국이 그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 44시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대 휴일 포함해서 주 64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휴일을 빼면 주 56시간인데 휴일을 포함해서 최대 64시간으로 됩니다. 이때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퇴근했던 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시절일 겁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 44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최대 휴일 포함해서 주 64시간으로 됐고요.

그러면 89년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몇 달러 될까요? 5569달러입니다. 이게 불과 36년이 지났습니다. 36년이 지났는데 두 자릿수가 네 자릿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89년도에 바뀌고 난 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03년도에 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주 40시간이 됩니다. 이때는 휴일을 제외할 경우에는 주 52시간, 휴일을 포함할 경우에는 6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40시간은 도입이 됐으나 휴일 포함했을 때에 주 68시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1인당 몇 달러쯤 될까요, 이제는 가까이 오니까 좀 감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는 1만 6500달러가 됩니다, 1만 6500달러.

그리고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오늘날 있는 주 40시간에 최대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우리가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3000달러가 됩니다.

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총생산 규모를 살펴보면 결국은 오래 근무한다고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의 바람은 물론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만 그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더 선호를 합니다.

지금 일부 병원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월급은 좀 줄어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 또한 간호사 영역이 이직률이 높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 임금보다 복지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이 앞으로 더 대두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측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2023년도 OECD 기준 장시간 근로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OECD 평균해서 연간 1742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872시간입니다. 130시간이나 더 많지요. 한때는 우리가 넘버 2까지도 했었습니다, 장시간 근로. 넘버 2까지도 하다가 지금은 여섯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는 세계적인 선진국 규모에 걸맞게 우리도 이 노동시간 부분은, 저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는 굉장히 후진국형 근로 형태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머리 좀 쉬어 가는 코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 통계 부분들입니다. 노동통계는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셔도 앞으로 기회 되실 때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재미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직률이 13%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된 숫자가 273만 명입니다. 되게 좀 많아 보이지요? 안 많은가요? 별로 안 돼 보이지요?

53년도에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72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노조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법은 이렇게 오래됐는데, 72년이나 됐는데 왜 기껏 13%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임금노동자가, 여기 보시면 매년 1월 달에 노동부에서 노동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매년 1월 달 또는 매년 말에 나오는데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조합원 수는 273만 명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공무원·교원을 포함하면 217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73만 명만 노동조합 가입돼 있다.

우리가 진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서, 거기는 분명히 국가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조합을 가입해라

가입해라 가입해라, 오바마가 노동절 날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러 갈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꼴랑 13%의 노동조합 조직률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동조합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많다. 노동조합을 가입하면 그 순간부터 사측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다. 또 그동안 이렇게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줘도 국가는 방관했다.

국가가 권유하고 노동조합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렇게 13%에 그칠 것이냐. 물론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권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고 가입을 해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그 우측을 보시면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자그마치 845만 명이 됩니다, 845만 명. 여기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왜? 양질의 일자리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 자리는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IMF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위탁이나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자리는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파견근로자 기간제, 기간제는 그래도 무기직이지요.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오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다.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낮춰야 된다. 결국은 이 비정규직이 바로 최저임금이고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똑같은 말들이 포장만 다르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양극화, 똑같은 말들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세대.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올해 최저시급이 1만 3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하면 209만 원 정도 되지요. 연봉으로 하면 연차수당 들어가고 또 몇 가지 좀 더하면 한 이천오륙백쯤 되겠지요. 지금 알바생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알바생들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젊은 알바들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저시급 부분이 결국 주 40시간 주휴 8시간 월 209시간 했을 때에 월급이 한 209만 6000원 되는데 이 최저시급은, 물론 자영업자나 또 영세·중소기업체들은 최저임금이 곧 경쟁력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최저시급이 생활을 버텨 내는 최저생계비로 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200만 원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이것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버텨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못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3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된 게 바로 1만 320원입니다. 불과 290원 올랐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물가는 상승률이 높고 생계형으로, 최저임금 알바로 버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속 버텨라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우측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 뿌리를 뽑는 원년의 해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출근해서 못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의 외주화로 나가 있는 하청 노동자가 많고 간접노동자가 많고 또 협력업체가 많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출근해서 퇴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은 국가가 지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문 닫아라가 아니라 문 닫을 각오로, 문 닫을 정신으로 그동안에 안전불감증으로 함부로 해 왔던 그런 일하는 방식들을 다 바꾸라는 주문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기계를 가지고 새 기계인 것처럼 생산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하게끔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간의 관행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동안 고참은 오랫동안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나마 압니다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산재가 나는 것이지요. 작년에 아리셀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규모 참사는 거의 대부분 알바식으로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일한, 용역사에서 사람 불러 가지고 거기에 하루 투입됐다가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최근 3년간 살펴보면 매년 한 해에 800명대 이상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내 가족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산재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냥 정규직이 아니니까, 우리는 정규직이니까, 저기는 파견이니까, 저기는 용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재는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방식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해야 됩니다. 초보도 와서, 신입 직원도 와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줘야 됩니다. 수십 년 일했던 사람들의 경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십 년 된 기계를 가지고 새 기계인 것처럼 하는 그것도 아니라.

또 근무교대제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극도의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교대제 행태로 만들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나옵니다.

뒷장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먹고사는 최소한의 생계 부분입니다. 임금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도 자기지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받든지 카드깡을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가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에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임금체불액 기록적으로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법적이든 형량이든 어떤 형태든 그렇게 주문을 해도…… 작년 당시에 고용노동부장관 누구인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은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2조가 넘는, 아마 역대 통계상으로 가장 체불액 규모가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근로감독을 하고 또 체불액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게끔 수시로 제보를 받고 제보를 받으면 바로바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임금체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인데 이것을 체불한다? 이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측을 보시면 부당노동행위 신청 건수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신청 건수는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들이 노동청에다가 신고한 거지요. 한 해에 1만 4000에서 1만 8000건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신청됩니다. 이런 신청이 되면 절차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니면 일선 노동청에서 이 부분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노동조합에 가입된 수가 270만 명인데, 이게 2023년 말 기준입니다. 한국노총 가입자가 116만 명, 민주노총 가입자가 108만 명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곳이 47만 명, 이런저런 노조가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0만 명 중에 한국노총이 42%, 민주노총이 39%로 조합원 수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8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간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도표를 참고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 것은 89년도, 90년도는 바로 87년도에 민주화 투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설립이 되고자 했던 그런 시기라서 89년도, 90년도에는 그래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18~19%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19년도·20년도를 보면 점차 증가세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은 생명 안전 영역을 정규직화하겠다, 특히 공공영역만큼은 자회사 형태로 직고나, 자회사로 하겠다고 해서 실제 위탁이나 파견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자회사나 직접 고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 부분 올라갔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노동조합 규모별로 노조 수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30명 미만 조합원이 있는 노조 수가 자그마치 2455개나 됩니다. 그리고 30명에서 99명까지 있는 노조 수가 174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300인 이내가 1086개소의 노동조합 그리고 300명 이상이 886개소로 해서 전체 6169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개수는 616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조 수와 조합원 수가 반비례를 합니다. 30명 미만의 노조 수는 비율로 39.8%인 데 비해서 조합원 수 비율이 불과 1.1%인 2만 9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100명 이내가 9만 5000명, 100~300이 18만 3000명, 300명 이상이 240만 명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30명 미만 또는 100명 미만의 노동조합이 아주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조합의 규모로 본다면 100명 이하는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이 많다는 것을 방증을 하기도 하고 또 300명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조직들이 노조 수에 비해서 조합원 수로 봤을 때는 기업별로, 어쨌든 초기업별로 큰 조직들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조직 형태별 조합 수, 조합원 수입니다.

현재 보통 노동조합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라고 해서 산별노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종사원들이 A라는 기업만을 위한 기업별 노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업별 노조라고 해서 산별노조 형태로 해서, 산별노조에 들어가되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것은 지부 또는 지회 형태로, 가입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 분야나 이렇게 봤을 때는 초기업별 노조로 가는 게 아무래도 더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나.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노조를 해산시켰다가 다시 노조를 만들 당시에 전략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노조를 초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기업별 노조로 파편화해서 실제 기업별 노조들 간에 그들끼리의 조각조각 노조를 만들었을 때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기업별 노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걸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각 나라별 노동조합 조직률이 어떨까 한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북유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은 49~68%, 벨기에 50%,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순서로 돼 있고 가까운 일본은 17%, 미국은 10%인데 우리랑 근로 형태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된 이 조직률을 어떻게 더 상향을 할 것인가의 주문은, 김영훈 노동부장관님도 계시는데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노조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노조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조합은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열심히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사업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유진기업입니다, YTN 인수한. YTN 인수한 곳 그러면 아시겠지요? 여기는 노조를 설립을 했는데 1년 만에 노조위원장을 징계 사유도 아

닌데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노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징계해고를 통해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이 노조위원장을 정말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YTN 인수를 한 유진기업이 어떤 회사가 될까, 진짜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의 결과조차도……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도 이 유진기업은 노조를 정말 탄압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삼호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불이행 이 부분 또한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지요. 유독 노조 간부만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 그래서 중노위도 이미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했는데 여전히…… 사업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권과 자본권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인력이지요. 그래서 자본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소송할 때 보면 김앤장 이런 대형 로펌을 삽니다. 돈은 수억 들어도 그 수억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간부들 고용을 받아서 주는 월급은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노동부에서도 좀 다양한 형태로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락앤락 잘 아시지요? 밀폐용기. 거기도 외주화 및 정리해고를 했는데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노위든 중노위든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겨도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을 하면 또 길게 길게 시간 끕니다. 물론 우리는 이깁니다. 이기나 노동자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왜? 그 기간 동안, 나중에 이기면 그 기간만큼은 월급을 받겠지만 그 기간까지 못 버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측의 회유에 그냥 찔끔 비용을 받고 그리고는 포기를 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KBS의 방송작가도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 이것 또한 그냥 소송 간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반 민간 영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영역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판정이 나면 저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노동위원회가 민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의 어떻게 보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것을 동의를 못 해서 또 행정소송으로 가겠다, 이런 형태는 정말 노동 존중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결정이 되면 반드시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제가 책 이름을 얘기해야 금방 아실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 교재 보면 '쎈'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 보신 분 계실 겁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재일 겁니다. 또 '우공비'라는 초·중·고등학교 참고서를 만드는 ㈜좋은책신사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2022년도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난 뒤부터 괴롭히고 업무를 배제시키고 교섭을 거부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교섭을 제대로 해라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섭해태를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은 왜 13%밖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자본과 인사와 경영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정말 여기에 버틸 수 있는 노동조합 많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도록 방치했던 국가의 책무도 저는 크다. 그래서 국가도 노동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고.

이 좋은책신사고도 결국은 노조 그냥 싫다는 겁니다. 아니, 노조가 불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노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이고 뭐고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노동삼권조차도 또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긴 근로기준법조차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임신한 직원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본인의 역할이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임신 사실을 알리자 또 됐고.

그다음 장.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자율입니다. 노사 자율인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그때 당시는 노사 자율에 따라서 타임오프를 합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나서 갖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해고한 건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 장을 보면, 삼성 갤럭시 조립 청년이 백혈병 걸리자 회사는…… 무급휴직 끝에 해고가 된 이런 사안도 있고요.

그다음 장 보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파트 경비업무 하시는, 저도 여러 차례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다 보면 이분들 근로기간이 심지어 3개월 단위로 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6개월 단위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노예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떤 본인들의 기본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떤 명분으로든 다 자르니까. 또 대다수가 그 업무는 고령친화직종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라도 잃어 버리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노동권 침해도 많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노조법 2·3조,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들어 왔던 노동조합의 설립과 역할과 교섭과 활동 부분을 이제는 기본적으

로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의 어떤 근로관계가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지요. 사용자·노동자 관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중층적입니다. 굉장히 다면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지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됐던 배경 중의 하나가 IMF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때 선택을…… 그때 있었던 정규직 기득권들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살려 줘라, 대신에 파견근로자법을 만들어서 파견근로자를 써라.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파견근로자들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담보돼야 될 게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해고되더라도 최소한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해고되면 바로, 자기는 바로…… 해고는 자기 목숨줄하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해고됐을 때 우리 국가에서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이 해고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는 실업급여 6개월, 8개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런 해고,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려면 먼저 국가가 선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을 할 때 이 노동시간 유연화는 검토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비정규직 증가가 많이 됐고 또 사업주들도 그때부터는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습니다. 사내하청, 파견·위탁 또 특수·간접고용 형태 이게 전 산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음 장.

그러다 보니까 원청자들은 룰루랄라 합니다. 일은 자기 사업장에서 하는데 계약관계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오더 받아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주문 내리면서 정작 그 원청자들은 '아니, 나랑 계약한 것 아닌데 무슨 교섭이냐? 교섭할 수 없다'가 지금까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분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삼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판단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리와 이윤을 챙기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한편으로 이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은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윤만, 권리만 챙기겠다? 이것은 2025년도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사용자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하지요. 하는데 근로계약서 종이 한 장이 있어서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우리 직원 아니야. 정식 직원 아니야' 이런 거지요. 결국은 그 노동자들 일 시키는 것은, 원청에서 시킴을 받는데 정작 계약관계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일한 성과나 또는 성과로 인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윤에 대해서는 전혀 원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사업주가 그 정도 권한이 있느냐?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장은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또 다음 장 한번 살펴볼까요.

손배·가압류 부분입니다. 손배·가압류 부분은 제가 뒷장에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가 들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불법 파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만, 사례로 한화오션이 470억 손배소, 현대자동차와 현대측에서 49억 손배소, CJ대한통운에서 20억 손배소. 사실 손배소가 들어오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비용적 측면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해 왔던 게 바로 2007년도 쌍용차 사태가 바로 그 사태입니다. 그래서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한 부분은 쟁의행위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96년도까지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96년도에 날치기법을 통과하면서 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가 되면서 실제 권리 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축소가 돼 버렸지요. 오히려 노동삼권이 훼손된 그런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손배소와 가압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기업주들이 그래도 노조와 앞으로 좀 잘하고 싶어, 그래서 이 기업주는 손배소 그랬던 것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이제 손 잡고 잘해 보자, 원점으로 가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임 문제가 있다고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거지요, 뭔가 기업주들 사업주들은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이 배임 우려에 대한 손배소 취하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면 이번에 담자, 상생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로 그 사업체 잘 만들어 보자라는 법이 바로 노조법 2·3조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란봉투법을 얘기하십니다. 최초의 시작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21일 날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 원본 그대로 제가 담았습니다.

제목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발 사 주겠다 했는데…… 노란봉투법 불씨 된 22년 전 어느 노동자의 죽음'입니다.

실은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된 게 바로, 모든 노란봉투법을 얘기할 때 우리 노동계에서는 고 배달호 열사, 고 김주익 열사를 얘기합니다.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몸에 불을 질러 분신했다. 배 씨는 두산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노조에 65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합원 임금 53억 원을 가압류했다. 임금 가압류가 시행된 뒤 배 씨의 손에 들어온 급여는 단돈 2만 5000원. 6개월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광장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2만 5000원을 받고 6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가장이 버틸 수가 없지요.

'같은 해 10월 17일 부산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씨가 사망했다. 2002년 한진중공업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단행해 65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회사는 잘나가는 기업이었다. 2002년 한진중공업 매출액은 1조 6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40억 원이었다. 사주는 해마다 50억에서 100억 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반면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에서 21년간 근무했던

김 씨가 받은 월 기본급은 108만 원 수준, 이마저도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나면 80만 원을 겨우 넘겼다고 한다. 노조는 노동자 해고에 파업과 농성으로 맞섰고, 사측은 조합원 18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150억 원대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 7명은 집을 가압류당했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역사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호 씨와 김주익 씨의 죽음이었다. 배 씨의 유서에는 해고자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조 말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망 당시 53세였던 배 씨에게는 배우자와 19살, 17살 두 딸이 있었다'.

좌측에 보이는 화면은 바로 유서 내용입니다.

'김 씨는 그해 6월 11일 85호 크레인에 올랐다. 크레인에 오른 지 129일째 되던 날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힐리스는 당시 초중등생에게 인기를 끌었던 신발로 운동화 안에 바퀴가 달렸다. 그가 사망한 뒤 유서가 발견됐는데 크레인에 오른 지 90여 일이 지났을 때 작성된 내용이었다. 유서를 쓰고도 30여 일을 더 버틴 그는 사망 당시 40세였고 배우자와 아들딸이 있었다.

김 씨의 사망 이후 약 2주가 지난 10월 30일, 이번에는 한진중공업 노조 문화체육부장 곽재규 씨가 한진중공업 4도크 바닥에 투신했다. 1975년 회사에 입사한 그는 김 씨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곽 씨 또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과 임금가압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김 씨 사망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절망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곽 씨가 몸을 던진 곳은 친구 김 씨가 사망한 85호 크레인 바로 옆이었다.

이런 비극을 토대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장기간 주장해 오면서 대법원에서 이 법의 취지는 먼저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파업 손해배상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 비율은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또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방식도 새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지만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노란봉투법은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하청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실정법에 반영한 것이다'.

다음 장, 왼쪽 유서 내용은 고 김주익 열사 유서 내용입니다.

'파업 등 노동쟁의 요건은 현행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불법으로 몰려 두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제도적 폭력으로 짓밟아 왔다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코레일, KEC,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

자, CJ대한통운, 유성기업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참사라며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며 남긴 절규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중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등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달에 있었던 매일노동뉴스 '77일간의 생존게임 쌍용차 사태' 부분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원으로 점철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난 2001년 GM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례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올해 초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쌍용차는 배가 난파당하면 구성원의 일부를 무인도에 내려놨다가 배를 수리한 뒤에 다시 태워서 가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방적 정리해고 추진, 노사 간 충돌, 경찰력 투입의 선례도 되풀이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7100여 명의 쌍용차 직원 가운데 2800여 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다. 파업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8월 6일 도출된 노사 합의에 의해 마지막까지 농성에 참여했던 686명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중 357명은 희망퇴직과 분사를 통해 고용관계가 해소됐고 329명은 무급휴직과 영업전직의 방식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됐다.

하지만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무급휴직자들은 1인당 평균 4378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고자 재취업 지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은 쌍차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농성에 따른 여진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는 농성에 참여한 비해고 노동자 34명을 해고한 것을 포함해 모두 126명에게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동계에 부과된 물리적 부담도 상당하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 제기된 손해배상·가압류 합산 금액은 무려 125억 원에 달한다. 농성을 주도했던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지금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농성 과정에서 표출된 노·노 갈등은 결국 노조의 분열로 이어졌다. 쌍용차 사태는 기업 매각 과정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의 폐해도 단적으로 보여 줬다. 검찰의 수사 결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돼 최소 5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현재 세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존립의 이유 중의 첫 번째가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최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바로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 내기 위한 헌법상의 노동삼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부분은, 결국은 이번 노조법에 정리해고 부분도 들어갑니다. 결국 표현의 방법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사업상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뒷장을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2014년도 대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한 시민이 언론사에다가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4만 7000원의 봉투 10만 개면 47억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뒷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노위에서도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3월 달에 판결된 대법원 판결 사항입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이고 원청의 도급대금 인상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수 없는 구조이며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도 원청의 책임 아래 있는 경우 등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집단적 근로관계, 즉 노조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3년도 6월 15일 날 판결된 대법원 판결 사항입니다. 현대자동차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특수·간접고용노동자가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ILO 이사회 보고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입니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배·가압류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ILO 이사회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

려를 표명하며 보조 조치 자체를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시에 EU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EU FTA 전문가 패널 구성 완료. ILO 협약 따진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전문가 패널이 3명인데 한국 측에는 땡땡땡 서울대 교수가 선정돼 있고 FTA 분쟁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로 구성돼 있고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가 미비준 상태다, 전문가 패널 권고보고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게 있고요.

또 2019년 1월 달에는 EU, FTA 노동권 약속 이행 불충분하다, 한국에 비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2019년 4월 달에 오늘 한·EU FTA 무역위원회, EU가 ILO 협약 비준하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8월 13일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의 상식선이다. 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더드, 결국은 ILO 협약 비준 이행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ILO 협약 비준했던 사항들, 98호와 87호 이 2건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담는 내용인데 이제 겨우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문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동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넘어 통상 마찰까지 빚어질 뻔한 전례가 이미 있다, 아까 제가 기사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2019년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FTA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기준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토대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5대 교역 상대인 EU는 내후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 영내뿐 아니라 교역 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이 노동후진국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통상 마찰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아마 언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유럽상의에서 '노조법 통과되면 한국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재계에서도 또 심지어 국힘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유럽상의들 다 철수한다라고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 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경총에서,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경총에서는 '참고 자료를 공유했지 공식 요청은 안 했다' 이렇게 일단 기사에는 나옵니다. '미국상의는 철수 언급 없이 우려 표명'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 반대 진영의 선두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등장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노조 활동 등 노동권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계 기업단체가 '한국 시장 철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국회 입법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반색했다. 같은 날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보다 앞세워 노란봉투법 포비아를 키우려 했다.

당장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회사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비정규직 노동자 질문에 '한국에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오히려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만화 '송곳'의 명대사가 소환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30일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총 쪽은 경영자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공유를 한 것이다. 실무선에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해마다 회원사들이 제기한 산업별 규제 이슈를 100개 안팎으로 선정해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고 진척 상황을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백서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훨씬 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처벌 요건 명확화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30일 노란봉투법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철수 가능성은 언급은 없었다.

이 부분이 지금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과 국힘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다 철수한다. 큰일 났다. 노란봉투법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짓말의 팩트를 제가 말씀

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조법 2·3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쟁 과정에서 쟁의행위가 법률적 제약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 제공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제2조제2호 사용자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3.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 노동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2.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3.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8일에 의견을 표명했고 이 내용은 국회와 정부와 환노위에도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인권위에서 얘기했던 노조법 2조 1항에 나온, 2조 1항의 근로자의 정의 규정은 실제 저희 환노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한편으로 또 재계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근로자의 정의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 항을 보시면 제2조제5호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 노동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

지입니다. 현재 ‘노동조건의 결정’ 부분이 빠지고 ‘노동조건의 변경’으로 할 경우에는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노동조건의 결정 부분이 제외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재계에서의 어떤 걱정, 우려가 많은 관계로 결정 사항은 유지하되 경영 사항과 단협의 일부 사항들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지금부터 세부 조문별로 조문별 개정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의 이번 변경된 내용을 다 담았고요. 앞에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개정 내용에는 없다는 말씀을, 제2조제1호 부분은 아까 우재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조 2항에 당초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사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사업주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라고 본다’. 아까 조금 전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냥 담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도 이미 직접적인 법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데 현저히 다면적 노무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노동삼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아까 2010년 3월 25일 대법원 판례, 이 판례를 법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ILO와 국가인권위에서의 권고 사항들을 법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조문 개정 부분입니다.

제2조 4호 부분입니다. 당초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거나 또는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죽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단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를 삭제를 해서 노동조

합의 결격요건을 삭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전교조가 불법 교원단체로 됐었다가 그 불법 교원단체가 다시 합법화를 하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불법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해고자였습니다. 해고자는 현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고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법으로 대법 판결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화면 뒷장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을 행사하는 부분들인데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해서 노동조합 설립이 방해되는 부당한 사항이 초래되고 있지요. 근로자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전체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지요. 또한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고.

이미 ILO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용관계 등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ILO의 기본 방향이다. ILO의 기본 방침은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들을 모든 종류의 반노조적 차별, 괴롭힘 또는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골프장 캐디 노조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노조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 노조 있습니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구직자나 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조문은 2조 5호 조항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조건·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인권위에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당초 마지막 줄 위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권위에서는 이 ‘결정’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뺄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한다면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문호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협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로조건의 결정을 살려 놨다는 얘기는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던 거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 하면 바로 정리해고나 또

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쟁의행위에 포함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외의 전방위적 근로조건의 모든 분야를 다 하겠다가 아니고 결국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 92조 2호항은 뭐냐 하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단협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제가 노동조합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노동조합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의 원칙, 교섭의 원칙 이 모든 게 신의성실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노사가 상생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원팀으로서 그 기업체가, 그 노조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심지어 파업까지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사용자가 이행을 안 해요. 이것 굉장히 나쁜 죄질입니다.

정말 노동자가, 이 노동자는 아까 노조법 제가 진짜 막 속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노조도 억지로 만들고 신고서에 온갖 서류 다 만들고 교섭을 하려고 보니까 노조도 많으니까 참관이라도 해야 되고 또 그중에 교섭대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섭할 때도 사측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하니까 억지로 달래고 어르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단순히 얼마의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무조건 사측의 발목 잡고 회사 문 닫게 하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노조, 회사 문 닫게 하려고 하는 노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그 조직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종사원들의 고용만큼은 꼭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최우선이지 회사 문 닫게 하려는 노조, 세상에 그런 노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보수 쪽에서의 언론과 또 일부 보수 쪽의, 특히 국힘 쪽의 몇몇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조원을 죽이기 위한 술수로써 마치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악마화했던 부분들이었고. 실제 오죽했으면 이 단협 위반, 단체협약 체결까지 얼마나 장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조차도 위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고자 복직하라고 판결까지 나도 이행강제금, 자기네는 그냥 과태료 내고 말겠다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업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노동쟁의에 이 부분을 담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노조법 2조 5호의 개정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뒷장을 보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노조법은 목적에서, 노조법의 목적을 제가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정리해고됐는데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해고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항목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 정리해고라는 게 법 문구에 없다고 해서 쌍용차가 그렇게 해서 부당·불법 파업이라고 끌고 갔고 결국은 47억의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은 고용안정이지요. 그 기조하에서,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유지를 하고 개선시키고

또 지위도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쟁의의 기준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좁게 해석을 오히려 목적과 상반되는 형태로 해 놓으니까 결국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관한 것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앞뒤가 맞지 않고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목적에 맞게끔 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96년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통합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됐습니다만 그 법 당시에는 법 문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한—결정이 없습니다—노동 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 실은 여기에는 근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과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까지가 다,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게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재계의 입장을 그나마 고려를 해서 결정은 유지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그리고 힘들게 합의를 했던 단협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재계의 입장을 안 담은 게 아니고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 아까 인권위 내용은 이렇게 남았지만 인권위 내용도 담지 않고 재계 입장 담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3조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했었지요. 내용 보시면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결국은 노조법 1조(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 그 활동조차도 지금은, 기존에는 엄격하게 단체교섭하고 쟁의행위로만 돼 있다 보니까, 실은 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핵심이 단체교섭, 쟁의행위이고 그 밖의 활동은 실은 그냥 크게 문제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뒷장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입니다. 노조법의 목적, 결국은 노동삼권 보장을 통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손해배상을 한다? 그 부분은 목적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거기다가 2017년 6월 ILO 이사회 보고서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권고 및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위원회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 우려,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해 독

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법상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또 설립된 노조가 반드시 해야 될 총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결산 결과에 대한 부분들 또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을 했을 때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될 부분들 또 단일화했을 때 나왔던 교섭 대표가 교섭을 할 때 지켜야 될 부분들 또 쟁의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투표부터 시작해 갖고 조정의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교섭을 하는데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고 해태하고 있고, 아까 말마따나 ‘이행강제금 물고 말지 이런 노조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법에 있는 것 다 지키는데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노조법 3조는 신설 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항입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실은 이 법 조항 문구는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계신데 민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뒷장 한번 보실까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노조와 노동자의 부득이한 행위에 따른 손배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의 제1항 규정을 노조법에 규정하여 손배책임의 위법성 면책 사유로서 정당방위를 명시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용자의 손배청구를 방지한다.

밑에, 아래쪽에 민법 제761조를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부분입니다.

1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은 이걸 민법을 인용해도 됩니다만 사용자 측이 워낙에 불법행위로 인한 파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자 측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 측이 불법행위의 당사자이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손배, 가압류로 노조를 탄압하니까 실제 그 노조들이 버텨 내지를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법의 당연한 조항을 지금 노조법 제3조 2항을 신설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제3조 3항 신설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의 3항 신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호,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번,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번, 임금수준과 손해배상청구 금액. 5번, 손해의 원인과 성격. 6번,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손해배상책임을, 이렇게 책임을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어야 된다고 한 게 왜 그렇냐 하면……

56쪽 화면 띄워 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도 6월 달 대법원 판결사항입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된 내용을 단지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쪽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를 부과했지요.

실제 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게 다수의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채무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 가담자들은 정말, 일반인들은 분신했던 분들처럼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반 개인이, 여기 계신 분들의 월급 수준이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최저생계비에 준할 텐데 그분들한테 각각 수십억 원씩의 손배청구가 되면 이분들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다음 장.

3조 4항 신설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부분입니다.

4항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부분인데,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을 보시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민법 제765조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항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765조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 부분입니다.

1항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2011년도 3월 24일 판결 내용입니다.

‘그 밖의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과 민법 제76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조법 제3조 4항을 신설해서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3조 5항 신설 부분입니다.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제외 부분입니다.

5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신원보증인 배상책임을 제외할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법 조항 또한 신원보증법 제6조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신원보증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그러나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신원보증인에게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근로계약이 중단된 특수한 상황인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위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활동에서 신원보증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신원보증계약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5항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부분은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6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 중에 470억 손배소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 470억 손배를 한화오션에서 취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노사 본보기 되길’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도 배임죄 부분이 있는데 이번 노조법에서 그 배임죄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가 상생과 신뢰에 기반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건이 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대신 노동조합은 향후 과도한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반목만 거듭되는 와중에 모처럼 양보와 타협으로 통큰 합의에 도달한 반가운 소식이다. 파국 대신 협력을 택한 한화오션의 사례가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하청노조는 첫째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손배소 취하, 2번 노조의 유감 표시 및 재발 방지 약속, 3번 원청 사업장 내 하청노조 활동 보장, 4번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노력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업 손배소 취하, 노조 유감 표시, 재발 방지, 그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원청 사업장 내 하청노조 활동 보장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노력 이 네 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손배소는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50일 파업과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번 도크 안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선박 건조시설인 1번 도크 작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회사 측은 점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 상대 소송을 취하하면 경영자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 사측의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 덕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생산환경을 확립할 수 있다.

소송 강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노사 신뢰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과 관련 경쟁사를 상대로 냈던 고발을 취소하면서 정부의 방위산업 원팀 전략에 부응한 적이 있다. 노조 상대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합의는 다른 사업 현장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회사가 노조 집행부를 경제적 수렁으로 몰고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만 노사 자율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나 정치권이 원치 않는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보도기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사항 중에 실질적 지배·결정권 사용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서 한겨레 7월 29일 자 기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김영훈 노동부장관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화면 아주 잘 받으시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청-하청노조 무조건 교섭? 실질 지배·결정권은 사용자에 국한한다', 노란봉투법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입니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다음달 초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원·하청 교섭 구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하청 교섭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 원청 사용자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원청기업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만 교섭 의무가 부과된 사용자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스무 곳이면 원청이 20개 노조와 교섭하느라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것 과도한 것 맞지요? 아까 제가 노동조합법 말씀드릴 때 교섭창구 단일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실질적 지배를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만 사용자에 해당하고 교섭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하청이 모든 사항을 갖고 교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한화오션에서 성과급, 학자금, 노동안전 등의 문제, 현대제철에서는 노동안전에 대한 의제만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하청 교섭에서 또 다른 쟁점은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에 대한 사항이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교섭대표를 정하거나 교섭대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원청에 노조가 있는 경우 하청노조는 어떻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아닌 지침, 매뉴얼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는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단체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사이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원청·하청 노조가 무조건 교섭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준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흔히, 노동 전문가가 기고한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문가의 기고글에 따르면 우리 노조법 2·3조 부분은 별로 박수 칠 사항이 아니다라는,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하도 이 노조법 2·3조가 기업 죽이기 법이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한참 얘기하시는데 일단 제가 오늘 토론했던 내용을 들어 보신 분들께서는 불법파업이 어떻게 해야 불법파업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김기덕 노동법률원 새날 대표님이십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돌입했다.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시행될 가

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개정에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리 없을 테니 이제 드디어 개정하게 되는 것이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방해를 작정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입법될 것이다.

그렇게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나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소감 한마디 없을 수 없다.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이번 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진을 적극 반긴다고 말해야 하는지는 아직 나는 결심하지 못했다.

이번 입법 추진을 두고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진보정당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서 운동해 왔던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용자 간주조항 누락 등 법안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총 등 사용자 자본의 거센 반대에 입법 추진이 지연될 것을 염려해서 정부 여당에 신속한 입법 촉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단체까지 불만과 함께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법안이니 무작정 노란봉투법이라고 환호할 것이 아니다. 추진 법안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고서 나는 소감을 말해야겠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환노위가 대안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그 법안 그대로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 환노위가 마련한 대안 법안인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말해보자.

먼저 이번 법안에는 노조법 2조 2호 후단을 신설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노위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삼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 제안 이유를 밝히면서 이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내용 및 제안 이유는 새롭지 않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 그대로이니 말이다. 대법원 판례가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원청 사용자를 인정하면서 판시했던 법리를 가져와 노조법에 규정하는 입법인 것이라서 어찌 보면 특별히 논란이 될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마치 하청 노동자의 파업 투쟁으로 원청 회사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사용자 자본은 입법에 반발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가 대법원 판례로 판시한 것을 입법하는 것을 두고서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인지를 두고서 입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시비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고 단호하지 못한 규정이 아

쉬울 뿐이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고 있다. 환노위는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해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신원보증인이 누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 하고 좀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노위는 이를 통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극히 잘된 입법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두고서 사용자들이 시비하는 경우 말고도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커다란 방해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해고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노조로 취급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해고자 등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법외노조 통보했던 사례까지 있었다. 이를 통해서 그 해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해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겠다고 규약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해고자 등만이 아니다. 단 한 명이 근로자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해서 노조 자체를 노조법상 노조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그걸 법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폐지가 답이다. 삭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조법 2조 5호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92조 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입법의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해고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타당한 방향이다. 그 제안이유와 같은 취지로 입법 시행되기를 적극 바란다.

그동안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고용에 관한 것임에도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취급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파

업 투쟁했다. 당시 이 나라 법원은 그 투쟁에 대해서 불법과 범죄로 책임을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법적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많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형사처벌까지 당하고 해고 등 징계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상여금 등 임금을 체불해서 이에 항의해서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파업을 한 것을 두고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징계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98년 5월 초 만도기계 노조 파업투쟁은 체불된 상여금 400%를 지급하지 않아서 도입했던 것인데 불법파업으로 처벌받았다. 당연하게도 이 나라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의 목적 내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법률원장으로서 만도기계 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파업 투쟁한 노동자를 변호하면서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법정 안팎에서 주장했었다. 그런데 입법된다니 기쁘다.

물론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결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존치시켜 이른바 권리 분쟁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쁘지만 이번 입법에 나는 박수를 쳐 줄 수 없다.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쟁의행위 등 활동할 자유에 관한 노조법 개정이다. 여기에 법안은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노동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권 보장 등으로 고려해서 입법으로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해 일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이긴 해도 그동안 나는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파업 등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과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해 왔다.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과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밝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입법과 같이 단순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는 입법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는 대한민국헌법이 노동자의 자유로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무엇보다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 부족하다.

노란봉투법이 입법, 시행돼도 이 나라 노동자는 노조법에 의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원칙적으로 불법과 범죄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입법 추진을 살피고 나니 분명히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자유, 단결해서 파업 등 단체행동할 자유를 빼앗는 노조법을 그대로 둔 채 이 나라에서 노동자의 쟁의행위 보장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김기덕.

이제 화면으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조법 제3조 6항 신설 부분입니다. 이 건은 소권 남용을 제한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뒷장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을 재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가 표면적으로 소권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그동안에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소권의 남용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조의2(책임의 면제) 조항입니다. 사용자 책임 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이 내용은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오션 470억 손배 취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현대제철에서도 46억에 대한 손배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화오션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린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판결 부분입니다.

경영자가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9쪽으로 좀 가 주실래요?

무제한 마라톤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노동 관련돼서 상식, 노동 상식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1953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가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 휴일 포함하면 최대 주 60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 44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 포함해서 주 64시간으로 되지요. 휴일을 제외하면 주 5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또 근로기준법이 바뀝니다. 그때 주 40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휴일 포함해서 최대 주 68시간으로 되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 40시간 그대로 두고 휴일 포함해서 주 52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53년도에 주 48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자그마치 72년 만에 주 40시간으로 왔고 그리고 주 5일제 할 것이냐 4.5일제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53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총생산이 얼마쯤 된 걸로 보이십니까? 53년도에 1인당 국민총생산이 67달러입니다, 67달러. 우리가 주 44시간으로 바뀌었던 89년도가 5500달러쯤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만 6000불 그리고 2018년도는 한 3만 3000불쯤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 편을 보시면 장시간 노동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2023년도 기준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니 OECD 평균이 1742시간인 반면에 한국은 OECD 중에서 여섯 번째 장시간 국가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1872시간, 130시간 더 많이 장시간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노동 지표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은 좀 될 겁니다.

2023년도 기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3%입니다. 13%고, 13%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73만 명입니다. 이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38.2%, 84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실은 대다수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은 비정규직 비율을 어떻게 앞으로…… 결국은 이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게 양극화하고 똑같은 말로 이어집니다, 양극화 이렇게도 이어지고.

그 아래쪽이 올해 최저시급이지요. 시간당 1만 30원으로 했을 때 월 209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알바하시는 분들 최저시급으로 해서 주 40시간 일했을 때 209만 원을 받고 삽니다. 요즘은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거기다가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살아가는,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200만 원 가지고 일단 월세 50만~60만 원 나가야 되고 핸드폰 요금 나가야 되고 또 밥 먹는 것, 아침·점심·저녁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어도, 8000원 이렇게 사 먹어도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될 거고 한 달 모으면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될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최저임금으로는, 실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구하고 하는 이유들도 최저시급 받고는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기대할 희망이 없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교롭게 젊은 세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은 산재 사망자 수입니다. 매년 800명씩 사망하고 있지요. 제가 사망자 수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 근절 원년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 여러 사고들 날 때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주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재 사망자 수가, 산재 사망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산재 사망의 대다수가 후진국형 산재 사망 사고들이에요. 저도 우리 당의 산재예방TF 간사를 맡고 있어서 경남 의령에 천공기 드릴 덮

개가 없어서 끼임 사고, 다녀왔고 의정부에 추락방지망에 대한 안전대 미설치로 추락해서 사망, 갔다 왔고 청도 인근에 철도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고 네 명이 중상을 입었던, 다녀왔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후진국 산재사고예요. 안전불감증, 그냥 관행…… 또 얼마 전에 시흥에서 있었던 SPC 빵 제조 쪽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셨던 분, 이 모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퇴근시간 돼 가지고 퇴근하게끔 만들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국민들께서도 당장에 내 가족들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 생각해 보면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사고 났던 산재 부분들이 진짜 허망하게, 진짜 후진국 사고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경남의 사면 보강공사 천공 작업은 드릴에 덮개만 씌우면 사람이, 노끈이 끌려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덮개 씌우라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천공기는 덮개를 씌워라. 그런데 안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공기 조작한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 안전대가 거기 말려들어 간 거예요. 그 기계가 말려들어 가니까 사람이 말려들어 간 거지요. 산업안전보건규칙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덮개 설치하라고 돼 있고……

의정부의 추락방지망에서 떨어진 사람은 밖으로 나갈 때 안전대를 내부에 걸고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안 걸고 나간 거예요. 그간에는 이 방지망이 사람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각 층마다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다 있는데 안 걸었다.

두 번째는 그런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로 가다 보니까, 혼자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대충 빠르게 하려고 나갔다가 그런 사고가 생긴 거지요. 이거 정말 매뉴얼이나 시방서에 따라서 있는 그 기준대로 하면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철도, 철도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철도가 이렇게 가면…… 철도를 가는 사람은 반대로 걸어야 된대요, 그래야 오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철도가 가는 방향으로 사람이 걸어간 거예요. 뒤에서 덮친 거예요. 뒤에서 덮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지요. 철도노선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고위험군의 작업이다, 그래서 철도 올 때 필요한 알람벨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 알람벨이 저는 최소한 철도노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람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그 철도노선을 따라갔던 일곱 명이, 거기에는 철도공사 직원도 있어요. 직원도 있는데, 일곱 명이 다 같이 진행 방향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가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지요.

정말 제가 가서 보니까 만으로 서른일곱 살, 서른 살이에요. 서른 살은 신입직원이어서 이제 서울에 이사하려고 월세방을 구했다고, 지난주에 이사한다고 했던 친구예요, 고인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일련의 이 산재사고 부분은 건설사 또 제조업 모든 현장 망라하고 기존의 경험치로 그냥 관행으로 했다가는 800명 이거 매년 발생됩니다. 지금도 제가 산재예방

TF 간사다 보니까 계속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산재사고 납니다. 그 안에, 유독가스 생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 가지고 또 사고 생긴 거예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옛날에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바로……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런 후진국 사고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산재 사망자 수를 언급한 게 매년 출근했다가 산재 사망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800명씩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중경상당한 사람들, 여기 사망자에는 현재 빠져 있어요. 중경상 피해자들은 저기 숫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참고로 시화 SPC 빵공장 거기는 기계가 30년이 넘은 기계예요. 또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형태가 12시간 맞교대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 다 몰려 있는 구간이에요, 돈 줄이려고.

그다음 장.

노동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데 작년에 임금체불액 최고를 찍었습니다. 2조가 넘었어요, 2023년도에 1조 7000억 찍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노동부장관한테 이 체불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들을 많이 했어요, 강력하게 주문을. 그런데 작년에…… 노동부장관 아시지요? 저는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분은 노동에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체불액이 2조가 넘은 거지요. 이 피해는 누구? 바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2조 이상이 되는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카드깡한다, 대출받는다, 이곳저곳 아는 사람한테…… 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은 먹고사는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에요, 생존 수단. 그 생존 수단이, 2조 이상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님, 임금체불은 사회악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간에 이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생존권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건을 보시면 한 1만 4000, 1만 6000, 1만 8000건씩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실은 처음 무제한토론 한 2시간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왜곡돼서 정확한 진실이나 또는 정확한 진위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노동조합에 대해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설립을 하고 총회를 할 때는 어떻게 총회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예산은 어떻게 감사를 받고 공개는 어떻게 하고 또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교섭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쟁의하려면 쟁의는 과반수 이상 투표받아야 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동의 구해야 되고, 그러고는 교섭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노동쟁의지요. 여기서 말하는 쟁의라는 것은 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노동자들도 파업만큼은 정말로 안 하려고 합니다. 파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파업을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노동자가 마지막에 파업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극도의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파업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로부터 노조는 절차적·방법론적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파업할 때는 무노동 무임금, 일을 안 하니까 무임금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극도의 파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다음 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270만 중에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노총 규모가 116만, 민주노총이 108만, 나머지 기타와 미가맹점도 있다 이런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 노동조합 조직률입니다.

현재 2023년도 13%대의 노동조합 조직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법이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3년도에 만들어지고 72년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불과 13%에 불과하다라는……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서는 노조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또 사용자의 불법적인 탄압과 또 배제와 괴롭힘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드리고요.

37쪽으로 넘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은 13%인데 북유럽 쪽이 여전히 노동조합 이런 형태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탈리아 34, 독일 16%,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트 더 돌면 다 끝낼 수는 있지만 또 저만 다 하면 아니라고 말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중에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보고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꼭 이 부분을 어떤 기회가 됐든 얘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 가르기 식 주장에 유감.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21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EBS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자연맹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 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의 원망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 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의 편 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런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한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한국교육방송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장관 몫을 뒀

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서 부분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고 3시부터 시작했던 무제한토론은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시부터 할 때는 잠이 막 올 듯 올 듯하더니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머리가 맑아져 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각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조법 2·3조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노동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신 동지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제한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교섭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외주와 다단계 하도급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지배·개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에 있어 하청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에서 원청의 설비로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에도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는 현실, 이러한 원청과 노사 대화의 창구조차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갈등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 때문에 원·하청 간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되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은 물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부조리함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강 건너 불 보듯 해야 합니까?

최근 한화오션 470억 손배청구소송 취하,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49억 손배청구소송 취하, CJ대한통운 20억 손배청구소송 취하는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소송 강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노사 간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라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요구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붙여 준 이름입니다. 손배·가압류의 고통과 절망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해야 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시민들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노란 봉투 안에는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떠안

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안타깝게 죽어 가는 현실을 같이 연대해서 함께 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연대와 정의의 약속, 우리 국회가 오롯이 받아 안아야 합니다.

노조법 제2조·3조의 또 다른 이름은 노사관계 평화 보장법입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고 당연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상대가 책임을 회피할 때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연해 있는 파견과 비정규 노동,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다층적 노사관계가 현실인 지금 근로조건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용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우리 사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입법화해서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입법부에 내린 명령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합법 파업 보장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파업에도 수십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따라 붙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원의 판결과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정말 합법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입니다.

노조법 2조·3조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노동 존중 기본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은 결국 노동자의 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 모두 사실상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조법 2조·3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노조법 2·3조 통과만을 갈망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많은 노동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명령한 일명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노동 존중 기본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사관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뜻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제 국회가 제대로 완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 합법 파업 보장법, 노사관계 평화 보장법, 노동 존중 기본법, 이 이름들을 가진 하나의 법,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짐 싸세요.

밤을 새워 가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소희)

(07시14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어제 9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2시간 남짓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밤을 새 가시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필버의 취지에 맞게 반대토론을 하는 국민의힘에 넘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 여야 의원님들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2시에. 워낙에는 박해철 의원이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필버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이 된 노조법 2·3조 개정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반대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노조법 2·3조 더 이상 끌지 않고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사에서 '노조법 2·3조, 여야 대타협' 이런 기사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실은 앞서 김형동 간사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위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 법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매우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개정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플랫폼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배달노동자,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노동자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노동소위 때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협안도 마련하고 뭔가 타협하는 기미를 좀 보였는데 노조법 2조 관련해서는 결국 파행을 거쳤고 그래서 저희가 더 논의할 시간을 좀 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당일 소위가 열리고 그날 밤 8시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 지점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면 저희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 노조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섰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여야가 합의해서 타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약간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찾아보시면 찬성 쪽이 한 43% 정도 나오고 반대 여론이 한 37~38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입장만 듣는

게…… 노조만 국민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도 국민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법안인가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법안보다 지금 더 중대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통계를 통해서 보여 주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의원의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산업재해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김영훈 장관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지점이 왜냐, 중대재해 처벌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현장에 나가면 기업이든 정부든 안전에 대한 철학이 빈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방을 얼마나 잘해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노조법 개정은 연내에 해서 타결하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지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로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도의 무궁화열차에서 일곱 분이, 두 분이 사망하시고 다섯 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제가 사망한 그 두 분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두 분과 다섯 분 모두 30대 노동자, 근로자십니다. 돌아가신 30대 근로자분도 외부 협력업체이기는 했는데 부모님들을 뵐 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고, 부모님들이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방지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준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철길을 나갔냐.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보통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를 보고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계신 근로자분들은 다 열차를 등지고 철길을 걸으셨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허리에 열차가 들어오면 울릴 수 있는 알람벨트도 찼습니다.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계속 보고 있고…… 코레일은 열차 충돌 사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은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거야, 징역 할 거야 이렇게 하니 모든 기업들이 우리의 CEO를 이 처벌로부터 어떻게 피해 가게끔 할 것인가에 골머리를 쓰면서 서류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작업은 대부분 로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거기다 쓰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돈을 현장 근로자들이 한 번이라도 안전훈련을 하는 데 투자를 하고 현장 근로자, 리스크가 많은 현장

에서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인프라를 투자해서 줄일 수 있는지 그 예방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고 노동자의 삶을 매일 앗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맨홀에서 질식하는 사고 지금 매일 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맨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매일 터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국가가 왜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기업은 왜 여기에 투자하는 대신에 사업주를 지키기 위해서 로펌에 돈을 투자하는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 분들이 같이 어떻게 법안을 개정해서 이게 옳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법안을 논의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급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호사 태움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약간은 허술한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보호를 못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갈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인하는 신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사가, 동료가 나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사고를 접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매일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또 다른 정말 실제자의 근로자들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피해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들은 뉴스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법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방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분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저는 노조법 개정안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몇 가지 준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원래는 참으로 따뜻한 법안의 이름입니다. 여러 분이 말씀 주셨다시피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 집이 압류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 그때의 노란 봉투는 정말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연대와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을 매우 존중합니다. 따뜻한 기억, 연대의 정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2조·3조의 내용들은 이런 취지는 무색한지 오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범위 확대, 두 번째 쟁의 사유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제한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앞서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의 기업들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이 발언을 19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그 발언 이후에 우리한테는 '칩워'라는 책을 번역하신 작가로 유명한데, 칩워는 반도체 관련된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인데 노정태 작가가 현재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 작가로 많이 기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쓴 기고문을 꼭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발언 이후 21일에 작성된 기고문을 잠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하게 될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드는 의문,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적 수준이란 대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 같은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일단 미국 기준은 아닌 셈입니다. 유럽은 어떨까? 주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럽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한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이 따르고 있다는 세계적 수준의 원칙은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일까? 일본식도 아닐 것 같다. 필자가 과문한 탓에 우리가 바람직한 모범으로 따를 만한 경제 강국이 그외에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구호를 빌리자면 노란봉투법은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뿐이다.

유럽은 한국의 진보 진영이 늘 금과옥조로 삼는 곳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의 이익보다 중요시한다는 EU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은 지나친 법이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3조가 아니라 원청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하는 2조가 문제다.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산재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식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문에 따르면 그렇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힌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철수했지만 가령 프랑스계 마트 체인인 까르푸에서 산재가 벌어질 경우 프랑스 까르푸 본

사가 원청이 되어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처벌 만능주의는 단지 산재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할 때에도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문제는 원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노조를 만들고 협상을 요구하면 미국 본사에서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조건에서 장사를 할 외국 자본은 많지 않다. 물론 당장 모든 기업이 짐을 싸 들고 한국을 떠나지는 않더라도 한국 내 투자와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투자가 줄어들면 기업이 줄어들고 경제 활기가 줄어든다. 이런 법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산업재해를 줄이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자, 이런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그전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노동법의 관점이 아니라 법 일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러한 입법은 말하자면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발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18세기로 돌아가 보자.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 출간된 '범죄와 형벌'에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만약 강간범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강간은 줄어들까, 늘어날까? 강간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간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국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간이 줄어들고 말고를 떠나서 강간범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유인 동기가 생긴다.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을 당할 것은 분명하므로 강간범으로서는 증인이기도 할 피해자를 살려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막음을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미 강간죄 자체의 형량이 사형이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범죄자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높은 형량을 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 베카리아의 말에 따르면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혹형주의, 엄벌주의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이 강력한 주장은 우리가 아는 근대 형법 체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되었다. 처벌은 그 잘못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쁜 놈을 혼내 준다',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자들에게 복수한다' 같은 사고방식은 세상을 늘 더욱 나쁜 곳으로 만들 뿐이다.

18세기에 분명히 밝혀진 이 단순한 진리가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일까?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다는 반론이 많다.

지난 18일 중앙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원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재발 비율은 거의 10%에 달

한다.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재발률이 28%나 된다. 강력한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너 말고 진짜 사장 나와, 처벌하겠어'라는 방향의 입법을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과 유럽에서도 떠올리지 않는 발상을 법으로 만들고 강행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으며 결국 국민 경제 전체를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 보자.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 기업을 할 의지를 잃는다. 한국인 또한 한국에서 기업 할 의지를 잃겠지만 태어나고 자란 나라니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기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가 난무하게 된다. 그런 불필요한 과정은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오너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결국 노동자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애초에 그런 엄벌주의를 실천할 수조차 없다. 지난 19일 경상북도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상을 입은 사건만 해도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의 대상이다. 지금 당장 기차를 멈춰야 하고 코레일은 면허취소를 당해야 한다. KTX건 무궁화호건 다 멈춰 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엄벌주의, 혹형주의,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 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을까? 필자 같은 책상물림이 이것이 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야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지금보다 더 열악한 여건과 안전의식으로 인한 산재가 예상됐다. 당시 정부는 한 가지 기발한 해법을 내놓았다. 공사에 참여하는 30~40여 개 건설사들의 깃발을 나란히 게양해 놓고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깃발을 한 달간 한 칸 내려서 조기로 게양하게 한 것이다.

이 간단한 해법이 큰 효과를 불러왔다. 산재 발생 여부가 건설사들 사이에서 명예의 문제가 되면서 건설사들 스스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장 인력의 동료의식이 끈끈하며 팀워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이 십분 반영된 탁월한 해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방법이 오늘날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는 나름의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입을 모아 노란봉투법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미국도 유럽도 하지 않는 법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시간이 있다. 노란봉투법, 특히 2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 이어서 8월 22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범 대통령 실장께서 정말 경악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한 사설도 이어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개정법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탈출이 진짜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을 무조건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진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법률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섣불리 만들었다가 상황에 따라 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수도 없이 제기해 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한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에게 모든 시설을 직접 투자하고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경영 합리화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약속한 한미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그램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외국계 자동차 업계들로부터 노란봉투법을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접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경총을 여러 번 만났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우려를 당정에 전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듣는 시늉만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묵살했다가 유례 없는 전세 대란을 자초했다. 노란봉투법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 줬으면 한다. 경제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조법 2·3조 같은 경우는 합의조차 되지 않았고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 절반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법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바꾸지'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행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앞서 초두에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말씀도 드릴 예정인데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좀 던져 주셔서 연말까지 2·3조 개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협상, 하나 주고 하나 빼 주는 그런 협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노조법 2·3조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입니다.

혹시 PPT가 있으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적인 조항 부분에서 법적인,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국회에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를, 계속 국회본회의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노조법 개정안 2·3조가 뭐야?' 라고 묻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상 내용이 어렵고 실은 노조법을 보신, 앞서 말씀 주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신 변호사들과 법률가들 외에는 이 내용을 또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주요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실은 사용자의 단어도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으십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누구야? 기업이라고, 사측 이렇게 하면 알겠지만 법률상 용어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 워딩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추가로 이후에 노조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 모호한 문구 하나가 저는 수천 건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법원의 해석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법원의 해석도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만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과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 납품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거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은 가능한 명확해야 합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문구는 법을 불확실하게 하고 사회 전체를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경영계는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

대방이 되어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조선·철강·건설업 등은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결과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분과,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 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기업하고 가정하고 같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 정도로 이게 모호하다라는 지점을 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점,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런데 뭐가 실질적이고 뭐가 구체적인가는 굉장한 다툼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논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없는 그런 단어로, 그런 문구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개정할.

그리고 2조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법은 국내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게도 큰 불확실성을 안겨 줍니다. 사용자 정의의 확대는 다국적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한국의 투자환경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제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면 투자도 고용도 수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번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는데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선진국 수준의 법과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투자환경 악화 사이 어느 쪽이 더 현실일까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7월 28일 자 입장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해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참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 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또한 이번 법안이 산업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또한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뽑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앞으로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암참의 성명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 역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음.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함. 대법원 역시 지금까지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만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한 적은 없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환경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함.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 철수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함.

굉장히 강력한 성명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한 유럽이든 주한 미국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그쪽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노조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어',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께 자세히 보고를 안 드리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 기업들을 대표하는 협회에서 이 정도의 성명서를 내면 저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다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에 사용자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있다고 해도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다시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굉장히 모호합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고용계약상 사용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할, 그냥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법적 모호함은 최소화합니다. 아예 없앱니다.

우리 경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국제 신뢰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길 좁아집니다. 지금 경제 어렵다라고 국민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을 살리겠다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 2조의 내용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체교섭 대상 과도한 확대 부분입니다. 제2조는 사용자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혀서 원청이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무차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노란봉투법이 당초에 목적하던 바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일까요? 수많은 하청노조의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원청은 순식간에 교섭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도급계약이라는 민간의 계약 질서는 무너지고 노사관계는 끝없는 분쟁의 늪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고 결국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결국 산업과 일자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모순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겁니다. 수십 개의 노조가 동시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기업이 이런 조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업이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어떻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경영 의사결정의 제약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해당 사항 PPT가 보여진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산업계든 재계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할 테니 이것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2조 제5호는 여기에 더해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에 포함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투자계획, 생산라인 변경 같은 사업경영상의 판단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경쟁 때문에 전기차 라인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라인을 폐쇄하거나 재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정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연차를 제작하던 노조가 '난 전기차 도입하는 것 싫어'라고 반대하면 생산 전환은 지연되고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고 해외 이전 또는 결과적으로 청년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이나 생산공정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경영판단 하나하나에 만약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남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법안의 부작용하고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부작용과 피해를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재계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빼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역시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이 노조의 이익에 반대된다고 해서 사업경영상의 판단으로 쟁의행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부딪친다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경제단체의 호소가 진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8월 18일 경제6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주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 '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제외해 달라, 제외하라'.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지금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좀 해 볼 테니까 1년으로 유예하는 것만이라도 해 달라' 이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거리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 못지않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외치는 일자리를 지키려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가 이토록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왜 민주당은 그 목소리를 단 한 줄이라도 반영할 의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도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때 8월 18일 국회 앞의 층계에서 경제6단체 200여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읽어 드렸던 공동성명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안에 닥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업에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사업경영상 판단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석유화학 구조가, 석유화학 산업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돼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니 노조에서 '우리는 이것 반대해. 구조조정 반대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너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쟁의할 가능성이 충분해

집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이 사안을 가지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경영상 결정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기업이 이 부분만은 제외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법이 개정될 경우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난 8월 18일에 경제6단체의 200여 명이 국회본회의 계단에 모여서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도 요청드리겠지만 노조법 2·3조 다시 한번 논의해서 수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내 합의 처리, 조금만 미뤄 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동소위에서 합의사항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요한 사항인데요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입니다, 이 부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합법적 쟁의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3월 24일 선고된 부분인데요.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밖의 활동'입니다. 아까 실질적·구체적과 같이 그 밖의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법적 모호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지점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이 '부득이'라는 표현이 또 얼마나 모호합니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2조·3조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시설을 점거하고 기계를 파손하고 출입을 막아도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 책임의 기본원칙도 무너트립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는 나라라면 그것이 과연 법치국가일까요?

그리고 개정안은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첫 번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두 번째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세 번째 손해 발생에 대해서 관여한 정도, 네 번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청구 금액, 다섯 번째 손해의 원인과 성격, 여섯 번째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언뜻 보면 대부분 다 합리적인 고려 기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장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임금 수준, 경제 상태, 부양가족 여부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책임 없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서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법원은 '이 근로자는 생활이 어려워' 그런 이유로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되고 결국 그 손해는 누군가에 전가가 될 텐데 거래처, 협력업체, 국민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막아 버리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겼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사용자 측은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을 한 것이 상황이 명확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노조 입장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뒤집어씌운다면 사용자 측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2·3조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진짜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만 했는데도 법적인 모호함이 드러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도 일부 조항,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만 가지고 왔는데 이 법 조항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일수록 더 논의를 하시고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에 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도 면책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급입법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실제로 불법 노동쟁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당한 권리로 그 피해 보상을 찾을 수 있는 권리 회복 기회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이들 조항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축소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개정 조항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면책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은 불법인 쟁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아니냐라고 명칭을 했던 것도 곳곳에 숨겨진 조항들을 살펴볼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쟁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으로 이런 노동쟁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노동쟁의 중에서 불법인 노동쟁의가 계속 제기된다면 그 피해를 기업만 볼 것인가요? 기업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거기에 딸려진 납품업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의 대부분이 사

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도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하여 산업현장에 불법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물리적인 실력 행사 등이 정말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노사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해도 면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3조는 만약 불법을 저지른 노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다수를 외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는 법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요?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딘가로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면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민주노총이 집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실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연내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통과시키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 법안의 후속 피해가 어땠을지 저희가 또 검증하고 판단해 볼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까요? 찬성이 한 43% 정도이고 반대가 36~3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려가 높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환노위 야당 위원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번 필버에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날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없이 바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진짜 지금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특히 기업과 재계는 절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속도하고 내용 조절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소위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설의 일부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에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포함시키고 노조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에 힘을 실었고 그런 반면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경제 6단체, 자동차·조선·철강·물류 등 업종별 전국단체, 외국계 기업단체까지 사실상 전 산업계가 법안 수정과 시행 유예를 요구하며 전례 없는 궐기에 나서는데도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3년 현재 13%, 273만 명에 그친다. 노조의 82% 224만 명, 노조의 82%가 공기업과 공공노조 중심의 한국노총 116만 명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이 주축인 민주노총 108명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만큼 강경투쟁 수단을 쓸 수 있는 노조는 거의 이 양대 노총 소속이다. 이들의 강력한 세력화와 교섭력으로 곳곳에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가 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고쳐서 파업 요건, 원청 책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바꾼 이후 상황을 사측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 특성상 협력업체가 수백 곳 많게는 수천 곳에 이르는 부산·울산·경남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계 등은 더욱 그렇다.

한국 기업은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다. 미국 관세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추가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 1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물론이고 무려 50% 관세를 맞은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석유화학 업계는 극심한 내수부진에다가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쳐 불과 몇 년 새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은 옛말이 되고 최근에 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미 합작이 성사되어 겨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노동시장, 그중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은 원·하청 이중 구조가 대부분이고 위험의 외주화, 임금 차별 등 불합리한 요소가 뿌리 깊은 게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이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계기라는 평가도 일부 유효하다. 그러나 단순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기에는 대내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한국 기업 상당수는 더 이상 국경 안에만 머무르는 내수용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기왕에 쌓아 올린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업별·산업별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 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신중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미 중장기 파장 등의 리스크가 예상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재계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는 그 지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올해 안에 연내에 합의해서 타결하자고 그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노동소위에서 못 나눴던 합의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합의 처리, 노조법 2·3조에 대한 합의 처리에 대한 기사 제목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논의 되었다고 하시지만 저희 노동소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그렇게 중요한 현안도 아닌 이런 법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3~4개월만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 지점이 안 되십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사이에 글로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의원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지에 대해서 노조, 아니 이거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노조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노동자가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를 통해서 사측에 요구를 한 게 노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를 위한 노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을 확대하라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진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득이' 이런 법적인 모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그 문구를 가지고 법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인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까? 결국 노조와 사용자는 계속 법적 다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필버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처음부터 와서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법적 다툼이 매우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충분히 논의하고 바꾸고 타협해서 협상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노동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재계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는데 왜 자꾸 밀어붙이는지, 이게 왜 이렇게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사관계……

(「국민의힘은 논의하는 동안 뭐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희 논의했지요. 논의하는데 원래 잘 안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의원님.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정치인데 협치에……

(「여기 의원들 답변하지 말고 본인 것 하세요. 자꾸 시끄러워지잖아요, 여기가」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게 괜찮지가 않아요. 의장님 서 계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시겠지요.

(「아니, 그래도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게 맞아요? 본인 것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작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들으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번 토론 때 저희가 할 테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라고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잠깐만요. 무제한토론 하는 토론자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조용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손님들 와서 소개를 합니다.

정혜경 의원실 소개로 민주노총의, 우리 국민들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소희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 우원식 토론 계속 진행하시지요.

○김소희 의원 저는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도……」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여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원청과 하청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아가 지역경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원청이 책임을 두려워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하청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의 목소리를 키워 주지만 그 그림자 뒤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힘 있는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대기업의 그림자 아래서 버티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노조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커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여기 몇몇 의원님들은 들으셨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절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이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모든 일에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통과시켰지만 2년째, 3년째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산업재해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미흡해서 그런 모양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조금만 일찍 들어오셔서 엄벌주의나 혹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

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법을 고친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을 고친다?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법 제정을 할 때 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지, 왜 신중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한 나라의 정부의 정책실장은 왜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법 제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 듣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만든 법도 현장에서 작동할 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마저 계속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연내 합의 타결하는, 노조법 2·3조 연내 합의 타결 이것을 목표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원래 이 전에 박해철 의원님이셨지만 제가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연……

국정 운영은 책임 있게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다들. 그런데 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진 다음에 법을 고치면 저는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빠져나간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험, 일단 시행해 보자? 경제가 실험 대상입니까?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입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이것이 가지고 오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일단 이 개정안이 일방적인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절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연내 목표를, 연내 통과를 목표로 몇 개월만이라도 시간을 갖고 수정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 통과시켜 보자 이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근로자의 입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근로자의 입장 초반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 처음…… 이 법안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정말로 노동자의 피해를 없애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좀 맞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지 마시고 개정안을 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개정안 내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서 이것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분 후면 이 필리버스터 끝나겠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반대의 목소리……

(「출석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못 들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로 국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짜리에 불과한,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강행처리로 되었다는 게 신문에, 매번 신문에 ‘강행처리’로 제목이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괜찮으십니까? 기자분들은 ‘대타협’ 이런 것을 제목으로 뽑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앞에 정말 무력합니다. 저희 소수 여당의 한계인데요.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마음 한편에 있다면, 저희가 3조는 충분히 양보하겠다라고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조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구 조정을 해서 개정을 논의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이후에 한 5분 후면 법안 처리하겠지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면 반대 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나 영남에 있는 기업들만 반대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저는 그 지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쨌든 산업현장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그 요구만이라도 들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를 늘리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필리버스터를 늘리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면 개정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더 하자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저희는 개정을 해서 합의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 겁니다.

○의장 우원식 곧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자가 최종 정리하는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두텁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법치와 균형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의 문구가 너무 모호해서 법리적 다툼이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달라는 요청, 그것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로펌만 배 불리는 겁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예방에 투자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징역을 안 살게 하기 위해서 로펌에 법리 판단을 의뢰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의 그 모호한 문구 때문에 법적 불확실 때문에 계속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혼란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제 신뢰를 해치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 신뢰를 해치는 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도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단순한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다툼이 여러 차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런 예상된 부분 때문에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조합 ……

○의장 우원식 김소희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의원 이 법이 시행돼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 연내, 연내 노조법 여야 합의 처리가 대타협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의원 퇴장)

(「좀 앉아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인사하고 가세요.

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09시1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모경종 의원, 장종태 의원, 허성무 의원, 김준형 의원, 정춘생 의원, 손솔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13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9시2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3표, 부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24)

(09시33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어제오늘 의장석에서 찬반양론을 경청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를 헤아려 보면 근 11년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삼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법 논의도 시민들의 모금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삼권의 이중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삼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께서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09시3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박균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당초 의안의 내용 중 별개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처리·공포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09시41분)

○의장 우원식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고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동안의 스포츠 행정에 의해서 국가대표로서의 활동이 극히 어려웠고 제한을 받았다 하는 토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스포츠 행정이 바로잡히는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 통과된 불법파업 조장법,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입니다. 이제 2차 상법 개정으로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수갑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의장 우원식 곽규택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9시 42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해당되는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그 가족들인 국민 여러분들께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절차, 내용, 개정 여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심도 있는 충실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고금리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법은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인 상거래와 기업 경영을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개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부 정치권의 독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판단이나 일부 계층만을 겨냥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과 세밀한 일정에 따라 개정의 방향과 적용 시점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경제계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의 몇 차례 회의와 두 차례 공청회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7월 경제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계는 당면한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입니다.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로 글로벌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환경 역시 악화일로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대 주력품목 중 자동차·화학제품 등 무려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율관세 역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 관세율이 높게 결정될 경우 수출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민생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있으며 경영난으

로 폐업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청년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섰고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산업 경쟁력의 회복입니다. 저희 경제계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 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루어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경제 8개 단체 일동으로 발표되었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까지만 해도 여야는 이번 2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개정에 따른 효과가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그다음 날부터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상법 개정의 중요도와 국가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개정안 시행 이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보완적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9월 중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야 합의는 지나간 옛날 고사성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다수당의 권한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인기영합식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정치적 지지와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서만 판단되고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하며 그래야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에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강제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관에 의한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우리 헌법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자본 다수결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에 따라 2대·3대 주주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갖는다는 회사법과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대주주가 51%의 지분을 갖고 2대 주주가 49%의 지분을 가진 그런 상황을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1번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 회사에서 대주주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2대 주주가 49%의 지분을 가진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게 되면 대주주는 357표, 그러니까 51 곱하기, 선임하는 주주 7명 곱해서 357표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2대 주주는 343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4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각각 85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이사 후보에게 85표씩 몰아주고 대주주는 7명에게 각각 기존대로 51표씩을 배분한다면 결과적으로 2대 주주 측이 이사 4명을 당선시킬 수가 있고 대주주 측에서는 이사를 3명만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조차 이사회의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그림에서 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1대 주주가 미리 7명 중에서 3명의 이사를 포기하고 4명에 대해서만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4명 이사를 선임하고 2대 주주는 결국에는 3명만 선임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51 대 49의 상황을 예견한 것이고 만약에 49%에 미치지 않는 특정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소액주주 집단이 이사 중에서 일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다른 경영을 주장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2대 주주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에는 다른 나라처럼 보완 수단이 항상 강구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사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대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여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존 경영진과의 마찰과 분쟁으로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이 오히려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사례들입니다.

PPT 2번 자료 열어 주시지요.

집중투표제로 이사회에 진출한 특정 주주 추천 이사가 더 많은 기업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 누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사회를 통한 회사 영업비밀 누설이 증가하고, 특정 주주의 추천받은 사외이사와 다른 사외이사 간 파벌이 형성되어 회사 경영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2006년에 있었던 칼 아이칸과 KT&G 간의 분쟁 사례입니다.

2006년 칼 아이칸은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서 KT&G 주식 6.59%를 매입했습니다. KT&G 정관 중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주주제안을 통해 3명의 이사 후보 추천을 한 다음 모든 이사를 집중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칼 아이칸 측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를 통해서 KT&G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그리고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KT&G는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총 2조 8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고 칼 아이칸은 12월에 주식 매각을 통해서 차익 1358억과 배당금 124억 등 1482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다음 먹튀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정관 자치주의 등 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정관 자치 원칙은 기업 스스로가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함으로써 정관에 의한 배제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적 과잉 행위입니다.

해외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40년대 많은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곧 행동주의펀드나 투기자본들이 기업의 이사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로 인해 이사회가 갈등과 파벌 다툼으로 분열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겪었습니다. 결국 당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22개 주에서 대부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본 사례도 유사합니다. 일본은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 내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이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주는 조치였습니다. 일본처럼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이렇게 다시 기업의 자율에 맡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자율에 맡기다가 다시 강제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후 기업 자율로 전환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1950년 일본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기업경영 저해 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50년 기업 자금조달의 편익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단독 주주권, 1주만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의 도입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원활한 경영이 저해되고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 또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도 1974년 상법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

정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할 유인이 커지고 선출된 이사 역시 회사 발전보다 자신을 선임해 준 특정 주주들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연임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이사가 선임되거나 주주 간 파벌 싸움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본 다수결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기업가정신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기여도가 낮은 특정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반면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대주주는 오히려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한 기업경영의 유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투자자의 외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핵심기관인 이사회가 이익집단 간 이해충돌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잃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본래 기능은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 사항을 의결하고 경영자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사회 운영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8년 상법 개정 시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할 때는 다른 정관 변경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특칙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볼 때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현재도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교수에 따르면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스스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멕시코, 칠레, 러시아마저도 신주인수선택권, 흔히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

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활동이 크게 저하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설정을 방해하고 투기성 자본들의 경영권 공격을 촉진할 가능성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방어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 규제 도입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그 연구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연합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2023년 말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여기서는 공사와 금융사는 제외된 30대 상장기업입니다—중 8개의 회사, 약 26.7%에 해당하는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투자자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0대 기업 중에서는 4개의 회사 그리고 30대 기업 중에는 8개의 회사,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16개의 회사가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서 외국기관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0대 기업 중에 외국기관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596조 원, 약 600조에 달합니다.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 대비 약 35.3%에 해당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잠재 위험군으로 주요 대표기업의 이사회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위험성도 상존하게 됩니다. 외국기관연합, 즉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 회사, 30대 기업 중에서는 6개 회사, 100대 기업 중에서는 약 20개의 회사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와 외국기관연합 측 이사 사이의 비율은 대략 4 대 4 또는 5 대 4, 4 대 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1명의 외국계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회사도 30대 기업의 대부분인 28개의 회사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경우는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 93%입니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 10개사, 100%입니다.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 회사, 84% 정도의 기업에서 외국기관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째,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기관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 4386조 원, 거의 약 13.6%인 596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외국기관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된 후 외국기관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로 인해 외국기관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 투자자금을 소진할 경우에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기업 밸류가 다운되어 소수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배구조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 유출, 기업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 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례와 통계자료 그리고 해외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산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며 소수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를 전체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은 분리선출 대상을 1명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정관에서 2명 이상 분리선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할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의결권도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 합산하여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식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기업 기밀 유출, 투기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일명 3% 룰이 시행되는 상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될 경우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에 투

자한 만큼 의결권을 보장받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2대·3대 주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은 단순한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요구, 이사회 및 주총 소집 청구,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각종 소 제기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 선임될 경우 해당 기업의 핵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경쟁기업이나 외국계 펀드 등이 지지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기술, 인수합병, 투자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2019년 엘리엇의 현대차 경영 개입 시도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현대모비스·글로비스 분할 합병에 반대하며 감사위원 후보로 경쟁사 인사를 추천했고, 감사위원 제도를 통해 기업 전략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DB하이텍 사례에서는 KCGI가 지분을 매입한 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해당 지분을 고가에 모 회사에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은 무색하게 실제로는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과 수익 실현의 통로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3% 룰의 강화와 결합된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투기성 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3% 이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역차별적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내에 대주주가 관여하지 못하고 2대, 3대 주주가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심축이 될 수 있고, 실제 이사회 회의에서 정책 결정이 장시간 표류하거나 전략적 투자 계획이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PT 보여 주시지요.

과거 2003년도에 있었던 소버린과 SK의 분쟁 사례입니다.

2003년에 소버린은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14.99%를 매입해서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주식회사 SK는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본연의 기업 활동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버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떠났으며, 이는 결국 기업과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2003년 부작용이 시작된 이래 2005년에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소버린에서는 900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사회의 기능을 감시가 아닌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특정 주주나 외부세력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회사 전체의 중장기 비전이나 전략적 의사결정보다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 또는 파괴적 개입이 우선될 것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합니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을 동시에 강제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부 기업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제국은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이사회 구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법률적인 의결권 제한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보호라는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간섭과 투기적 개입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다음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하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의무화는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상되는 문제는 국내 우량기업의 자진 상장폐지와 신생 유니콘기업의 해외직상장 가능성 증가 또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법 개정 시 상장사 상장유지 비용이 12.8%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우량기업들이 상장유지를 포기하고 자진 상장폐지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것이고 실제 최근 다수 기업이 상장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생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기업법제가 우호적인 해외증시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자본시장 공동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터팬 증후군이라 불리는 성장억제 현상도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증시는 규모가 축소되고 미래가 없는 자본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산총액 2조 원 기준선을 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외형 확대를 지양하는 비정상적 경영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인수합병이나 신규투자, 고용 확대를 미루며 규제 회피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내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산규모별 상장기업 분포를 보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는 206개 회사입니다. 1~2조 원에 이르는 회사들은 137개 회사에 이르는데 자산 1~2조 원 규모의 회사들이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지 않고 연구개발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투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버린과 SK그룹의 경영권 분쟁, 칼 아이칸과 KT&G의 집중투표제 활용 사례, 엘리엇과 현대차그룹 간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외국계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기수익 실현을 목표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에 개입하고 원하는 시점에 지분을 정리

하며 막대한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장기투자자와 기업 자체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돌아갑니다.

네 번째 문제로 이사회의 분열과 경영 의사결정 지연이 불가피해집니다.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와 대주주 측 이사 간의 갈등 또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간의 마찰은 결국 이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JB금융지주나 KT&G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이사회 내의 의견 충돌이 기업 내부 기밀의 외부 유출이나 감사권 남용으로 이어지면 회사의 신뢰와 주주가치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은 단순한 법률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장 중인 중견기업, 벤처, 스타트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투자 유인을 낮추고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차익 실현을 목표로 한 자본흐름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는 줄고 기술혁신은 정체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는 우리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해외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 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족쇄와 수갑을 풀어 주고 제대로 된 경쟁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입법이 아닌 보완 장치와 보완 입법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어떤 철학과 기준 위에서 운영될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법안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시장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 있는 경영인의 합리적 판단과 장기적 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시험대에 올리고 힘든 대내외 여건 속에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이제까지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집중투표제 또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 이런 문제들을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는가, 왜 일본은 정관 자율로 맡겼는가……

미국은 1940년대에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폐지되었습니다. 기업사냥꾼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동주의펀드와 헤지펀드 세력들이 집중투표제를 악용해서 기업들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제도는 임의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몇 개 주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노스다코타 이런 주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없는 주입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남아 있는 몇 개 주의 공통점은 상장기업 수가 거의 없고

자본시장 중심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전례는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면 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지속적인 파벌 형성, 경영 비효율, 기업 내부의 정치화 문제가 커지자 결국 정관 자율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의 절대다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가 봤다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돌아선 바로 그 길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 IMF의 요구에 따라서 급하게 도입됐습니다. 그 후 2020년에 1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개정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의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모두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비율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도 3% 룰이 적용됩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3% 룰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최소한 2명이 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은 결국 대주주에게는 지배권을 박탈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게는 지분쪼개기라는 무기를 제공하는 악법입니다.

3% 룰은 원래 1962년 상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과 기업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강화하려고 합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3% 룰이 없습니다. 투표권은 지분만큼 행사됩니다. 다만 기업은 정관으로 방어장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나 대주주가 장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의결권 제한 규정 없이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내부 경제를 강화합니다. 일본은 상장기업이 정관으로 각종 방어장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도 허용 안 됩니다. 포이즌 필 도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방어장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권 보호장치도 없이 3% 룰만 강제합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왜 외국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 모두 자율에 맡기는가? 왜 그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우리는 법으로 강제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외국은 시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원칙, 특히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경영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주주는 분열되고 외국자본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기업 대주주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화하려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이 한때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철회한 제도들입니다. 그들은 30년 전, 40년 전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분열을 불러오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투기세력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으며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전략 실행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그런데 우

리는 이 실패의 길을 이제 와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어장치 없이 규제만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됩니다. 경영권 방어장치 없이 집중투표제를 법률로 의무화한 유일한 OECD 국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특수관계인 합산 3%를 동시에 강제한 유일한 국가, 차등의결권도 없이 대주주만 통제하는 유일한 자본시장.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실패로 되돌아선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외국이 실제 시장에서 확인한 제도의 결함을 우리는 실증도 없이, 세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제도 실험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외국의 제도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자유와 자유로의 구조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보완하는 다른 법안들과 병행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갖는 실질적인 우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상장사들에 대해서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상장사의 77%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상의에서 상장사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7%, 경영권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 74%,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으로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배임죄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가 —약 77%지요—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개사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개사, 회귀한 기업이 273개가 더 많아 이미 중소에서 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에서 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장사 74%는 2차 상법 개정 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사 38.6%는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도 6.7%에 달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 39.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외부 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서 이사회의 견제가 심화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확보 및 검증 부담 증가가 37.9%. 감사위원 후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감사위원이 이사 겸직하고 있어서 이사회 내 의사결정이 방해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대답이 16.5%, 경쟁기업 추천 감사위원의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 확대, 경쟁기업에서 추천된 감사위원까지 감사로 들어와서 기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응답도 5.8%에 해당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했던 그 1차 개정 상법에 대해서 보완책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이 39%, 배임죄 개선이 27%, 하위 법령 정비가 18% 순이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 상장사 38.7%가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는 배임죄 개선 및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을 했고 하위 법령 정비라고 응답한 기업이 18.3%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 판단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장기업 44.3%가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해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거나 또 M&A 등 모험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임의 목적 없이 리스크를 감수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지나친 가중처벌, 쉬운 고소·고발 절차, 40년 전의 처벌 기준, 경쟁기업 기밀 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가 악용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상의에서 상장사 300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고요.

이번 개정 상법에 대해서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이와 별도로 또 지역 상장사에 대한 영향 및 애로를 조사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 2025년 8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중견기업들이 많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부산이나 광주·대전 등에 위치한 지방 기업들과도 아마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사는 대구 지역의 상장법인 56개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업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응답은 35개 회사, 응답률 약 62.5%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또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그리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시 고려사항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개정 상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응답 기업의 51.4%는 개정된 상법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답했고요. 48.6%는 상세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상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부분입니다.

응답 기업의 82.8%가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이 57%, '매우 부정적'이 25.7%였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약 5.7%였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 54.3%로 나왔고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가 42.9%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 중에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48.6%였습니다. 이어서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가 4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가 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 이런 부분이 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응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6%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 운영과 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된 실무교육 및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상장기업들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그리고 기업 자율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 기업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 A사의 경우에 '자산 총액 2조 원 미만 기업이어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기준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3분의 1—독립이사로 바뀌었지요—독립이사 비율이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서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총·등기·공시 등 절차적 부담과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기업 B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까지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합산 3%로 제한됨에 따라서 의결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46%를 차지하고 일반주주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주총에서 출석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과 찬성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충족되어야 선임할 수 있는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세력의 규합 등으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C사의 경우,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

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회사가 투자·인수합병·유상증자 등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주주의 소송과 법률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도 이사회 개최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지역 상장사들의 영향 및 애로 조사의 결과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차 상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상관없이 지난 1차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까지도 새로운 규제이고 기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규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에게 항상 정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 사절단 형식으로 대기업 회장들까지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벌일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에게 미국과 협상할 때 어떤 투자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대기업들은 그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법 파업 조장법 만들어서 정말 1년 내내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두고 또 경영권마저도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만들고 도대체 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라는 상황인지, 이제 기업 문 닫아라, 기업 문 닫고 회사 그만두고 그렇게 하라는 건지, 정말 지금 국회에서의 이런 입법 논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적인 상황에서 이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실제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고려아연 사례와 KT&G, JB지주 사례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평등,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사례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한 경영권 장악의 실증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금년 1월 23일이지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일은 집중투표제가 단지 제도의 미비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경영권 분쟁을 좌우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최 모 씨가 소유한 2대 주주 유미개발은 영풍그룹보다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잇따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고 이사 수를 제한하는 방식까지 병행함으로써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중투표제가 지분율에 따른 경영 참여라는 기본 원칙과 괴리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줬습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 지분 주주의 이사 선임 수단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능하거나 지지 기반이 취약한 경영진이 집중투표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의사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진은 본연의 책임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보다 이사회의 생존과 이사회 내의 주도권 유지에 더 많은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중장기 가치 훼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T&G와 JB지주 사례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초래하는 이사회의 분열과 기밀 유출 우려를 드러냈던 사안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이사회의 파벌화와 내부 기밀 유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KT&G 사례에서는 칼 아이칸이 집중투표를 통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했는데 이 인사는 회사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내부 정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사가 아닌 외부 주주의 경영 간섭을 이사라는 법적 지위를 빌려 정당화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였습니다.

이보다 더 최근 사례로 2024년 작년 JB지주 사례가 있었습니다. JB지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된 얼라인파트너스 추천 이사와 OK금융그룹 추천 이사 간 이사회 내의 대립이 격화되며 이사회 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단지 이사 간 의견 차이를 넘어서 외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사들이 각자의 추천 세력을 대표해 이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기업의 전략적 일관성과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상법상 영업보고 청취 또 이사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 등 핵심 권한을 지닌 기관입니다. 이사회 내 이사들이 추천 주주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주주 전체와 일반 국민,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오용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구조 왜곡과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우리 기업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왜 이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 사례입니다. 감사위원이 기업 전략을 거부했던 사례입니다.

2012년 12월에 KB금융지주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신한지주와의 격차를 줄이고 보험업 부문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M&A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KB는 2017년에 와서야—5년 뒤지요—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며 보험업 경쟁력 강화에 다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시기보다 무려 8년의 시간이 허비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전적으로 총주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일부 이해관계에 충성하는 감사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전체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일부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된다면 일부 주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장기 전략 추진은 끊임없이 제동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DB하이텍 사례입니다. 감사위원회를 장악한 다음 고가 주식매각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DB하이텍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연대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후보를 제안하자 모회사인 DB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요청하여 경합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KCGI 측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불과 9개월 만에 KCGI는 자신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대부분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모회사 DB에 매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분리선출 제도가 기업의 감시라는 본래 목적보다 특정 세력과 기업 간의 거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감사위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지분 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철수하는 방식은 진정한 소액주주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감사위원의 선임이 특정 투자자와의 담합 또는 밀약 형태로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감사위원회 왜곡이 구조화된다면 기업은 감사위원회라는 핵심 통제기관조차 장악당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후보자에 경쟁사의 인사까지 내세웠던 현대차·모비스 사례입니다. 2019년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을 문제 삼으며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군에는 현대차의 신사업 파트너이자 수소전지 글로벌 경쟁사인 발라드파워시스템즈의 회장과 또 중국 전기차 기업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CTO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비밀, 기술전략, 미래 투자계획이 모두 담긴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감사위원 자리를 경쟁사 인물들에게 넘기려 한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후보들은 주총에서 부결되었지만 만약 의결권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감사 분리선출 인원이 확대되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선출 제도가 확대될 경우에 외부 투기자본이 이사회 감시를 명분으로 기업의 심장부에 침투하게 되고 글로벌 경쟁사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 경영의 실질적 통제권을 외부 세력에 넘겨주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정치화된 감사위원회가 자리 잡을 경우 그 피해는 경영진을 넘어 모든 주주와 모든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것

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 합산 3% 룰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3% 룰 이 규정은 형식상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기업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무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K와 소버린 사태에서는 지분 쪼개기로 3% 룰을 우회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003년에 행동주의 펀드인 소버린은 주식회사 SK의 경영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14.99% 지분을 5개의 자회사로 나눠서 각각 2.99%씩, 즉 3% 룰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2.99%까지 분산 매입을 했습니다. 3% 룰을 우회하기 위한 지분 쪼개기 전략이 통했던 것입니다.

SK는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위임장 대결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방어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버린은 경영권 분쟁이 야기한 주가 상승을 기회로 단 2년 만에 9000억 원의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챙기고 철수했습니다. 문제는 대주주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나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2.99%씩 나누어서 투자를 하거나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3% 룰은 대주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투기자본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의결권을 허용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주식 대여를 통해서 의결권을 우회 행사했던 사조산업 사례도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사조산업의 대주주는 주총을 앞두고 지인 2명에게 각각 3%씩의 주식을 일시 대여한 뒤에 이들을 통해서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에는 이 주식들이 원래 대주주에게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위임계약을 은밀하게 체결하고 주식만 명의신탁 형태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지분 대여나 명의 위장을 통한 3% 룰 우회가 전혀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산 3% 룰이 강화되더라도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지분을 분산한 뒤 비공식 약정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룰이 원칙적으로는 대주주 견제 장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편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 준 것입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일부 기업들이 감사위원 선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3% 룰이 실제 기업지배구조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은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감사 선임 실패 사례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테라젠이텍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수년간 감사 선임에 실패했습니다. 이 회사 외에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네오이뮨텍, 덴티스, 제놀루션, 현대바이오 등 다수의 코스닥·코스피 상장사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는 법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소액주주는 지분이 부족해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지배구조의 혼란이 아니라 상법상 요구되는 감사의 존재라는 요건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사업보고서 공시 불이행, 거래소 제재,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앞으로 감사위원 선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합산 3% 룰의 결과는 투기자본에게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대주주의 재산권만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위원 구성 실패, 감사 기능 마비라는 현실적 부작용이 이미 수년째 여러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정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규제입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를 들여서 자본시장을 자해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차 상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법원의 입장 또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반대 의견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와 법원은 제도의 실효성과 균형을 언급하고 또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개정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경영권 방어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법무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다만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분 비율뿐 아니라 투표 전략에 따라 이사 선임 결과가 좌우되고 결국 정보의 우위에 있는 지배주주 측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 대부분의 주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의 가능성을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 구성, 소수주주 측 이사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해외 입법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분리선출 방식에 대한 비판과 분리선출 방식이 2020년 12월 최초로 도입되었음을 고려하면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분리선출 방식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기업법학회와 상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교수께서 내셨던 의견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충분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이미 1명 이상으로 충분한 감시 기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사선임권과 재산 감독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자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 도

움이 되지 않고 기업 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집중투표 의무화의 부작용 우려입니다. 상장회사에만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주주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장이 되며 각 주주집단을 대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여 이사회는 각 주주집단의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사회는 파행을 겪기 쉽고 연구개발 투자 축소, 고배당 정책 확대 등 단기 이익에 치중한 의사결정이 강화되어 기업의 장기 경영전략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동력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헤지펀드 등 특정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미 단순 3% 룰, 합산 3% 룰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와 더불어 집중투표는 기존 규제와 중복되며 대주주의 이사회 구성권이 침해되고 특정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기업가 정신을 해칠 우려가 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소액주주 추천 부적격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 쉽게 말해서 무능한 이사가 들어와 가지고 기업 경영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수개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며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이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일본이 1974년 집중투표제를 폐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즉 부적격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대, 3대 주주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인 자본 다수결 원리를 위배하며 집중투표제도 자체가 본래 인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폐쇄 회사 중심의 제도로 자본 다수결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미국은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대부분의 주가 폐지하고 현재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기업이 적은 5개 주에서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5개 주가 다 농업을 하는 주지요.

미국 교원연금에서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 비효율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교원연금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1950년에 의무화되었던 것을 1974년에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상 이를 배제하고 있다. 현재 G7 국가 중에 미국 일본 캐나다는 선택사항,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 소수 국가뿐인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고 있고 황금주를 인정하고 있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칠레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기업 자율성 훼손으로

주주 권리를 침해하며 정관 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부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이기 이전에 이사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기업에 투자한 만큼 의결권을 보장받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최대주주 영향력은 축소되고 2대, 3대 주주 영향력이 투자액 대비 커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3% 룰 역시 1962년 기업이 별로 없었고 외부감사제도나 회계감사제도, 금융감독 등이 없었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주식회사 근간인 주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특수관계인 합산 3% 룰 도입으로 재산권 침해를 더욱 심화하는 퇴행을 겪어 왔다.

합산 3% 룰이 외부 세력에게는 지분 쪼개기로 지분에 대한 100%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을 허용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더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은 더욱 제약된다.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외부 세력에게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이다.

외부 인사의 감사위원회 장악으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협력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어 기업의 장기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즉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나 감사의 분리선출 확대 같은 것은 어떤 통일적인 이사회의 의사 결정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만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으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는 지주회사의 타격이 더욱 크고 지주회사 감사위원은 자회사 감사권까지 있으므로 상법 개정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해 온 정책에도 역행한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순이 있다. 해외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입법례를 찾기 어려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입법례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우리 법에만 넣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보다는 연금·펀드 등 대형 외부 기관 투자자가 감사직을 노릴 가능성이 크고 감사의 권한이 막강하여 회사 내부의 모든 서류를 열람·조사할 수 있어 정보 및 기술 유출이 무방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상장회사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이하 상근감사 의무 설치 법인), 이 상근감사 의무 설치 법인이 다시 상근감사 제도로 회귀할 유인이 발생한다. 감사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감사위원회는 각 위원이 모두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전적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회의체 기관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판단되어 권장되어 왔으나 합산 3% 룰 강화와 함께 분리 선임 방식까지 채택해야 한다면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상근감사 1인 선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상근감사 제도로의 회귀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문제 지적입니다.

2025년 제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및 감사위원 선임의 3% 룰

이 강화됨으로써 이미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 2024년 말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6개 정도인데 206개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별 이해관계인 지분은 평균 42.9%이며 연금, 펀드, 소액주주 등 외부 지분 합계는 56.1%임.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합산 3% 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와 특별 이해관계인의 지분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외부 지분은 44.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실제 A 대기업의 경우 24명의 친인척과 4개의 재단을 통해 지분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 3% 룰에서 합산 3% 룰로 강화됨에 따라 의결권이 26%에서 3%까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중투표제도 도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충분하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이미 1명 이상으로 충분한 감시 기능이 확보되어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이사이므로 이사 선임권과 재산 감독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한다. 상법 재개정 시 소액주주 보호보다는 행정주의 펀드로부터의 공격이 잦아질 것이며 방어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규제가 도입된 후 외국기관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 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에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기업 밸류가 다운되어 소수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상장회사의 86.5%, 중견기업은 968개사, 중소기업이 1092개사를 차지하는데 최근 5년간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10배 늘었고 경영권 분쟁 93.1%가 중견기업에 집중되었다. 경영권 분쟁 상장사 최대주주 우호지분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22.7%로 상장사 평균 39.6%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상법 추가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아 M&A, R&D, 유상증자와 같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은 실종될 것이며 경영권 방어 지분 확보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어렵게 될 것이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적용을 피하여 SK 지분을 매입 공격한 후 약 1조 원의 단기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상장기업들이 규제의 적용을 꺼려 해서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자산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들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324개사는 상장폐지 등 기업 성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즉 피터팬 증후군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산 2조 원 상장기업, 24년 말 기준 2조 이상, 4조 미만 상장사 75개사들은 인적분할 등 기업 쪼개기를 할 유인도 커진다.

그리고 근로자 해고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헤지펀드 등이 이사회를 주도할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헤지펀드는 단기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해고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거의 소멸되었다.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각, 공모 증자, 제삼자 신주 배정 등 가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현재 여당에서는 자사주 소각까지 입법화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취득 자사주뿐만 아니라 기존 자사주까지 소급하여 소각하게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소멸될 위기에 있다.

기업이 방어 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 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폭넓게 활용 중이다.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우 한국은 벤처기업에만 인정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든 기업에 인정되고 있고 신주인수선택권 역시 한국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배임죄의 모호한 구속 요건, 쉬운 고발 등으로 경영진 경영 판단에 애로가 많으므로 특경가법·상법상 배임죄의 폐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식 경영 판단의 원칙의 도입 필요하다. 미국 판례는 법원이 경영 판단의 실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만 충족하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보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결정의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심사를 한다. 증명 책임도 미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그러니까 주주가 되겠지요—가 책임지며 이사가 선의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판단까지 법원이 심사할 수 있어서 경영진이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경영상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경영진의 남용 방지, 배임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여 경영진의 책임 추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개최됐던, 우리 법사위에서 개최됐던 공청회에 참석한 또 다른 전문가는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 과정에서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도 과거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이며 분리선출 대상 확대는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전문가께서 밝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부작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부분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2020년 상법 개정

으로 도입되었는데 제도 도입 당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정한 취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면 경영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즉 1명의 감사위원만을 분리선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회사의 정관 자치로 둔 것은 회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 정원이 4인이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일 경우에 이사회 의견이 2 대 2로 대립해서 결의가 불가능해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이며 분리선출제도와 함께 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입법례와의 정합성 및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리선출 확대로 경쟁 기업, 해외 투기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 시에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 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요. 2019년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경쟁사의 CEO 등을 감사위원 후보로 주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외부 인사의 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제품 개발과 가격 등 핵심 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적으로 정관에 1명 이상 분리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업은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굳이 2명을 이렇게 법에 의무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다. 현행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기업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즉 집중투표 배제 과정에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다. 현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지만 미국은 강행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 주에서는 아예 회사 설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주가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전면 배제를 허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즉 이런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없고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같이 두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 자본이 제안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 간섭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 역시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실제로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단기 시세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의 이사회 진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은 더욱 쉬워지는 반면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선택권, 차등 의결권, 황금주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 자기주식을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최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주주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018년 OECD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책은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법률을 피하고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018년 OECD의 보고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방향이 이 방향과 정반대로 보여집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부작용 없는 만능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경영권 공격 방어 법제가 불균형적인 환경에서의 과도한 일방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배구조 발전과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다수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도입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경영권 공격 방어 법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런 법안들이 추후에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에 기업의 근로자들과 또 협력사들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인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에게 끼치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고용과 거래가 연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이사회 내 분쟁 발생, 이사진 선임의 경쟁 또 전략적인 경영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계획 지연이나 구조조정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 축소 가능성이 생길 소지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부 자본 개입 시 단기수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인해 협력업체에 대해 거래단가 압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진입 시 핵심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요구 가능성, 성장 투자 축소로 인해 협력업체에 대해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하거나 거래 축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기수익 중심 행동주의 펀드가 감사위원 후보로 진입하면 장기 파트너십 관계를 무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한 내부 통제 형태의 변화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감사위원 수 확대 및 독립 감사위원 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내부 감사 기구를 재구성하고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변화 적응 기간 동안 경영, 노무관리 공백 발생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 대응 체계 구축 지연, 노사협의체 도입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 감사위원이 적극적 감사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근로자 쟁의, 노동관계 문제, 협력업체 납품 불이행 등 다양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고 이는 근로자와 노조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라 내부 갈등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와의 관계 조율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용 상승 및 조직 기능 약화로 인한 일자리 또 협력업체의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 컨설팅, 이사진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경영권 방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재정 압박이 증가되겠지요.

또한 비용 절감 요인으로 근로자 임금 동결, 복리후생 축소, 협력업체 거래단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위원 및 다양한 주주 그룹 참여로 의사결정 속도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은 핵심 경쟁력에 집중,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삭제, 협력업체 수 감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최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연이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듯이 기업들의 투자와 발주 증가가 둔화되면 이는 협력업체 주문 감소와 중소기업 고용 불안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 축소와 협력업체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은 근로자 고용 불안 심화와 노사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강화와 동

시에 추진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 긴장 관계는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협력업체와 연계된 채용이나 계약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회가 단독으로 속도전처럼 추진함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법제 변화로 인해 법안의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까지 대상으로 기업 내 경영 계획, 인사정책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협력 기업과 연계된 채용, 물량 계약 등에도 연쇄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제도는 근로자 고용 안정이나 협력업체의 지속 가능한 거래 관계 측면에서 오히려 리스크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나 중소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과조치와 경영 안전장치 등 각종 보완 입법을 함께 논의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사회가 너무 분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투자도 지연될 수밖에 없겠지요. 투자가 지연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겠지요.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기업 하나가 공장을 증설하면 수십 명 신규 인력이 채용되고 그 지역 상공인들도 먹고살고 부품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사 선임부터 싸우고 감사위원 구성도 합의 못 하고 감사위원 구하기도 어렵고 주총에서 고성이 오가고 이사회는 회의만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그러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피해는 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고 근로자들과 협력사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규직 임금 협상 모두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경영권 방어 때문에 주춤하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인사 확충, 조직 인원 새롭게 구성하는 것 또 복지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회사의 미래가 흔들리는데, 자기 경영권이 흔들리는데 누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누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겠습니까? 누가 직원들 복리후생 챙기겠습니까?

결국 사내 협의체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지금 경영권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보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회사 안의 약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사는 더 취약합니다. 기업 경영이 불안해지면 이사회가 투자 결정을 미루면 그 영향은 협력사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라인 투자가 보류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 협력사 납품 계약 당연히 잃게 되겠지요.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공장 돌린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가 되고 현금 흐름 끊기고 은행 대출 상환 안 되고.

대기업 이사회 내부에서 그냥 안건 하나 빠진 것에 불과하고 이사 중의 일부가 반대한 것에 불과한데 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협력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출 확대 결국에는 단기수익 압박, 단기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 분리선출 확대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에 잠시 그런 소재가 생겼을 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분쟁이 발생했던 회사들의 주가, 잠시 올랐을 때의 그 이익은 결국에는 행동주의펀드나 그런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국내의 기업에 도움이 됐다거나 국내, 우리 국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까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구조는 단기 투자자에게 이사 자리를 열어 주고 감사에게 내부정보 접근권을 줍니다. 장기 경영보다 단기의 수익 확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설비투자보다는 배당을 요구할 것이고 고용 확대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고 협력사 보호보다는 원가 절감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 법이 말하는 투명한 기업이란 현장 노동자 일자리 줄이고 협력사의 숨통을 조이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완 입법과 필수적인 경영 방어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완 입법과 필수적인 보완장치가 없다면 이번 2차 상법 개정은 부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감사위원 확대 개정안은 경영권 균형 붕괴와 기업 의사결정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 아래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그리고 배임죄 완화 내지는 폐지,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 입법과 장치들도 함께 논의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계속 언급했듯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 시점의 적정한 선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설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고 구체화해서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고동진 의원안입니다—과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의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김성원 의원안입니다—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해서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고동진 의원안입니다—그리고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

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한 형법 개정안—유상범 의원안입니다—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최은석 의원안입니다—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포이즌 필 등 방어 수단을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확대만 처리하고 이러한 경영권 방어 방법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경영권 방어 법안이나 장치들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외의 경제적 위기와 재계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권 위협과 경영판단 위축 우려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경영권 방어 법안이나 장치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04년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모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영상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이고 충실의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협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 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판단 자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 발생 여부는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결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임 여부 판단은 사전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충실의무와 주의 의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세 번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행위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형사처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사후적 결과만으로 배임 성립을 판단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형법과 상법에 명문화해 이사가 충분한 사전조사와 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을 내렸다면 책임면제조항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과 상법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는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요건을 제한 또는 완화하거나 폐지가 필요하고 고의, 사익 편취 중심의 규율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도입입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포이즌 필이라고도 하는데 절대적 인수합병 시 기업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 희석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에 숨겨진 독약 같은 조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적대적 M&A 시도자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수자의 지분 비율이 희석되며 자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이즌 필 방어장치와 함께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원칙 또는 예외적 허용 규정, 일정 기준 초과 시 주주총회 승인절차 명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경영권 방어와 혁신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창업주가 외부 투자로 지분 희석 시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요건은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창업주 지분율 30%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시 가능하며 발행 시 주주총회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정관에 발행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며 구글, 포드 등 글로벌기업이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나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증거공개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법적 절차 보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이 경영 판단의 원칙과 조합을 이루게 될 경우 투자환경 신뢰가 증대되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또 배임죄와 특별배임죄 규제 정비,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소송절차 개선 등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과 반드시 병행해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 지역구인 부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선대 때부터 사업을 일구셔 가지고 지금 그 후세대들이, 2세·3세까지 회사가 장기간 이어져 왔던 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면 한결같이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사를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회사를 문을 닫을 것인가, 회사 경영하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조한테 험한 꼴을 당하거나 상속세로 인해서 후손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날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새롭게 투자처를 찾고 이익창출 기회를 찾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사 경영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회사 문을 닫을 것인가, 그래서 후손에게 이런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조건하에서 누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과거와 같은 기업 성장, 해외와의 경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되실지, 과연 그런 환경을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했는지, 그동안의 기업의 성장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들에 대해서 다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또 기업을 상대로 시험을 해 보기 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오기형)

(12시22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십시오.

○오기형 의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오해가 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저는 이번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 과정이기는 한데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의식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현안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까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달려와서 좀 숨이 가쁜데……

저희가 그동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또한 회사 경영진들이 특정 배후 조종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주들의 이익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 주주 중심의 경영 내지는 책임지는 경영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들,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자산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이걸 PBR이라고 부르지요—그다음에 수익성 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PBR은 0.93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주가라면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주가라면 1, 2, 3, 4 등…… 아마 1 이상이 돼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0.93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고, 이 0.93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중국도 1.6인데 신흥국 평균이 1.82, 선진국 평균이 3.38인데 대한민국은 0.93이다. 이 0.93이라는 수치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OE 경우도, 수익성과 관련된 이 점도 한국이 8, 신흥국 11.1, 선진국 평균 11.6,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년, 20년 동안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종래에 논의했던 자료를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OECD 2018년도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한국은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 세 가지 문제인데 신규 창업을 위축시킨다,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 부패를 유발한다.

신규 창업을 위축한다는 것은 기업가정신,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늘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축적되기 때문에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

배하니까 많은 기업들의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후에 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이 정치계, 언론, 광고, 법조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확대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OECD 이코노믹 서베이라고 해서 코리아 2018, 2018년도에 OECD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서 함께할까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 시장의 참여자 중에 이런 지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거버넌스 리더십에 문제점들이 있다'. 그중의 몇 가지 열거해 보면 2세 또는 3세 지배주주들의 리더십, 경영 역량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이건희 등은 나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했는데 현재는 어떤가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3세·4세 지배주주들이 기업가정신이 있는가, 리더십의 검증도 없이 승계받으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에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TSMC와 비교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고요. 노키아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대한민국 기업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지배구조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간에 형평성이 무너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업집단 재벌들의 집단 내부지분율은 약 61%인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5%다, 공정거래위원회 작년 9월 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의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들이 주주 환원보다는 지배주주들의 사익 편취, 사익 편취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또는 어떤 대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비판이 있는 겁니다.

사익편취의 수단과 방식이 과거의 CB·BW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는 합병이나 물적분할을, 쪼개기 상장 등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일반주주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은 사외이사가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만 하는 이사,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관계에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것 아니냐, 많은 사외이사들이 결국 고액 연봉 파트너 파트타임처럼 그런 잡(job)으로 전락해서 실제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외이사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자기의 사외이사 직을 지정해서 꽂아 주는 지배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대변해야 될 일반주주들 입장을 대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 역할밖에 못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이사회와 TSMC 이사회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너의 일부,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굴러가고 있느냐 그런 시중의 비판들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지적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와 리더십 문제, 네 번째 이 주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각 기업들과 관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스튜어드십 투자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직도 그게 너무 미흡하고 실제 너무 초보적 단계 아니냐,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거 아니냐, 국민연금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그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OECD나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기업 지배구조 문제점이다. 그리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할 정도로 냉소가 있었는데 그 냉소의 원인 속에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일반 주주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런 불신이 강하다 이게 이제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출발점, 그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작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안을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추진해 왔고 그리고 그 다섯 가지 항목 추진 중의 일부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언론에서 머니무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자산은 부동산에 70% 정도 편중돼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부동산 편중이 그 정도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심의 편중이 과연 적절하냐 내지는 지속 가능하냐 또는 대한민국이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를 갖고 계속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모두가 함께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비판들이, 이 주제도 정당과 상관없이, 전문가든 실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된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부동산 중심의 사장되는 자금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가계부채 중심의 또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비판도 쌓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과도하고 GDP 대비 90%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내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자본 흐름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자본 흐름으로 바꾸자,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

이 쏠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이 혁신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의 성과를 가지고 그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자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의 문제의식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서 은행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은행들 중에서 제대로 기업과 함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상, 지원보다는 대부분 은행들의 먹거리는 주담대였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 인상될 때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 인상됐더라도 미국의 금융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이 바로 전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변동의 부담이, 5%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버퍼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를 인상했지만 그 3% 인상 속에서 80% 이상이 변동금리였습니다. 미국은 5% 인상을 통해서 전가되는 것을 금융기관이, 금융 전문가가 미리 준비하고 막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대로 그것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은행들은 매년 50조, 60조의 예대마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대마진 속에서 적어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됐다면, 그래서 총량 관리가 됐다면 그러면 적어도 30조 정도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부담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실제 은행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경제 잘 살리자 이런 담론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니무브, 낙후된 내지 고착화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이 지점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 지점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매개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보자, 그 속에서 다른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보자, 그게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분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와 판단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밸류업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일본

의 밸류업 정책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기로 한 것도 엎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밸류업 정책의 엑기스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화면이 2개인데 두 가지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번역을 도서관에 맡겨서 하나 구해 가지고 읽어 봤는데 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89년 이후에 1990년, 10년, 14년까지 24년 정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이것 뭔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시장 내지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저출생·고령화 그 추세가 일본에도 닥치고 있었고—혁신하는 것밖에 없다. 자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혁신경제에 자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의식으로 이토 보고서가 나온 거지요.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쟁력과 인센티브 그다음에 부제로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별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최근 니케이지수가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만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4만 2633입니다. 약 3배가 증가된 거지요, 10년 동안.

일본이 일관되게 지난 10여 년 동안 해 온 정책이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나름 그 제도 시행의 함의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성은 뭔지 그런 걸 윤석열 정부나 금융위에서 고민한 거지요. 저는 그것 잘했다고 봅니다.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 밸류업 정책을 스터디하고 그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고유한 형태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게 작년 초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입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작년 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금도 승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바라보는 지난 10년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됐습니다. 국정농단이 있었고 형사처벌받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가 동원돼서 그런 식의 엉터리 합병을 지지하고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건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이나 국내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나쁜 사례였습니다.

2014년 일본은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2015년도에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시장의 불신을 누적시켜 왔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과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법 개정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번역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여전히 또 일본 팀입니다—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왔던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식들을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저성장 기조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성장하는, 혁신하는 기업한테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투자는 단기매매, 단기차익 중심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장기투자자를 육성하려면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필요하지만 주주들, 일반주주들 들러리 세우면 장기투자할 수 있겠느냐. 주주들에 대해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 또는 태도, 성과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ROA와 같이 표현되는 실제 수익률이었습니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보여 줘야 된다, 그게 단기적으로. 하지만 수익률이 전부는 아니고 긴 호흡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량적인 정보 말고 정성적인 정보, 좀 긴 호흡에 서로가 믿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도록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을 것인가, 그 신뢰 속에서 개인투자자든 기관투자자, 특히 기관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혁신하는 기업에 계속 투자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혁신하고, 혁신하게 해서 기업들이 전체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가 이해하는 이토 보고서나 그 이후 자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이 보고서에서는 세금이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는 제가 작년 국감 과정이나 예결특위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딱 보니까 상법 개정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본시장법도 부분부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만 나와서…… 과거에 속담이 있지요,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탱자가 돼 버렸다고 그런 비판을 제가 지난번 국감이나 또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금이 초점이 아니다. 실제 장기적 투자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신뢰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키울 것인가가 초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 일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2015년에 만들고 거래소 5개를 3개로 조정하는 거래소 개혁을 하고 PBR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수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고 그 속에서 함의점을 갖고 이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활성화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법 개정의 맥락 화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이게 작년 2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추진방향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일부 세금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많은 부분도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부분에서 일반주주 보호강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 자사주, M&A 관련 제도개선 이것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다 들어갔습니다. 배당절차 개선 그다음에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이게 충실의무입니다. 실제 이 부분도 저희가 다 함께 처리한 겁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추진한다……

앞에 공정한 시장질서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최근에 금융위와 거래소가 함께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제 이 내용입니다. 이미 다,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 전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것을 추진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 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하면서 일부는 도입되고 일부는 또 다른 게 추가되긴 했지만 그중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문제, 중복상장 문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초반까지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셨고 이런 자료를 배포하셨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중간에 안 했는가. 왜 안 했습니까? 저는 가끔 묻고 싶습니다.

이걸 기획하셨던 분들, 그때 금융위원장이나 이복현 원장한테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계속 하셨으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권 갖고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다 했으면 박수쳤을 텐데, 시장에서 박수 받고 표도 더 많이 얻었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경협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러 중도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대로 가져갔으면 민주당은 협력자가 되고 실제 주도는 국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은 안 했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시장에서의 실망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 제기를…… '좋은 방안도 마치 할 것처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잘 되겠나? 좀 이상하다' 이런 불신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일관되게 끌어오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었던 건데 대한민국은 작년 초에 반짝 한 몇 달 하려고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멈춰 버렸고 그리고 올여름 1년이 지나서 민주당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정책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고민했던 정책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중복되는 또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작년 가을에 채택한 것은 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하자. 대규모 상장회사는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지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종래 1명이었는데 이걸 2명으로 확대하자. 상장회사 사외이사라는 용어가 들러리 같아서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바꾸자. 독립성을 명시하자.

그다음, 투자자가 벌써, 한 회사 주주가 삼성전자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총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요즘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1차 상법, 2차 상법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1차 상법의 1-1 지난 7월 초에 했고 이제 1-2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작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이 충실의무 도입에 대해서 합의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고하자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총리권한대행보고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했던 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거고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필요한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은 당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 내용에 기초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서로 보고 토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규정 법사위에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합의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신다고 해서 그냥 막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한걸음 한걸음 토론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회의 문제를 풀고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함께 저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은 거수기 이사회가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거수기 이사회를 바꾸자,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 이겁니다.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사들의 행동준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게 충실의무 아닙니까? 자신을 찍어서 지명했던 사람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찬반 투표할 게 아니라 자신이 대변해야 될 회사의 전체 이익, 그리고 회사 전체 이익의 구성원인 주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판단을 하라는 것 아닙니

까. 그렇게 판단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사외이사, 이제 독립이사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지지 말라고 계속 그랬다가 이제 책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기왕이면 많은 주주들의, 일반적인 1주 1의결권이기 때문에 1주 1의결권이 관철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풀어 가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있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1차 상법 개정의 내용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통과된 거나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이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2차 상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2차 상법 개정, 저희가 다른 의제로 차분히 사회적 토론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의 문제 그리고 합병·분할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의 문제, 의무공개매수의 문제 이미 작년 2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것 저희가 가을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상법을 마무리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고 2차 상법 개정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전에 다른 예결특위장에서도 한번 이 화면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 했던 이야기예요. 여전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에 계시고 이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약간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들러리 이사회,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 이게 우리 상법 개정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불량주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뭐 할 수단이 없다, 이것 이렇게 해 갖고 한국 시장이 뭔가 지금 PBR이 0.9니까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투자하면 나중에 그게 업사이드, 상승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PBR이 0.9거나 또는 PBR이 1이어도 실은 낮은 거지요. PBR이 0.9면 그 0.9인 회사는 저평가된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요, M&A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정상적으로 경영만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가치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청산을 해도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1. 그 회사의 장부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0.9라는 숫자도 못 믿겠다, 그런 게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0.9가 나오는 그 전제가 되는 재무제표가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문제는 지배주주가 되지 않으면, 일반 주주 내지는 적어도 경영진의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주식이 갑자기, 회사의 이익이 사익 편취, 터널링(tunneling)이라고 표현되는 지배주주와 이해관

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수단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 개선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개선하라고 맡긴 게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사와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사와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누구 입장에서? 특정 재벌들의 오너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들 전체를 위해서 판단하고 안 될 건 안 된다 반대할 건 반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신이 쌓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는 냉소의 그 평가의 기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나 주요 기업들이 이익 빼먹기를 너무 빈번하게 한다 내지는 그 가치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 내지는 많은 주주들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한다, 계속 들러리 서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은 이자라도 주는데 이 회사는 이자도 안 준다 이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지점에서 일본 밸류업은 적어도 ROE에 해당하는 뭔가를 배당을 통해서든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일본은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부족하더라도 긴 호흡에서는 어떻게 되겠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회사와 투자자가 신뢰를 갖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관행이라도 쌓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행도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경영권 하면서 왜 경영권에 간섭하느냐 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를 한 여섯 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삼성물산 부당합병입니다. 2014년도에 일본은 이토 보고서, 2014년도부터 10년 동안 밸류업을 해서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은 삼성물산 부당합병부터 쌓인 그 불신이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심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해결 못 하면서……

거의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사건이 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제일모직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변하는 삼성물산이 같이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면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리포트, 보고서를 봤습니다. 자산, 재무제표 또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것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리포트를 양쪽에서 봤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지적하고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적대적 M&A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날짜로 합의했다면 날짜를 합의한 시점에서부터 하루, 그 뒤로 일주일, 그 뒤로 한 달 이 세 가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으로 해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 시점을 삼성물산 전체 주주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배후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고 특정 회사에 불리하게 날짜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고 제일모

직에는 유리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누가 잘못해서? 국정농단 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그 일반주주는 삼성물산의 일반주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물산의 일반주주는 한 주당 1만 3533원 정도를 손해 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엇·메이슨 국가·투자자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 과정 판결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아니, 일반주주들도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도대체 삼성물산의 2015년 이사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봐도 거수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례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개입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고 이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특검이 개입을 했고 이 특검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아실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잘 아실 거고, 그 사건입니다. 직접 수사도 하셨을 거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사건 잘 아실 거고. 수사와 관련돼 있었거든요. 삼성 승계작업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의사 표시와 청탁이 있었다, 그 뇌물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합병 찬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결국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장관이나 그 기금 관리했던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합병 비율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과해 주고 그 묵과해 주는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들 다 징역 가고. 이러니 한국의 자본시장을 믿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황당한 사건을 저질렀으니, 그러니 한국 자본시장이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반복하겠습니까? 반복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 가만히 눈 뜨고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국민연금도 찬성하고 또 어떻게 배후 조정해서 여론 조성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로 해서 누구는 이익 보고 온 국민은 손해 보고. 그런데 온 국민은 손해 봤는데 국민연금도 손해 봤는데 일반 투자자도 손해 봤는데 찍소리 못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해서 ISDS 국가·투자자 소송이 2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엇 사건도, 실은 2건 다 중재 판정은 졌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사건은 확정이 됐고요. 엘리엇 사건은 중재 판정 관련해서 후속으로 관할권 관련해서 좀 절차적으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중재 판정만 났고 보면 이 2건에 약 2300억, 4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그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왜 제 호주머니에 있는, 냈던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해서 세금으로 엘리엇·메이슨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때문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삼성물산 그 당시 이사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당시에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이 있습니다. 국내 주주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주는 합병을 반대했으면 반대했던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5만 7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게 6만 6600원 정도로 상승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성신약은 일부 보상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안 했던 주주들, 국민연금 포함을 해서 나머지 주주들은 다 손해를 본 것이지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의사결정을 한 주주들의 이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손해 봤던 국내의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례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성물산 당시 이사들 당신들 전 재산으로 그 당시에 손해 봤던 주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판에서 다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냐 없냐, 민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지점이 법원에서 그동안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든 창설적 의미에서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추가하자 그런 논의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담론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충실의무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삼성물산 사례만 보더라도 이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 이 의제가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회사의 재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합병 비율이 잘못되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삼성물산 주주들만 손해 본 겁니다. 일반 주주 대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투자 결정을 했는데 투자 결과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에는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재산도 그대로 있고 제일모직의 재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합병 비율만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손해 보는 게 없고 회사의 주주만 손해 본 경우입니다. 그것도 삼성물산 주주 모두가 일률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주주충실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외에는 민사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판례로도 인정하고 일부 입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은 판례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써 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충실의무와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상법 전문가들은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있지만 이복현 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나쁜 거짓말이라고. 이 내용은 실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다, 올 3월 달에 이복현 원장이 별도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충실의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월 29일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메이슨 ISDS 그 과정에서 약 904억 원 정도 대한민국 세금이 나갔고 그중에 158억 원 원천징수, 세금징수로 했고 잔액 746억 원을 메이슨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고 여전히 국민의 세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

당신들은 책임지느냐? 삼성그룹에 있는 분들은 정말 늘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은 무슨 책임을 지느냐?

다음 화면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관련 사건이, 재판이 많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고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 유죄판결도 있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최근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지요. 그 관련된 건인데 검찰이 인천 연수구의 어느 회사 공장 회의실과 또 다른 공장 통신실 액세스 플로어 밑에, 플로어가 있는데 그 밑에 패널을 딱 뜯어 보니까 메인 및 백업서버,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등 26대가 발견됐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DRM 해제작업 참관 기회 그다음에 압수된 전자정보 폴더 내의 파일들을 판단할 기회만 주었을 뿐 12개 폴더 내의 파일 일체를 별도의 선별절차 없이 모두 압수한 것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요즘 표현으로 독수독과 이론, 적법한 증거수집절차 위반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 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사적으로는 무죄라고 하지만 떳떳한가? 그 당시에 사설들, 이 판결 나오면서 많은 이야기 했지요. 도대체 삼성 왜 괴롭혔냐, 이제 괴롭히기 그만해라,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삼성이 억울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겁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 히스토리, 증거수집 과정이나 증거법적으로 결과를 배제했던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손해 봤고 그리고 손해 보는 과정에 국민연금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뇌물죄 유죄 받았고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은 손해를 봤고 여전히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으로 이 뒤처리하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삼성 이 합병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까, 억울하다고? 지금이라도 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상권 행사하면 알아서라도 좀 돈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억울합니까?

지난 2014년도 일본에서 이토 보고서 가지고 10년 동안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믿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 없습니까? 이제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가 여전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도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이 사례가 주는 함의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도대체 법이 법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사들이 거수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주주 이익을 그냥 갖다 바치는 행태가 버젓이 일어났고 버젓이 일어났는데도 책임 추궁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되고 이사 선임 과정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회사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삼성물산.

실제 많은 경우에서 배후지시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LG화학 물적분할 케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또한 2020년도 사례인데 계속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020년 물적분할 전에 시가총액이 48.5조, 약 5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물적분할이 그다음 날 공시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8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모회사 주식이 20조 3000억,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 지분이 86조. 그런데 이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은 모회사 주주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G화학 물적분할 사례를 놓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송아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를 샀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 송아지는 남의 집 소가 돼 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이 사례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LG화학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산이 48조, 50조 가까이 되는데 어느 순간 20조가 됐으니까 한 60%가 날아간 겁니다, 5년 동안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자회사는 실은 한때는 구십몇 조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86조지만. 모회사에서 떨어져 나간 물적분할한 자회사는 이렇게 커졌고, 그런데 이 자회사는 권한은 없고. LG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커 나가는 것이 괜찮겠지요. 그런데 LG화학이라고 하는 그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는 않는 거지요.

이런 행태가 빈번하면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계속 논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다음 페이지 화면 하나 더 보시면 LS그룹 구자은 회장 발언입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중복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논란이 되더라.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에 주식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LS그룹 계열사 주가가, 3월 7일 자 인베스트조선 기사인데 일제히 급락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야?' 이런 거지요. 이 투자자들, 자본시장에서 보면 이것을 보고는 '개판 5분 전이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한다. 다 들러리만 서라는 거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동시상장이 유행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행처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서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 많은 기업들이 모회사가 하나 상장되면 자회사는 실제 모회사의 사업부처

럼 운영을 합니다. 별도 상장을 안 합니다,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들러리 서는 그런 뒤통수치는 일 안 하는 게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묘하게 이것저것 편의 봐준다면서 이런 행태들을 반복했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든 뭐든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단타 하다 빠져라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길게 보고 어떤 자금이 모이는 기본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서학개미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지요.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한국 자본시장에 국민의 재산을 많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국민연금이 한국 자본시장에 무조건 투입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후에 국민들의 노후 재산을 보장하는 건데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수익률도 확보도 못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재평가되고?

그래서 이 LG화학 물적분할·동시상장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비판을 받았고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를 들러리로 세우지 마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동시상장 그만하자,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하자. 그래서 거래소 규칙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른 나라는 거래소 그 단계에서, 상장 단계에서 많은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봐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모회사 주주들과 소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모회사 주주들에게 어떤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회사가 동시상장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입법들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사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일반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담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은 두산그룹이 좀 어려웠을 때도 이러저런 말도 있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냉소가 있고 자신도 서학개미처럼 외국에다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 중에서 두산은 기술이 있잖아,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 원전 관련해서 뭔가 좀 독보적인 게 있잖아. 그러면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두산에 대해서,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의 밑에 있는 자회사인, 캐시카우인 두산밥캣, 매출이 9조 70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와 두산로보틱스, 그 로보틱스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 나올 때 매출액이 530억입니다. 영업적자 158억입니다. 이 회사랑 주식교환하겠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 위의 주식회사 두산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독립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밑의 매출액이 9조 7000억, 영업이익이 1조 3000억, 그런데 두산로보틱스 회사는 적자 회사. 매출액이 5000억도 아니고 530억 그리고 영업적자 158

억. 이것을 바꿔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그냥 시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것 진짜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 계속 자본조정, 말하자면 조직 개편 등으로 하는 행태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전체 사업전략, 경영전략 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 테지만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오너들 승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그냥 막 바꿔치기하면 이게 되겠냐라는 비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알짜 회사, 또 다른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갑자기 포괄적 주식교환한다 그러니까 알짜 회사가 매년 적자를 보는 회사로 그냥 넘겨 버리면 이게 무슨 밸류업입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 밸류업 정책 표방을 하고 있었으니까, 11월 달에.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이렇게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따로 이게 기업들이나 시장 활동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 이사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양보를 했을까요? 거수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시에 따른 것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대기업의 이사회 이사들이 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거수기 이사회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사회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자기반성이나 엄격한 규범이 있는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 선임 과정에서도 결국 누가 낙점해서 이사회 이사하라고 하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즉 일반주주 입장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제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신성통상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은 2019년도인가요? 노 재팬 캠페인 할 때 탑텐 해 가지고 그 성장률이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 성과로 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PBR…… 표현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유보 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아서 계속 누르고 있는, 계속 뭔가 가족기업 비슷하게 하는 곳이라 이 회사에 대해서는 많은 주주들이 비판을 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축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 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관련한 다양한 논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번 다뤘던 회사입니다. 여전히 주주들의 일반적인 비판도 지금 많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아연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곽규택 의원님도 고려아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고려아연 사례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저희들도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1대 주주, 2대 주주 서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저희는 그

런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경우에 정치권에서 누구 편들어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건 민간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할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의제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전달된 것은 이 회사의 자사주 문제가 독특하게 작동됐고 또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뭔가 특정 지배주주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사는 행동,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2대 주주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1대 주주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경영권을 반환받기 위해서 공개매수를 시작했고 그리고 현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공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삿돈으로 공개매수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공개매수가가 8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매수가 끝난 이후에 매우 짧은 시간에 다시 회사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68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공개매수로 경영권 방어해 놓고 그다음 회사에서 그 돈 쓴 다음에 돈 부족하다고 유상증자하는데 그 주가는 67만 원. 그러면 89만 원에서 67만 원 이 차액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었던 거지요.

이 고려아연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 공개매수를 결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일련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경영권 관련 논쟁을 하면서 회사 재산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쓴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행태는 여전히 특정 주주, 이게 꼭 1대 주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2대 주주지만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이럴 때 서로 책임지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그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보면 여전히 회사 경영진 등은 뭔가 행동준칙이 없는 거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군가 확실하게 회사의 재산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서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고려아연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이사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이고 또 여전히 이후의 토론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사례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롯데렌탈 경영권 프리미엄 사례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를 팔았습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에 팔았는데 지분을 매각할 당시의 회사의 주가는 2만 9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롯데그룹은 주당 7만 7115원에 팔았습니다. 약 2.6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지요.

그런데 이 롯데렌탈 이사회에서는 어피니티 에쿼티, 매수인한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삼자 유증 방식으로 주가를 약 2만 9180원, 주가보다 살짝 낮은 것으로 해서 일반 주주 지분율의 20% 정도를 유상 증자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다른 40%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지요.

이 회사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지배권이 오십몇 %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가 플러스 2.7배, 2.6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하고 그다음에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그건 좀 비싸게 주고 일부 싸게 해서 또 유상 증자를 해서 지분을 추가 인수하니까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매수인은 많은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한 45% 이상이 되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닭 쫓던 개 꼴인 거고 들러리인 거지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례가 지금 제도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논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증하고 이 방식 자체가 롯데렌탈 이사회, 그러면 '이사는 누구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롯데렌탈 유상 증자를 결정하는 그분들은 누구의 거수기인 것이지? 어떤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이 사례가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상증세법 개정하면서 지배주주 경우에는 약 20% 상속할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니까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0%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정가격이라고 하는 틀로서도 제도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현재 실제 2.6배 정도 프리미엄에 비교하면 그 상속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지요. 오히려 다른 논의들도 있지요.

상속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가를 저가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PBR 0.2, 0.3, 0.4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세는 비상장회사는 PBR 대비 0.8로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니까 0.2, 0.3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상속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똑같이 0.8로 하자. 0.2든 0.3이든 상관없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PBR 0.8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자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 이것 좀 진지하게 이번에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포인트는 지배주주들이 나름의 성과, 경영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주주들이 들러리 서는 경향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비판이 쌓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롯데렌탈 경영권 프리미엄 이 사례에서도 롯데렌탈 경영진이 특히 이사회가 나름 독자적인 판단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접근해 볼 때는 여전히 독립된 판단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6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6개 사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반 투자자들 들러리 세우고 특정 지배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의 구조개편, 조직개편, 합병·분할 또는 공개매수, 매각 등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내지는 이해가 안 된다 내지는 어떤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에서 특별하게 긴 호흡으로 어떤 회사를 믿고 그 회사

가 성장하면 그 회사의 성장 결과물들이 일반 주주에게도 골고루 향유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긴 호흡에서 장기 투자를 못 한다, 긴 호흡에서 장기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 내지는 자본시장 활성화, 그래서 혁신경제로 가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와 기업들의 서로 신뢰가 축적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 결정점에, 시작점에 책임지는 이사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거수기 이사회에서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들자라는 이번 민주당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세 가지 통과된 것과 이번 두 가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패키지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1차 상법 개정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1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사회의 행동준칙,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게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2~3년 이사들이 새로 선임되고 이사들이 스스로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사 충실의무에 따른 행동준칙들을 보다 보완하는 금융이나 거래소에서의 또는 전문가들 사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곽규택 의원님도 그 제안 하시던데 저는 그 지점 공감합니다. 더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동준칙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서 보다 더 나은 기준들이 설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상법 개정이 주는, 사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존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대로 그냥 버티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만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출발점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해서 이번의 법 개정의 초점이 됐던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랜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게 5명과 1명 이상, 2명·3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그 시점에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항상 소수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 1명이든 2명이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출할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교해 보면 현재 이사 선출 구조는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므로 다수파가 무조건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해서 51%의 지분만 확보되면, 결과치만 확보되면 무조건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한 3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의 비례에 맞춰서 한 30% 이하의 일정 정도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례투표제 또는 소선구제와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투표제에 관해서 연혁을 한번 쭉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논의는 최소한 24년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중에 스토리를 쭉 찾아보니까—연

혁적으로—1998년도에 상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다 포함이 돼서.

그런데 2001년도에 증권거래법 개정하면서 상장회사 특례를 인정했고 그래서 집중투표제의 청구 요건을 좀 완화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상장회사들이 대부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정관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하여간 그런 배제된 정관을 채택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증권거래법 폐지되면서 새로 상법에 상장회사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상장회사 집중투표제가 상법에 따라 규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지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2013년도 7월인데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도 실은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게 공약이었는데 실은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도 공정경제 3법 논의할 때 저희들도 이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공정경제 3법 TF에서 같이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지금 의무화하자라는 것이 적용되는 회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해서 도입되니까 그 기업들은 전체 198개 회사가 있는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9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중투표제가 이미 도입된 회사가 20개고 도입이 정관으로 해서 배제된 회사가 178개입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 178개 회사의 정관에 따른 배제 효과가 없어지고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의무화했다가 나중에 자율로 변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선 의원님 주장에는 특정 파벌주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논의의 초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일당 독재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가 아니라 실은 다당제 하는 거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그걸 반영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비율이 있어서, 특정 주주가 다 100% 갖고 있으면 그건 상장 공개 회사가 아니고 비상장 회사겠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을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오픈 컴퍼니, 상장회사라면 그러면 일반 투자자 주주가 있는 것이고 그 주주들에게 1주 1의결권을 보장했다면 그 주주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들러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 하는 것은 귀찮은 거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의 대상이 되겠지요. 지금 집중투표제에 대한 논의에서 인식의 포인트는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 투자자를 들러리로만 세우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볼 거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분들을, 은행처럼 이자를 주시면 되잖아요, 지분 투자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자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분 투자자로서 참

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회사법상 1주 1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주 1의결권에 기초해서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독주하니까 집중투표제라는 형식으로 해서 좀 견제를 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실험이나 추진을 해 보고 이 사례를 축적해 보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도입돼 있는 의무, 실제 대규모 상장회사에도 20개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처럼 한번 해서 견제와 균형의 관행이 쌓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OECD에서 2023년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팩트북(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찰 대상 49개국 중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나라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투표제가 얼라우드(allowed)라고 된 나라가 23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얼라우드 벗 리미티드(allowed but limited)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집중투표제 지금 한 나라 중에서 피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자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 논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집중투표제 자체가 파벌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점을 잡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그게 제대로 논점을 잡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을 특정 지배주주가 다 인정을 하고 지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요식 절차로 해서 뽑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배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그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무엇이 해법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고 그 해법 중의 하나가 적어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한두 명이라도 넣자, 넣을 기회를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LG화학 물적분할 자회사 동시상장 이 케이스에서도 어쨌든 뭔가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가서 반대를 하면 그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이 남게 되면 그 기록이 일종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사들이 들어갈 기회가 없으면 기록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어 있는가, 안 했는가는 나중에 재판 가게 되면 입증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증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회사에서 어떤 토의를 했고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식으로 논쟁해서 공격과 방어가 있었고 견제와 균형이 있었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하는 이사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 이사의 충실의무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견제가 되고 나중에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법 개정이 전체가 세트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충실의무와 함께 집중투표제를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 말씀드린다는 취지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경영권 방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고려아연 사례가 거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 사례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2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해서 올해 1월 23일 날 정관 변경을 해서 의결

했습니다, 1대 주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대 주주가 주도해서.

그래서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에서 반드시 불리하다라고 막 기계적으로 하는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3일이지요. 고려아연에서 그 사례는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는 경영권 방어용 집중투표제 도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2대 주주와 1대 주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정치가 어떤 특정 주주를 편들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가 알아서, 민사적 문제인 것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풀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규칙을 잘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잘 관철만 되면 된다. 그게 상호, 누가 설득해서 다수파가 되느냐 그것을 정치권에서 제도가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그걸 염두에 두고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집중투표제, 아까 KT&G 이야기했는데 저는 역으로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다, 이게 KT&G 사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입니다. 1년 반 전에 KT&G는 여전히 주주 구성이 소액주주가 59.3%니까 60%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가 7.3%, 기업은행 7.1%, 국민연금 6.6%, 우리사주조합 3.7%, 이래서 거의 분산돼 있습니다. 특정 지배주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정기 주총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등이 주주제안을 했고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집중투표제 결과 경영진이 제안한 대표이사,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권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늘 보면 특정 지배주주가 그 회사의 경영권이 천년만년 유지될 걸 전제로 해서 그 변수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싫다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지는,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중투표제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딱지 붙이기 하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집중투표제의 성격은 1등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2등 투표하는 겁니다, 2등 투표. 그래서 적어도 1대 주주가 아닌 데서도, 소액주주지만 일반주주지만 서로 의결권을 모아서 1명이나 2명, 1대 주주·지배주주·경영진을 견제할 기회를 달라, 이게 집중투표제의 제도적인 함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이 약 29.21%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사 선임에서는 최대주주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는 60~70% 되는 일반주주 또는 다른 주주들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적어도 1명이나 2명, 이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이사를 넣을 기회를 만드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집중투표제 반대 관련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회에 최대주주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이사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시각에서만 집중투표제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장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까 여섯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언급하지 않은 많은 유사 사례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 특정 지배주주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상장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기하거나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 PBR이 0.9, 이제 3100 되면서 겨우 1.0 됐는데 이런 상황을 돌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 못 믿으니까, 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못 믿으니까, 회사가 언제든지 이 이익을 주주의 입장에 반해서 빼돌릴 수 있다고 의심을 사니까.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바꿔 보고 아, 저 사람이 가서 적어도 견제하겠다 신뢰하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문화와 관행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현재 최대주주라고 하는 분들, 경제단체 대표들의 의식 전환부터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본시장이 선진화된다. 그 문제의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중투표제의 의미는 거수기 이사회 멈춰야 된다. 거수기 이사회만 갖고 구성하겠다고 하는 최대주주들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일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뢰가 쌓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상법이 미국 법이나 독일 법이 섞이면서 약간 논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영역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상법이 만들어지면서 3% 룰이 고정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와 구분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3% 룰에 따라서 어떤 주주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 형성된 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한다 이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상법의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그 3% 룰은 한 번도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용해 왔습니다. 그 3% 룰에 따라서 되는 이유는 감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감사가 지배주주인 경영진, 대표이사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 체크 앤 밸런스의 취지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미국식의 제도가 대한민국 회사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상임감사를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규모 회사들이 실제 감사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속에 감사위원회, 무슨 사외이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이사들은 모두 특정 지배주주가 주도권을 갖고 영

향력을 갖고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10명의 이사를 선출하게 될 경우에 10명의 이사가 모두가 다 특정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니 그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를 견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은 지배주주의 협조자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부터 분리선출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수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 논쟁의 결과 2020년 저희가 공정경제 3법 처리할 그때 좋다, 일단 1명부터 분리선출하자라고 했고 그 분리선출의 의미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할 단계부터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을 이사로 선출하자, 분리선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제도가 2020년 도입됐고 지난 4년 동안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이 제도는 작동하더라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해서 제도개혁안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는 누구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안 돼'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것도 싫겠지요. '내가 회사 재산을 어디에 빼돌리든 말든 너희들이 왜 개입해?' 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감사위원의 확대는 싫겠지요. 그런데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너들이 다 빼먹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가득 쌓여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혁신을 못 하고 있는,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돌파하자라고 입장을 갖게 된다면 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1명이던 걸 2명을 선출함은 좀 더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확대가 결국에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슈는 아니다. 결국 경영권은 다수파가 경영권을 갖고 있지만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명이라도 더 넣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그 이익의 공유 과정에서, 분배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것이다, 의혹이 좀 더 약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는 필요한 정책적 변화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선진화하자고 하셨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가 그런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수단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큰 방향에서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수단에 대해서 이게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가, 저는 지금은 이 대안을 먼저 채택해 보고 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일각에서, 재계에서 우려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영권 위협 현실화 이야기하고 기술 유출 이야기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 뭐 해 가지고 기술 유출한다고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제도나 회사 제도에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회사가 경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정 방위산업이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개별법에 따라서 지배권 변동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승인이 풀렸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참여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상법에서의, 일반적인 상장회사에서의 논점과 직접 연결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관련성이 좀 더 직접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누구든 간에 기술 유출의 이슈를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이사회에 지분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경영에 일단 5%는 1%든 일정 지분을 갖게 되면 외국인들이든 국내 일반 투자자든 간에 그분들이 장부열람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실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 소통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아무 정보를 기술 유출 그 단어 한마디로 일반 주주들의 회사법상 보장하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겠다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그건 논거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10년 동안 했던 것 거기서 주요 이야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소통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일반 투자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정성적 지표, 정량적 지표에서 먼저 정량적 지표로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래서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정성적 지표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의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된다.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시를 강화해야 되고 공시에 대해서도 의무공시 말고도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기관투자자들이 긴 호흡으로써 믿고 자금을 투자를 하고 혁신적 금융으로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자금이 유치가 돼야 혁신의 동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른 주주들이 주주기는 주주지만 회사 장부나 어떤 것 정보 공유 싫어' 이런 식의 인식이 된다면 그게 설득의 방식인가. 저는 되게 배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후에 공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기관투자자들과 각 주요 기업들의 경영진이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지요. 함께 진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만 하면 '경영권 침해하지 말아라. 회사의 정보,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자본시장의 상장회사의 성격을 부인하는 거지요. '내가 무슨 결정 할지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상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딱 폐쇄회사로서, 유한회사로서 경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지분을 인수하게 하고 그리고 1주 1의결권을 보장하는 그 속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장부열람권도 보장하고 이사 주주제안도, 그런 회사법 제도하에서, 이 회사법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현행 도입돼 있고 다 합헌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하에서 그 취지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지금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일반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집중투표제, 주주제안 등을 하는 것도 실제 이걸로써 자본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중투표제나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 요건 자체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 한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주주제안의 경우는 0.5%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따른 논쟁이 허들들, 장애물들이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중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주요 상장회사 기업들의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이사회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일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코스피 얼마냐 이건 정책적인 어떤 과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과거의 사례를 쭉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선진화, 지배구조의 개혁 등을 일관되게 해 나가고 그 결과물로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어떤 목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과 정부 내지는 정치와의 관계에서 지금은 여전히 상호 견제하고 협조하는 그런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질서 또는 혁신의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선진 자본주의 또는 생산적 금융을 만드는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과정과 조건 속에서 실적을 내는 것, 그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 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책임과 그 성과를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과가, 의미 있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앞으로 금융의 과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개선 그다음에 기업과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사이에서 서로 간의 소통과 또 새로운 관행의 축적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진화를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대한민국식의 어떤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러면 일본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채워 나갈 것인가, 풍부하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 맞대고 안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 투자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 조세정책과 시장가격에 대한 논쟁도 있어서 짧게 이 부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조세정책이 정부의 시장가격, 일반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은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조세는 그 자체로서의 중립성 또 효율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된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어떤 상품의 효율성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너무 많이 작동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에 대해서 특정 상품에만 택스 인센티브를, 혜택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게 실제 그 상품에 경쟁력도 없는데 그것을 오히려 원조시킨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판단,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제가 자본,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 그게 효과적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시장가격, 세금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올리는 것을 세금으로 풀 수 있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정책에서는 좀 더 서로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물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는 그 맥락 속에서 분산투자를 장려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세제정책은 앞으로 계속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용을 손익 계산할 때 좀 반영하는 구조라든지 또는 각종 투자상품의 손익을 하나로 처리해서 어떤 상품은 이득을 보고 어떤 상품은 손해를 보면, 특정 A주식은 손해 보고 B주식은 이득을 보면 그 잔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과거에 손실 봤던 것 미래에 이득 봤던 것 함께 계산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그 거래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이익 계산할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분산투자 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그 방식 중의 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금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갖고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조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또는 그렇게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화,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머니 무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다 동의하고 있을 주제이고 또 전문가들이나 또는 현업에 있는 분들 다 공감하는 주제라고 봅니다.

머니 무브를 위해서 부동산 중심의 생각을 좀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자, 그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들을 서로가 다양하게, 풍부하게 논의하고 또 어떤 흐름을, 기조를 형성하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내지는 현재 우리의 자본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 첫 출발점이 후진적 지배구조, 특정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속에서 시장의 불신을 쌓고 있는 것,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 결정점에 거수기 이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꿔야 된다.

그 상법 개정은 지난번 1-1, 이번의 1-2, 1차 상법 개정 다섯 가지가 한 패키지다. 그리고 그 취지에서 이번 집중투표제나 그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선진화 또는 밸류업, 용어가 뭐든지 간에 그런 문제의식은 국민의힘만의 문제의식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의제도 아니다. 실은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풀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 주장과 그 요구 속에서 윤석열 정부 때도 밸류업 정책을 고민했던 거고 그 밸류업 중심에 일부 세법의 문제나 일부 좀 독특한 조항을 빼고 많은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이해 나갈 주제인 거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다.

충실의무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했었던 거고 그리고 자사주 문제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24년 금융위에서 자사주에 대한 부분적 개선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 또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또 자사주 관련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그 의제가 민주당이 갑자기 제기하는 의제가 아니다. 실제 여야 상관없이 고민했던 의제고 그 의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가 멈췄던 거고 멈췄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불신이 쌓인 거고 그래서 '한국의 자본시장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냉소와 또는 혐오 내지는, 하여간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내려고, 신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몇 달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가야 될 주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시 봐 주십사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도개선의 과정들은 계속돼야 된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쭉 열거해서 한번 화면을 보신 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인프라 개선이라 해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하자 그래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유사 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그다음에 투자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또 ISA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또 다양한 거래시스템 구축 그리고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확립한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해서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자사주 개선, M&A 제도 개선, 배당 절차 개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그다음 밸류업 지원 방안 추진.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을 혁신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로 인해서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이 표현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주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대부분이 공감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로만 하고 멈춰 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신이 쌓였던 거고, 2014년도에 일본은 이토 보고서를 통해서 10년 동안 일관되게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서 니케이지수가 3배가 됐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횡보해 왔고 중간에 약간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심각하게 반성과 함께 이후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의 자료 중에서 보면 코스피 2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그리고 3000을 돌파한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5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2500에서, 내란 직전의 6개월 평균이 2600~2700 사이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100~200 올라간 거지요, 코스피 지수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이 필요하고 박스피라고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돌파를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신뢰를 얻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그중에서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회를 변화하자 하면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임원 자격제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공평한, 서로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자 해서 의무공개매수제한 개선, 그다음에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자회사·상장회사 동시 상장할 경우에 자회사에 이 관련돼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함,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표결 제도를 바꾼 것, 그다음에 특수관계인과 주요 내부자거래에 대해서 주주승인제를 도입하는 것 또는 보수심의제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과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자. 실제 이 주장은 이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자,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자, 주주총회 절차를 개선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하자. 또 하나는 중복 상장 관련해서 규율을 하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좀 더 절차를 보완하자, ESG 경영을 혁신하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것도 정부 차원에서 TF를 꾸려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회사의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바꾸는 거지만 이후의 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하는데 서로가 이미 논의됐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무위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자사주 문제와 관련돼서도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면서 이유가 좀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는 제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일본처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 또 금융위와 거래소가 함께 공시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공시의 내용들도 변화시켜서 풍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본시장의 구조를 보완하는 변화 등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고민을 하셨던 주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제지만 지금 특정 일부 단체의 목소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결단할 때는 함께해 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

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영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빠진 게 있었는데 조금만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나 상법 개정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회사의 경영권을 침탈한다,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대부분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한국만의 고유한 표현인 거고 경영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그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회사의 주주들 속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서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건데 누가 의결권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경영진이 되기도 하고 또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현 경영진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게 강하게 있는 거고 현 경영진을 임명했던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든 최대주주든 그 지배권을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지배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만들다 보면 그게 좀 어느 순간에 회사법의 기본 내용을 다 무시해 버리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됩니다.

그 회사의 특정 지배주주가 현 경영진을 만들었는데 그 현 경영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침탈하는 것은 다 부적절한 것이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현재 회사법이나 다른 나라 회사법이나 선진국의 회사법은 특정 경영진이 특정 주주의 지지를 받아서 이사회 다수파가 됐다 할지라도 일을 잘 못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못 했고 또 부당한 어떤 불법행위나 뭔가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묻는 게 현재 회사법상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 표결을 통해서 그런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경영진의 변화를 꾀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일반주주들이 서로가 소통하면서 다수파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적대적 M&A가 들어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대적 M&A를 무조건 허용할 거냐 문제는 별개의 이슈지만.

지금 경영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경영권은 특정 집안에서 특정인들이 계속 만고불변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 선택지가 너무 좁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 그 지점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할 때도 그 시각 갖고 이야기하면 결국 봉건제 하자는 건데 그 시각은 아닌 우리가 현재 상법의 기본적 취지, 1주 1의결권 그리고 주주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고 뭔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부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그런 식의 인식 전환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대부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차 상법 개정한 겁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로가 논의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급하게

할 거는 아니지만 서로 같이 논의를 좀 풀었으면 하고 거기에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냉소가 여전히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올해 4월 9일 주가가 2290이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저치였지요. 그러고 나서 6월 2일 대통령선거 직전에 약 2650 만회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내란 전 수준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650, 2700 했다가 3200까지 해서 500이 올랐습니다. 한 두 달 사이에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오른 거지요.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선진화되고 있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래서 여전히 냉소가 있다가 호기심 또는 여전히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등등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지점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은……

○부의장 주호영 의석의 의원님들, 이야기가 다 들려요. 조금 목소리를 낮춰 주세요.

○오기형 의원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은 여전히 한두 번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논쟁을 통해서 잠시 소강상태이기도 하고 또 일관되게 가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1-2,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은 일관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또 한번 보여 주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5년 이상 일관되게 계속해서 풀어 가야 될 그런 의제이고 그 과정 속에 다음 제도개선과 그리고 시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주호영 오기형 의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배숙)

(14시28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 의원님,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조배숙 의원 왜요?

○부의장 주호영 뒤의 분에게 혹시 예상을 알려서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배숙 의원 글쎄요, 한 3시간……

○부의장 주호영 한 3시간 정도?

○조배숙 의원 3시간 내지 4시간.

○부의장 주호영 3시간 내지 4시간.

민주당 다음 하실 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하시겠답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의 입법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지 국민께 묻습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토론과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 입법 독재입니다. 소수 야당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아 보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부디 저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악법 통과의 실상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훗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그렇게 기업계와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옥죄는 법입니다. 미국은 투자를 유치하는 외국 기업에 과감한 보조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규제만 더 강해진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의 가속으로 돌아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국회는 법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일자리의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논의와 절차적 검토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자본시장 질서까지 파급력을 미치는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지금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법률 개정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후의 질서이고 신중해야 할 공동체적 약속입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수행하도록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 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있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합의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논란의 소지가 크고 그 파급효과가 넓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그리고 또 추가 논의를 거쳐서 추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보다는 숙의와 공론을 우선시하자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최소한 책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정문 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2차 상법 개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경제계, 법조계, 심지어 일부 진보적 학자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1차 개정안의 효과조차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입법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속도전이 아닌 신중함을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이 단

지 중간 과정 없는 표결의 결과물로만 전락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법률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 종료를 선언한 15% 미국 관세,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금리상승과 고환율, 소비 위축과 청년 고용위기, 이런 많은 도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경영권의 방어 수단을 봉쇄하며 이사에게 모호한 총주주의 이익보호의 무를 지우는 방식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며 투기자본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입니다. 기업과 주주, 근로자와 소비자, 정부와 시민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조화가 아닌 분열의 법입니다. 특정 주체의 이익을 앞세우며 다른 주체에게는 책임과 규제만을 강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1차 개정안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차 개정안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실제로 주주 권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소송이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다시 손보자고 말하는 것은 무모한 조정, 무분별한 개정, 무책임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소위에서 일곱 번 논의했고 공청회도 두 번 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심층적 토론, 시뮬레이션은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여야는 분명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추후 처리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국민의힘은 줄곧 시장과 법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이 일부 재벌이나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코스닥 상장사, 혁신스타트업 등이 이 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점점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잃고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행동주의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일부 사들인 뒤에 주주권을 이용해서 경영에 개입하거나 기업 구조를 바꾸려는 투자자입니다. 겉으로는 주주 가치 제

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제안, 인수합병 반대, 고배당 요구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의 행동주의펀드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는 과거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PPT를 보시겠지만 칼 아이칸과 KT&G 사건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KT&G 지분 6.59%를 사들인 후에 이사회에 본인 측근을 들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자산 매각, 자사주 소각,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별도 상장,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T&G는 이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조 8000억 원을 썼습니다. 반면 칼 아이칸은 단 9개월 만에 주식 차익, 배당금으로 1482억 원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국민의 대표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에 돈 뜯기고 떠나보낸 셈입니다.

두 번째, 엘리엇과 현대차 그룹입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차는 그룹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일부 부분을 분할한 후에 글로비스와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펀드 엘리엇은 주주에게 불리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현대차는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엇은 현대차와 수소차 분야 글로벌 경쟁사인 밸러드 사의 CEO와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의 CTO까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내 전략산업의 핵심 정보가 외부로 흘러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사 선임은 무산됐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결국 엘리엇은 2020년 초 지분을 모두 팔고 철수했는데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KCGI와 DB하이텍 문제입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부문과 제조 부문을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행동주의펀드 KCGI가 등장해서 지분 7% 확보하고 물적분할 반대를 외쳤습니다. 소액주주들도 KCGI 편에 서자 회사는 분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KCGI는 보유 지분을 시가보다 12% 비싼 가격에 대주주 측에 팔고 먹튀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남은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4번 PT 보시겠습니다.

FCP와 KT&G입니다. 싱가포르계 펀드 FCP는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분리를 시도하면서 인삼공사의 대표이사로 외부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인사는 LG생활건강 부회장이었고 인삼공사 전체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100억이라는 과도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KT&G 사외이사로 자기 측 인사를 추천했고 급기야 1조 9000억 원에 인삼공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는 기업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기업 간 다툼이 아닙니다. 행동주의펀드는 단기 이익만 추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장기 투자가 줄어들고 R&D 예산이 경영권 방어에 소진되고 주가 하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봅

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이 외국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상법으로 기업을 보호하던 시기조차 이 정도인데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말 그대로 행동주의펀드의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기업을 옥죄어서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에 던져 주고 대주주의 기준을 높여서 국내 주식시장을 망치는 것이 개혁입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10억이면 대주주입니까? 서울 아파트도 못 사는 기준으로 국민 등골을 뀎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사지 못하는 금액을 두고 대주주 운운하면서 양도차익의 20 내지 2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조세 폭거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규정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입으로만 주식시장을 외치고 여당은 뒤에서 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입니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민주당은 기업 감시라는 미명 아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고 국내 기업을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일련의 입법 및 세제 행보는 국민 경제의 활력, 투자심리, 기업 환경을 모두 훼손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투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건전한 주식투자 문화를 무너뜨리고 경영권의 기본 방어장치마저 해체하는 지금의 정책 흐름은 대한민국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을 옥죄는 일은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국제 교역 질서도 허물어져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전면 발효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허무는 역사적 변화이고 모든 국가에게 무역 흑자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출되던 자동차, 철강, 가전 등 한국 주력 산업에는 이제 최대 15 내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철강사를 인수해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었지만 우리는 아직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대가로 고율 관세를 일부 유예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관세를 돈으로 사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는 관세의 15%를 선방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한미 FTA 체제 아래서 0% 관세였던 기존 상태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15% 상승한 것이며 사실상 13년간 쌓아 온 FTA의 혜택을 한순간에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좌파 진영에서조차 당시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한미 FTA를 반대하던 이들이 '한미 FTA가 좋은 거였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시대의 혜택에 기대서 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무역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로는 트럼프식 보호무역, 내부로는 상법 개정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철강, 반도체, K-식품 등 전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해외 생산 이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통한 대응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4%, 2025년 1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률은 6.0%입니다. 관세가 15% 적용되면 수출분의 이익률은 관세 부담만큼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보다 더 큰 비용 부담이 돼서 수출만 고려하면 적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진정 민생과 경제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조화롭게 키우는 길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명분과 보여주기식 개정에 그치는지.

이 개정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다시 열고 산업계와 학계, 투자자, 소액주주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법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단기적인 법이 아닙니다. 1년, 10년,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입법해야 될 국가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통상 전략, 산업구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갈등과 속도의 정치를 멈추고 경청과 설득의 정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입법이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입법 신중 그리고 민주적 숙의가 회복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명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진에 대한 견제,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그 실행 방식이 과연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신중했는가입니다.

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한결같이 총주주의 이익을 이사가 충실히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 속에는 중대한 법적·현실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총주주 이익이라는 개념,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인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 기업의 주주 구성은 단순히 대주주, 소액주주로 양분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 외국인 자본, 연기금, 소액투자자, 전략적 주주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때로는 정면으로 상충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결정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이익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 엘리엇 사태에서 우리는 그 복잡성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진정 소액주주 보호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엘리엇 자신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고 그 후에 소송을 통해서 수천억 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경영권은 흔들렸고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외피를 두른 외국계 투기자본의 주주권 강화가 정당한가? 또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판단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법제화될 경우 기업 경영은 소송에 시달리는 구조로 전락하지 않을까?

물론 어떤 법률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입법의 실패이자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바로 그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누구 이익인지 판단도 어렵고 그런데 그 책임을 오롯이 이사에게 지우는 구조는 경영 자체를 회피하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차 개정안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1차 개정안을 전제로 합니다.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당시 시장 영향과 실행 결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에 그 후속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여야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공청회를 거쳐서 추후에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약속을 뒤집고 후속 조항까지 함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차 개정안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의 시행된 결과가 제대로 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입법 자세가 아닙니다.

또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기업은 신중한 대응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니라 시행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 보완입니다. 입법을 마치 일방향성 규제처럼 던지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해칩니다.

주주 충실의무의 법제화는 단기 투자자나 소수 투자자에게까지 이사의 법적 책임을 확대해서 경영 자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또 주주 이익이라는 개념이 법적 다툼의 기준이 되면 향후 수많은 민사·형사 분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면 경영자의 판단 여지는 축소되고 대형 로펌과 외국계 펀드가 법률을 무기로 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경고들을 무시합니까? 왜 충분한 토론과 그 실증 분석도 없이 이 중요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첫째, 입법은 실증과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개정안도 시행 전이므로 결과를 지켜본 뒤에 보완 입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은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와 주주, 대주주와 소액주주,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균형 없는 법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입법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졸속 추진은 법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와 중소기업의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시장 안정과 기업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입법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상법 개정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두고 있고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때는 이사가 스스로 판단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면서 외부 감시 강화는 추진하되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 공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주주총회 관련 제도는 사적 자치와 정관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감사위원 선임도 상장 여부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기업 경영의 법적 규율이 가장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법을 추가로 개정한다는 것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모든 갈등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법이 시장의 질서를 망치고 기업의 숨통을 죄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더 센 규제를 만드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질서를 설계하는 법입니다. 소액주주 보호, 기업 투명성 강화, 독립적 감사제도 모두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법자의 명분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법보다 신뢰가 앞서야 하는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개정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명분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양하되 절차는 정당해야 합니다.

지난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기업 경영 자율성 위축, 소송 남발 우려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현장의 기업들도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점검해야 될 시점에 민주당은 오히려 그 위에 더 강력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키운 채 그 위에 또 다른 규제를 쌓는 방식은 기업과 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1차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먼저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사항들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법 제382조의3, 다음과 같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겉보기에는 참 공정한 조항입니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말은 시민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의로, 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행 가능한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경제법·회사법 영역에서는 법적 명확성, 법 해석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바로 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개정 전에도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차 개정 법률안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항상 일치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거나 환경,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단기 수익을 희생할 경우에 일부 단기 투자자는 즉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가 주주 이익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경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1차 개정 법률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매우 추상적이고 법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총주주는 누구입니까? 외국인 투자자, 기관, 개인, 연기금, 전략적 투자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항상 같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립됩니다. 결국 이사는 어떤 판단을 해도 소송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컨대 A 상장회사가 장기적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단기 배당을 줄였습니다. 단기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총주주의 이익을 해쳤다며 소송을 걸 경우에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프론티어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은 이론적·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역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시 경영 판단 위축과 소송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가 개정안에 대해 주주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법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도 이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배임·횡령 책임,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모호한 총주주의 이익보호의무까지 얹히게 되면 이사의 책임 범위는 무한대로 확대됩니다.

대한변협 기업법연구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충실의무는 본질적으로 충돌의 문제다. 이익집단 간 조정은 입법자가 할 일이지 이사의 법적 의무로 설정하면 안 된다. 책임은 커지지만 기준은 모호해져 회사의 전략적 판단은 왜곡되고 이사의 역할

은 방어적으로 축소된다'. 결국 경영진은 안전한 길만 선택하게 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빠른 결단, 전략적 리스크 감수, 구조조정이나 합병·분할 같은 결정은 꺼리게 됩니다. 이사의 기능이 약화되면 기업은 혁신을 멈추고 외부 법률 검토에 의존한 경직된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이 조항은 단지 대기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견기업, 상장 초기 스타트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업자는 대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CEO입니다. 이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소액주주를 유치할 경우 본인의 경영 결정이 나중에 총주주의 이익 침해로 평가받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비스타트업이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외부 펀드 유치를 결정했지만 일부 초기 투자자가 희석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CEO는 경영상 판단으로 결정했지만 후일 그 투자자가 총주주의 이익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기준은 모호하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결국 창업자가와 중소기업은 이 조항을 투자 유치의 방해 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을 장려해야 할 상법이 도리어 위축을 유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상법, 자본시장법, 배임죄 판단 등은 모두 회사의 이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개정 법률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장하며 기존 법체계와 해석 충돌을 일으킬 여지를 남깁니다. 배임죄 해석은 이익 침해를 회사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까지 요구하면 일부 주주 이익만 침해해도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서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충실의무 개념과 상충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이사는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 법률의무로 부여하는 모호한 개념인 총주주 이익을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법에 명문화할 경우 위험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기업에게는 경영 판단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투자자에게는 경영진을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사법부에게는 불확실한 해석 권한을 너희가 가져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소송, 더 많은 위축, 더 많은 불확실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법은 기업에 혁신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항은 책임만 강화하고 신뢰는 제거하며 혁신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개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위험한 시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상법은 시장의 언어를 따라야 합니다. 명확해야 하며 책임은 정의로워야 하고 규범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이 조항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법률에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공정성과 감시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제시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을 간과한 단견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 이사의 명칭 변경과 비율 상향 조항이 어떤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개정 전 상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적 시각을 통해서 경영의 균형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개정법률은 이러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령상 용어는 그 자체가 제도의 정신과 의무, 기대 역할을 규정합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사외이사에게 절대적 중립성과 완전한 경영 독립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 주주, 경영진, 대주주로부터 모두 떨어져 있는 자로서의 역할이 암묵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기업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현 경영진 또는 대주주에 의해 추천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됩니다. 그들은 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대부분 비상근 형태로 활동합니다. 연간 수회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자료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업의 경영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그들이 현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이사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 투자자, 주주에게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왜 독립된 결정을 못 했느냐, 왜 경영진 편을 들었느냐는 비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책임만 커지고 실질적 통제 능력은 제한된 채 명칭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이사회 본질적 기능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순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전략과 정책, 예산과 인사, 리스크 관리 등 광범위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보 공유와 상호 신뢰, 전략적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독립이라는 개념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이사 개개인이 책임지는 대신에 거리를 두고 방관하는 구조로 흘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독립적이었다는 항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협업과 소통의 기능은 약화되고 이사회는 책임 회피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율 상향 문제입니다.

1차 개정법률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독립이사의 비율을 현행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명확한 수치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먼저 비율을 강제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규모, 업종, 경영 방식이 다르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외부 인사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업 특성을 이해하며 비상근으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수치를 적용하면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부 인사를 형식적으로 선임하거나 명목상의 참여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사회라는 이름 아래 앉아 있는 이사 수는 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도는 줄어들고 오히려 의사결정의 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은 비상근 인사라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는 대부분 상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경영 실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부 자료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경영진의 해석을 참고하지 않고는 정보를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이사들이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면 경영진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외부 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복잡한 투자 결정은 이사회 안건에 올리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의결로만 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국내 여러 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전략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이사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거나 회피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주도한 사안이 실패했을 때 나는 외부인이라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몇몇 대기업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리스크 평가 실패, 내부통제 부실 사태 당시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 사외이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사회적 비판을 피해 갔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지고 사외이사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면책용 방패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제도를 법률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 경영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로 조정하고 내부이사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 규정은 감사·보상·지명위원회 등에 독립이사를 두도록 권고하지만 전체 이사 수나 비율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컴퍼니 코드 수준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며 강제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 책임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며 경영진과 이사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실질적 협력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처럼 명칭도 강제하고 비율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실효성보다는 형식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는 이사회라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단순한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경직된 구조와 책임회피 문화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 구성과 운영은 기업의 경쟁력, 생존, 투자 결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 이사회가 단순히 비율과 명칭으로 규정된다면 그것은 법률이 현실을 통제하겠다는 착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사 제도의 실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이름 바꾸기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이사후보의 자격, 이사회의 책임 구조, 정보 접근성, 사후평가시스템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칭은 역할을 대변해야 하고 비율

은 책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 개정법률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비율 상향은 실질적 경영책임 강화에도,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이사회의 의미를 형해화하고 책임회피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시 한번 철저한 공청회와 현장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기고 책임과 실효성은 잃는 것이 아닌가, 답은 분명합니다. 이 조항은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 가야 하며 기업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수정·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명성 제고이자 실효성 있는 개혁입니다.

또 1차 개정법률 중에서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실무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또는 전산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주주총회를 전자적으로 개최하고 주주의 출석, 발언·의결권 행사 등을 모두 전자플랫폼상에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처음 들으면 왠지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주주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헌법적 공간이며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법상 필수 절차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절차를 오직 전자적 방식으로만 제한하고,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한다는 것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기술적·물리적 준비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입니다.

전자주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기반의 보안시스템, 영상회의 플랫폼, 주주 인증 등 실명 확인체계, 실시간 투표와 반영 시스템, 불시 상황에 대한 백업 절차까지 마련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단위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중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 또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아주 매우 고도화된 설비와 인력이 요구되는 고비용·고위험 구조입니다.

현재 전자주총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일부 대기업조차도 여전히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플랫폼 접속 오류, 실시간 의사표시 반영의 지연, 질의응답 시스템의 부실함, 인증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총회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로써 의무화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 현실을 무시한 매우 무리한 강제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 분쟁 위험의 폭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총에서 의결 무효 소송, 주주권 침해 소송 등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자주총은 기존 대면 총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먹통이었다, 인증 메일 받지 못했다, 버그로 인

해 투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주주총회의 정당성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기업이 아니라 외주 플랫폼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소송 책임으로부터 결코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제도는 정보격차와 참여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전자플랫폼은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제공된다는 명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기관투자자와 젊은 주주들은 시스템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고령자, 정보소외계층, 해외 거주 주주들은 플랫폼 접속 자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의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인증서 발급, 화상 플랫폼 사용,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식은 열려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배제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넷째,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과 진정성 있는 토론 구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단순히 찬반 투표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영진은 연간 실적을 보고하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며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전자주총에서는 주로 사전에 준비된 영상을 송출하거나 시스템상 시간 제한 때문에 발언 기회가 제한되기 일쑤입니다. 질문 접수도 대부분 사전 제출 방식이고 실시간 반론이나 재질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의사결정이 대화보다는 일방적 전달로 왜곡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비판이나 요구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기술적 방패막이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사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현재도 많은 상장사가 전자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참여의 질과 정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지만 법적 의무는 없으며 모든 기업의…… 주로 기업의 자율에 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자율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주주총회는 선택사항이지 강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섯째,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론화나 실증적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만으로도 주주 참여 확대는 가능하며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중견기업에 있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인 쪽에서는 '팬데믹 때도 했는데 왜 못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에는 특수한 상황 아래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법률로 영구적 강제를 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곱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기업의 법적 책임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만약 총회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회사의 책임인지 통신사의 문제인지 사용자의 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는 대

부분 기업이 전체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총회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총회를 최소한으로 열고 안건도 최소화하며 외부 질문은 최소화하고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회 형식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투명성과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율이라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경영 방식은 산업별·기업별·조직구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상법은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서 기본틀만 제공하고 세부 운영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전자주총은 장려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가 되어야지 경영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주총 의무화 조항은 과감히 철회되어야 하며 기업과 주주의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충분한 시범 운영과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뒤에야 제도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입법신중주의이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길임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 특히 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1차 개정법률로 확대된 3% 룰과 이에 터 잡아 2차 개정안에서 확대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입니다. 이 조항은 그 취지가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만으로 지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무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3%로 제한하는 구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1차 개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3% 룰을 개별이 아닌 합산시켜서 최대주주의 영향력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번 제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그 틈새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라는 기구의 성격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단순히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를 감시하고 필요한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보유한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대해 최대주주의 선임 권한을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함께 묶어서 3%로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현실을 보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53.2%로 나타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대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높고 하위 그룹이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평균

칠팔 명 내외이고 그중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은 이사들 중에서 선임되고 상장회사는 통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감사위원들 중 최소 2명을 별도로 선출하게 되고 그 선출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여전히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주주는 대체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이며 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외부의 단기 이익을 노리는 주체들이 기업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계 펀드 엘리엇은 국내 유수 대기업의 주총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한 바 있고 그 후보자는 경쟁사의 전직 고위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되었다면 기업의 내부 전략, 기술 정보, 인수합병 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도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경제계의 우려는 명확합니다.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요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룰 통일 적용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주도권을 대주주가 아니라 외부 세력이 쥐게 된다, 기업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반응이 팽배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주주 간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감사위원 후보를 두고 소액주주, 외국계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합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들은 단기 성과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투자, 기술개발, ESG 경영 등 중장기적 관점의 의사 결정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 룰 적용 기업에서 외부 연합세력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들이 기업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경영진과의 갈등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을 위축시키고 기업 운영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은 상장 유지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강화되자 독일, 이탈리아 등의 다수 중견기업이 상장 폐지를 선택했고 미국 테슬라조차도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상장 자회사 수를 줄이고 있는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배권 불안, 과도한 외부 견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3% 룰은 흔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출이 선택 사항이며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 제한은 없습니다. 일본, 독일 등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이사 비중을 통해 견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

적입니다. 결국 1·2차 상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한국 기업 특성과 주주 구성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제도적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이 제도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소액주주나 연기금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부분은 외국계 투기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가 이 구조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이나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는 무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러 분석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생명줄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 선임 절차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룰을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다수 분리선출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입법은 명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 현장과 전문가, 투자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즉시 충분한 공론화와 시범 운영을 거쳐 언제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입법자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중 특히 기업 경영의 핵심을 정면으로 뒤흔들 수 있는 조항 중의 하나가 바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집중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다수 후보를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임의조항으로 도입되어 왔고 현재도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에 따라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과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다수 이사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권리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전문 경영인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무력화되고 이사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행동주의펀드들이 소액주주 연합을 통해 집중투표를 무기로 경영권에 개입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사에 강제하게 되면 경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고 전략적 결정이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 주가 변동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중투표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제가 아닌 기업 자율적 선택에 따른 임의규정입니다. 기업들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상장사 대부분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중투표제가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런 기존의 선택권을 삭제하고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기업의 이사회 구성 권한과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행동주의펀드 활동입니다. 행동주의펀드는 다수의 소액주주를 조직적으로 결집시켜서 집중투표제 구조를 활용하여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핵심 의사결정을 무산시킵니다. 이들의 전략은 종종 기업의 장기적 비전과는 상충되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투표제가 강제된다면 향후 더 많은 중견기업들까지 유사한 방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외부 이해관계자가 소액주주라는 명분만으로 이사회에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기존 주주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내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투표제는 그 자체가 민주적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강제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 설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헌법적 권리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법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경영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법률로 강제하게 되면 기업은 더 이상 이사회 구성 방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곧 기업의 기본적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획일적 강제는 기업의 성격과 규모,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과잉 입법입니다. 대기업이나 지주회사는 이사 수가 많고 의결권 분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가족경영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면 오히려 외부인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만 높아지고 경영의 연속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인 이사 중 1인만 외부 이사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그 1인은 경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사 및 투자 결정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 내부정보 유출이나 비공식적 거래의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통로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구조에서는 이사회의 책임 구조도 왜곡됩니다. 외부 소액주주의 집중 지지로 선임된 이사는 특정 세력의 이익만 대변할 가능성이 크고 이사회 전체적 책무인 회사와 주주의 이익 대변이라는 본질적 역할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사 개개인의 정치와 이사회 내 파벌 형성,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연방법령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주의 선택,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일부 주에서는 정관 변경이나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두고 있으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 비율도 낮습니다. 영국, 독일은 아예 이사회 구성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집중투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영권 규제 국가가 되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선으로 포장된 위험한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영권 불안정, 책임 회피, 이사회 분열,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국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창업주 또는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은 창업자와 오너십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단기적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경영자는 지속적으로 외부 세력의 정치적·재무적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개발과 인재 투자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는 흔들리고 근로자와 소비자,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사회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까? 기업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주는 단지 지분 비율로서 존재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나눌 동반자입니까?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자유, 자본시장의 신뢰,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단 몇 줄짜리 법 조항으로 뒤흔들 수 없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강제하는 입법이 아니라 권장과 지원이라는 보완적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자율 도입 방식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그 대상은 현실이어야 합니다. 국민 경제의 핵심인 기업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은 분명 국내 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인지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선진 자본시장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과 지배구조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나 과잉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감시와 법적 책임, 자율 규범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으로부터 비율 강제와 감사위원 선임 제한, 집중투표제 강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조항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국

가가 기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어느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강제하는 비대칭적 모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주가 별도의 회사법을 갖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입니다. 이 법은 기업 친화적 구조를 지향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주주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유연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은 이사회 구성, 감사 선임, 독립성 확보 등의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 규율을 두지 않고 기업 정관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모범규준으로 운영되고 집중투표제 역시 연방증권법의 일부로 도입될 수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기업 주주들이 자체적으로 정관에서 선택합니다. 즉 미국은 주주 보호를 이유로 기업 운영의 세세한 구조에까지 입법자가 개입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책임지되 공시와 소송을 통해 감시받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회사법은 기업이 세 가지 지배구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 감사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또 일본 금융청은 지배구조 코드,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모범규준 형태의 권고를 제시할 뿐 강제규정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제도와 관련해 일본은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단수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이사 역시 일정한 수를 권고할 뿐 비율 강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회사법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감사위원회의 구성, 주총제도에 대해 모두 의무규정이 아니라 컴플라이(comply) 또는 익스플레인(explain) 원칙에 따릅니다. 즉 기업이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아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만 하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모든 기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상장기업의 정보 공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감사의 형태, 독립성,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 중심으로 유도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지배구조 설계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들 국가는 법으로 일률적인 구조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의 산업환경, 주주 구성, 지배구조 성숙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경영·감사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둡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회피를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전제로 한 책임 강화, 시장과 주주의 감시를 전제로 한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이 분명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과연 이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판단과 유연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인가. 현재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도 그 독립성의 실질은 보장하지 않고 일정 비율 이상을 강제하면서도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제한하면서도 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의무화하면서 기업 내·외부 환경에 따른 선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 구조는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국가가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현대기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외면한 법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존재합니다. 가족경영, 창업자 중심의 중견기업, 벤처기업, 전문경영인 체제, 외국자본 주도기업 등 각기 다른 현실에 하나의 지배구조 모델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개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나친 형식적 책임만을 확대하여 오히려 실질적 책임 회피 구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분명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주권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과잉 입법이나 획일적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률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모두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기업을 경직시키고 시장을 위축시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해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이 모두 택하고 있는 공통된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연성과 실질 중심의 제도 운영입니다. 즉 정답을 하나로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해답을 기업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상법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국제적 흐름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단지 규제를 강화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획일적 강제,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개입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과 기업의 창의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의 흐름을 외면한 채 과잉 규제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형 법제도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나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받는 제도와 실질적인 자율성입니다.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은 그런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조정하고 다시 논의하고 현실과 국제기준을 함께 반영하는 더 나은 상법 개정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상법 개정안의 여러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기업이 운영되고 사람들이 일하고 국가경제가 돌아가는 그곳에서 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많은 우려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률적이고 과잉 개입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시장 기능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의 파급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정서적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 경영 현실에 기반한 응답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대주주의 정당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외국계 단기 투자 세력이 기업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하기는커녕 제도의 허점을 통해 특정 세력이 이사회 구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상법상 임의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상장기업은 이를 도입해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상장사에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 주주 구성과 상장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집중투표제는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단기 이익 추구가 장기적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는 자율적 채택 대상이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에서도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서조차 의무규정으로 채택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만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투명성 강화나 주주 접근성 확대라는 긍정적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T 인프라와 전산 보안 운영비

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및 보안 관리는 대부분 외부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고정비 지출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상근 직원 수가 제한된 중소기업에서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위탁운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한 표준화나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화는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지방 소재 중견기업들은 전자시스템보다는 오프라인 회의를 선호하거나 자체 보안 사정상 외부 IT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룰 확대 역시 심각한 쟁점입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일부로서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제도의 설계상 3% 룰이 확대되면 소액주주 또는 외국계 자본이 경영과 감사 기능을 동시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ESG기준원조차도 3% 룰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중립적 인사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제도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이사회는 비상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명목상의 견제 기능만을 유지하게 되며 실제 의사결정은 내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도적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교해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은 무리함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사외이사 수나 선출 방식에 대해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각 기업의 정관 자율에 따른 경영체계 구성을 중시합니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통해 집행부와 감독부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주주 그룹의 지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역행합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적 형평성과 균형보다는 규범적 이상주의에 기반한 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칫 시장 생태계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오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상을 향해 가야 하지만 반드시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전 세계 경제계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상법은 단지 주주 보호나 형식적 지배구조를 넘어서 국가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규범입니다. 제도 변화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멈추게 하고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제계와 전문가,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충분히 경청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이사회 구성 방식이나 의결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투자전략, 산업구조의 역동성, 더 나아가 일자리와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는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파급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허울 좋은 기업 규제 또는 투명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과 경영 리스크 확대입니다.

기업은 매일 수많은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투자, 인수합병, 구조조정,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에 있어 형식적 견제장치를 확대하면서 실질적 판단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비율 상향 등의 조항은 모두 이사회의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키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전략에 외부 변수의 개입 여지를 확대시킵니다. 이는 곧 의사결정 리스크를 높이고 기업이 전략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술 기반의 고속성장 모델을 요구받는 스타트업, 중견기업,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기업에 있어 의사결정의 경직성과 시간 소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 지연과 자본시장 위축 가능성입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단지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과 제도의 일관성, 특히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는 사실상 이사회 과반 구성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전문성과 정보력이 부족한 외부 인사나 투기적 소액주주가 핵심 전략 논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 전략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의 산업에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 결정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사회 장악 구조가 불안정해지면 단순히 의사결정 지연이 아니라 투자 요구, 해외 이전이라는 탈한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줄곧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 개정이 아니라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시그널로 작동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내 대기업조차 지배구조 방어에 몰두해야 하는 시장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장기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증가하며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반영하게 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역량 저하 및 청년 고용 위축입니다.

이 법률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직접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총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그 여파는 고용시장과 청년일자리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성장은 고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유지 혹은 축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신사업 부문, 해외법인 등 장기 성과 중심 부서에서는 이사회의 리스크에 따라서 신규 인력 충원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불안정한 경영권 구조와 지배구조 규제가 과도하게 설계되면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단기계약직, 외

주 중심의 고용 형태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법 개정이 단지 이사회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 미래의 커리어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고용법적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회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제2차 상법 개정안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청년들은 이 법안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중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청년의 시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소속 청년인데요. 이운찬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들은 제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는 활력을 꺾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입니다. 이 제도들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와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여 기업의 활력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그물을 촘촘하게 짜고 외부 투기세력이 손쉽게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기업들은 본질적인 경영활동보다 방어와 규제 준수에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청년의 미래는 규제가 아닌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규제를 통한 분배보다 성장을 통한 기회를 더 원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혁신할 때 창출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취업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흔들리고 외부 공격에 취약해진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 신기술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자유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업의 경영권을 법으로 위협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곧 해외자본의 이탈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기업과 투자를 보면서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청년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회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활력을 꺾고 투자 위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분법적인 이념적 논쟁을 멈추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구구절절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글로벌 기업환경과의 괴리 심화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파트너와 합작, 공동 투자, 기술제휴 등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신뢰 기반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파트너사나 투자자는 상대방 기업의 의사결정체계가 예측가능하고 일관되어야만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가 해외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반경영자 중심적 또는 투기적 소액주주 우대정책처럼 비칠 경우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 자체를 꺼리지 않겠습니까?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업 입법이 경영권 방어를 지나치게 제약하며 장기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별 파급효과의 비대칭성입니다.

현행 개정안은 일정 매출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견·중소 상장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코넥스 기업의 상당수는 임원 수가 3명에서 5명 사이에 불과하고 사정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5년 7월 공식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상장기업의 약 60%가 중견·중소기업이며 자율적 조정 여지가 없는 일률적 제도 도입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동일한 법률이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의 이면입니다.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제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의 명분이 있지만 현행 제도에도 소액주주 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제안권 확대,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등을 통해서 주주 참여와 감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왔습니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표준 자문 권고안을 따라 대규모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이 장기 계획보다 단기 성과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ESG 자문기관의 권고에 따라 일부 외국계의 대형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을 행사하는 구조는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압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전문지 및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간접 사례는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글로벌 투자 인식과의 괴리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지 국내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자본시장에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금융 및 자본시장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대와 투자자 권익 보호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배구조 규제가 획일적으로 강화될 경우 기업경영 자율성이 위축되고 시장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상시적인 제도 변경이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존재할 경우 중장기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연구자들도 시장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입법은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일부 외신과 기관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배구조는 개정 빈도가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대한 간접적 영향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 고용과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획일적 규제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중견·중소기업에게는 규제 적응 부담이 커지고 이는 투자 유무 및 사업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은 투자 프리미엄을 고려해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에서 신규사업을 보류하거나 외주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며 여기에 맞춰 각국은 규제샌드박스, 입법예고제 정비, 산업규제 정비, 종합계획 등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 개정안은 그런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기업의 자율경영은 축소되고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은 저하되며 제도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정밀한 설계와 충분한 시장 검토를 거친 합리적 법 제도의 정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진정한 책무이고 우리 모두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상법 개정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소액주주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기업 감시 강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명분이 과연 현재 상정된 법안의 방식으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경제단체는 현재의 개정안이 오히려 주주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축시키며 실질적 투명성보다는 형식적 제약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 확대 등의 조항은 실제 기업

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보다 실효적이고 균형 잡힌 지배구조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현행 개정안의 일괄적 규제 도입 기조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 11월 15일 김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구자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시된 선택지들이라는 점입니다.

두 의원님의 안은 상법 개정 논의의 다양성과 현실성을 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된 2차 개정안인 이정문 의원안에는 이들 대안들이 일부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검토할 때 원래 이것도 논점이 같으므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의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그저 이정문 의원안만 올라온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 있는 반대를 위해 저는 열 가지 검토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현실적인 제안과 제안 조건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에서 제시된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계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게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미국, 일본 등지 이사회의 유연한 경영권 보호수단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본이 과도하게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고 지배주주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제도는 자칫 잘못 설계되거나 남용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경영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부가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행 대상자와 내용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것. 다음으로 특정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는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끝으로 모든 정보는 공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 이는 무분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제도로서 설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김성원 의원안의 현실적 규제 설계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옳되 속도와 방법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는 과도한 형식적 통제를 줄이되 기업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성원 의원안의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 주식, 즉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 분쟁 중 하나인 적대적 기업인수합

병 시도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개정안과 같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경우 신규투자를 받아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창업자 등 현재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희석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등의 보통결의·특별결의 요건의 완화와 관련해 개정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요건 중 발행주식 총수 일정비율 요건을 정비하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사정족수로 기능하고 있는 해당 요건을 폐지하여 주주의 참석이 저조한 경우에도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 판단의 원칙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이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익추구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 판단이 보호받지 않으면 회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법원은 회사 업무의 실제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정비율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 삭제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감사의 선임·해임 등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일괄하여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를 통해 총회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일정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3% 이내의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을 일괄하여 삭제함으로써 원활한 총회 운영을 도모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주평등원칙의 훼손 주장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규모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해임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3% 룰을 적용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지분율을 합산하고 기타주주들에 대해서는 1인의 소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견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주 등이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일정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미국의 포이즌 필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포이즌 필이란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대적 M&A가 발생하면 대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나 자기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수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 등을 부여하는 계획을 의미함. 적대적 M&A 시도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도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이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를 제외한 주주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행사의 결과로 위 권리를 보유·행사했던 주주에게 교부된 주식만큼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와 같이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특별배임죄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사 등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책 다원성 확보와 입법 다수주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비율 상향,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의된 김성원 의원안과 구자근 의원안은 보다 다양한 제도적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본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병합이나 보완 없이 소외되었습니다.

입법 다수주의란 단순히 의석수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안이 동등하게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포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미국·일본 등 비교국과의 차등규제 모델 검토입니다.

지배구조 개혁은 그 어느 나라도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대다수 선진국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 법제에서는 독립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업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 의무화되거나 면제되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규정 자체를 배제하거나 자체적 기준을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 역할, 독립성 등을 권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은 기업이 외부이사 또는 감사위원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영국은 보다 강한 주주 중심 모델이지만 소규모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보고의무나 독립이사 관련 규정을 자율 보고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선진국 다수는 단일 기준 강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구조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별 파급효과의 비대칭성과 현실적 수용성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자본력과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상장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출 500억에서 1000억대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는 준대기업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제도는 소규모 이사회에서 명목상 인원 확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책임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5년 7월 국회 설명자료에서 상장사 중 6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정책목표는 타당하나 일률적 제도 도입이 실질적 실행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에 대한 고려 부족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경북, 전남 등 지역거점에서 고용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지연, 구조조정, 의사결정 리스크가 지역인프라, 협력중소기업 생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경제 연구기관과 현장 의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023년 산업전망보고서 등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인력 조정, 고용 유연화, 외주 전환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곱째, 외국인 투자 신뢰와 자본시장 일관성의 위협입니다.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 다수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안정성, 정책 일관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련 경제단체는 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즈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 보도를 여러 차례 내놓은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여덟째, 저는 신뢰받는 상법 개정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국가경제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통제의 법이 아니라 신뢰, 자율성, 공정성이라는 세 기둥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신뢰받는 개정안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건은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기업이 법률의 원칙 안에서 유연하게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상장사 전반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례 규제 원칙입니다. 규제는 위험에 비례해야지 형식에 비례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전통 제조업과 플랫폼 기업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해관계자의 협의 절차입니다.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 대한상의, 코스닥협회, 법무부, 상장회사협의회, 외국인투자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법령 간 충돌 정비입니다.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전자문서법, 공정거래법 등과의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회 관련 용어 및 절차는 체계화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입법 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입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분석 및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일몰제 시범제 방식의 유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검토사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병합 조율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은 현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나 같은 회기 안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김성원·구자근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하지 않았고 법사위 내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원 의원안은 2024년 11월 15일에 발의되어 의미 있는 조율안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받고 있으며 구자근 의원안 역시 외국의 자율적 신주인수제도를 참고한 현실적 대안으로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국회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뿐 아니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 없이는 설사 좋은 법안이라 해도 그 결과는 신뢰받기 어렵고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실질적 대안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현재처럼 정기국회에서 한 번의 표결로 지배구조 개편의 대원칙을 정하기보다 산업계, 학계, 입법부, 법무부, 금융당국, 외국인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또는 입법자문회의를 국회 내에 구성해서 향후 상법 개정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단지 찬반 논쟁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공정, 자율, 성장의 균형점을 탐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법은 살아 있는 현실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신뢰받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다양성과 자율성, 균형과 절제 그리고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과 구자근 의원안은 단지 대안이 아니라 현재 상정된 개정안의 일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균형추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병합심사와 현실적 조율 없이는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 모든 입법 구성원들이 더 신중하게 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담는 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화면으로 보시는 또 복도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간곡히 호소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은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통해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취지를 담고 있더라도 그 입법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일방적 절차 속에서 강행된다면 그 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실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법사위 처리 과정은 허탈과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왜 졸속인가에 대한 물음과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내용 모두 부족한 심사였습니다.

이번 1·2차 상법 개정안은 주요 조항이 모두 기업지배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 환경에 전면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충분한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대체 입법안과의 비교심사, 외국 입법례의 검토를 모두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전체 법안 심의는 불과 2회의 공청회, 일곱 차례의 소위 회의로 축소되었고 김성원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이미 발의된 대체 개정안들과의 병합심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법안 상정 전까지도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법상 형식을 지켰다는 평가만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는 내용도 속도 모두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속도전만이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발언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그러한 속도전 입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론을 제기하자 민주당 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회의 자체를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개정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법사위는 이날 상법 외에도 방송 3법, 노조 개정안까지 함께 단독으로 상정하고 표결했습니다. 단 하루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를 좌우할 핵심 법안 3건을 패키지처럼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은 국회의 심의권, 입법권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절차적 문제는 같은 회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률안 간 병합심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2차 상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투표제의 선택권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완화, 자율적 전자주총 전환 등을 다룬 김성원 의원안, 2024년 11월 15일 발의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대한 기업 자율성 강화, 주주제안권 조정 등을 다룬 구자근 의원안, 2025년 3월 12일 발의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상법 382조의2, 제542조의12, 제542조의13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혀 다른 입법 접근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지 않고 이정문 의원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회 정신과 국회법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7월 11일 법사위 공청회를 보면 증인 4명에 대해 각 7분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했고 공청회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각 법안 조항별 영향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인 진술 역시 경제단체, 학계, 노동계 대표 간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으나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3차 공청회 또는 비공식 협의체 구성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업 경영 현실과 제도 개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구와 공청회 재개가 필요하나 현행 절차는 너무 짧고 협의 부족 상태에서 법률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국회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법안 통과 직전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 대안 통합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기존 이정문 의원안 중심의 수정의결 대안을 구성했습니다. 법사위 관행상 여야 간 협의로 통합 대안을 마련하고 그 통합 대안에 대해 양측 모두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에 표결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통합안조차 없이 이정문 의원안 플러스 약간의 문구 조정 형태로 제출되었고, 내용상으로도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구조 분산 위험, 감사위원 3% 룰 확대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 사외이사 비율 상향에 따른 이사회 실효성 저하 문제, 전자주총 의무화로 인한 중소 상장사 인프라 부담, 즉 절차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대안 통합이나 입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한 정당의 독자안이 입법화되는 구조로 귀결된 것입니다.

전문가 및 경제계의 반발에도 귀 닫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 전까지 기업계와 학계는 거듭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상의, 한국경총, 전경련 등 경제 3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1차 상법 개정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개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닥, 중견·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적 규제라 밝히며 별도 유예나 차등 적용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고들은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졌어야 했지만 해당 회의록과 위원회 자료 어디에도 실질적인 반영은 없었습니다. 토론 기회조차 제한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철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한 EU 상공회의소 입장문을 살펴보면 이번 상법 개정안이 향후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입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오늘 통과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경제 8단체의 공동 입장에 공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회의 진행 방식의 문제점은 비단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대표적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했고 경제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역시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 후에 단독 표결이라는 형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속도전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갖는 공공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향후 어떠한 법률안도 의회 다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고, 국민은 법률 제정 과정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회 입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입법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곧 국회 입법행위 또한 국민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단시간에 심사와 의결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 입법의 정당성과 헌법정신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절차 관련 판례들에서 반복

적으로 강조된 정당한 심사 과정의 확보라는 원칙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민주당은 과거에도 정쟁 속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실질적인 토론의 부재, 충실한 공청회 미이행, 전문가 의견의 무시, 기승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법률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떨어지며 자주 법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입법 불안정성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입법부는 신뢰를 잃고 정당 정치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구조로 빠져들게 됩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 투자자 신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등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정치적 속도전 논리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없는 개혁은 폭력이며 공청회 없는 법 개정은 폭주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입법의 본래 취지, 즉 국민을 위한 법 제정,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제도 형성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법 개정을 보완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녕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지난 7월 29일 우리나라 주요 8개 경제단체,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가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입장문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인들의 무력감과 위기감을 생생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에서 단순한 반대나 우려를 넘어 절박한 호소와 체념에 가까운 깊은 상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토로한 참담함은 단순한 수사나 이해집단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현장의 목소리이며 그야말로 생존의 외침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 남짓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고 생산라인을 해외로 옮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경고를 모두 외면한 채 오히려 규제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쓰러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말합니다. '관세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말은 정치권을 향한 마지막 절규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1차 상법 개정안 공포됐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강행됐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통과됐습니다.

이 정도면 입법공습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민생의 터전인 경제계의 목소리는 이렇게까지 가볍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가 민생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민생의 현장인 기업과 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계의 호소는 이윤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정치꾼이 아닌 진짜 정치인이라면,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이들이라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은 국민이 맡긴 자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준 것이지 국민을 기업과 노동자로 갈라치기 하고 국가경제를 벼랑으로 떠밀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경제계의 경고도 외면하고 민심조차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듯한 태도로 반시장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귀에 달콤한 말만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달콤한 언사에만 귀 기울이고 민심의 경고에는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을지요. 더 늦기 전에 이 무거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7월 29일 경제 8단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8단체 입장문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정책 및 기업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었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입법을 연이어 쏟아 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꺼져 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상 전문입니다.

민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입법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은 정치권 안팎을 막론하고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언론들이 귀를 막고 경제현실과 괴리된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일제히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자처해 왔고 국민과의 소통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 투자자들, 수많은 고용인들과 그 가족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들의 말은 왜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 여당은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말은 친기업이지만 행동은 반기업입니다. 입법으로는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의 자리에서는 기업이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하는 이 모순된 태도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던 시절부터 입으로는 경제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경제를 조이는 입법을 추진해 온 전례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국민에게는 어떤 손을 보여 주고 기업에게는 어떤 손을 숨기고 계신 건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는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언론이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올해 3월 21일 자 조선일보 사설은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짚어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런 당연한 말과는 정반대로 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발목을 잡는 입법만 하고 있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노조 입장만을 대변해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중국, 대만 등의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나.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해 보고 노조 주장대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폐지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노조 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은 19일 주주와의 대화에서 생존력 확보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를 생존 위기로 몰고 있는 이 대표가 어떻게 삼성전자 앞에서 국제경쟁력 운운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13일 국회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이 개정안은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지운다고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기업 말만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업 얘기를 철저히 무시한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최근의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계승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부자 감세라며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한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궈도 상속세 때문에 후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팔아야 한다면 근로자와 국가 누구에게 이익인가.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에 불법 파업의 자유를 준다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찾아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다. 얼굴이 두껍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앞서 읽어 드린 3월 사설은 단지 과거의 비판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지금도 기업계의 경고와 산업계의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지지세력의 구호에는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특정 세력의 이해만 반영하는 입법을 국민 뜻이라 포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의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법 방향을 보면 그 기준이 오히려 지지층의 기대와 투표 계산으로 뒤바뀐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수 기업의 우려는 묵살되고 다수 개인 투자자의 기대만이 정당화됩니다. 거대 노조가 요구하면 입법은 전광석화처럼 추진되지만 기업 현장의 요청은 철저히 외면됩니다.

경제의 논리보다 정치의 셈법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경로에 가깝습니다. 기업에도 표가 많았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다뤘을까라는 물음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가 있는 곳에는 민감하고 없는 곳에는 무관심한 입법, 지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 이중 행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더 체계적입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번에 했던 그 협상이 과연 최종적인 것이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번에 조현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의 방일에 수행하지 않고 급히 워싱턴을 간 그 상황을 보고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급했던지 조현 외무부장관은 직항 비행기를 기

다릴 시간이 없어서 경유지를 거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1차 관세 협상과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기만 합니다.

그 1차 7월 말의 관세 협상도 일본과 EU 수준인 15%라는 조건부 감세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무관세 경쟁력을 내려놓은 셈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와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밖으로는 관세 협상의 파고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규제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처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지는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투자 축소, 고용 불안,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조법 강화까지 병행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의 목을 조르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조선일보 7월 30일 자 사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기업에 ‘세금 더 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세율 1%p 인하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합의해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올해 14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원인도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게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문 정부가 국가부채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다. 남 얘기를 할 일이 아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기업 이익이 커지면 법인세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 2년간 법인세가 급감한 것도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첫 적자를 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 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남은 이틀 동안 일본·

유럽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기업들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통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산자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1분 1초라도 더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간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다.

기업이 15% 이상 관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국내에서 기업 세부담을 낮춰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달려들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입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놓고 치열한 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는 단어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15%라는 숫자는 보기에는 양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10%도 채 안 되는 현실에서 사실상 수출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인 무리한 요구 후 형식적 양보에 우리가 끌려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 됐습니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투자 여력은 해외로 쏟아붓고 산업 생태계는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발을 풀어 주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라는 추가 규제의 그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영권은 위협당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으로 방어 수단은 차단되고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기업을 살리자는 건지, 망하게 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이름만 다를 뿐이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과 똑같이 기업의 목을 조이는 악법입니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기업 앞에 국회가 돌덩어리를 하나 더 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전문가들까지도 한목소리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도대체 왜 상법 개정안을 고집하는 건지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이 정부가 유독 반복해서 집착해 온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코스피 5000'입니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서 마치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공식 논평에서도, 브리핑에서도, 각종 회의 발언 속에서도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는 거의 집요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 역시 그 명분은 주주 보호와 투명 경영이지만 실제 의도는 코스피 5000을 위한 지렛대, 주가 부양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의 상징에 정책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현실과 국제경쟁력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공식 논평입니다.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제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주주 보호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되게 되어 뜻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금주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논평을 내셨는데 야당과 적극 소통하신다고 했는데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입니다. 일종의 경제 체온계처럼 시장의 기대심리와 기업 실적을 수치로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코스피는 경제의 결과이지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마치 국정의 목표 수치처럼 반복하며 상법 개정안까지 그 도약의 발판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삶과 산업의 체력 강화가 아니라 주가 상승이라는 것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미 주어진 수치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입법을 동원하는 모습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 논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이 과연 그토록 조작 가능한 수치입니까? 관세협상에 따른 결과는 기업에게는 15%라는 고정된 부담, 국가에게는 투자 유치와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며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야당의 바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장기 전략 대신 주가 차트를 보고 정책을 짜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행태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당장의 성과, 지지율이 앞서는 위험한 행정의 기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수치 중심의 정치 허상은 결국 국민의 신뢰와 실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중앙일보 시평은 GE, IBM, 보잉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한때는 주주 가치와 단기 이익에 집착했다가 결국

기술력과 경제력을 잃고 추락하게 됐던 전례를 짚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가에만 몰두하면 장기투자는 줄고 노동과 기술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실물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대신 숫자 맞추기에 정책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실물경제가 좋아야, 그래야 코스피 수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며 그리고 또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시평의 전문입니다. 7월 24일 자입니다.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는 주가 5000 목표'를 제가 읽겠습니다.

1981년에서 2001년 제너럴 일렉트릭을 경영했던 잭 웰치. 취임 직후 시장에서 1~2위 기업이 돼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목표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자본주의 기업의 핵심 철학인 주주 가치 극대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주주 가치 극대화, 별다른 위기가 아닌데도 웰치는 매년 하위 10%의 직원을 해고하고 실적 나쁜 사업장은 정리했다. 온정적이라는 평을 듣던 GE 기업문화는 오징어게임장으로 변했고 웰치는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주들은 환호했다. GE 주가는 웰치 재임기간 50배 이상 올랐다. 전 세계 기업에서 GE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

그런 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GE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2009년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했다.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 자신은 주주 가치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으며 주주 가치는 경영의 결과물일 뿐 목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E의 추락은 주주 가치로 포장한 단기 이익 집착이 누적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이다. 그의 인터뷰가 반성인지 변명인지 헷갈린다.

GE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의 지향점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 명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활성화, 경제활력 등이다. 그러나 당장 와닿는 것은 주가 부양이다.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지지율 호조에 고무된 듯 지금 민주당 내에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크립토(암호화폐) 1000조 원 시대, 주가 5000 시대 등을 내건다.

문제는 그 방법이 기업 압박이라는 것이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영권 방어수단인 자사주마저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오르는 주가에 개인투자자들이야 열광하겠지만 기업들은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투자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주가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는 건 위험하다.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일 뿐 그 자체가 경제의 동력이 될 순 없다. 주가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며 제한적이다. 자칫 말보다 마차를 먼저 놓았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

과거 장하성, 김상조 등이 벌였던 소액주주운동은 재벌 견제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시세차익 추구 운동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 이 틈을 타 소버린, 엘리엇, 아이칸 등 외국 행동주의 자본들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시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단기 주가 상승을 노리고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다.

눈앞의 주가를 위해 장기 경쟁력을 해친 기업은 GE 외에도 많다. IBM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보잉은 주주환원정책에 집중하다 기술개발과 안전투자를 소홀히 해 연이은 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 식품대기업 크래프트하인즈 또한 과도한 비용절감과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주가가 폭락했다. 단기 이익 추구의 폐해 사례들이다.

과거 한국의 대기업은 취약한 경영권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 해고 최소화, 사회적 기여 등의 전략을 택했다. 국가가 중재한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는 이런 타협을 깨기 시작했고 주주자본주의는 이 흐름을 가속했다. 지금 기업 압박의 목적이 채용 확대나 사회적 기여가 아니라 주주 이익 확대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주주자본주의=단기 이익 추구=일자리 위협'이라는 구도는 너무 단순하다. 우리 기업이 배당과 주주 가치 제고에 인색했다는 지적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주가 부양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가 주주 외 다른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반드시 유리할까? 주주 가치를 내걸고 해외로 아예 본사를 옮기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탈출구조차 법으로 막아 둘 것인가? 가능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대부분의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노동자다. 그런 만큼 주주 가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오징어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 '왕개미'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식의 주주자본주의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균형이다. 국가와 기업 간 타협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를 정책 목표로 삼는 건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찾는 일처럼 어리석다.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길을 찾아야 한다. 잭 웰치의 반성 또는 변명이 언젠가 우리 정치판에서 재현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저는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로 충분한 검토와 숙려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의 추진 명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작 경제계와 산업현장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자 살아 있는 경고입니다.

법이란 단지 명분 하나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구조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제도의 수용성과 현실과의 정합성 그리고 글로벌 흐름 속에서의 위치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 추진 과정을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거짓 구호 하나로 이 모든 우려를 덮고 지나가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정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먼저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왜 그런 장치를 제도화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균형을 만들어 왔는지부터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규제만 강화하고 기업의 방어수단을 없애면서 견제장치만 쏟아 낸다면 그것은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올 3월 상법 개정안이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명확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4일 매일일보의 '해외 사례로 본 상법 글로벌 스탠더드…… 한국은?'입니다.

3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선택신주인수체결권 등 기업 경영권 보호 관련 여러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내는 방어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의존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경영권 방어의 일환으로 고려아연 자사주를 사들인 바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인수합병 상황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M&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다. 일본은 2005년 일본식 포이즌 필 제도를 시행해 2007년까지 일본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가 넘는 기업들이 신주예약권 제도를 도입했고 지속적으로 도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통상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보유 지분에 의해 의결권이 차등 부여되는 제도로 복수의결권이나 무의결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기업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 가능하며 경영권 상실 우려가 없어 증자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더불어 해당 제도도 병행해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거꾸로입니다. 기업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으나 상법 제269조제1항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돼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밸류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영권 방어 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되면 기업이 주주환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적절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해 행동주의펀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별다른 방어수단이 없이 국내에서 시행된다면 회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장기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균형 있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신주예약권처럼 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상태에서 행동주의펀드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견제장치는 넘쳐나지만 정작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 등 방패 없는 공격만 쏟아지는 개정안이 연달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는 그 간극을 구체적으로 짚어 냅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차등의결권을 통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은 시장 활성화와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3% 의결권 제한 등 일방적인 견제장치만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영구조 속에서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주와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일방적 견제만 있는 구조에서는 기업도 방어에만 몰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수단조차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해 해외 상법 전문가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내 경제계의 불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법학자들조차 한국의 상법 개정 방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언론의 사설과 국내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배경을 지녔지만 하나같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일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용이 위험하다',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경고는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시장, 현장, 국제기준을 바라보는 이들이 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우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 법안을 강행하려 합니까? 정말 이 법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법이 국민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감수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무게 역시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할 몫입니다.

누군가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해외 주요국들은 견제장치와 방어수단을 함께 갖춘 균형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와 견제는 있지만 방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진국에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무슨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 보호의 이름으로 국내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방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관세협상 이후라는 새로운 생존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수출은 더 이상 무기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 기업들은 버티기 위해서 수조 원대의 해외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가 입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정치의 극단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쓰러지면 그다음은 고용이고 그다음은 생계이고 결국 국민의 삶이 망가집니다.

이러한 경고와 현실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 다수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경제와 우리 기업,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고 민생을 말하면서 시장의 외침은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국민의 일터는 위협하는 이 법안에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불붙은 등 위에 물을 끼얹는 일이지 휘발유를 붓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기술적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업 경영의 원칙을 바꾸는 것이며 수많은 일자리와 가계소득, 지역경제의 흐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명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 주주의 권익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과 그 절차입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집중투표제, 분리선출제, 3% 룰 확대, 독립이사 확대 등은 기업 현실과 산업구조를 무시한 채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시제도, 전자투표, 의결권 위임장 제도 등으로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법률로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1차 개정의 효과 검증도 없이 졸속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어 그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흔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오늘날 기업은 일자리와 세수, 기술개발, 수출 주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아우르는 국가 경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의 경직화와 비효율 증가, 외국계 자본의 단기 투기 가능성 증가, 경영권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기업들의 상장 유지 기피와 해외 이전 가속화, 중견·중소기업의 이사 확보 부담 증가, 고용 위축, 지역경제의 소외 확산.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군, 즉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지방 중소기업 등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력과 자원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용 감소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주장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는 원칙 기반의 자율적 규율을 강조할 뿐이지 법률로 모든 의사 결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모두 사외이사 집중투표 등 제도를 의무화하기보다 권고 수준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업종별 특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사 선임 구조에까지 입법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경제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8대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경총,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국회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입법 절차가 졸속입니다.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의 효과 분석도 없이 이어졌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 없이 강행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입니다.

상장 기준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인적·재정 여건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큽니다.

집중투표제 및 분리선출제가 의결권 자문사에 의한 자동투표를 확산시켜서 실질적 경영 참여도 하지 않는 투자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이 우려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실효성과 균형을 갖춘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투명한 지배구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심층 논의, 공청회, 제도 실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명분은 그럴 듯하나 실질은 위험하며 절차는 무시된 채 속도에만 치우친 졸속 입법의 전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기업과 투자, 일자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 깊은 공청회 더 열고 실증 데이터 확보하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넘치면 혁신은 숨을 잃고 법이 지나치면 시장은 침묵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회복과 기업의 자율 경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17시43분)

○부의장 주호영 김남근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다섯 가지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패키지 입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특히 주식시장 현장에서 우리 개인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절실하게 왜 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절절하게 한번 전달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마치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별개의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사실 다섯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소위 부스터 5, 다섯 가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하나의 일련의 법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섯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사가 주주들에게 좀 더 책임지는 구조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경영 임원이나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사회가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이사회가 현재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의 이사회처럼 거수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두 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조 이상 자산을 가진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그러면 이사회를 독립이사로 구성되도록 하려면 독립이사를 뽑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조 이상이 되는 그런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의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독립이사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3명에 대한 의결권들을 소수주주들이 1명한테 몰아줘 가지고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그 이사들, 당연히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서 대주주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고 하니까 독립적인 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2조 이상이 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의 제도는 두 번째, 첫 번째 제도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된 거지요. 2조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게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 분리선출을 지금은 1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2명 이상으로 확대

하자라는 것들이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립이사를 뽑으려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구조를 보게 되면 3월 말에 한꺼번에 그냥, 수십 개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사실상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주주총회뿐만이 아니라 전자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일반적인 주주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하자라는 것들이 다섯 번째 개정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것이 1차 상법 개정안으로 지난 7월 달에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때는 국민의힘도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실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일련의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는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 패키지 입법인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 일련의 같은 체계의 것인데 왜 세 번째, 네 번째,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될 이사에 대한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지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가지는 하나의 일련의 같은 패키지 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중의 몇 가지만 뽑아서 반대한다는 것들이 납득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것들은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도 말씀하신 게 대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방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막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합의해서 통과를 하고 막상 2차 상법 개정으로 남아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법상에 보게 되면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되기 어렵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 2조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금 2023년 말로 하게 되면 2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4개의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경영을 하는 데들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나 이사회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는 데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대표적인 게 블랙록 이런 데지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글로벌 투자를 하는 데들이 네덜란드 연기금, 노르웨

이 연기금, 스웨덴 연기금 이런 데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의 캐피털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ESG 경영, ESG 책임 투자라는 걸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ESG라는 게 E가 인바이어런먼트(environment), 환경적 기준에 관한 투자 이런 걸 하느냐의 것이고 S가 소셜(social),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이고 G가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다양성 이런 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사회의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여성 이사 수가 얼마나 되느냐, 외국인 이사 수는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투자의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산 2조 이상이 되는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전히 전근대적인 방식의 지배주주, 재벌 총수가 요구하면 일사불란하게 요구하는 그런 식의 이사회들을 계속 전제로 하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추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시대가 많이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214개 정도 되는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들을 받아서 계속 신산업, 신상품, 신기술들을 개발해야 될 상황들인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지시하면, 지배주주들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전근대적인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글로벌 영역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시대의 변화들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려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라고 했던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을 보면서 그걸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주식시장 활성화하려면, 밸류업 하려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기 단계, 특히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같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겠는데 2차는 그것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다섯 가지 일련의 패키지 입법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지 못한 것 아닌가 또는 세계적인 이사회 지배구조의 변화의 모습, 일사불란이 아니라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 주식시장이 2500p를 잘 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도 바로 내려가고 이런 박스권에 갇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의 주식시장만 어렵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보수적인 경제지입니다만 한경비즈니스가 2024년 초에 왜 한국의 주식시장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을 증시 전문가 50명한테 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답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밸류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한결같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첩경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는데 그런데 잘 안 됐지요. 지지부진하고 2500p도 못 넘어가고 계속 한계를 보이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전문가들한테 또 마찬가지로 물어봤는데 가장 한결적으로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우리의 상법 개정과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부분들에 진정성이 없다, 그냥 시도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시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법 개정의 얘기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시도를 했던 자본시장, 일본식의 밸류업 정책을 하자라는 내용에도 다 나오고 있던 내용이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한계였다라는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개미 투자자들의 말씀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의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에 성공했다는 것들은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전기차 이차전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실제 성공했어요. 그러면 미국 같았으면, 정상적이라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걸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성공한 신사업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겨 가지고 그걸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이 환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실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투자는 성공을 했는데 막상 투자 수익을 환수하려고 그랬더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그 유망한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 상장을 해 버린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거꾸로 가장 유망한 사업이었던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들의 유망 사업들을 잃어버리게 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들은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해 가지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수익은 환수할 수 없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많이 떠나갔다는 거지요.

특히 많이 떠나가는 데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면 2022년, 2023년에 코로나 국면이 지난 다음에 그 위기 상황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6% 올랐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주식을 회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만 주가가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한국은 주가의 상승 정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개미투자자들이 대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한 1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개미,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4년에 오게 되면 그게 한 924억, 912억 달러.

이것 다음 장의 도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912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5년도에 우리 개인투자자들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12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4년경에는 한 41억 달러까지 갔다는 거지요.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이런 데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지가 않게 되고 당연히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간 국내 주식시장들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빠져나갔냐? 그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들을 한국 대기업들의 이사회에서는 자신 그룹들의 이익이나 자신들 그룹 지배주주의 이익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을 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주식투자에 성공을 해도 주식투자 수익들을 환수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국회에 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그룹들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것 중의 일부들을 회수를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어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투자 방식들이 아시아에 투자할 돈 얼마, 미국에 투자할 돈 얼마, 유럽에 투자할 돈 얼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투자한 돈은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다시 아시아에 있는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에는 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사회가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들을 많이 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기,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면 그게 다 추진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래서 들어오고 있지요.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을 하고 1차 상법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상당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 내용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던 것이라는 거지요.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 하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이 2024년 1월 2일 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증시 개장식 때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다는 거지요. 말은 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를 않고 왔다 갔다 했고 결국은 이거를 저버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을 침체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상법 개정 1차 할 때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할 때 많이 나왔던 용어 중의 하나지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가 있었다, 하려는 시늉은 했었다, 하려는 의견들은 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시아 기업들의 지배구조 분석 같은 것들을 하는 전문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진행이 너무 더디다, 지지부진하다, 그게 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이런 지적까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우리 주식시장을 활

성화한다,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다 같이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겠다라는 것들은 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더욱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코스피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이런 큰 흐름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하니까 1차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해 놓고 막상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속선상에 있는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214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좀 너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 아니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상황이나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것이지요.

또 다음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시대의 변화도 있다는 거지요. 주식투자자들이 그런 몇몇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주식투자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년 전보다도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관계하는 그런 주식시장이어서 이걸 자꾸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은 계속 재계, 재계, 재계 얘기만 많이 하는데 주식시장이 재계의 목소리만 가지고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서 주식시장의 운영들이 설계돼야 되고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설계에 있어서도 이런 시대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대세다,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이거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쭉 내 오고 계시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소위 쪼개기 상장이다, 이중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사건이 전기차의 이차전지 사업들, 배터리 사업이 유망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였는데.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해 가지고 LG화학이 이차전지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 다른 나라에 앞서서 상용화를 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 아주 유망한 신산업을 가진, 그래서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차전지 개발에 성공을 해서 가치가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기업이 이 사업을 가지고 막 확장해 나갈 그 시점이 되니까 LG화학에서 이 사업을 따로 떼어 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투자자들을 받아서 별도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한 100만 원 넘게까지 유망 사업을 갖고 있어서

한 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갔던 LG화학의 주가가 한 70만 원까지 확 급락을 해 버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자신들이 투자해 준 돈으로 유망 사업인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막상 성공해 다른 투자수익을 환수해야 될 때 얘들은 이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 상장을 해 버리니까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 어떤 불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사업을 떼어 내서 SK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 상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을 가져오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지요.

다음은 합병 같은 사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불공정 합병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지요. 당시 합병을 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함께 주역 기업이었고 건설 부문 1위였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가면 다 래미안 아닙니까? 삼성물산이 다 그런 건설사업들 주도하고 있었고 무역에서도 다 주도하고 있었고 핵심적인 7개 큰 사업들을 갖고 있고. 제일모직이라는 건 에버랜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막 커 왔던 그런 기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한 세 배쯤 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합병 비율은 거꾸로였지요.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의 한 3분의 1쯤 되는 회사로 합병을 해 버리니까 이런 합병 비율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 기존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많은 개인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삼성물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였다면 그룹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더라도 이걸 거수기처럼 그냥 찬성을 할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데 막상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게 하루 만에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라든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보면 삼성물산 같은 저렇게 거대한 한국의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회 운영이라는 것들은 글로벌 수준에는 너무 미달하는구나. 기업 총수가, 재벌 총수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냥 아주 치열한 검토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회사에도 큰 영향을 줄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경영결정을 하는데도 저렇게 어처구니없게 결정을 하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게 됐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걸로 작용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부당한 합병을 하는데 또 국민연금이 개입하도록 박근혜 정권이 지시를 한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돼 가지고 엘리엇하고 메이슨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 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개인투자자들은 민사적인 손해배상들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

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얻기가 어렵고 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신호를 세계적으로 준 거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 외에도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게 됐던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원전사업의 기술과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상당히 뜰 거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사고 투자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 체코 원전 수주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가치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 투자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멀쩡히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 내 가지고 부실한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겠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두산그룹에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1년에 영업이익만 1조 이상 발생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수백억, 수천억의 영업이익들을, 배당이익들을 가져다 주는 그 두산밥캣이 떨어져 나가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 자체는 큰 손실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사회였다면, 독립적인 이사들이 있었다면 이런 지배주주, 그룹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대기업들에 있어서도 이사회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 이사회가 그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 줬다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이게 좌절됐던 것들은 사회적인 여론이 아주 비등하게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금감원이 개입을 해서 금감원이 합병에 대한 주식 신고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안 받아 주게 되니까 스스로 두산그룹 자체가 포기를 해서 해결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 자체도 사회적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회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사회 지배구조라는 건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신호들을 보여 주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구조의 특성은 계열사를 가지고 레고 놀이를 한다'.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이런 놀이를 한다는 거지요. 걸핏하면 뭐 분할한다, 그러다 다시 합병한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그룹 차원에서야 레고 놀이를 할 수 있어도 그 레고 놀이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뗄 때마다 붙일 때마다, 분할과 합병을 할 때마다 계속 주주들의 피해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뗐다 붙였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적어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벌그룹의 대기업 이사회들은 그런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레고 놀이하듯이 쉽게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피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를 계속하다 보니까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복잡하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SK의 소유지분도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주회사 밑에 복잡하게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떼었다 붙였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어떤 게 SK그룹의 지배구조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경제질서도 교란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주주들의 이익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한 기업가치가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형태로 그런 우발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상증자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업의 사업이나 규모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한 주의 주식가치는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가진 주식가치를 떨어트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막아 주기 위한 이사회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한 돈을 가지고 새로운 유망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식가치가 희석되더라도 새로운 유망 사업들을 벌이게 되니까 그거가 회복이 돼서 더욱 주식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가치는 떨어지고 그냥 채무 변제하는 데 다 써 버렸으니까 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채무 변제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당연히 그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은 막아야지요.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주들이 피해 볼 텐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왜 채무 변제를 하냐. 채무 변제가 필요하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해야지 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네이버의 자회사에다 그 570억이나 되는 큰 유상증자를 한 데도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채무 변제를 해 버리니까 주식가치가 떨어졌던 그런 사건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을 줬던 사건 중의 하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그룹의 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요. 폴란드에 자주포도 수출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성장한 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투자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새로운 시설투자를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지요. 벌어서 생긴 영업이익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먼저 시설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또 추가적으로 대출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3조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유상증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바로 유상증자로 전부 해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주식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난리가 난 건데.

그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없냐? 폴란드 자주포 수출하고 방산사업이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1년에 나오는 영업이익만 해도 조 단위란 말이에요, 조 단위. 그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왜 이걸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느냐,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대출을 못 받느냐? 조 단위의 영업을 내는데 그 기업이 대출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돈을 안 꽂을 리가 있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시설투자하는 데 필요하다면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이라는 돈을 다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 그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사회에서 이 논의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 주식가치가 희석돼서 주주들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이런 3조나 되는 유상증자와 같은 큰 경영상 결정을 하는데 그 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그런 논의 자체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거지요. 우리나라 이사회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이냐 이런 걸 또 전적으로 보여 줬던 거고 이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들의 전형적인 원인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아주 나빠지게 되니까 한화그룹 차원에서 다른 계열사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을 갖다가 다시 넘겨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결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이슈 중에는 아예 한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가 재벌그룹에 연결 연결돼 있다 보니까 계열사의, 다른 그룹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보여 줬던 사건도 있었지요. CJ CGV가 유상증자를 한 후에 거기만 기업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CJ그룹의 다른 기업들의 주식가치도 다 떨어트리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도 보여 줬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배구조의 한계들을 많이 보여 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사주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상법에서 자사주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자본금의 일부를 자기 주식을 갖는 데 쓴 거니까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든 거와 같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거였어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의 시험문제에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도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오던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그러면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201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자사주를 5~10%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의 수만 하더라도 297개나 됩니다. 15~20%까지 갖고 있는 기업의 수만 해도 119개나 됩니다. 또 15~20% 갖고 있는 기업이 57개, 20% 이상 갖고 있는 기업도 60개나 되고 무려 40%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도 4개 기업이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과다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사주의 보유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임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이나 이런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바로 보상으로 넘겨주거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식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일부 보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할 이유가 없고 장기간 보유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사주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또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 같은 것들이 예상될 때는 자기 우호적인 회사한테 이걸 헐값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주주들한테 어떤 환호를 주는 신호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 같은 걸 해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배당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지요. 주식을 그만큼 소각을 하면 1주의 주식 가치는 올라가게 되니까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다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나중에 또 헐값으로 우호적인 세력에게 넘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달리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사회였다면 '왜 이렇게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느냐? 1%, 2%도 아니고 이걸 5%, 10% 심지어 20%, 40% 이렇게 보유하느냐?' 당연히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거 갖고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돼야 되는데 이 과다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의 이사회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했다, 논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를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에서는 한 번도 이게 논쟁조차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 독립적인 이사들이 없다,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못 벗어난다, 주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그 사업의 능력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주식 가치가 크게 낮게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내일 표결을 하게 됩니다만 만일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음 스텝 중의 하나로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고 예외적으로 임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자사주를 넘기겠다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요구를 해서 주식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하도록 하고 그것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보유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재계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해서 이런 이상한…… 과다한 자사주 보유에 대해서는 벌써 다 해결을 했어야 되고 이런 걸 해결하지 않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기업의 어떤 이사회 지배구조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다음으로 전환사채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해 주도록 보통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옵션을 행사하는 자격을 갖게 되느냐?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갖게 되지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주식 가치보다 대부분 낮게 돼 있다 이거지요. 낮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정해진 가격으로만 사더라도 이게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는데 소위 리픽싱(refixing)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그 정해진 가격들을 계속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정한 전환가격이 1주당 831원이었는데 몇 차례 계속 이걸 내려 가지고 500원도 안 되게 이렇게 전환가격으로 해서 최대주주에게,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넘기게 되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지요, 이런 방식들을 취하다 보니까. 미래아이앤지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해진 가격은 1159원 정도였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떨어뜨리다 보니까 508원까지 낮은 가격으로 최대주주·지배주주에게 주식들을 넘겨주게 되니까 주식 가치는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이 전환사채 리픽싱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전환가격은 시가의, 주식 가격의 70% 이상 안 내려가도록 하는 하한선을 둬야 된다 이런 입법까지 추진하는데 왜 이걸 또 입법으로 추진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이사들이 견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이사회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한계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유형 중의 하나는 자진 상장폐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건이 신성통상 사건이었습니다. 신성통상이라는 회사는 3년 동안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고 내부이익잉여금도 3100억이나 된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상장폐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기업이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소수의 가족 경영하기 위해서 상장폐지를 한다

이런 사정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상장을 해 가지고 다른 여러 일반주주로부터 자금들을 모아 가지고 그걸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3년 계속 내고 있었고 이익잉여금도 많이 쌓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그거를 자기들 가족 경영하듯이 폐쇄회사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서 상장폐지를 하니까 이런 비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사회 지배구조가 견제를 못 하느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우리 지배구조의 한계들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위 말하는 LBO 문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이런 문제를 막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지배구조 문제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차입매수(LBO)라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그걸 자기 돈을 갖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 대상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MBK라는 사모펀드는 자기들이 한 2조 5000억 정도를 모아 왔고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자금은 7조 5000억이었는데 나머지 5조는 그 홈플러스의 주식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한 거지요. 자기들이 조달한 비용보다 그 홈플러스라는 인수하려는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서 인수자금을 갚았냐 하면 결국은 그 홈플러스의 알짜 매장들의 부동산들을 매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알짜 매장들을 매각을 하고 그걸 다 임대 매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홈플러스는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임대료 부담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그게 팔려 버리고선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매년 1년에 막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큰 부담에 임대료 비용 부담들이 생기게 된 거지요. 이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또 팔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회사정리절차에까지 들어가는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만일 이런 식의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인수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이사회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인수하려는 데가 우리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져가느냐. 또 그 뒤에 있는 이사회도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부동산을 전부 다 팔아 버리고 그 돈으로 인수 자금 빚을 다 갚아 버리고 홈플러스 우리는 거액의 임대료를 계속 내게 하냐, 이러다가는 회사 망할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이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 같았으면 그 이사들이 결국은 회사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영상의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주주 보호, 회사 보호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위 충실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다면 다시 거액의 징벌적손해배상이 물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결사적으로 홈플러스의 이사들은 막으려고 그랬겠지요, 이런 식의 인수나 아니면 그 뒤의 매장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홈플러스의 이사는 아무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게 MBK에서 파견한 이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MBK에서 파견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히 나서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MBK나 이런 어떤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기업이나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독립적인 역할들, 견제와 감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 사건 중의 또 하나도 이런 홈플러스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원 보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DB하이텍이니 남양유업이니 이런 데들은 경영을 잘못해서 굉장히 기업이 어려워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기업 총수 지배주주, 지배주주이면서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이사에게 3년간 171억, 170억 이런 거대한 보수들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익도 안 나는 회사에서 170억 씩이나 보수를 주게 되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사회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사회 산하에 임원 보수에 대한 보수검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보수검증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기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보수가 과다해서 그 보수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결정 같은 걸 이사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사회가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과다한 임원 보수들이 지급되는 이런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사회의 지배구조들이 얼마나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들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느냐, 지배구조가 이렇게 불투명하냐 이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기업문화는 지배주주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뿐이지 그 이사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우발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기업가치는 계속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투자들이 사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들이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는……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너무 빨라요」 하는 의원 있음)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주 잘 들어 주시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주식시장을 살리고,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단지 주식시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어디를 많이 했었냐 하면 일본이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010년대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걸 일본이 밸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일본도 일본 기업들의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부활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목표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 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일본은 전부 다 소프트한 자율 규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본도 하드한 법률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우리로 따지면 거래소의 어떤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우리 상법 개정과 같은 회사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코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별도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라는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거냐 하면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이사회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어긋나는 그런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 활동들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 있었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활성화된 주식시장으로 변모해 갔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본의, 옆에서의 선례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참조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첫 번째로는 동경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사회를 독립이사, 우리가 이번 1차 상법 개정안에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일본의 그런 거하고 상당히 동일한,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독립이사가 3분의 1 이상이 돼야지만 상장을 시켜 줬어요. 상장의 요건으로 이걸 아예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사 3분의 1로 안 된 경우에는 우리의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요구해서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사회적 책임투자 활동들을 벌여 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 내는 그런 성과들을 얻어 냈다는 거지요. 그게 이렇게 한 10여 년 축

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임원들의 보수들을 심사하는 임원보수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둬 가지고 이사들도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체계 있게 이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다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하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까지를 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도 많아지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들을 제대로 견제해 내는 체크 앤드 밸런싱(check and balancing)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믿고 신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밸류업에,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에 가장 그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24년 두 번의 회사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코드, 가이드라인 이런 어떻게 우리로 보면 상장 거래소의 감독 규정, 상장요건 규정 이런 식의 연성법령과 그다음에 회사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성법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법령체계들을 계속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독립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주식시장을 다섯 단계로 나누지요. 우리는 세 단계잖아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일본도 그때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시장들을 정비했는데 그중에 우리 코스피와 같은 게 프라임 시장이 되는데요. 그 프라임 시장의 상장요건 또 상장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우리는 아직도 많은 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돼 있는 데가 많지요. 이것도 상당히 전근대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사회가 경영 임원하고는 분리돼서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같이 하게 되니까 이사회 의장이라는 것을 따로 두지요, 이사회를 소집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그런 기업들을 외국에서는 대기업들 중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아직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를 겸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글로벌 스탠더드를 좇아간다는 회사들은 이사회 의장을 두는 경우들이 있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회 의장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일본은 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라임 시장에 남아 있으려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독립이사들이 이사회 의장을 따로 맡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로 따지면 재벌처럼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재벌개혁이라고 그러면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것들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구조의 투명성들을 강화하는, 독립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도 계속 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사회의 지배구조, 그룹 단위의 지배구조의 투명성들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들을 만들어 준 게 일본의 이런 밸류업, 주식시장 활성화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활성화된 주식시장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우리들도 지금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일본의 경우처럼 밸류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치는 그런 일환으로 회사법, 상법 개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의 밸류업 시장들을 분석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10여 년에 걸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아베 정부의 3개의 화살 얘기를 할 때 그 3개의 화살 중에 주식시장 활성화, 밸류업이 있었고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적인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했었고 실제로 2012년부터 죽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면서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 도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밸류업되는……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2012년경부터 한 2022년 이때까지 주로 주력을 했던 것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겁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거고, 최근에 2023년에 들어와서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PBR, 주주환원의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PBR 2 이하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성향을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또 집중적으로 쓰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일본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만 2010년대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그런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토론을 해 주셨던 오기형 의원님께서 이토 보고서라는 것을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토 보고서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됐던 보고서, 어떤 제안서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토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했던 것 중에 5대 정책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ROE 향상, 자본효율성 제고, 거기에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는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가 주주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내라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이 앞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경영권 방어에 관한 포이즌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의 핵심적인 경영권 방어는 뭐냐 하면 주주 설득이지요. '경영 임원들을 지지해 달라', '우리들이 하는 경영상의 정책들을, 경영상의 결정을 지지해 달라', 그런 것을 열심히 설득해서 지지를 모으는 것들이 그런 해외의 투기적인 행동펀드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핵심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자꾸 행동펀드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회사법이 개정되면 엘리엇

같은 데가 들어와서 공격하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엇 같은 데가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꿔 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주식들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막아 내는 핵심은 뭡니까?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거지요. 엘리엇이 들어와서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현대자동차가 쉽게 방어해 냈던 게 뭐예요? 다른 주주들이 엘리엇을 지지하지 않고 다 현대자동차의 경영 임원들을 지지해 주니까 쉽게 방어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은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내는 것들이 그런 투기적인 공격세력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식이지, 그거를 위해서 따로 재계를 위한 어떤 특혜적인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도 우리나라 재계의 좀 독특한 모습 중의 하나인데 제도가 필요한 건 또 상법 개정이 된 다음에 또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태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정부한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슨 제도를 만들어 달라…… 재계가 그렇게 약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투자자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데가 해야 될 것들은 주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 내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일본의 이토 보고서도 지배구조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의 거래소 상장기업 구조 개편 그것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5개가 되는 시장을 우리처럼 3개로, 우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하듯이 3개의 시장으로 재편해 내는데 그 시장을 재편해 내면서 거기에서 상장조건을 죽 정리해 나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코드 이행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사회 의장은 우리처럼 대표이사가 맡는 게 아니라 독립이사 중의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경영 임원하고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 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상장요건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바꿔 냈다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

었는지 이번 국정감사 때 저는 국회 정무위나…… 국민연금이 보건복지위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보건복지위나 이런 데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평가 이런 것도 저는 정확히 해서……

상법이 개정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정된 것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지를 하려면 그 주식시장에 있었던 플레이어인 국민연금이나 그런 은행, 증권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겸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사회적 책임투자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증권회사, 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들을 변화시켜 내는 것들이 저는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많이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는 회삿돈을 수백억 횡령했는데 아직도 이사를, 심지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효성·태광 이런 데들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랬다면 그런 데의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회삿돈을 횡령해 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계속 이사회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그런 회사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에도 지금 국민연금이 다 투자한 게 있고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이라면 이제 이런 상법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독립적인 이사로 바꿔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표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 냈느냐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4개 정도는 다 두고 있어요.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특별한 주주나 임원들을 위해서 특혜적인 거래 같은 것을 하지 않는지 내부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임원 보수가 과다하지 않은지 임원보수위원회 이런 전문위원회를 둬서 이사들도 그 이사회 산하의 그런 소전문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시활동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성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여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한 명도 여성 이사가 없는 그런 대기업도 많아요. 그리고 글로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도 이사회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지배주주하고는 결이 다른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독립 이사들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일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집중투표제니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한 분리선출이니 이게 다 취지가 뭡니까? 이사회의 다양성을 만들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돼서 이사회가 독립이사들 적어도 3분의 1, 2분의 1 이상 되도록 만들어서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들이 갖춰지

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은 재벌 총수들이 얘기하는 일사불란하게 뭘 결정하는 그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회가 획일적으로 굴러가서 리스크 체킹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체킹을 하도록 하고 주주들의 또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총수가 지시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이사회를 모델로 하면서 이런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다양하게 하는 게 무슨 과도한 규제이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옆에 일본만 해도 이미 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들을 이렇게 다 바꿔 왔잖아요. 미국은 진작에 그랬었고 유럽도 진작에 그랬었고 그런데 한국만 그런 총수,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회사법 개정을 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면 안 따르는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자꾸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부터가 다른 나라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잘 봐야지 자꾸 전근대적인, 재계가 요구하는 '우리가 했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계속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만 가지고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미 바뀌었고.

이런 방식으로,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지배구조를 가지고는 글로벌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다른 국가들, 거래하는 상대방 기업들이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진 기업들하고 잘 거래하지 않으려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미 글로벌 영업을 하려면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자꾸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블랙록이니 캐피탈이니 유럽의 네덜란드 연기금, 노르웨이 연기금, 스웨덴 연기금 이런 데들이 다 ESG 투자를 원칙으로 갖고 움직이고 있고 이사회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선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철회한다.

그리고 거기도 ESG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그런 지배구조의 개선들을 요구하는 작업들 계속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시대적인 흐름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국회 내에서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서도 또 기업 내부에서도 또 사회적인 관계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의 토론이나 비판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체질들을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행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표가 있습니다마는 상장기업에서 독립이사가 3분의 1 이상 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도에는 한 12% 정도 됐는데 그 뒤에는 거의 한 90% 이렇게 되고,

사장이나 이런 임원들을 선임할 때 낙하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천 과정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도 처음 시작할 땐 10%였는데 2023년에 오게 되면 한 87% 정도 되고, 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자기가 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임원보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하는 게 2015년도에는 한 13% 정도 됐는데 2023년에 오게 되면 한 85% 넘게 이렇게 변해 왔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데가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하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책임투자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의 성과들을 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독려하는 활동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행점검이나 이행평가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은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도 금융감독 당국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 같은 것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체계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일본처럼 우리도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 와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성공하지 못했냐? 왜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만 하다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냐? 그것은 핵심을 놓쳤다 이거지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우리가 지금 1차·2차 상법 개정들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진심을 갖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도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밸류업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게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그게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상법 개정에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설정을 했던 부스터 5, 다섯 가지의 정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섯 가지는 하나의 일련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의 입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따로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문제도 잠시 보류를 한 것이지 하나의 세트로 원래부터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입법 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래서 안심하고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런 식의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어떤 문화, 경영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이사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적어도 독립이사 3분의 1, 2조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독립이사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 같은 건 이사 수도 많고 대부분 지배주주를 지지하는 그런 이사들만 선출돼 가지고 이사회의 거수기다 이런 비판이 많고 앞에서도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심각한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 거수기 역할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장치로서 둔 것이 2조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의 분리선출을 2명까지, 2명 이상으로 확대하자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할 건 그 두 가지 것에 대한 것인데 그건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사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현장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전자주주총회를 두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트 입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까지 있다라는 것들은 다 글로벌한 기준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의 판례에 다, 그게 명문으로 돼 있든 판례로 돼 있든 다 일치된 것이어서 이걸 확대라는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혁적으로 충실의무를 회사한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혁이 좀 있었다는 거지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언제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나. 우리 상법은 대륙법계통의 상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을 계수해 가지고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있고 그 위임 계약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을 잘해 달라 이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위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의무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IMF 때 대거 부도가 나고 그때 이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 이사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 이사회를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 영미식의, 미국법에 있는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 충실의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하기로 해서 그때 충실의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법 체계에 의하게 되면 이사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영미법상에 있어서의—영미법에서는 계약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이 충실, 피듀시어리 듀티는 소위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수탁자들은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에 기초한 두 가지 의무를 갖는 거지요.

보통 피듀시어리 듀티는 이해충돌 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지배주주인 경영 임원하고 일반주주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에 작동하는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이때 도입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충실의무라는 것들은,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것들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처럼 주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이 있어야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 이건 아닌 거지요. 미국도 다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어떤 위임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닌데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위임계약이 없는데 무슨 충실의무와 같은 의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영미법의 형평법상의 충실의무라는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충실의무, 피듀시어리 듀티 하게 되면 그것은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의무의 성격이다, 책임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삼성 에버랜드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임죄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형사 책임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원리에 의하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책임을 묻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민사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인 것. 그러니까 제재적 성격이 필요하게 되면 손해배상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과 같은 그런 식의 행정벌을 통해서 해야 되고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소위 보충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은 형법과 같은 어떤 형사 법전에 명문으로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소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형법과 같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원리입니다. 이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있어서의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배임죄 책임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형사 책임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배임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회사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만 배임죄로 처벌해야 되고 주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형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된다는 게 민사 책임도 묻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아마 대형 로펌이라는 데가 그렇게 해석을 해 주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됐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이 문제가 됐던 합병·분할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이사들은 일반주주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의 해석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있고 주주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혼선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까지 확대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확대이기보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이런 혼란들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까지 한다라는 것들이 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만일 상법을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배임죄가 확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했던 것처럼 배임죄에 있어서는 민사책임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 부분들을 그렇게 확대할 가능성은 없고 또 이미 법원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면 배임죄든 어떤 것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런 법리들을 확고히 해 왔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권한도 없는데 밖에서 막 지시를 해 가지고 이사회가 결의를 하게 만들었다, 소위 이런 월권을 했다, 그래서 권한을 넘어서 월권을 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 그런 경영상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이나 배임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도 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그래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무슨 형사적 책임을 확대하는 걸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재계가 진짜 그런 게 우려가 된다면 형법이나 이런 데 배임죄를 개정을 해서 판례로써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서 경영상 판단에 적정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경영상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가지고 배임죄로 재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남용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히 하자.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상법 개정 이후에 한번 정비하는 작업을 하자, 그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코스피 위원회도 내일 상법이 통과가 되면 재계하고 만나서 그런 후속적인 보완 작업으로 배임죄 같은 걸 정비하는 논의라든가 또 재계가 요구하는, 상법 개정이 된 이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자사주가 개혁될 경우에 대비해서 경영권 방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걸 동시이행 관계처럼 얘기해 가지

고 배임죄도 정비되고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되고 그런 것 다 될 때까지는 상법 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조금 연관이 없는 것들을 너무 무리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개혁들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대로 하고 그 이후에 또 재계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재계가 요구하는 그런 배임죄, 경제 형벌이 확대되는 것들을 막고 그런 것들은 또 따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자 이겁니다.

이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신이라든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이런 때를 거치면서 형벌이 좀 남용됐던 측면이 있어요. 무슨 법만 만들면, 걸핏하면 형벌 조항들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일반형법 외에 특수한 형법들이 굉장히 많고 경제 관련 법에도 꼭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들을 집어넣고 그랬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책임 있는 걸 아예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으니까 민사책임을 좀 활성화해서 집단소송제라든가 디스커버리 제도 등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악의적이고 무모하게 이렇게 배상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가지고 피해를 확대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 형벌들을 좀 정비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이제 곧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재계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또 재계가 상당히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같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사회,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만 변경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던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사외이사라고 그래서 그게 다 독립이사는 아니잖아요. 아웃사이드 디렉터(outside director)라는 것하고 인디펜던트 디렉터(independent director)라는 건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디렉터, 사외이사라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대표이사를 자문해 주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자문해 주고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경영 임원들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체킹 앤드 밸런싱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독립이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있어야 된다. 사외이사면 그게 다 독립이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장님, 법무부장관이 자리에 이렇게 이석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법무부장관은 지금 식사를 좀 하러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양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국회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하루 종일 여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식사하러 갔다니까요. 식사하고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김남근 의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시지

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발언 중인데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따로 가서 얘기하세요, 따로. 토론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는데 장관이 이석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 국회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사람이 앞에 뻔히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좀 시정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분부터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저분부터」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회의장 의사정리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그게 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지요.

토론을 계속해 주세요.

○김남근 의원 그러시지요.

송석준 의원님, 이제 양당 협의하시라니까 빨리 가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회를 독립이사 3분의 1로 구성하자, 이건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도 나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2분의 1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1차 상법 개정안에 통과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지금 2차 상법 개정, 내일 표결을 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하는 걸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들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입법 체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립이사라는 것들은 사외이사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사외이사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보게 되면 대표이사에 어떤 자문을 해 주고 있는, 평상시에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경영이 뭔가 독립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외이사라 그래서 그걸 다 독립이사라 할 수는 없고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법원이 해서 독립이사의 여부를 판단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독립이사가 3분의 1로 구성돼 가지고 한 것인지의 여부들을 심사할 때는 별도의 독립이사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증권회사, 은행과 같은 그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때 독립이사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사외이사라 그래서 다 독립이사로 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 지배주주로부터 영향력이 있어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냐를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령이나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배구조를 변경해라,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도 하기 때문에 독립이사라는 것들의 개념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사외이사에 대한 그냥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어떤 우리

회사법상에 있어서의 지배구조의 변경들을 시도하는 작업이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독립이사들이 강조가 되게 됐느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연혁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년대, 60년대의 판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이 많았는데 거기 판례에 보면 러버 스탬프(rubber stamp)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판례에 보면. 고무 도장에 불과했다. 그냥 지배주주나 대표이사가 시키면 와서 고무 도장만 찍지 이사회 활동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무 도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이사들에 대해서 충실의무 위반이다. 그다음에 주주 대표 소송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징벌적 배상 소송도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미국에서는 이렇게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이사들은 없어지고 독립적인 역할도 하고 적극적으로 분석도 하고 발언도 하고 역할도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사회의 체계가 바뀌어 나간 것이지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월드컴, 엔론 이런 대규모의 회계분식 사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대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이라는 건데요.

미국은 우리와 달리 국회의원의 이름을 따서 법 이름을 명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베인스라는 민주당 의원과 옥슬리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주도를 해 가지고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아주 대대적으로 바꿔 내는 그런 입법 시도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베인스-옥슬리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여야 합의로…… 그때는 상당히 미국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사베인스-옥슬리법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필요적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그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가 뭐 보고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하고 그 감사위원회에 이사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회계문서 같은 것들을 수시로 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들이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제도 같은 것들을 필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 매달 열리는, 이사회하고 감사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하고 우리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임원들의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따지는 임원보수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임원도 일방적으로 낙하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내부거래, 임원들이 어떤 특혜를 받아 가지고 회사와 거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거래를 심사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이런 전문위원회들을 이사회 산하에 두도록 하는 이런 체계의 입법들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나와 있게 되고요.

이 사베인스-옥슬리법 이후에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한

경영이 아니라 체킹 앤 밸런싱, '견제와 감시의 역할들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회 지배구조가 변화해야 된다'가 되고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하게 되면 반드시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독립이사는 경영에 참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독립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그중에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그런 게 돼서 미국은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큰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지 않고 별도의 독립이사 중에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는 거지요.

미국식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서 쫓아갔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보면 초기에 이사회 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코드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이사들로 바꾸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체계들을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이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을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취지의 것들이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이 좀 독특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계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배구조의 변화하는 과정이고 뒤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집중투표제는 1차 상법 개정하고 딴것처럼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조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독립이사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기관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서 계속 독립이사들로 하라는 변화를 시도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독립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독립이사들을,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선출하는 그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집중투표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각 주주들은 한 주당 어떻게 보면 3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소액주주들 중의 한 명이,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두자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글로벌 스탠더드한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스탠더드한 이사회 지배구조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자사주 도입하고 그러던 시기쯤에 집중투표제 제도도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래대로 잘 도입이 됐으면 되는데 도입을 하면서 또 재계가 막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때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단서 규정을 두게 됐는데 본문과 단서가 완전히 전도돼서 대부분의 기업

들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그런 정관들을 두면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 실제 도입된 데들은 한 4.5%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집중투표제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적어도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입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2조 이상이 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자산 2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법령이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 의무를 부여받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2조 이상인데 그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하고 있는, 2조 이상이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게 214개입니다. 그래서 214개 기업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슨 강한 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을 잘못 이해하신 거지요. 이것은 2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도입하자라는 것이거든요.

2조 이상의 대기업이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블랙록이니 캐피털이니 네덜란드 연기금이니 노르웨이 연기금이니 이런 해외의 ESG, 책임투자 원칙들을 가진 데들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게 돼 있고 개선을 요구받게 돼 있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찾아 가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2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글로벌 경영을 하는 데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블랙록, 캐피털, 그런 여러 연기금, 해외 연기금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글로벌 투자들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2조 이상이면 법무팀이 다 있어요, 법무 담당 팀이」 하는 의원 있음)

글쎄요. 그러니까 2조 이상 글로벌 경영하는 대기업들이 이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행동 펀드들한테 다 먹혀 가지고 무슨 진짜 경영권을 뺏기고 이런 것은 너무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2조 이상의 200여 개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무능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그런 글로벌 경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런 2조 이상의 200여 개의 대기업들이 이런 글로벌한 기준들을 못 이행해 낼 것이다라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왜곡된 주장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자꾸 이 집중투표제를 엘리엇이니 이런 해외의 행동 펀드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들을 대부분 다 물리치는 것은 뭡니까? 현대자동차도 보게 되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물리치는 방식은 무슨 포이즌 필을 도입해 달라, 재계를 위한 어떤 특별한 제도를 도입해 달라가 아니라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주주들의 지지를 열심히 하고…… 일본의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주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라,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다 방어해 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엘리엇을 어떻게 방어해 냈습니까? 다른 주주들이 다 지지를 해 줬잖아요, 현대자동차 임원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지주에 열심인 그런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설마 그걸 엘리엇을 지지하겠어요, 우리나라 주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동 펀드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긴다, 먹힌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사회를 다 휘저어 놓을 거다라는 것은 상당한 정도 공포 마케팅이 있다, 우리나라의 2조 이상 되는 대기업들이 그런 정도를 방어해 내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어서 좀 과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이 아닐까 그런 점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문제입니다.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문제가 왜 나왔었냐면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감사는 좀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있었고요. 감사위원 제도가 그래서 도입될 때도 그 연장선에서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감사위원들을 주주총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한 명을, 한두 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이 또 독립성을 못 갖게 되고 사베인스-옥슬리법이나 이런 것의 어떤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에서 1명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도록, 1명 이상을 뽑으면 감사위원이 될 사람이니까 3% 룰이 적용돼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개혁은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주주,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선임이 됐고 그들이 이사회에 가서도 그런 독립적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성공적인 개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적어도 2조 이상의 대기업들은 이사 수가 많으니까 그게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2명 이상이니까 꼭 2명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명도 4명도 하라 이런 얘기고 그런 것들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을 좀 확대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활동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배구조를 바꿔 내 보자 그런 것들이 이 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차, 내일 표결을 할 이 두 제도가 결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자, 독립이사 2분의 1, 3분의 1을 구성되자라는 것 중에서 우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1차 상법 개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것이어서 1차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2차를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방어해 내기가, 행동 펀드나 이런 데로부터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유라는 건데 그것은 법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지요. 이것은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 214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하자라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투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상법 개정 내용입니다, 이것도 1차에 통과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주주총회에 일반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전자주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자주총과 현장주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3월 말이 되면 한꺼번에 한 2주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여러 주총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개씩이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주주들이 대부분 다 주총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자꾸 앞에서 존경하시는 조배숙 의원님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게 부담이 크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서 전자주주총회를 그 기업이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고 저희도 이것 입법을 할 때, 입법 준비를 할 때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 다 조회를 해 봤고 충분히 그런 기술적·관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다,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야 이런 것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들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고 또 이미 유예기간들을 다 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저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해서 일반주주들이 주총에는 가능하면 참여하는 문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일반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또 독립이사가 될 그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에 대한 분리선출 과정에서 그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출해서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제가 그런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 경영대의 김우진 교수님의 전망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왜 운영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이 상법 개정이. 그래서 자본 효율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서울대 경영대 김우진 교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주요 국도 충실의무의 궁극적 대상이 주주라는 점을 부정하는 곳은 없다. 이는 너무 명백함에도 한국의 법원 판례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건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경영진은 회사 운영의 기본 목표가 기업가치 극대화임에도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했다. 우리나라 경영의 방식이 그냥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뭐 짓고 뭐 이런 것만 했고 기업의 내실 있는 가치,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가치 극대화, 좁혀서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경영진들이 다 염두에 둘 거다, 이 법 개정에 따라서. 특히 이사회가 늘 염두에 둬야 하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사회가 앞으로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주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경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충실의무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회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면 상장회사의 이익이 그리로 빠져나간다. 우리 재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총수 일가들이 그런 개인회사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식당, 뭐 무슨 전산, 온갖 것들을 다 밀어줘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기업집단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충돌들이 주주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이제 이사회는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합병을 옛날처럼 기계적으로 승인하기가 어렵다. 아까 어떤 한양대에 있는 경영대 교수님이 우리 재벌들은 합병과 분할을 마치 레고 놀이하듯이 한다, 붙였다 찢었다 붙였다 찢었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걸 하기가, 이렇게 기계식으로 레고 놀이 하듯이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 법이 명확해졌으므로 소송을 통해 판례가 쌓여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대 경영대 김우진 교수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주 충실의무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데 한국 기업 저평가의 또 다른 이유는 번 돈을 쌓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투자를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경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의 문제는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그냥 쌓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내부 유보가 너무 많다. 배당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해야 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왜 돈을 두고만 있냐, 빨리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이러는 걸 독촉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런 독립이사들이 없으니까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이론상 기업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익을 내도 돈을 쌓아 두면 분모가 커져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일본이 이 ROE를 주목하게 된 게 그거지요, ROE를 자꾸 높이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이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실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이사회가 독립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독립이사를 뽑기 위해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이 왜 필요하냐를 지금 딱 보여 주는 거지요.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가 최소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이다.

(「조금 천천히…… 자꾸 빨라져」 하는 의원 있음)

고객께서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수강생이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가 최소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의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독립이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2단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 경영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이런 2차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앞에 이사의 충실의무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실제로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일부 국내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자본을 쌓아 두고 있다.

섬유화학 등에서 한때 열심히 제조업을 했으나 새로운 산업 흐름에 맞춰 변신하지 못해서 공장 터나 건물을 잔뜩 갖고 부동산업이 주업처럼 된 기업들도 많다.

우리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화그룹하고 대림의 입장이 달라요. 대림처럼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고부가가치의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데들은 계속해서 옛날 에틸렌 이런 거 기초화학제품 만드는 회사를 유지하는 거기에 다시 돈을 계속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요, 많은 변화를 시도했으니까. 그런데 한화처럼 옛날 에틸렌 이런 기초화학만 갖고서는 더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데들은 계속 그거 버티는 데만 시간을 끄니까 화학 이런 데 구조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때, 그때 화학이 한참 잘 나가서 에틸렌, 나프타 이런 기초화학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그 이사회가 정상적이었으면 그거 가지고 '빨리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자. 변화를 하자. 돈 쌓아 두고만 있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잘 작동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산업의 위기 같은 것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잠긴 돈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국내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2024년에 0.8인데 선진국 23개국의 평균이 3.5배이다. 우리가 0.8인데 선진국은 3.5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흥국 24국의 평균은 1.8 정도인데 이런 신흥국에도 못 미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PBR 2 정도로 정책적 목표를 놓고 그 PBR 2 정도가 되도록 그런 투자나…… 그게 자꾸 상법이 개정되면 투자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PBR 2가 되려면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쌓아 둔 돈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자꾸 돈을 쌓아 두기만 하려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런 게으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회 독립이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자든 배당이든 통해 가지고 자꾸 변화를 시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PBR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이번 상법,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효과인 것이고 그것 착실하게 해 나가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주식시장의 전문가인 그런 교수들의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전문가인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법 개정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을 이렇게 시급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의 시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일부는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7월 말에 한 3200 갔고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이 했고 새 정부 출범한다라는 그 기운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 4개월 사이에 한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그러면 왜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게 됐느냐, 특별한 모멘텀이 있냐, 무슨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 장의 이건 증권거래소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증시 주변 자금들이 많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 그동안 침체됐던 증시 주변으로 자금들이 몰리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이런 거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래대금 이런 거에 뭐가 영향을 주냐 하면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국회를 찾아와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이 유럽에 투자할 거, 아시아에 투자할 거, 미국에 투자할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 놨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본은 이미 밸류업이 돼서 많이 올랐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 한국에 들어올 모멘텀이 없다. 한국이 여전히 유럽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나쁜 곳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

투명하게 기업 지배구조들이 운영이 되고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시현되고 있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투자 심리가,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투명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신호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는 일부 이미 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상승 배경 해 가지고 이것도 증권거래소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 등 이런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증대들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표에 있습니다마는—예전에 한 2013년경에는 국내 주식에 한 20%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 1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국민연금이 계속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꾸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국내 투자 비율을 줄이고. 이게 또 주가가 떨어지는 데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

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납부할 보험료하고 나중에 받을 소득 부분들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지 이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주식시장의 이런 밸류업,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코스피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도 우리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을 탄탄히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한 2.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인데 해외 채권 수익률은 4% 정도여서 한 7%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주식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국내 주식에서의 수익률이 낮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이 주로 투자하는 데가,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를 하려면 대부분 자산 2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큰 기업들인데요. 그런 데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혁들을 통해서 주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코스피 5000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를 지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강만 더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5000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 할 때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수치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런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혁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들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작할 때 2012년에 아베노믹스 할 때 그 중요한 정책으로 잡았던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상법에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선뿐만이 아니라 합병·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전환사채, 앞에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예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각 개별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합병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캣하고 두산로보틱스 합병 사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들은 굉장히 자의적인 합병비율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시가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라는 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그런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시가가 가장 낮아진 시점

에 합병비율 같은 것들을 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합병비율을 정할 때는 시가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실적, 자산 이런 것들, 소위 내재적 가치들을 갖고 있는 공정가액을 가지고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한다라든가.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독일처럼 합병검사인 제도 같은 것을 둬서 절차적으로 합병들을 그냥 외부의 어떤 회계사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법원의 어떤 검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것들이 유망한 사업들을 신규로 시작한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물적분할을 한 다음에 별도 상장하는 소위 쪼개기 상장, 이중 상장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뒷부분에 별도 상장을 할 때는 적어도 한 30% 정도는 모회사에, 원래 투자했던 분들을 위해서 새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의 30% 정도를 배정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또 주주 보호하는 장치들을 두고.

또 기업 인수 같은 것을 할 때도, 예전에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배주주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하는 인수 금액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인수하는 금액에 있어서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25% 이상 지배주주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경영권 프레임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나머지 주식, 그게 50%는 100%든 그런 의무공개매수제도 같은 것들을 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주주를 보호하는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법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의 주주 보호제도를 자본시장법에서 그 두 가지 경우만 도입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인수 문제라든가 유상증자, 상장폐지, 전환사채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 사안, 사안마다 특수하게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자본시장법에 도입을 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상법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이 발맞춰 가지고 바로 논의를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들의 목표를 세우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사주 남용을 막고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스톡옵션과 같은 임원들 보상이라든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전환에 따른 주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라든가 또 종업원 그런 조합 같은 데서, 우리사주조합 같은 데 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도록.

그런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기업들에서도 많이 문의가 와요. 실제로 그렇게 추진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범을 보이겠다는 대기업들도 좀 있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화재에서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걸 보였고 자사

주가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도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해 보겠다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 20%씩 갖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저는 그중의 일부는 반드시 소각을 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과다 보유했던 것들을 법이 바뀐다고 다 팔아 버리고 주가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내재적 가치의 지표, 돈 쌓아만 두고 그걸 잘 활용하지 않고 있냐를 따지는,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뭘 하라고 하는 그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진국처럼 3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흥국 수준인 2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투자나 배당들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정책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거야 개별 기업에 대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현장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표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해 낼 것들을 계속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공개 대화를 통해서, 안 되면 이건 주주환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위 포커스 리스팅(focus listing)이라고 그러지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발표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좀 이끌어 내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주로 그게 국민연금보다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펜실베이니아 트럭노조 연금 이런 식의 연기금들입니다만 이런 데들은 서로 연기금들끼리, 기관투자자들끼리 또 연합을 해 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도 하는데 내년 주총 시즌에는 이런 기관투자자들끼리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주주환원 정책들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년에 또 우리 주식시장을 크게 활성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나 증권, 은행 이런 데 있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하는…… 그래서 지금 증권이나 은행들은 금감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들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또 그것도 의문이 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위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통해서 일본의 사례처럼 이사회를 독립이사 3분의 1로 바꿔 냈다라든가 이런 지배구조를 바꿔 낸, 횡령·배임을 하고도 안 물러나고 있는, 기업에 횡령·배임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그 이사들에 대해서 사임을 하게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지배구조를 바꾼 사례라든가 PBR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강화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낸다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

검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실현되도록 한다고 하면 좀 더 코스피 5000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 외에도 자본시장 질서도 좀 철저히, 그동안 증권거래소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가 자본시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삼부토건 같은 사건이, 딱 봐도 증권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상황이다라는 게 다 체크가 됐고 그게 몇 개의 통장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상거래들이 일어났고 이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떠어떤 사람들이 얼마의 초과적인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까지가 다 분석이 됐으면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제재가 되고 수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뻔한 사건들을,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과 같은 사건들을 2년, 윤석열 정부 3년 다 되도록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결론을 못 냈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금감원이 무능하다, 증권거래소가 무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새로운 금감원장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선서를 해야 된다.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 나오면 이제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바로 체크돼서 오면 금감원에서 1개월 내에 딱 조사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안 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기관하고 협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통화했냐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그때 통화한 내역들 확인하면 되지, 서로 핑퐁하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줘서 2년 동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런 식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금감원장이 되면 안 된다, 금감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 감독에 대한 신뢰들을 높여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큰 한 발짝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제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또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지금은 각 개인별로 금융상품을 사는 거지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 가지고 그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 2%도 수익이 안 나요. 그냥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위탁수수료를 챙기는 것 외에 개인들에게 큰 효과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개별개별 해서 작게 투자를 해 가지고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막 몇백조 단위를 주식시장에 투입을 해야지 그래야 7% 수익도 내고 그러는 건데, 퇴직연금도 거의 한 600조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커지겠지요. 그러면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 정도는 기금화해서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7%, 9%, 1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개인한테 배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막 600조나 되는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또 코스피 5000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작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기금화하기 위한 입법들을 발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새로운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MSCI 지수라고 그러지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이라고 하는 MSC라는 회사의 index(지표)인데 일단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해외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기관투자자들이 이걸 가지고 해외투자를 하니까 다른 유럽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도, 아시아 기관투자자들도 이 지표들을 잘 주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선진국으로 안 돼 있고 신흥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신흥국 중에서는 투자하는 포지션이 크겠지만 선진국이 아니니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MSCI 지수를 우리가 선진국에 편입되도록 하는 작업들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 코스피 5000으로 가는 큰 걸음들을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게 저희가 한 방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런 여러 제도들을 입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재계하고 또 투자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열어 가지고 배임죄 문제, 경제형벌 문제 합리화는 어떻게 할 거냐, 자사주 같은 걸 도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계속 점검해 나가고 또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해 나가고 행정적인 이행 점검이나 감독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그러면 코스피 5000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어찌 보면 코스피 5000이라는 것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전략들이 충분히 실현되게 되면 충분히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목표이고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이걸 해 나갈 것이다. 그냥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밸류업 해서 이름만 똑같이 밸류업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코리아 밸류업 해 놓고 그냥 시늉만 하다가 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진심을 갖고 할 거다. 그게 코스피 5000이라는 어떤 정책적 목표로 진정성을 담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설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진정성을 갖고 저희가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상법 개정을 시도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2500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권의 코스피가 3000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밸류업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세제 같은 논의도 아마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반대 논리들, 많은 반대 논리들을 재계에서는 제기를 하고, 일정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약간 부풀려진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고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무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계도 입장을 바꿔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포이즌 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 달라,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또 얼마든지 논의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계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배구조 개선 이외에 또 자사주 제도 개혁이라든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라든가 지속적인, 계속 이어서 중단되지 않는 그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투자자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 날 저희가 자사주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토론회, 의견을 모으기 위한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 되면 바로 재계하고 연락해 가지고 재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도 코스피5000위원회라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경제형벌 같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TF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계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는 것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반대 논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소송 남발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중론 없이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권고 이런 걸 많이 해 오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의 김우진 교수님의 반대 논리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충실의무가 회사와 주주를 대립적 위치에 놓는 게 아니다. 재계가 충실의무를 마치 그냥 회사와 주주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주가 배당을 더 하라고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배당을 더 하라는 식의 그런 소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사가 투자나 인수합병에 실패해도 마찬가지다.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걸 면책하게 하는 게 경영상 판단의 원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이미 우리 법원에 딱 정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법리로서 이미 명확히 정립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판례의 법리를 한번 그냥 읽어 드리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러한 임원의 행위는 경영 판단의 허용되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재량,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판례에 정립돼 있고 이게 무분별하게 이사들에게 민사적 책임이나 배임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들을 막아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경영자를 대신해 가지고 판사가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경영적 판단을 했다라는 것만 있으면 판단을 잘했든 못했든, 석유공사가 5조를 날렸든 그것도 경영상 판단이라면 다 인정해 주고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지원해 주

다가 380억을 날렸는데 그게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적 판단이었다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도 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도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서 다 책임을 면책해 주는, 민사책임·형사책임 다 면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법원이 다 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명확지 않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명문화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배임죄에 관한 부분에 우리 법원의 경영상 판단의 원칙들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법안을 이미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발의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예 배임죄가 대륙법 계통에 있고 영미법에는 친숙하지 않은 제도여서 한번 논의를 한다 그러면 영미법 계통처럼…… 영미법은 왜 그러냐 하면 영미법에서는 이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민사적인 것으로 제재적 효과도 얻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이런 행정벌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배임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모아진다면 그런 집단소송제, 대기업하고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도입하고 그래서 이런 책임을 민사책임 위주로 묻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고 그러면 배임죄 폐지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냥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계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도들을 합리화해 나가는……

과거 유신시대 군사독재 시절에 법만 만들면 무조건 그냥 형벌을 만들어 두고 경제 관련 법에도 무조건 다 형벌들을 둬 가지고 다른 나라의 예가 없이 형벌로 대응하는…… 실제로는 형벌도 다 잘 적용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체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독점이나 재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는 나라들도 있는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두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두환 시절에 공정거래법을 만들면서 아마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형벌 제도를 그냥 막 두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들은 드물고 그다음 과징금제 이런 행정벌을 다투거나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퉈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증거는 다 대기업 안에 있고 중소기업이 입증하려면 그 자료를 재판에 현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디스커버리와 같은 징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에서 중소기업이 이기기가 어렵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 보니까 민사 손해배상도 굉장히 작은 규모고 과징금도 굉장히 관대한 그런 방식의 과징금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위화적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형벌을 남겨 가지고 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민사적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들을 충분히 물을 수 있으면 배임이든 경제형벌이든 이런 형벌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려는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남발이 우려돼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약간 부풀린,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런가. 이런 논리가 많이 나왔던 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만들 때 소송의 남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20년 동안 16건밖에 소송이 없었어요. 1년에 1건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소송 남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좀 과도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보통 임원배상책임제도라는 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사가 직접 배상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자산 2조 이상의 214개의 글로벌한 기업들인데 그런 데들은 이사들에 대해서 다 책임보험 같은 걸 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그냥 이사들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의 책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소송들이 남발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부풀려진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빨리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영을 하는 그런 한 200여 개의 대기업들이 그냥 총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식의 경영상 결정은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어떤 전문가의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경영적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신사업, 신기술 진출을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경영들을 하는 것이지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재벌 총수가 지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사회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재벌 총수라고 하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결정을 못 해서 새로운 사업투자를 못 한다 이런 비판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주장이 아니냐.

이사회에 대한,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사회의 지배구조의 모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누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전근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통은 대부분이 다 경영에 참가하는 경영 임원을 겸하지 않고 그냥 이사 업무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 이사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모델하에서 시스템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지 그것을 과거처럼 우리가 작은 기업을 급하게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70년대, 80년대 모델처럼 그냥 재벌 총수가 지배주주가 결정하면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식의 모델로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경영 간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반대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고 나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큰 기관투자자들이 막 항의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4대 기관투자자 그러면 블랙록, 뱅가드, 캐피

털,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들입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연기금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삼성전자에 다 투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데가 삼성전자는커녕 해외에 나가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지난 30년 동안 해외에 가서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사를 선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4년간 900개가 넘는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해 달라고 그래서 선임됐던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엇, 소버린 이런 투기적인 행동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대표를 주주로 앉힐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들이 주주를 선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5%, 10% 이런 투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만한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예들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능력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주주들의 지지를 얻는 거지요. 다른 주주들이 다, 지배주주가 엘리엇 편을 안 드는데 소버린 편을 안 드는데 어떻게 그들이 경영 간섭을 하고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다 떠나갔지 그들이 성공한 예는 없었다, 이런 큰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에 대한 분리선출을 반대한다, 우려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독립이사들이 경영정보를 유출시켜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업들마다 이사회를 할 때 다 그런 비밀유지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독립이사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기업 경영정보들이 유출되고 그런다는 것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적어도 독립이사로 들어갈 정도면 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기업의 비밀들을 유출시키고 어떤 산업스파이 역할들을 하려고 독립이사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좀 비판을 위한 비판들이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일 투표를 하게 될 그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2차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1차 상법 개정과 하나의 세트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부스트업 5, 밸류업이라는 표현이 좀, 일본이 쓰고 있는 용어여서 부스트업 5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제도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 설정했을 때는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당한 합병,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 상장폐지, 과도한 자사주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고 그게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그런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이 해결되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다 떨어져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부터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 법리적으로는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충실의무로만 해결되지 않고 이사회가 견제를 해 줘야 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베인즈-옥슬리법이라는 미국의 2000년대 이후의 큰 법 개정, 일본도 다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 사베인즈-옥슬리법의 이념, 이사회는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들을 강화한다라는 철학 방향, 이 이사회의 역할들에 대한 그 체계에 따라서 활동을 하려면 이사회가 적어도 독립이사들 3분의 1, 2분의 1 이상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합의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조 이상의 큰 대기업들—한 214개 정도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그런 대부분 글로벌 경영을 하는 데들인데 이런 데들은 독립이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에 대한 분리선출이라는 거지요.

집중투표제라는 게 이사를 3명 뽑는다 그러면 그 소수주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한 후보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대표를 1명 정도는 뽑아서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게 집중투표제이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자는 것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정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를 뽑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2명 정도는 이사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내일 아침에 표결을 할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한 분리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또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미 블랙록, 뱅가드, 네덜란드 연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웨덴 연기금 이런 데들이 다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이사회의 다양성. 적어도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다양화될 수 있는, 그게 여성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일정 정도 구성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글로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글로벌시장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214개의 글로벌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 있어서는 다 이미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갖고 있는 제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일 투표를 해야 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1차 상법과 밀접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 주총에, 3월 말에 한꺼번에 수백개의 기업들의 주총이 열리는 그런 상황하에서 일반주주들이 현장 주총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주총이라는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서 주총을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이런 것을 다 개발해 놓고 있고 그것을 자체 기업들이 다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마치 별개의 것이고 1차를 다 해 본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2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다. 처음서부터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1·2차를 합쳐 가지고 첫 번째 어떤 상법 개

정이 시도가 돼야 되고 그 뒤에도 우리가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상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남용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소각하도록 하는 정책들,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강화하는 것,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기업에 유보되고만 있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돈들을 그게 투자든 배당이든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기업들에 있어서의 기업 내부 가치들을 증가시키는 주주환원 정책들을 강화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죽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진행될 자본시장법 개정, 자사주 개혁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개혁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재계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재계들의 얘기도 들고 그래서 재계들이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의 문제,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이 확대되는 문제, 경제 형벌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와 달리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몇몇 재계의 얘기들만 듣고 주식시장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고 이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는 자국 주식시장의 변화들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착실히 좀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상법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도개혁들을 하게 되었느냐? 단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 전체, 떨어져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큰 비전, 전망,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이것을 경제활력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 3대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창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코스피 5000이라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신산업들의 성장이라는 이러한 큰 목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활력을 새롭게 이끌어 내고 또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지 거기서 자금들이 모이면서 그 자금을, 새로운 신성장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자금들을 펀드라이징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목표, 이런 큰 방향을 잡고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 지금 상법의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다.

당연히 국회도 우리 경제활력을 살려 내는 이런 큰 작업들에 같이 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같이 안 하고서는 따로 하느냐, 지금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게 시기가 있고 이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왔었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했던 정책이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여러 작업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재계하고도 소통하고 투자자하고도 소통하고 전문가들도 소통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는, 코스피를 활성화해 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법 개정이라고 자칭되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에 대한 법 제도 개선 작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국민들이 보내 주셨으면 하고 내일 이것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께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반영해서 내일이라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찬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다 힘을 모아 가지고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20시33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3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의정목표를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난 의정활동 시절을 돌이켜 보면 최근 들어와서 우리 사회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오히려 반하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 현상이 요즘 들어서 특히 아주 심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상법 토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3일 날 제1차 상법 개정안이 이 본회의장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차 상법 개정안과, 오늘 논의돼서 내일 오전에 아마 무조건 통과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긴 시간 반대토론을 해도 민주당은, 범여권은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상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방송 3법, 소위 방송악법 3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기업들, 심지어 외국, 우리 기업들까지도 걱정했던 노란봉투법으로 포장된 노동관계 악법이 오늘 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도 걱정하는 악법을 우리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실, 특히 새롭게 국민들께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제 90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정말 심각한 비극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중앙감리교회 초기에 교회를 이끌었던 3대 전도사이신 구연영 선생님의 118주년 순직 추도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본회의장 저의 반대토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연영 선생님은 구한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구한말 국운이 쇠할 때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의병 거병을 해서 실제 전투에 의병장으로 참전하고 또 승리했던 정말 존경스러운 구한말의 구국의병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의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힘에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의병활동이 침체될 무렵에 애국계몽운동에 나서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쇠퇴함을 막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기독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면서 신앙활동을 통해서 꺼져 가는 우리 대한제국,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1907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는 안타까운 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연영 의사님의 고장이 바로 제 지역구고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구한말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선배들께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근대화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얕보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한 이 시점, 세계가 그렇게 환호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이라는 이러한 한류 영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 케이팝이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세계가 그렇게 존경하고 세계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가서는 안 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은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함께하고 계시는 이학영 부의장님께도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정말 반성하시고.

만약에 이 법도 내일 통과된다면 정말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바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재의요구 꼭 해 주십사 하고, 양심선언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재의요구만 그렇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할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얘기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반성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구연영 의사, 순직하신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시 한번 오늘 1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또 민심을 잘못 읽고 다시 역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또 기대해 봅니다.

지난 77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면서도 또 대한민국 정부수립 77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분들께서는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각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국가의 제도와 여러 가지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포용적 법치주의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또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를 같이 이루어 낸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어쩌면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유일한 발전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행의 제도를 우리는 이번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악법 시리즈 억지 통과로써 우리가 그렇게 가꿔 온, 지난 77년간 가꿔 온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심지어 짓밟고자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인정하고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답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도를 왜, 왜 허물려고 하는 겁니까!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국민들께서 반대하시고 심지어 외국 기업들도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노란 봉투로 포장된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방송 공정화를 핑계로 사실상 노조에게 언론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방송 3법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곧 통과시킬 상법 2차, 지난 1차와 묶어서 그야말로 반기업적이고 시대에 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악법 통과를 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1차에 이어서 이번에 2차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에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친기업을 하겠다. 실용정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그렇게 기업들이 반대하고 언론에서 학계에서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반기업적 악법 상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개발비리, 저는 양두구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불독에 제가 대똥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장동 비리 문제를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친기업을 외치면서 이렇게 사실상 기업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로 위장된 반기업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1·2차 상법 통과시키는 것은 전

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역구 주변의 골목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심지어 농촌 현장을 가 보십시오. 제조업 현장 가 보십시오. 구석구석에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3년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으시지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 뭐」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일부는 영향을 줬겠지요.

하지만 제가 어제저녁을, 제가 제 지역구의 외식업협회 회장님을 맡으면서 또 이천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 순두붓집, 두붓집을 갔었습니다.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굉장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음식점인데 거기가 한때는 월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알찬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월 2000만 원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혹시 비상계엄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게 엄청 서민경제에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음식점에서 52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제일 유명한 순두붓집인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은 한두 명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만 한답니다. 해 봤자 남는 게 없고 요즘 또 원자잿값, 물가, 여러 가지가 오르다 보니까, 자잿값도 오른데다가 이 인건비 감당이 안 되고 실제 인건비로 억지로 구해도 시간, 그 시간을 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는 만약에 그분들에게 유연한 탄력적인 고용을 허용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의 유연성을 준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용이 서로 매칭이 돼서 자유롭게 고용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 골목경제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음식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일부 음식점들은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그런 서로 타협에 의해서 이렇게 유토리 있는 시간 운영과 또 임금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식당이 매출이 줄었다면서요. 와서 밥 먹을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있어요. 물론 소비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도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 중소기업 또는 외식업, 이런 자영업, 심지어 시설농들의 경영 현장에 가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의 그 폐해가 시차를 두

고 아주 역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단적인 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역에 시설농들이 많습니다. 시설농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 의존해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똑같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시간 52시간 적용을 하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훨씬 더 자기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더 싼 임금을 줘도 할 의향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불법으로 모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농들이 경쟁력을 잃고, 더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생산비는 늘고 결국은 그 이삼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시설농들이 비용을 감당 못 하고 누적 적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밥상이 무너집니다. 상추, 시금치, 모든 우리 야채들이 말이지요. 시설농들이 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너무 오르고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그런 노동규제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접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공급합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해 오나요? 야채는 수입도 잘 안 돼요.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1·2차 상법 개정 또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무슨 방송 3법 개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경제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뵈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평소 같았으면 야유가 터지고 고성이 난무할 텐데, 오늘 정청래 대표님 안 계시네요. 아까 오셔서 또 오늘 고성이 좀 여기서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안 계시네요. 저 뒤에서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신 모습에 제가 참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상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친기업 정책을 외치던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이제 100일이 다가오는데 100일 기념으로 가장 공적으로 이거를 이제는 자랑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그야말로 오명으로 남을 건지 이제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 현실이 말해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 지역구 또는 여기 서울, 지방 이렇게 도시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느끼는 바로 현실이고, 아마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우리 김기표 의원님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김기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한 요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이 사실 서민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바로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저성장 또 코로나의 후유증 또 국제적인 어떤 공급망의 애로 이런 거로 인한 고물가 또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제 트럼프발 위기잖아요.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렇게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FTA를 통해서, 특히 한국에게는 많은 기회를 열고 또 과거 노무현 정부, 소위 좌파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해서 그래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견조한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소위 트럼피즘에 의해서 이제는 관세 폭탄을 우리 기업들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치인들은 모르실 겁니다. 기업인들이 당면하는, 직면하는 이 관세 폭탄은 정말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내던 이런 세금을, 돈을 그야말로 10% 넘어서 15%, 100%, 200%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외환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험한 환경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건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민의의 전당 이곳, 우리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로 예기치 않았던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 관세 폭탄으로 위기에 처한 이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만들어 온,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기업가정신으로 오늘날을 만들어 온 그분들을 우리가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바로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보니까 법인세, 세법을 또 개정해서 법인세율을 올렸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오히려 세율을 깎아 줘도 기업들은 이거 갖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선언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르다고.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시행이 안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확실하게 정말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막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국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도 아직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진 환경 속에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사위……」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할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바로 우리 국

회가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 또 상법 이런 악법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제 국민들에게는 또 기업들에게는 갑갑한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 아직은 국민들이나 또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시지요. 지금 이러한 법이, 상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고치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한다는데 왜 그렇게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뒷골목 또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는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경영에도 노동자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 단기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의 장기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심지어 이제 억지로 감사위원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고급정보를 빼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타격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억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폐해는 나타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3년 전,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에 시행됐던 소득주도성장의 그 폐해가 지금 구석구석에 시차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민들과 그러한 것을 공유하면서 다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더 강도 높은 이 노동관계법, 노조의…… 예를 들면 단일노조 민노총이면 이제는 모든 산업현장에 당사자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새로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또 사용자의 범위도 모호하게,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원청, 모든 관계자가 다 사용자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활동,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그야말로 이제는 기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고 파업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의 주권이 기업경영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넘어간다면 이제는 누가 소를 키우고요 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통과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불법적인 이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 주겠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파업과 이런 산업현장이 그야말로 분쟁의 대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 뭐를 다 어기게 되면 실제 다 소송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기업현장 구석구석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다 소송 대상이 되고 쟁의 대상이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소송의 대격전장으로 바꾸고

또 파업, 노동쟁의의 대격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기업이 이제 기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다들 가시고 어떻게 두 분만 계시는데 우리 법사위원님들은 이렇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 많이 안 하셨잖아요. 여기 좀 아시는 분들이 떠나셔서 제가 갑갑한데 정말 우리 두 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제현실을 좀 냉철히 진단해 보시고 우리가 법을 하나 잘못 만들었을 때 그 법이 얼마나 현실에는 구속이 되고 제약이 되고 불확실성이 되고 위험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진지하게 법적인, 리걸 마인드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코노믹 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좀 진단해 보고 또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입법화하는 데 같이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일련의 악법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런 8개 단체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또 이번에 특히 오늘 제가 반대토론하는 상법 추가 개정이 얼마나 이게 앞으로 폐해를 줄 건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국민 호소문을 여기저기서, 이미 벌써 우리 국회 소통관에서 수차례 있었고요.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 앞의 계단 위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간절한 호소문을 경제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이랬겠습니까? 그 호소와 절규를 정말 우리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김기표 의원님,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지요? 다시 한번 이분들의 구구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보셔야 돼요.

지난 2021년도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제가 굉장히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정책을 계속 연발을 했는데 다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시장적이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부동산정책 이제는 좀 자제해 달라, 그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루어지고 주거복지도 강화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악화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표현한 글이 시무 7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무 7조를 읽어 봤냐고 제가 김현미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 봤대요.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계속 안 읽어 봤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감 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상처 든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만든 노래가 그 당시 가왕 나훈아 씨의 '테스형!'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절규하는 그 속에 바로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애환을 잘 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틀어 줬더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혼났지요.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을 하고 그때 물러났지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연이은 실패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조기에 막을 내리는, 소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가장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상법 또 오늘 통과시킨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파업조장법 그리고 또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아마 엄청나게 이재명 정부에게

는 부메랑처럼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성장 교두보는 무너져 내리면 이제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기업들은 이제는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난다고 그러고 이제는 접어서 노후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모험적인 기업가정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지면 누가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 아닙니까, 광복 80주년. 2025년 오늘날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인적자원 아닙니까? 우리는 부존자원 제대로 없이 또 어떤 외부로부터 엄청난 기술 또 저절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 우리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양성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는 배우고 또 연구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또 많은 문화인들이 K-컬처를 개발하고 그것을 또 세계 국민들에게, 세계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K-컬처 전성시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부문에서 이제는 제조업 강국이 됐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기업가정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교육열 그리고 또 뛰어난 인재들이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바로 민간 기업들이, 개인들이 창의와 자율로 뭔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애로가 있을 때는 해결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개인 차원에서 어려웠던 투자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집중투자를, 예를 들면 SOC 방식으로라든가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산업 신도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과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부는 도와주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또 뛰고 개인들은 더 발전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지금 관세 장벽과 세계적인 전쟁, 공급망 애로로 그야말로, 또 중국의 부상, 중동의 부상으로 무한경쟁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또 발목 잡고 외국 투기자본에 그야말로 노출시키는 이런 상법 개정……

행동주의펀드에 의해서 이제는 과거의, 아까 김남근 의원님 전문가로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실제는 과거의 얘기고 이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행동주의펀드들의 행태가 교활해지고 우리의 약한 고리가 있으면 집중 공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 주고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기업들을 내몬다면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또 내적으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도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또다시 이번에 노동 파업을 유도하는 또 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노동관계법을 노란봉투 씌워서 이쁜 이름으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양 내몰지만 기업들은 벌써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떠나겠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환경이 안 좋으면 이제는 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삼국 또 더 많은 저가의 노동력 또는 저가의 토지 내지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로 이제는 기업들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법을 이렇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겠다면 책임지세요.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바로 여당과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같이 이 자리에서 그 법 통과를 막아 내지 못한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똑같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니다. 제발 자중하시고 세간의 목소리, 각계의 반대 목소리를 제발 경청해 주시고, 내일 이제 마지막 표결이 이곳에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상징적으로라도 내일 2차 상법 개정안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률들에 대해서도, 오늘 정성호 장관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장에서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관님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양심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분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께 이번 잘못된 법안의 재의 요구를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각계에서, 지금 단순히 기업계뿐 아니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계로부터도 반대,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연구 낸 성과 또 각계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1차, 2차 하나로 묶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지만 우선 이번 2차의 내용은 2개 아닙니까? 하나는 먼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해서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간접적으로 기업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김남근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그야말로 지배구조가 정상화돼서 한국 경제의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모든 게 시스템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솟구치던 주식시장이 요새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법들이 통과되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동요하고 기업을 접거나 또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는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아마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펀더멘털을 길러야지요.

제대로 주가를 올리려면 기업의 가치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 환경,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친기업적인 그런 내용으로 전환해 주고 또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 대신에 이렇게 반대하고 목놓아 절규하는 나쁜 제도를 억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한번 이 두 가지 이번 상법 개정안 골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집중투표제, 복수의 이사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이러한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각료 중에서도 이번에 상법 개정안 제도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거를 먼저 시행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중투표제를 이제는 오히려 강제화했다가 다시 정상화해서 임의적 제도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시기는 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지난 얘기, 이미 과거에 외국에서도 그런 취지로 처음에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되돌린 제도를 마치 외국의 정상적인 스탠더드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현실을 호도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의 있게 잘 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투표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임의화하거나, 사실상 이 제도는 후퇴된 제도예요. 그렇지만 몇 개 안 되는 일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러시아라든가 이런 사회주의권에서요. 그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경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집중투표제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한 차등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완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보완 제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좋으니까 과거 초기에 선진국에서 도입할 때 같은 그런 나이브한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집중투표제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 이런 것을 해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보완적인 제도를 만든다 만든다 하면서 보완 제도를 안 만들어요.

지난번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 것이, 의무를 어기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송의 대상에는 경영 의사결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경영…… 이제 중장기 시야에서 이런 투자 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기 이윤 극대화 이런 좋은 펀더멘털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제약받고 소송에 휘말리고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써라, 회사의 장기 성장보다는 당장 주주들에게 많은 것을 배당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행위를 해라라고 주주들이 간섭하고 개입하도록 하면 그 기업은 단기적으로 그런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하다가는 폴싹 망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 성장전략이 없이 단기, 뜯어먹기 좋게 경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도 망하고 결국은 갖고 있던 장기주식 보유자들도 역시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

늘날 이렇게 위대한 고도성장을 만들어 온 기업가 정신,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 환경을 왜 이렇게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국회가 나서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님, 잡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성하세요.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이 상법, 1·2차 상법안 우리가…… 제발……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만만해 보여요? 하던 얘기나 하세요. 상법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거예요. 잡담이라니! 말조심해야지!)

경제 살리는 거예요? 잡담 아니에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이 자리는 제가 반대토론 하는 자리니까 토론을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깊이 반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상임위에서 오늘 제 반대토론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듣는 것은 듣는 거고 듣는 의원들한테 잡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요」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왔는데 상대방 측, 잡담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잡담이라고 안 하고 미담이라 그럴까요? 방담이라 그럴까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기 본회의장은 지금 토론장이지,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나누는 것은 나가서 뒤에서 해 주셔야지요. 본회의장 좌석에서는요 여기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경청해 주시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에게 잡담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잡담을 잡담이라 그러지 제가 잡담을 미담이라 그럽니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사과를 하세요!)

잡담을 정담이라 그럴까요?

본회의장에서 이웃 의원님들하고 잠시는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너무 신경 쓰일 정도까지 말씀 나누시면 잡담이라고 이런 핀잔을 들어도 그것은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껏 얘기하세요. 정도껏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정담 또는 미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이학영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국민에게 마이크는 송 의원님 목소리만 들립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송석준 의원 예,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사과를 하셔야 될 분이 저보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부의장 이학영 토론 진행하십시오.

○송석준 의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본회의장의 단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유상범

당시 법사위 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법사위장에서 수모를 당했습니까?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 툭하면 중단시키고 말이야.

(「하나 마나 한 얘기 하고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학영 송석준 의원님, 본론을 진행하시지요. 송석준 의원님, 본론 진행하세요.

○송석준 의원 안 그러시던 분들도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세요.

○부의장 이학영 신경 쓰지 마시고 본론 진행하세요.

○송석준 의원 여기가 법사위원 장이 아닙니다. 법사위 회의실이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이고요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발언권 자격을 갖고 제가 이렇게 또 부의장님과 많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반대토론 하는 자리니까요 가급적이면 예의를 지키고 들어 주세요. 잡담은 자제해 주시고요.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충분하시니까 이제 반대토론 계속하세요.

(「예의 있게 얘기를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주의를 주셔야지요.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뭘 주의를 줍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의원님들도 조용히 해 주세요.

(「뭘 잘했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좀!」 하는 의원 있음)

(「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지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국민들은 송석준 의원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 내용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조용해질 겁니다.

우선 그만 의원님들하고……

○송석준 의원 그럴까요?

○부의장 이학영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원님 본론 이야기하세요.

○송석준 의원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언성이 오가서 제가 발언이 잘 안 돼 갖고.

좀 자제해 주세요.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 제가 반성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성 많이 해 주세요.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조심하세요. 조심해!)

반사, 반사. 더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말 우수한 인적자원을 채용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렇게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이래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 낸 원동력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일궈 온 그 토대를, 그 기업인

들을 얽어매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죽이고 기업인들을 노동자의 손에 얽어매려는 이 노동관계법 또 외국인 단기 투기자본에 이렇게 무방비로 그야말로 옷을 벗겨서 내모는 이러한 잘못된 상법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에 나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까? 우리 제발 자제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외국의 행동주의펀드라든가 단기투자자들의 이런 압력…… 그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3% 룰이라든가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실제 이사 선임이라든가 감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기업의 잉여자본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또 연구개발로 또 여러 가지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배당을 확대해라, 자사주 소각에 우선 써라 이런 식으로 강요되다 보면 그야말로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할 수 없게 구조적으로 막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쁜 법을 왜 우리가 국회에서 억지로, 그야말로 무슨 기업의 소유 구조를 정상화한다 또 소액주주자를 보호한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내몰고 이런 일을 우리 국회에서 하면 안 되지요.

제발 내일 표결할 때는, 여기 제가 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병덕 의원님이 참 자세 좋게 듣고 계시는데 꼭 주변 의원님들 설득 좀 해 주세요. 정무위 통해서 자본 논리 잘 알고 기업의 애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 갖고 기업들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불합리하고 정말 잘못된 표결이, 의사결정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민병덕 의원 의석에서 ―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설득시키세요. 열심히 들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두 번째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문제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하나가 집중투표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인데 감사위원은 기업의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동네 작은 모임에서도 감사는 돈의 집행,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 또 주식회사 이런 데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요, 감사의 역할이, 규모도 크고 금액도 많고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감사위원이 이렇게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3% 룰이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되도록 1차 상법 개정 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위원 선임에, 이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 1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3% 룰, 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 거기에다가 이번 감사위원 선임을 이제 분리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주주를 배제하고 다른 투기적 자본, 행동주의 펀드들이 작동을 해 갖고 이렇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감사를 선출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고 그걸 경영에 간섭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간첩법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산업기

밀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소극적으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간첩법 아닙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간첩법 개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지연하고 회피하면서 왜 이렇게 외국의 투기 자본들에게 노출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는 극성스럽게 나서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울부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안 들어 주시고 왜 우리들을 때려잡고 사지로 모는 이러한 악법들을 자꾸 만드느냐고 기업인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관에서 수차례 또 본회의장 앞에서 외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은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동료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기업인들 대표들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제발 좀 이건 거둬 주십시오, 재의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상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노란 봉투로 의장된 노동관계법, 또 방송 3법은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관계없지만 방송기업은 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기업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방송도 이제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송을 특정 노조에 그냥 모두, 또 특정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냥 무슨 진상품처럼 이렇게 상납하듯이 줘서 되겠습니까?

KBS, MBC, EBS도 국민의 방송이고요. 이것도 또 경영 마인드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작품을, 좋은 방송을 가장 싼 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특정 세력에게 다 안겨 주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이 3개의 방송사가 경영 마인드가 이렇게 왜곡이 되면 그거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마 나쁜 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피해지요, 그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법안들이 반드시 내일 아침 표결 때 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소액주주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좀 갖고 있던 게 몇백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소액주주들의 고통과 소액주주들의 여망을 우리가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막고자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런 법 개정이 어떤 보완장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폐해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고 보완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자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미래의 중장기 성장전략이 차질이 없게끔, 그러면서 소액주주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경영의 투명성에도 도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또는 각종 공청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치열한 반대 토론을, 또 찬반 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또다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경제에 역행적인 법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반대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고 많은 각계에서 반대하는 나쁜 제도는 바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더욱더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고쳐 나가는 데 우리 정치권이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안 있지 않습니까? 이번 노동관계법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그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손해배상책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부분은 일부 보완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면책을 시켜 준다든가 또 사용자의 개념을 무한대로 막연하게 늘린다든가 노동자의 지위를, 또 노조에 가입하면 당사자 계약관계가 아니어도 마치 다 노동자, 쟁의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건 너무나 파업 범위를 넓혀서 기업들이 이제는 겁나서 기업 못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되돌려서 다시 한번 재의 요구받아서 여기서 다음에 보완된 제도를 갖고 논의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지 당장의 단기적인 시각에서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뭐 어떻게 이것만 하면 주가가 오르겠지……

실제 이미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상법 개정안, 노동관계법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주식시장이 지금 꼬여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예민한 영향을 준 것은 지난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낮추면서 대혼란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말 주식시장에 예민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 나가야지 자꾸 뭔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괜히 어떤 뭔가에 이렇게 경도된, 잘못된 제도개선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막아 내고 또 그런 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간곡히 정말 호소드립니다.

기업을 떠나게 하고 또 투기자본의 재물로 기업을 몰아갈 수 있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꼭 내일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이, 엘리엇, 스타보드 밸류, 서드 포인트, 밸류액트 캐피털, 인클루시브 캐피털, 스트라이브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바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대상, 미국·일본에 이어서 3위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의 우량 기업들이 지금 과거에 없던……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우리가 한 6년 전만 해도 한 8개에 불과했던 게 바로 이 통계가 나온 23년, 4년 지난 23년에는 77개로 이러한 현상들이 급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왜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억지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여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주요한 정책도 이제는 큰,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아닌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외국의 악의적인 이런 펀드나 주주들에 의해서 이제는 정부 정책까지도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에너지 공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은 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운용되어야 될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가격 정책이, 이게 정부 정책과 다르게, 민심과 다르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수단도 제약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여천 화학공단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화학 공업 이쪽 분야가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방경제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실 보호 정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우리 기간산업을 살려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국가 경제 체질 또 기업 체질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이제는 심각한 외국 자본에 의해서 또 주주 보호라는 이유로 우리가 정책 수단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받는 굉장히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면 이제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단기적인 혼란,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을 막는 데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일단 피력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단순히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1차 상법 개정안도 관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뭐가 문제였고 또 어떻게 이것을 개선이 되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은 지난 7월 3일 날 법사위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갖고 7월 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서 법으로 확정이 됐지요. 소위 재의 요구도 받지 않고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여야가, 여기 유상범 당시 법사위 간사님도 계시지만 당시

에 굉장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가 어쨌든 우리가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최소한으로 합의하는 모양으로 일단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합의 처리합시다 해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지요. 대신 이것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 충실의무지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것이 잘못하면 소송 남발, 무수한 소송에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도 문제 인식을 하고 협조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상법 개정이 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아닙니까. 상법 제382조의3에 주주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이제 회사 및 주주로 넓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기업 경영자는 고유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왔는데, 이사의 역할이 회사의 이익, 다시 말해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최선의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주주의 이익과 다소 상충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위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조항에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한 것은, 이것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결국은, 배임죄 문제 지금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강제 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배임죄의 어떤 심각한, 주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3% 룰을 더 강화한 것 아닙니까?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의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이 3% 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해서 3%가 넘는 주식을 근거로는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 아닙니까? 3% 룰의 원칙적 취지는 대주주가 감사위원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라는 그런 장치로 활용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계열사 전체를 하나의 주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도 3%를 초과해서, 그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보다 더 강력히 3% 룰을 강화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계열사의,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그

런 분들까지도 최대주주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3% 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오히려 제약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 개정안에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찬반 양론이 있는데……

또 세 번째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 거지요. 상법 제542조의14를 신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대부분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도 비대면으로 주주총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실시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1차 상법 개정안의 네 번째는 사외이사의 명칭과 선임 비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상법 542조의4제3항의 개정인데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대주주와 분리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다는 의미에서, 이름 바꾼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독립이사 수가 3분의 1 이상 의무 선임하도록 확대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일부 제약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그리고 3% 룰 강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및 선임 비율 변경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이 지난 7월 3일 개정된 1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법률신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이미 주주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회사의 수임인인 이사가 개별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현행 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경영계에서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회사뿐이 아니라,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남발하는 오남용이 예상된다. 심지어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주 충실의무의 문제점을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데 의무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막말로 소송 걸어도, 그러면 기업 경영진들이 기업의 장기 이런 성장 극대화를 위하고 정말 가장 충실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주주에게도 이익이고 회사에도 이익인데 단기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에, 거기다가 또 이런 소송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언제 일하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주주의 이익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괴롭힘 당한다면…… 안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봤을 때 단기적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를 빨리 극대화해서 더 많이 빼 가는 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회사에 목숨 걸고 중장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야에서 가장 좋은 경영 판단을 요구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R&D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발목 잡히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실해지는 거지요.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야에 갇혀 갖고 결국은 누가 소를 키우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기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면 앞으로 고용되어야 될 젊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걸 있는 자들이 나눠 먹고 털고 기업은 망하고, 그러면 고용을 기대했던 미래 세대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에도 미래의 기회가 사라지고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기업들이 사라지게 되면 또 부실화가 된다면 대한민국 재정도 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취약해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다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를 위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것의 보완책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회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걸려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뒤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보완책을.

또 두 번째가 3% 룰 강화의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초 기업 측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출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지분 구조에 따라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분율이 더 높을수록 선임권이 약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지분이 많을수록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도 힘들고 소수파가 합종연횡하는 비정상적인 구도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와 함께 도입되었을 때 바로 이 3% 룰을 강화해 이런 문제점이 악용의 소지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G의 경우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앞장서다가 2006년 국제적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격을 받고 집중투표제에 따라 워런 리히텐슈타인이 사외이사로 선

임됐는데 이사회 출석률이 극히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10개월 만에 40%의, 1500억입니다. 1500억을 챙겨서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량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과거에 없을지 몰라도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우려가 있는, 그것이 과거에 많지 않았고 이런 근거로 해서 했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냥 허용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이거는 양론이 있지만 여기도 문제점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분석했던 그 기사인데, 전자주주총회는 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오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과정에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전자주주총회의 제도만 도입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주주총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런 미비점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냥 우선 하고 보자, 하다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고치자 이것이 바로 지금 경제 관료들의 태도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현실화될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걸 쓸어 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도 하게 되고 관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신중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우리 22대 들어와서…… 당시 여소야대였지요. 그 구조에서도 심화됐고 더구나 지금 여소야대에서 야대여소로 이제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종전에 야당 시절에 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도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관성에 따라서 종전에 밀어붙인 거니까 옳은 줄 알고 밀어붙이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00% 다 보완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특히 여러 1차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주주 충실의무에 따른 문제점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발의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8월 4일 날 발의했는데요.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

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그동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법조항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지난 8월 4일 날 발의한 그런 보완입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니만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측에서도 보완입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그 내용은 상법 제382조의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서 법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622조, 623조, 624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우리 동료 법사위 위원이시면서 우리 당의 수석대변인으로 있는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1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내놓은 논평을 여기서 잠깐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 7월 8일 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했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무시한 채 입법 밀어붙이기에 돌입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중인 겁니다.

개정 상법에 대해 소송 남발, 법적 불확실성 등 기업 경영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하기로 한 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 과정도 외면한 채 시행 효과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과 같이 국가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는 순간 입법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과 시장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속도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되었고 검찰개혁 4법도 무리하게 상정시켰습니다.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입니다. 특히 상법처럼 국가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의 논평입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이 말씀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시지요?

김기표 의원님, 공감이 가시지요? 안 가시나요?

사실 이게 우리가 법사위에서…… 곽규택 의원이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또 같이 여야가 서로 합의할 거 하면서 사실은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로 정말 충분히 이렇게 또 우리가 양보할 건 많이 양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을 한다는 그런 합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완 입법은커녕 내일 처리되는 이 2차 상법 개정안이 1차 개정안과 만나게 되면 이게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강화된 3% 룰, 주주충실의무 도입 이것과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출 이런 것이 같이…… 나눠져서 각자 할 때는 '아, 나중에 잘되겠지'라고 했는데 우려했던 현상이 내일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위 살라미 전법, 이번에 정말 악법들 시리즈가 7월 3일부터 내일 8월 25일까지 시차를 두고 살라미식으로 지금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 없으신가요?

(「송 의원님, 본인 얘기만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랑 법사위에 같이 계시고 또 어른이 되셨잖아요. 민주당 여당, 야당 최고위원에서 이제 여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야당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실험하는 차원에서 무책임한 법안도 가끔은 발의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당은 그렇게 한가하게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을 통과시켜서 현실을 혼란시키고 또 우리 경제 주체들, 대한민국의 주요 기간 이런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시키면 안 되지요.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여당의 입장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곽규택 동료 법사위원님이 이렇게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구구절절한 논평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영교 의원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곽규택 의원님의 7월 8일 날 논평, 이것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부의장 주호영 잠깐만요.

송석준 의원님, 우리 의원님 이름을 직접 거명하시면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든지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석준 의원 그럴까요?

○부의장 주호영 예.

○송석준 의원 예,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우신 분들이라 제가 좀 불러 봤는데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금요일이지요, 지난 금요일 날 노란봉투법으로 위장된 노동관계법의 강제 상정을 앞두고 제가 성명서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도 여러 가지 쓰나미 속에서 덮여지고 또 그날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이런 성명서고 외침도 묻혀서 제대로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그 성명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낸 성명서고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 정치적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졸속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당은 오늘 방송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반기업·언론장악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영구박탈 그리고 금융제재 등을 운운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 만능주의 처방전만을 내세워 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지 딱 일주일 만의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민간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기준을 이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기업과 주무부처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주장의 끝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이런 제도로나 정책으로나 언행으로 나타날 겁니다.

기업 처벌 만능주의는 결코 중대재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며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이용한다면 해결은 더욱더 멀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산재를 막겠다고 하지만 연이은 인사 참사,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여당 인사의 내로남불 사익 추구에 성난 민심을 회피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중대재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관세전쟁, 패권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초유의 경제 난국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전방위적 기업 압박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들을 지키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재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도 치밀한 분석과 근본적 예방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며 강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기업적 정책과 무리한 졸속입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압박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의 파업만 보호하고 기업의 대응수단은 전면 봉쇄하고 있다. 사

용자, 노조 및 노동쟁의 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파업천국으로 만들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 청구를 못 하게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노조에 의한 기업 장악, 기업의 노조 천국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법, 방송 3법 등 연이은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겠다며 내세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작 사고를 예방하기보다 기업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졸속입법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낸 성명서입니다.

이번에 7월 3일부터 시작된, 내일까지 이어지는 살라미식 악법 강행 처리 이것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우리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뒷골목 민생 현장 그리고 또 농촌의 축사 그리고 시설농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이번에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이 안까지 같이 가세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모범 고도성장으로 이끌어 오는 데 주역을 해 왔던 기업들이 이제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지난 과거에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을 엄청나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서 일련의 발언은 진짜 기업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철도공사라는 공기업, 바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선로 위를, 철도…… 우리 민간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공기업의, 어쩌면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인들이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무궁화호 열차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수많은 중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처벌 규정을 둔 법이 있는데도 발생했을까요? 그것도 민간 현장이 아닌 공공부문에, 바로 국민들의 공기업 현장, 철도 현장에서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광주의 철거 현장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는 어이없는 사고 또

우리 국내 최고 일류 기업의 아파트—같은 회사였지요, 광주의—그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붕괴돼서 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지난 22년 말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너무나 베일에 싸여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청춘 남녀들이 어울리고 외국인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은 그곳 이태원, 우리 바로 이웃 동네, 우리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합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중대재해 사고를 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단순하게 처벌 만능주의로 접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촘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원인의 초기부터 그리고 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사고의 반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러한 보완 입법을 하는 데 우리 민의의 전당이 집중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속도전인 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상법을 하고 나서 바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보완 입법은커녕 지금 그냥 밀어붙이기 바쁘잖아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많은 허점이 있고 이렇게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겠다라는 그러한 노력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면허 취소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이 이제는 꽁꽁 얼어서 하던 사업까지 다 접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다 죽어요. 잘나가는 동네는 그래도 기본 경제 흐름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뭔가 건설사업도 해야 되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지방경제가 죽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지방 지역구를 두신 여당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천이 어렵고 또 전라북도, 전남, 광주가 어려운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현장을 우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뭔가 기업들의 애로를 원천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어쩌면 처벌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대통령부터 나서 갖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절대 다시는, 면허 취소까지 해서 일감을 이제는 절대 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겁을 주면 누가 기업을 하고 누가 모험적인, 위험한 현장 일을 운영하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못 하는 영역을 민간이 그 위험 속에서도, 위험을 떠안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수지타산, 이런 경영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 위험과 불확실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성과를 이뤄 내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으로 국가에 세금도 내는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기업들 책임지라고 그냥 강한 처벌로 협박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고가 예방이 되고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절로 기업 경영이 좋아지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연속 악법 강행과 더불어서 지난 정권에서 만들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러한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다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우리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겁박하고 야단친다고 웅크리고 뒤로 뺄 뿐입니다.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멎습니다. 기업들도 움츠리고 지방도 움츠리고 모두가 움츠리면 대한민국이 위축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멈추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려면 뭔가 경제 주체들, 대한민국 각 산업 현장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과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분들의 고통과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금융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세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규제 아닙니까, 규제? 우리는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국회에 들어와서 기가 막힌 게 법안 발의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맨날 처벌 강화예요, 징역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올리고 벌금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고.

보니까 제일 많은 입법 성과, 의원님들 '내가 임기 동안에 법률 개정안 몇 개를 발의했고 제정안을 뭘 냈고……' 성과를 내시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구 고치고 이러는 것은 애교지요, 애교. 그런데 처벌 강화, 모든 것을 처벌 강화, 처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민간들은 자꾸 위축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입법 성과 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너무나 안이하고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벌 강화할 것은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엄단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만능 특효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대표적인, 그 집약된 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대재해 기업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AI로, 소위 요새 ABCD라 그래요. 소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또 컨버전(conversion), 디지털트윈, 이런 어떤 첨단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면요 중대재해 현장을 다 입체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AI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AI가 또 추적·감시할 수도 있어요. 센서링 기능과 또 AI의 이런 분석 기능, 빅데이터가 있고 현장의 CC카메라에서부터 드론이니 다양한 감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실명을 말씀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장군 출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군대에서 우리 항작사, 제 고향에 있는 부대장 출신이신데요. 이름은 안 밝혀도 다 아시지요?

우리 군대에서 정말 효율적인 전투 훈련을 위해서 얼마든지 첨단 기법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전술이 나올 수 있고 분명히 사고 예방을 위한 기법과 현실적인 능력은 굳이 강한 처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과학적인 기법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조합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만 터지면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너 좀 혼나 볼래? 아주 그냥 혼내 버려’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글로벌 이런 어떤 위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기후적으로 얼마나 전례 없는 새로운 어려운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까? 이것들이 서로 뒤얽혀서 정말 답도 없어요. 기존의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설루션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제반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 또 새로운 대처 방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여야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지요. 이렇게……

아니,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성장 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도와 경제 발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야,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고 포용적 제도로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제도, 이 포용적 제도를 가장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에요. 3인 공저, ‘국가는 왜 망했는가’라는 책을 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대한민국 정말 포용적 제도를 가진, 정말 좋은 제도를 갖춘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를 왜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게 이렇게 강행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정말 법사위 위원으로서 법사위에서 많은 여러 악법들이 우리 진지한 논의도 없이 그냥 뭐 논의하려고 그러면 토론 정지해요. 그래도 법에서 정해 놓으니까 토론을 하다가 한두 명 하면 토론 정지, 토론 중단이야, 토론 중단 동의. 그래서 토론이 중단되고 그냥 수적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 처리돼서 그게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닮고자 하는 이제는 선도 국가의 지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는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의 지위에서 뭔가 이제는 남에게 전수해 주고 또 남을 이끌어 가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이제 부여받고 있고 요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5200만 국민을 대표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존경하는 여야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선배님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놓은 이 제도, 이 대한민국을 왜 허물려고 합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우리의 선배님들·부모님들의 그 간절함, 여망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그분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더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3일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악법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끝자락에 우리 국민의힘 반대 토론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고 싶어도 맨날 잘라요. 우리—제가 또 이름·실명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민주당 당대표님, 아까 얼굴 보이시더니 사라지셨네요. 지금 이 방

송을 보고 계신다면 좀 이 자리에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구구절절한 저에게 보장된 이 발언을 좀 들어 주십시오.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들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못 했던 부분 당대표 되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도 그냥 대표가 아니라 거대 다수의 여당 대표 아닙니까? 동료 의원들을 사람이 아니라 악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 국민들께서는 공감을 못 하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도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서로 가치관이 달라도 상대방이 미워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합리적인 대안, 해법을 찾아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바로 현실은 전쟁 아닙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있고 논쟁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입법부라는 또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바로 민의의 전당 이곳 300명 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팍팍하고 각박하고 살벌한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내라고 이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뒤에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나요?

○부의장 주호영 예.

○송석준 의원 아, 예.

부의장님, 제가 실명은 안 부르겠습니다.

부의장님, 공감하시지요?

아니, 왜 서영교 의원님 웃으세요? 제가 이름을, 실명을 안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웃으니까 또 하게 되네.

공감하시지요, 부의장님?

○부의장 주호영 의원님, 실명의 문제도 있지만 의석에 있는 의원님들께 답변을 강요하는 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석준 의원 아, 그렇습니까?

○부의장 주호영 예.

○송석준 의원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의장님 좀 이렇게 졸리실까 봐……

(「주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 잘 듣지요? 이렇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제가 발언하려고 그러면 하도 발언권을 제약하고 또 불허해서 제가 정말 마이크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고 충분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체질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필버가 체질이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오랜만에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되시더니 많이 또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각계로부터 제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특히 경제계, 경제 8단체의 공동 입장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7월 29일 날 나왔는데요. 그게 이미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겠지만 다시 한번, 이분들은 여러 가지 현장의 고민과 또 각계의 목소리를 자기들, 경제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시고 내일 표결 때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었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 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꺼져 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5년 7월 29일, 경제 8단체 일동.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경제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인들은 어차피 여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험악한 표현도 있고 더 험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정제하고 최대한 다듬어서 만들어 낸 저분들의 호소문입니다.

이 호소문을 우리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정말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간절하게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숙의하고 또 문장을 다듬고 다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근거 없이 이러겠습니까? 정말 기업들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어려운 환경에서 최근에 이런 트럼피즘에 의한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라고 해서 기존의 이런 자유무역주의가 이제는 퇴조하고 새롭게 신보호주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이제는 판치면서 기업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기업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례 없이 새롭게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기업들을 우리가 보듬고 이분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이분들이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 법들을 강행하고 그것을 또 억지로 이분들에게 지켜 달라고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정부의 재정,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업들은 각자 어려워지면 도태되고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그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실업자로 내몰리고 지방경제들이 피폐해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천산업단지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서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지방경제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걸, 기업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우리 지방경제가 한마디로 그냥 순식간에 멈출 수가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산의 자동차 공업이 쇠퇴하면서 군산 경기가 얼마나 암울해졌습니까. 외국 기업이 떠나지 않게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오도록 기업의 생태계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국회에서, 바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또 모두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주변에서 대외적으로 쓰나미 같은 공격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데 내부에서조차도 또 뒤통수치듯이 법을, 기업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노란봉투로 포장된 노동 악법, 거기에다가 또 이런 상법을 통해서 투기자본에 기업들을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또 대통령이 재가하고 공포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가 케데헌이라는 케이팝 그리고 드라마로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신비해하고 한국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정말 좋은 나라,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좋은 제도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허물고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농사꾼 출신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 모도 못 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동생들 데리고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

교 2학년 서울로 전학 오기까지, 2학년 4월 말까지 저는 사시사철 농사를 지어 본 사람입니다. 제가 기업인은 아니지만, 제가 도시에서 기업인 생활은 못해 봤지만 시골에서 영농활동을 해 본 농업인 출신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면 1년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작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농업을 하다 보면 더 그게 실감이 납니다.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금융 현상과 또 여러 가지 돈이라는 이런 화폐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농업 현장은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씨앗을 심고 그것이 모종으로 자라고 또 그것을 옮겨 심고 그것이 또 성장하면서 잡초와 싸우고 그것을 이겨 내고 결실을 내는 것을 보고, 그 수확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하면 제대로 된 결실이 안 됩니다. 제대로 말려야 되고 제대로 털어야 되고 제대로 빻아서 우리의 식단에 놓아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의 이런 모든 경제 주체들이, 농업인이든 기업인이든 자영업자든 개인 프리랜서든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결과를 내고 그중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갖고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직장도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선순환 체계를 우리가 지원하고 보장해 주고 지켜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서서 간섭하고 훼손하고 붕괴시킨다면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제도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게 영향을 주는지 시골에서 농사지어 본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히 알게 됩니다. 법 하나가 또는 정책 하나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감 나게 현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실제 민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제가 시설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동두천인가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화재가 나 갖고 그분이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일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에 따라서 했겠지요. 전국의 모든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일제 조사를 해서 열악한 환경을 다 개선해라, 이것이 고용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농막이나 이런 임시 숙소가 아닌 정식 주택에 입주를 시켜라라는 것이 고용부의 소위 노동자 보호라는, 외국인노동자도 어차피 국제노동규약에 의해서 같은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로 보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식 주택 입주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농막에 있으면 자기들이 이동 거리가 적기 때문에 교통비가 적게 드니까 좋고 또 그분들은 음식을 독특하게, 향이 나고 독특한 요리법으로 하니까 다른 기존의 정식 주택에 입주하면 이웃과의 마찰과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정식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일반 주택 숙소에 있는 걸 본인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막에서 같이 집단 거주를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자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러다 보니까 정식 주택을 또 안 짓는다고……

제가 아는 후배가 아주 크게 농장을, 시설농을 하는데 결국은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내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2만 평 가깝게 제일 큰 영농을, 시설농을 하는데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주고 나면 들쭉날쭉하는 가격으로 한정되게 번 돈으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또 이행강제금, 어쩌다 남으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소득주도성장의 그 아픔을, 아까 제가 모 음식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시설농, 화훼농, 우리 국민들의 식탁 이 중요한, 이분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은 외국인노동자들 월급 챙겨 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남는 건 빚과 이행강제금, 벌금 내는 거에 급급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그냥 우리가 겉멋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위를, 권익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겉멋 내기 정책,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노동관계법이 얼마나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는 현장에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실제 현장에서 이미……

이 법은 시행도 안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과 이런 소득주도성장에서 나타난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이제는 몇 배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는 입법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7월 3일부터 시작된 여당의 야당이 반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런 악법 시리즈 마지막 법 내일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을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 주셔서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셔서 내일은 반드시 외국인 투기 자본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위기로 빠져들고 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서는 아까 경제 8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지방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의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입장문을 밝힌 게 있어요. 경제단체 전체에서 목소리는 아까 들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지방의 경제인들은 어떤 생각을 이번 국회 처리하는 법들을 보고 하는지 한번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기업 숨통 조이는 상법 개정 지방은 위기다’ 이런 제목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 기업 투자 둔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지역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 경제 여건 속에서 상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

친 규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금 여력과 경영 유연성이 제한적인 지역 기업인들에게는 중복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상공회의소는 특히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제도 개편보다 생존을 위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대전은 최근 내수 침체, 청년 고용 감소, 중소 제조업체 폐업 증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요인도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규제의 틀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지역 내 경제 흐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축소, 신규 인력 채용 회피, 고용 불안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침체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특히 자금 회전이 민감한 지방 중소·중견기업은 법적 압박만으로도 사업 지속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이전에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은 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기업을 옥죄는 제도는 오히려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실질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기업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정책이 더 절실하다며 지방 경제가 중앙 입법의 파급효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취지를 넘어 현장의 생존 조건과 괴리된 채 이렇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기업 활동 위축과 지역 경제 저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일방적 입법 추진이 아니라 제도 개편과 경제 회복의 균형을 조율하는 정치적 판단력이다. 중앙의 결정이 지방에 닿을 때 그것이 제도가 아닌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 과정이 먼저다.

이것은 지난 7월 30일 대전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호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약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있는 분들은, 여력이 있는 분들은 고통이 와도 규제가 와도 그것을 소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선상에서 운영되는 기업들, 한계선상에서 겨우겨우 이어 가는 지방의 많은 경제인들은 중앙에서 제도 개편 하나 자체가 그야말로 그분들을 삶의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밀어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정책의 효과도 시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 소멸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많은 경제인들은 근근이 최저한의 영업이익으로 최저한의 이윤을 내면서도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중앙으로 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에서 그나마 겨우 요만한 이윤과 영업이익을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 뭔가 소액 투자자들을 지

원해 주겠다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에 우리는 함몰돼 갖고 이러한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순간 제일 먼저 골로 가고 벼랑으로 추락하는 것은 저 지방,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구, 한계선상에서 겨우겨우 지방 경제의 군불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한계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는 글이 여러분, 이 대전상공회의소 목소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은 상대적으로 지방 도시 중에는 양호한 도시입니다.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옆에 있고 또 많은 연구기관들과 최근의 인프라가 가장 많이 갖춰져 있는 동네 중의 하나가 대전 아닙니까? 바로 대전시의 경제인들도 이렇게 목 놓아 호소하고 고통을 얘기하는데 저 아래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여수, 광양, 목포, 군산, 전주, 서천, 우리 남쪽의 많은 지방 도시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의 한계 기업들, 우리가 이렇게 돌봐도 부족한 판에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경영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겠습니까? 강한 규제로 그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런 새로운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방 기업들이고 지방의 경제인들이고요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역민들입니다. 지방 상권은 그냥 놔둬도 지금 자꾸 위축되고 소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방의 발전을 우리가 더 견인해 주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더 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지방으로도 투자를 해 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의 적극적인 진출, 투자 여력을 우리가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해 줘야지 기업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그럴싸한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가 5000 시대 개막……

우리 도시의 여유 있는 분들이야, 자산이 많은 분들이야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지만 지방에서 주식 투자에 몰입하는 경제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방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생각해서도, 이분들이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단순히 경제인들, 잘 나가는 경제단체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번 상법, 2차 상법, 1차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어렵게 영위해 가고 있는 경제인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전 쪽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전북 쪽의 얘기 좀 들어 봐야겠네요. 이게 전북 경제계 쪽의 목소리를 전북도민일보에서 8월 3일 날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경제계, 쏟아지는 규제에 경영 비명’ 이런 제목입니다.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북 경제계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와 경영 부담까지 떠안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지역 구조상 서울 및 수도권보다 더 큰 압박과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일—8월 1일이지요—도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이 또한 상법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복지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 기업들은 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 조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오르면 투자 축소, 고용 감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실제 도내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5월 기준 0.86%로 올해 1월 0.7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익산의 한 기업 대표는 투자 여력도 빠듯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늘면 중소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사실상 통과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돼 기업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도내 경제계는 그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상황을 간신히 버텨 오던 가운데 이번 규제 등이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내 일부 기업은 노무·법무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세부 시행령 공개 전까지 조직 개편이나 자산 조정 등 선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장은 이미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기업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전라북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전라북도의 전북도민일보가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도 마다 않고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위해서는 규제를 달리해서 여러분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에 많은 인구가 늘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도 잘 안 되는 판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규제, 지방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 시행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만들어 낸 그런 가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구구절절한 목소리고 특히 더 어려운 지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전라북도 이런 지방 경제의 경제인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이런저런 경로로 언론에 내고 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존에 있는 문제,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도 발굴해서 그거를 개혁해 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작은 손톱 밑 가시라도 뽑아 줄 생각

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분들 뒤통수를, 그냥 무슨 스펀지 방망이가 아니고 해머로 내리치듯 뒤통수를 쳐서 되겠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도 힘들어하지만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은 이 자체로 기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앙에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더 극한 상황에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주는 파장은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한계기업들, 특히 지방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이 한계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고 그분들이 결국은 기업 할 의욕이 꺾이고 그분들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는데 그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아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지방의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어렵게 지방의 싼 인건비와 싼 지가, 여러 가지 생산비를 고려해서 지방에 생산 거점을 갖고 해외 수출을 해서 또 상장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이렇게 지방세수에도 기여를 하면서 운영되는 그 기업들이 지금 신보호무역주의로 직격탄을 받아서 죽어 가는 판에 나라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고 주식 소액주주들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한계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이분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되지요?

(「살살 해요, 좀 살살」 하는 의원 있음)

수석님, 정말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바로 지방 경제계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들리니까 천천히 얘기하라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조실까 봐.

진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이번 상법 1차·2차 묶어서 두 법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압박하는 정도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정치인들 또 법조인 출신, 관료 출신들이 실제 모르는, 정말 기업인들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거 처리를 일단은 보류하시고 또 부결시키시고 한번 지역으로 가셔서 경제인들을 좀 만나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지원책을 우리가 더 경쟁적으로 여야가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업계, 경제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 봤고요. 이제는 언론계의 목소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어느 한 목소리가 괜히 편협되거나 뭔가 좀 전체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 목소리를 들었으면 이번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공정한 시각에서, 여야를 어떤 편협되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언론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28일 자 서울경제신문의 배동진 부장님이 쓴 글입니다. 이거 한번 언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상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들어 주시고 이 목소리를 좀 어떻게든 우리가 이번 상법 처리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무늬만 실용주의 정부?' 이렇게 물음표를 다는 제목입니다.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가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장.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이어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이 거론될 즈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덩샤오핑의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내걸며 중도층과 보수층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흑묘백묘론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논리에서 시작된 말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론을 내걸며 G2 지위에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발언들은 지켜지고 있을까. 당시 이 대표는 대선 후 대통령이 돼 실권자가 됐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기업 못 해 먹겠다'라는 아우성이 재계 곳곳에서 들린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 등 증세안도 검토하고 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소위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억제, 재초환 규제 완화 무시 등으로 건설업계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80%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율을 1%p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각각 2.56%, 0.75%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2년 사이 41조 원 급감한 상황에서 세율을 높이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경우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미국 내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뒤 국가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미국 내 투자와 함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미국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결국 일부 공장의 미국 내 이전, 공장 신설 등으로 약 100조 원 이상 투자에 나섰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세까지 방어를 해야 해 못 해 먹겠다는 소리가 그냥 나온다. 미국 투자 확대 시 한국 내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전통적 우호관계인 한미·한일 동맹의 강화가 우선인데 대선 이후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국무위원들도 반미, 미군 철수 등을 외쳐 온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등을 임명했다. 최근 정상회담 기피, 소극적 관세 협상 등 외교관계에서 미국의 계속된 한국 정부 홀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지향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도록 세제 지원, 규제 철폐,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최소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하고 외교도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어느 곳이 이익인지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발언 번복의 전력이 있는데 이를 기업이나 국민들이 액면대로 믿은 것부터가 잘못인지 모른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재벌 갑질을 비판하면서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에는 재벌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삼성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전북 전주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라고 말했다. 이후 다른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꼬집었다. 이제 기업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실용주의 한다 했더니 진짜로 실용주의 하는 줄 알더라'라고 할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장문의 분석 기사인데요. 7월 28일 자 서울경제신문의 배동진 부장님이 '무늬만 실용주의 정부?'라는 의문표를 담은 제하의 기사입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실용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야지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 아닙니까? 그동안 공약을 할 때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이념적인 잣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현실로 다가오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의 다양한 기대 또 걱정을 적극 수용해서 이제는 그동안의 잘못된 공약은 바로잡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실용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만 실용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실용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시정할 책임은 우리 정치권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300명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님들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이곳에서 외쳐 주고 대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걱정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포장된 노동관계법 또 상법이 갖는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경제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이러한 법은 처리해서는 안 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이런 한결같은 목소리, 경제인들의 목소리, 특히 지방의 한계선상에 몰려 있는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지 마시고 내일은 우선 처리된 것은 재의요구를 해 주시고 2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또 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제가 시간 되는 한 더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더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경제 7월 30일 자 사설에서 소개된 이런 걱정스러운 논평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밖에서 핍박받고 안에서도 치이고…… 기업들 설 땅이 없다' 이런

제하의 한국경제 7월 30일 자 사설입니다.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법안이 줄줄이 시행될 태세다. 대표적인 법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산업계 우려가 숱하게 제기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 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도 나와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소액주주 편을 들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가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크게 줄이는 조치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로 확대된 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국내 기업 상당수는 신규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정도로는 기업들의 근심을 덜어 내기 어렵다.

지금 우리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처럼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지금이라도 경청하고 반기업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

길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할 때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업들의 근심을 덜어 내 줄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까지 하십니까?

그만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런 관세 폭탄이 날아오고 또 각종 비관세 장벽, 비관세 제재들이 아마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한 번 한 나라에서 시작이 되면 이제는 자국 기업 보호 우선주의로 모든 나라가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옵니다.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전 세계가 엄청난 교역 혼란과 중대한 위기를 같이 맞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국제 위기 상황을 맞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안에서 기업들이 안는 충격과 피해, 이런 위험을 덜어 주고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안에서 더 세게, 밖에서 치인

그래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궁지에 몰린 기업들을 안에서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듯이 이러한 그들이 싫어하는 법안들을 억지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8월 1일 자 사설입니다. '與 반기업 입법폭주 방치…… 갈수록 공허해지는 실용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용을 새 정부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의 진정성에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에 역행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지난 8월 1일입니다—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지요—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4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업의 숨통을 죄는 반기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크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해 대주주 경영권을 위협한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까지 맞물리면 기업의 투자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규제와 부담을 더하는 것이 과연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에 정부가 침묵하며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데 여당은 악역을 맡아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런 대통령이 반기업 입법을 방치한다면 실용주의 구호는 공허한 수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관세 전쟁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 활력을 살리고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자임했다면 여당의 반기업 입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처럼 침묵하며 기업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실용정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앞에서 나온 논설하고 비슷한 취지의 글입니다, 지난 8월 1일 자. 지금 우려했던 현상이, 입법 폭주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법사위를 통과할 때 나온 사설입니다.

이제 내일 이번 2차 상법까지 또 본회의 확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우려들이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급속히 위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

규 채용도 급속히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구직에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중소기업들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뚜드려 패도 되고 규제로 묶어도 됩니까?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의 선단식 경제성장의 선봉에 섰던 그런 경제주체들 아닙니까? 그 선단 선두에 선 대기업이 잘돼야 관련 협력업체들 또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는 같은 기업들이 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방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라고 뚜드려 패도 되고 덩치가 크니까 뜯어먹어도 안전할 거라고 보시면 착각 아닙니까? 대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정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의 부침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정부가 간섭을 안 해도 혁신적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 도태되는 것이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바로 대기업은 어쩌면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면 그분들이 채용과 일자리 만들기를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요. 능력도 안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 있는 것 마무리해서 적당히 정산해서 이제는 노후나 마련해야겠다 이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이 점점 기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져서 더 이상 못 해 먹겠다, 차라리 일하기 좋은, 기업 하기 좋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서 그냥 노후라도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막 요새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우려하는 법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마구마구 쏟아 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8월 2일 자, 이것도 사설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 보시지요.

관세 협상 도운 기업들에 반기업법으로 갚은 민주당.

민주당이 1일—8월 1일이지요—국회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일사천리다.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공을 세운 기업들이다.

정부 협상팀은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담은 이른바 마스가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해 협상의 실마리를 잡았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측 요인들과 접촉하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협상을 도운 기업들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부담을 안기는 반기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에까지 확대하는 법이다. 구조조정, 해외투자 등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당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회사마다 100개 안팎의 사내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일일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상법 1차 개정 한 달도 안 돼 2차 개정안도 처

리했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노란봉투법은 생산 현장의 노사 관계에서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도, 사회적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업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더구나 제조업은 한 번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과 산업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듣고 숙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바란다.

한결같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언론 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잣대로 현상을 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사설 형태로 걱정스러운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정말 주변의 사소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서 우리가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국민들의 창구, 귀요, 발이요, 손이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양한 통로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현상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7월 4일부터 시작된 입법 폭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법들 하나하나가 갖는 사회적인 파장 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 더욱더 한계선상에 있는 수많은 지방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엄중히 되새겨 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했던, 과거 정부에서 만들었거나 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의 역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보지만 규제는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취약한 부문을 더 힘들게 합니다. 강자들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피해 가는 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강화됩니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또 핵심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해야지요. 그래서 규제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이미 약발이 통하지 않는 형식적이면서도 오히려 약자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강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나쁜 규제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걷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대립과 반목의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걱정하는 또 지방의 한계기업, 위기에 몰린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악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후배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 이 시대의 시대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외면하고 포기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정말 자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위기를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워서 우루과이라운드, 소위 FTA를 선도해 오던 우리의 맹방 미국이 동료, 가장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두 개의 전쟁은 또 계속되면서 세계의 어떤 공급망 자체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는, 부존자원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로지 인적자원에 의존해서, 잘 교육된 인적자원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좋은 기업들을 만들고 조직들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 선순환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의 방정식, 우리의 그러한 공식을 우리 스스로 해체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순간에도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컬처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여와 야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이제부터라도 회복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정이 다가옵니다. 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나온 글들이 조금 더 많이 정제되고 정리가 잘된 것 같아서 제가 한 언론에 나온 글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지난 3일, 이게 1일, 2일 시리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8월 3일 자 한국경제 사설의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설 제목은 '맥킨지 한국, 더 뜨거워진 냄비 속 개구리…… 살길은 기업 야성 회복'이라는 사설입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가 한경 인터뷰에서 끓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그대로라며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재차 경고했다. 미국발 15% 상호관세를 냄비 속 개구리에 끼얹어진 뜨거운 물에 비유하며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라던 2013년 진단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다급해진 현실 인식이다.

송 대표는 한국 경제가 G7 도약은커녕 뒷걸음질하는 이유로 성장 기회를 위해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인의 의지 약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기업가정신 약화 이유로는 상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환경 악화를 지목했다. 이들 바위 규제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도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송 대표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런 정책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에 한국 정치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경제 현실은 너무 다급하다라는 점이다.

결국 기업과 기업인이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돌아보면 위기 돌파는 언제나 기업의 몫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조강국,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도 기업인 분투가 결정적이었다. 창업 세대와 2·3세대 기업가들은 남다른 의지와 혜안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오늘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을 일궈 냈다.

다음 스텝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지만 상황은 악화 중이다. 지난 십여 년간 혁신을 외면한 결과로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배터리, 헬스케어,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의 위상도 점점 뒤처지는 판국이다.

이제 믿을 언덕은 기업과 기업가정신밖에 없다. 여건이 만만찮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미국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방산, 원자력 등이 각광받는 데서 보듯 우리는 여전히 차별화한 제조 역량을 보유 중이다.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선두 기업을 제치고 테슬라 배터리 공급권을 따낸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트럼프발 위기를 냄비 속 개구리가 정신 차려 밖으로 뛰쳐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 사설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렇지만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가능성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많이 일찍 겪으면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소년 농공 가장이 돼서 4년을 농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도회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의 오지 설성면에 있는 경남종합고등학교라고 상과 한 반, 보통과 한 반이 있는 고등학교의 보통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도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경운기나 이앙기나 심지어 초기에는 양수기도 없어서 소위 새끼줄로 묶어서 두레라는 거로 물을 퍼서 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환경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술도 일찍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택고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종고를 다니다가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참으니까 되더라고요.

(8월24일 24시 경과)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 도움으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와서 서울에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반에서 꼴찌까지 가면서 학교를 진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했더니 되더라고요.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 10년 하고 서기관 승진하고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 신분으로 미국의 미주리주립대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무리한 목표를 갖고 유학을 가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체중이 10kg이 빠지고 불면증에 3개월간을 시달렸습니다.

제가 말도 안 들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이 교련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킹을, 리스닝을 제대로 적응을 많이 못 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더구나 계량경제학을 소화하려면 고급 수학, 통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토부에서 10년을 술 먹고 정말 이런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 까먹은 수학, 고급 수학, 고급 통계학 이게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버티니까 또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지혜를 모아서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저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가는 길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마 그동안에, 과거에 없던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나 군사력도 굉장히 약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도 수용할 정도의 핵무력 거의 완성 단계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 불균형이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북한은 아직도 막강한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의 기습 침투로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대거 투입하면서 실전훈련으로, 거기다가 드론이라든가 최첨단 무기체계 운용 실전훈련을 마스터하고 지금 군대가 장기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군사력 면에서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위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우리 채 해병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을 때 국회해병전우회, 당시 이달곤 회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당시 사무총장하고 같이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돌아서지를 않아서 하루 제 군대 동기 집에 머물면서, 하루 더 머물면서 발인까지 보고 올라왔습니다. 가족들 만나서 위로도 드리고 또 많은 해병대 희생자의 전우들 또 해병대 지휘관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 해병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의 중심에 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못된 것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최강의 부대입니다. 명령 지휘체계가 가장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특정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 부대가 아니라 특수임무를 위해서 전략기동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최강의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우리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동료 병사를 잃는 그 사건을 두고 8명의 관계 지휘관들이 줄줄이 엮여서 형사 이런 소추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대민지원을 이제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채 해병의 희생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 또 예우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는 문제로 해병대 전체를 지휘체계를 흔들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까지 오게 할 정도라면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안보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군 간성들을 내몰지 맙시다.

채 해병 특검은 조기에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빨리 마무리하고 군 지휘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안보와 직결된 조직과 지휘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늦게 오셨는데, 그래요. 제가 좀 더 발언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쪼여 오니까 제가 반응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안보체계가, 우리가 정말 과거의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경제위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국제경쟁력은 각 부문에서 갖췄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중국의 맹추격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위 산업에서도 이미 중국이 추격을 해 왔고 지금도 바짝 거의 많은 부문에서 이미 우리를 따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굉장히 과거보다는 격은 높아져 있지만 그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은 정말 심각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은 너무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너무 생각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당대표 간에 어떻게 악수 한 번 못 하는 이러한 불행한, 황당한 상황이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 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요 선배요 후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치적인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서로 모른 척하고 외면한 척하고, 서로 모른 척해야 됩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아무리 상대방이 밉더라도, 상대방이 원망스럽더라도 같이 선의의 경쟁, 서로 한마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쪽으로 경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언론들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인터넷 언론의 글도 또 한 번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데일리의 8월 19일 자, 며칠 전이지요, 여기 나온 기사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기업법 융단폭격, 관세 전쟁보다 무섭다’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법과 노조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내 한 대기업 최고위 인사는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 법은 경제 헌법과 같아서 추후 기업의 의사결정 구도, 노사관계 설정 등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제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겠나라고 토로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관세 폭탄, 중국 기술 굴기 등이 전례 없는 수준인데 국내 정책 리스크는 이보다

더 크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 600곳, 외국인 투자기업 1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 40.6%는 노란봉투법 처리 시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사업 비중 확대를 거론한 기업은 30.1%였다. 노란봉투법으로 1년 내내 하청 노조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줘야 할 수 있는 만큼 아예 한국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국민 76.4%는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63.8%, 건설업 48.3%, 철강업 36.9%, 제조업 14.7% 등은 사내 하청 비중이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원·하청 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가 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며 선을 그었다.

더 센 상법 후유증 역시 상당하다.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해 보니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율은 40.8%였다. 그런데 1차 상법 개정에 따른 합산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과 이번 2차 개정안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모두 적용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 25.9%, SK 39.6%, 현대차 32.1%, LG 40.8% 등 4대 그룹 의결권 상실률은 40% 안팎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임죄 형벌, 제재 일변도의 산업재해 처벌 등도 산업계를 옥죄는 정책들이다. 특히 배임죄는 고무줄 잣대로 불릴 정도로 적용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한데 이에 따른 기업인 처벌은 주요국들보다 유독 과도하다는 특징이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는 배임죄 제도개선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현 제도가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처리되는 많은 법들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면서 각 법률이 갖고 있는 처벌규정을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까지 만들어서 또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배임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많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주주 충실의무제도가 이제는 많은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든가 소액주주들에 의해서 어쩌면 기업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작동을 해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과도한 소송 대응으로 인한 비용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악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존의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는 못할 망정 기존의 어려운 환경, 이런 강한 규제에다가 또 이렇게 기존 규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추가적인 규제까지도 강화되게 된다면 가뜩이나 그야말로 내우외환으로 몰아치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한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그렇다면 지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 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제대로 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제 무대를 상대로 세계 최고의 번영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그 경제주체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또 뒤통수를 솜방망이가 아닌 해머로 휘둘러 패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아침이 밝았으니까요 오늘 아마 이따가 9시 지나면 또 토론을 종결시키고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법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반드시 내일은 부결시켜 주시고, 또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께도 간곡히 호소드렸지만 기존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법들은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재의 요구돼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시 폐기되는 순서를 밟아 갔으면 합니다.

기존에 처리된 또 공포된 법이라도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신명 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법으로 다시 탈바꿈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다시 신명 나게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방 경제 살리고 또 청년들의 좋은 미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정말 할 도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글도 더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는 학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학계의 전문가께서,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드렸지만 또 상법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 분석해서 언론에 게재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선 교수가 매일경제, 이게 옛날 기사네요, 2017년 1월 22일 날 게재했던 글인데요. 이게 최근 법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투기자본에 심장 내주는 격’ 이런 글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파괴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상법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현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소액주주 보호 취지도 훼손될 것이란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

주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대항할 수단을 없앨 것이라며 한마디로 투기자본 앞에서 국내 기업들이 무장해제되는 셈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에 제한을 가하는 만큼 기업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국내 대기업의 지분 구조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 수준이고 나머지 40% 내외가 소액주주로 구성된다며 소액주주의 경우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성향이 높고 세력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기자본은 상법 개정안을 악용해 과거보다 더 심하게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의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주 행동주의란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실 책임 추궁,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경영에 직접 개입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아우른다.

하지만 최 교수는 투기자본의 특성상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칼 아이칸이 KT&G를 상대로 자회사인 고려인삼의 기업공개와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 수단을 잃을 경우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흔들기는 소액주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투기자본이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에 나서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액 배당과 자산처분,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수익을 챙겨 간다면 자칫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기업 개혁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나아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보완 입법이 없이 강행된다면 개악이 되고 결국은 기업들을 몰아내고 기업들의 기업 운영을 포기하게 하는 진정한 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바로잡는, 용기와 양심이 우리 미래의 전당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반드시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찬반 토론이 헛되지 않고 진정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악법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또 한 번 연구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이 많아서 이것은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난번 법사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 그래도 모양을 갖춰서 이

렇게 공청회까지도 거치기는 했는데 과연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 법사위 공청회 때 지적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회를 중심을 빠르게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3일 이사회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소액주주 보호 그리고 주주와 기업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가 결국 주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1일 상법 개정안 공청회장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신 정우용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시 이정문 의원안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2020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정한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면 경영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1명의 감사위원만을 분리선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회사의 정관 자치로 두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정원이 4인이라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일 경우 4인이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일 경우 이사회의 의견이 2 대 2로 대립하여 결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해외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이며 분리선출 제도와 함께 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해외 입법례와의 정합성 및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리선출 확대로 경쟁 기업 해외 투자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 시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2019년 3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경쟁사의 CEO 등을 감사위원 후보로 주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외부인사의 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제품 개발과 가격 등 핵심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우려됩니다.

최근 자체적으로 정관에 1명 이상 분리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기업은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투표 의무화에 관한 지적입니다.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 훼손, 자본 다수결 원칙 위

반입니다. 현행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기업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집중투표 배제 과정에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자본이 제안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 간섭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 역시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실제로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단기 시세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의 이사회 진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외부인사의 이사회 진입은 더욱 쉬워지는 반면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합니다.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 다시 말해서 신주인수선택권·차등의결권·황금주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합니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 자기 주식을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회사의 자기 주식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으로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주주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자기 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께서 발표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결어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OECD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책은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법률을 피하고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부작용 없는 만능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영권 공격·방어 법제가 불균형적인 환경에서의 과도한 일방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발전과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다수 이루어졌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도입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때 비로소 경영권 공격·방어 법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 소위원회에 체류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 체류 중인 법안들이 추후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보완 입법에 대한 것이 이미 법안 발의, 배임죄에 관한 보완 입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지만 또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상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입법안을, 이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또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먼저 선행 개정되고, 입법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모아 가면서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바로 이런 보완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치 정해 놓은 공식대로, 정해 놓은 일정대로 이렇게 상법을 밀어붙인다면 이 상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만 강화되고 부각돼서 결국은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사지로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정말 충분한 숙의와 또 보완입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책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상충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정책 다양한 목표 간의 충돌 현상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게끔 절충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 없이 그냥 어떤 하등동물이 정해진 행태 프로그램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지로 가고 결국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나방이 불이 좋아서 불로 뛰어들다가 타 죽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법 규제 강화가 결국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일면의 호소력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근본적으로 경제주체, 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를 지탱해 주는 기업들이 취약해지고 기업들이 토대가 무너진다면 주가고 모든 경제의 근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경제계 8개 단체가 간곡하게 간곡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관에서 수차례 또 산업현장에서 수차례, 심지어 국회본회의 본관 앞에서 계단 앞에서 얼마나 목 놓아 주장을 했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아까 전북과 대전시에,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안 들으셨겠지만 경제계에

서 아주 간절한 호소문을 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경제인들이요 간곡히 읍소를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특히 한계선상에서 지방경제를 꿋꿋하게 어렵게 지켜 내고 버텨 내고 있는 지방의 그런 한계기업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무너진다. 그러면 지방경제가 같이 무너지고 지방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 목소리를 정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기업들이, 근근이 어렵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인구소멸로, 여러 가지 시장의 축소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에 많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멸, 지방경제 악화를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는 법이 그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그런 것을 촉발한다면 바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것을 강행하는 여당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게 직격탄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지방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노력에 집중해야 될 정치권, 그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여당에서 이런 무책임한 악법을 보완책도 없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이것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제가 참 여당의 대변인도 아닌데 제가 이 심야에, 새 아침이 밝은 지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께 내가 이렇게 호소드리는 게 정말 내가 아이러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제가 호소할 게 아니라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을 상대로 우리 이러지 맙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잘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드리고 싶은데 위의 부의장님이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아까 발언하셨네요, 맨 뒤에 앉으신 의원님, 오 의원님.

(「알아도 해야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짜 한번 자성을 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합병한 것에 대해서 반송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삼성……

(「국정농단했던 것」 하는 의원 있음)

국정농단?

(「그렇지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ISDS?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그것대로 또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 봐야 되고 이것은 어쩌면 경제 헌법과 같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법, 바로 경제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 법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지요. 건드리더라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명히 현재 갖고 있는, 상법이 갖고 있는 루프홀(loophole)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입법도 해야 되되, 다만 소위 말해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도 그런 것 아닙니까? 소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모든 기업을 노조가, 그것도 강성, 단일화된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기업생태계를 노동계가 장악하고 그야말로 경영의 자율성·창의성을 속박하는 이런 법이, 그것도 소송이 이제 남발하게 될 것이고 또 파업과 이런 쟁의가 그야말로 일상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버텨 낼 재간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량 해외 기업들, 이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외국계 상공회의소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를 이렇게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계 전반에서, 그다음에 전국 방방골골에서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이것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실제 그 폐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여당이시니까 책임을 지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여당의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실패로 또 대한민국 지방, 소중한 지방경제의 실패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이 법이 또 아침에 이제 몇 시간 후면 가결, 통과되겠지요. 우리는 표결에 참가 안 했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국회의 다수결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후배들, 후손들은 당대 22대 국회의원 전체가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지방경제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기업들을 이렇게 힘들게 포기하게 해서 일자리 없애고 나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책임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동료로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한 경제 헌법에 손을 대는 문제부터, 특히 노동관계법, 그야말로 기업의 가장 기본인 노동자와 기업 경영자 간의 분쟁에 경영활동 자체도, 경영 의사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삼고 또 당사자 고용주를 갖다가 그야말로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닌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까지도 다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부메랑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난번에 철도 현장에서 사고 났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정신에 의하면 철도공사 사장만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요. 바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한 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기업의 수장은 물론이고 그 정책결정을 한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또 관계부처 장관을 지휘한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결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에 의하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지금 이 상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요 보완입법 없이 무책임하게 이거를 집행하고 시행을 하면 결국은 이거를 집행하는 게 결국은 관계부처 이쪽에 앉는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뽑고 여러분들이 만든 분들이 그런 사고를 치고 나라를 망치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애정 어린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국무위원이 뭔 나라를 책임집니까? 내란, 누가 책임집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란에 관해서는요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서 냉정하게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 중인 그런 사안을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

게 기업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분들을 도와주고 민생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될 우리 국회가 사법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감 놔라 콩 놔라 미리 단정적인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지방경제 살리고 무너져 가는 민생 살리고 뒷골목 경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맞대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란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가……

(「일주일 만에 144조가 날아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일과성으로 지나가면 또 수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시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또 소득주도성장의 여파가 지금 우리 민생 바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중산층을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소개를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제저녁을 우리 이천의 맛집, 구체적인 이름 한번 대겠습니다.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분이 연간 매출액이 53억까지 하는 정말 맛집이에요. 스테디셀러 또 아주 베스트셀러 업소인데 그 회사가 요새 20분의 1로 매출을 줄여서 운영한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얘기하는 52시간 원칙과 또 최저임금을 감당하려면 기존의 많은 고용인력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갖고 그 시설을 텅텅 놀리면서 아주 최소의 매출만 운영하면서 한 달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운영만 한대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할 게 아니고요, 지역구 또 지금 사시는 동네 골목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어떤 특정 목소리에 너무 경도돼서 더 큰 걸 놓치고 그 목소리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경도된 정책과 제도 이런 국정 운영은 반드시 그 후과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상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토론 자리이지만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완입법 없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 한번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한번 해 보자라는 오만과 어떤 편협된 생각으로 이걸 밀어붙이다 보면 고스란히 그것은 다 민생의 피해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게 우리가 검찰제도도 바꾸고 사법제도도 바꿔 나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과학적인 분석과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아마 엄청난 민생의 혼란과 제도 적용상의 혼란 때문에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사회적 대혼란으로 아마 여당이 그 혼란의 책임을 온전하게 다 뒤집어써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진짜 다양한 법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그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적 논리로 통과되고 숙의 없이 보완 없이, 그것이 결국은 다 자충수가 될 것이고 부메랑이 돼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서로 숙의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300석 자리를 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자리를 같이 만들었는데 서로가 너무 생각 차이가 크고 또 같은 당에서도 사실은 여러 생각이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여기 전체주의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독재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각자의 지성과 각자의 양심과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식견에 따라서 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여야 없이 같이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들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곡된 결정으로 빠져들지 않게 같이 좀 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이런 데서는 52시간 제약이 엄청 그 폐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아주아주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엄청 큰일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 R&D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왜곡되고 과도하게 된 그 노동 규제들을 과감하게 손을 댄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해 줘야 결국 국가가 돈 안 들이고도 바로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잘못된 제도를 찾아서 과감하게 고쳐 나가고 기업하기 어려운 애로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토론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니까 한말씀만 더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공동 번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한정된 국토자원이 제대로 활용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런 것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게 처음 출발한 것은 80년대 초반에 서울시 사대문 안이 학원도 집중하고 인구도 집중하고 좋은 시설들이 집중하면서 너무나 지역 균형을 저해하고 서울로 또 사대문 안으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규제 대상이 퍼졌고 나중에는 경기도 전역 또 인천시, 서울시 전역으로 수도권 규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인구밀집 시설들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규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3개로 구분을 해서 이미 개발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주로 기존 도시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한강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기도와 인천 일부 이런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으로 물 흘려 주는 경기 동·남부권의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중에 가장 심한 규제가 자연보전권역에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유발시설의 밀집,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인데 과연 이게 80년대 초반에 시행을 해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봐야지요.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특히 경기도, 우리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평택, 충청남도랑 접경하는 지역까지 이미 다 개발이 완전히 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에는 이미 도시화가 다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이 그나마 개발이 덜 돼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고 또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고 대규모 시설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소규모 시설들과 소규모 개발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는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고 수도권의 환경 보호를 한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개발, 소규모 시설의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고 그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배치를 제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 관리에 더 애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아주 핍박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인근 지역과의 상호 소통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서부벨트로 성장관리권역의 평택·화성 지역은 충남 또 남쪽 세종 이쪽과 원활한 소통으로 그쪽은 소위 개발벨트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자연보전권역은 섬처럼 강한 규제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쪽과 연계되는 강원권·충북권·경북권, 그러니까 소위 영남권이지요. 그쪽과는 완전히 소통에 단절이 생겨서 그쪽은 마치 거대한 자연보전권역이 장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 소통을 장애하고 그 빈 공간을 소규모 난개발, 소규모 시설들이 난개발로 다 뒤덮여서 불통의 장벽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영진 의원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의장님은 허용해 주시겠네요.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이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계시니까……

이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막연하게 이렇게 규제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불통의 그거를 강화해서 지역 간의 서로 상생 발전을 저해할 뿐더러 당해 지역을 갖다가 아주 난개발,

이런 나쁜 개발로 지역을 망가뜨려서, 지역민의 인구는 줄지를 않아요. 인구는 느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환경 악화는 심해지고 수질오염, 대기오염 각종 이런 환경오염이 더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연보전권역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리고 또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사실은 수도권 전역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수도권 규제를 없애고 법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행정수도 이전 그게 좀 딜레이되면서 시차를 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획적 개발안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계획적 개발, 다시 말해서 그쪽을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되 규모 있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튼튼히 하고 또 지역 간에 이런 간선시설들을 확충해서 지역 이웃 도시, 지방도시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자는 것이 바로 계획적 개발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얼마 안 남은 지역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은 개발하게 좀 규모 있게, 그래서 기반시설도 넓게 해 주고 대신에 규제할 것은 더 엄격히 규제하고, 그렇게 해 줬을 때 영남권으로 서로 벨트가 형성이 되고 충북·강원과의 공동 상생발전의 벨트가 형성이 되거든요.

바로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이천에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게 지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방으로 못 가고 원삼으로 갔지 않습니까? 옆의 원삼은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벨트로만 계속 개발이 돼서 그쪽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이쪽 자연보전권역에 만약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갖춰서 좀 더 남부벨트에 갔으면 바로 음성하고 충주하고 하나의 벨트로 형성,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규제가 막은 거거든요. 그게 강원권으로도 연결되고 또 경북 문경이라든가 영주 이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이쪽에서 막아 버리고 외부로, 그것도 지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수도권 내에 더 복잡한 데로 다 몰아내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제가 정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또 환경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 바로 그것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또 국민들,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정말 새벽 1시 10분이 되도록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이신데 결과적으로 이 좋은 자리에서 나쁜 법을 통과시켜서 나중에 지탄을 받고 기업을 몰아내고 기업을 속박하는 그런 나쁜 법이나 만드는 국회라는 오명을 우리는 이제 벗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완입법 이미 벌써 발의가 돼 있고 또 지금 우리 여야가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법들도 같이 보완이 됐다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순차적으로 갔으면 그것이 다 우리가 모든 정책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문제 지적은 덮어 두고 당초에 그냥 하려고 했던 것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결과도 안 좋고 과정에서도 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계속 후대의 기록에 이렇게 일방처리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고 또 합의정신도 무시되는 이런 정치사에 오명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하도 발언권 제약을 받아서 제가 엄청나게 핍박받던 와중에 오늘 이렇게 발언을 중간에 끊는 일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한 자리에서 제가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나쁜 법 통과하는 걸 막기 위한 반대토론을 하는 데 이렇게 시간을 마냥 허용을 받고 그것도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주장을 해도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후에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식으로 무시당하고 원안대로 그냥 또 통과, 가결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국회에 이렇게 밤새면서 여야 의원님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마주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국회가 과연 그냥 정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장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좀 생산적인 국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은 서로 견제하고 말려서 해서는 안 될 짓은 피하는 그런 정말 멋진 민의의 전당 우리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마 몇 시간 후면 그동안 올라왔던 많은 이런 악법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뭔가 이슈로 넘어갈 텐데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게 이번 시리즈법의 마지막 법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상법 1에서부터 이번 상법 2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으로 위장된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방송 3법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계된, 소위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의 기본법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훼손을 할 수 있는 이런 악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표결이 있기까지 계속 하고 싶은데 또 기다려 주시는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의사진행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한정된 시간인데 우리가……

저는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현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던, 그것도 참 저랑 같은 상임위에서 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분은 전임 위원장에 비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좀 부드럽고 그래서 소통이 잘되는 분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런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서……

그런데 본인이 그런 범죄의식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 불법행위지요. 그런데 또 이분이 여당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이셨잖아요, 분과장. 거기다가 이런 핵심 정책, 새 정부의 정책까지도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우리 정말…… 저는 거시적으로 주로 우리 의원님

들 이렇게 호소의 말씀드렸지만 미시적으로 각자 개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부터도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 만연돼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과거에 다른 의원님들도 국회 회의석상에서 회의 중에 어떤,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또 공천에서 배제된 사태도 있었는데 또 그런 분이 정부 요직으로 또다시 발탁이 되고.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 제가 고위공무원으로 첫 승진을 해서 첫 보직이 총리실에 파견을 나가서 새만금개발 국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또 새만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비전과 당위성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바도 있었는데 거기로 책임을 지고 가신 분이 과거에 유명한 흑석 거사, 부동산 투기 또 이런 불법적 행위로 지탄을 받았던 분이 그런 자리에 간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신성한 땅 새만금을 책임지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분께서 또 이런 불법행위를 하다가 그것도 언론에 노출이 되는 정말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국회 구성원 한 분 한 분께서 서로 진짜 존중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혹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그런 조치들이 우리 국회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견제·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됐으면 합니다. 걸러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실망시키고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국회에서 또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현안이지요. 큰 성과는 어차피 시간을 두고 나타나겠지요.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제고하고 우리가 또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라든가 또는 국가균형발전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성취해 내는 데는 많은 중장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가장 단기적인 지표로 주가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현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정책을 잘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단기적인 주가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단기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투기적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투기적 이익에 또 너무 탐닉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국가의 근본 토대를 강화하는 데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 부리듯이 기업의 주가를 억지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 같은 것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는 가장 대표적인 너무 근시안적 제도 개선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까지 가장 모범적인 견조한 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한때는 일부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상법 개정안 자체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중장기 성장동력 만드는 것을 발목 잡아서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망치는 그런 악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보다 더 투명하면서도 다양한 선진적인 감시장치를 도입하고 보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가치,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님들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살라미식으로 추진됐던 입법에 대해서 마지막 상법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방송 3법도 아마 이게 여당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보다 더 방송 3법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게끔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법은 아직, 지금 1차 상법은 통과됐고 2차 상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완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저의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세계의 선도적 역할을 지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시장을 개척해서 공업입국 또 무역입국,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과 또 많은 학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가발을 만들고 작은 가내 공업, 시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제조 각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그리고 또 서비스업, 물류 부문에서, 모든 산업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장 선도적 위치에 진입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모범사례를 이제는 우리가 잘 다듬고 더욱더 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는 추종국에서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상법 자체도 부족한 점이 오늘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기업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기업들을 발목 잡기하고 이런 식의 법이 아니고 기업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보다 더 활력 있게 투자하고 창의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입법들이 추가로 상법에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신명나는 그런 법들이 보다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를 얽어맸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것의 무리한 측면도 다시 또 보완이 돼서 정말 중대재해는 철저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고 또 사후적으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 그런 것이 같이 강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더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 가는 중산층들,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많은 농업인들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노동시장의 왜곡된 대책들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은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법안 토론이 진행 중인데 주무 장관이 임석해 있지 않습니다. 10여 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님 문제 지적, 저도 아까 비슷한 걸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누가 대타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대타가 없이 자리 비우시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의 상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애로를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고 그것을 바로 입법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간절하고도 가장…… 정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업계 각 영역에서 또 학계 또 언론계 모든 영역에서, 특히 청년들의 구구절절한 외침 속에서 절대 이런 무리한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발 1차 상법에 이어 이번 2차 상법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의 단기 투기자본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발목 잡는 그런 나쁜 법이 탄생되지 않도록 곧 몇 시간 후에 진행될 이번 표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 반드시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또 소득주도성장에서 만들어 낸 52시간 노동 규제라든가 최저임금제의 불합리한 측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개선된 입법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현정)

(01시3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저는 제2차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2차 상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지난 1차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숫자를 늘리고 또 3% 룰을 강화시킨 1차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후속 법안입니다.

좀 전에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 상법 개정이 기업 죽이기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법 2차 개정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을 달성하는 그 기반을 닦는 마중물이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SCI라든지 OECD에서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과 투자자 보호 미흡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재계에서 반대 이유로 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경영권이…… 그러니까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주의,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돼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회사의 투자라든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경영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확고한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있다 보니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적 지배구조 등을 통해서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기업에서 모든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상법이 통과되면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21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 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불투명한 편법적인 지배구조라든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다든지 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들이 자본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리고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도, 한동훈 전 대표도,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전 원장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한바—물론 실패하긴 했지만—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계에서 반대를 하자,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자라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한덕수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국가경제와 자본시장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아닌 경영권 승계가 필요하고 또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소수 재벌 오너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1차 상법 개정 때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본회의에 상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들이 반대를 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서 합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1차 상법 개정이 그렇게 우려했던, 재계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1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을 때 주식 시장이 어땠습니까? 정말 뜨겁게 반응했고 결사 저지했던, 그렇게 반대를 했던 오너 일가, 재벌 대기업이 지배주주로 있는 지주사 주가가 또 가장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들이 없어지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반대를 했던 재벌 오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대단히 아이너리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은 오히려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에는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에는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2차 상법 개정의 내용들이 1차 상법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하자라는 후속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 상법 개정만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정말 그야말로 논리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버에서 반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어 보면 1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대부분이지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차 상법 개정 때 반대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랜 시간 동안에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찬반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차 상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독한 코리아의 증시 저평가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는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각종 전문가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탄핵되었던 그리고 MSCI와 OECD에 의해서 이미 탄핵되었던 재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주장하면서 반대

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는 1500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 외국의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2차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약 30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일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을 아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증시 상승에 대한 소소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였습니다.

우리 직장인 중에는 급여 일부를 적금하듯이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1500만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왜 상법 개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한번 받아안고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2007년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p를 돌파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처럼 주가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박스피라는 말을 지겨울 만큼 들어야 했습니다.

2010년 코스피 주가가 2000p였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같은 2000p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3100p로 1.5배 상승할 동안에 미국의 나스닥은 2만 1000p를 상회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한국 증시는 2000~2200선, 많아야 2500선에서 오르내리면서 기나긴 정체의 늪을 반복했습니다. 이른바 박스피의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국민은 주식에 투자해도 10년, 15년 동안 수익률이 거의 오르지 않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바닥일 때 사서 조금이라도 오를 때 얼른 팔고 나와라,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상식이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기업 실적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제자리인 괴리 현상에 개인 투자자들은 좌절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원금 손실로 손해를 보고 또 수익률이 훨씬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 기회비용 손실까지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낳은 국민적 불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즉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우리는 개미라고 부릅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개미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작은 몸집과 끈기 있는 습성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생명체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대형 기관이나 자산가들에 비해 자본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개인들이 작은 알갱이들을 모으듯이 자산을 조금씩 모으고 투자를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개미와 유사해 소액 투자자들을 일컬어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투자처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동학개미, 미국 시장

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서학개미라고 부릅니다. 일본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일학개미,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미는 중학개미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 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소위 게임스탑 사태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형 기관들이 공매도한 주식을, 게임스탑이라는 공매도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폭등했고 이에 따라서 대형 투자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은 사례입니다. 개미 투자자들도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게임스탑은 미국의 오프라인 게임 소매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다운로드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은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할 것을 서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기에 투자했던 공매도 펀드였던 멜빈 캐피털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인해서 2021년 1월 달에 20안팎이던 주가가 불과 몇 주 만에 최고 483달러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월가를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금융시장의 공매도 제도개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임스탑처럼 개인 투자자의 힘을 보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국장을 지키자 그래서 주식을 매수해서 시장을 떠받쳤는데 이를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게임스탑 사태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집단적으로 시장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유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 그 힘이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점점 더 소액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 정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다가도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또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쪼개기 상장 또는 주가조작 또는 알짜 기업에 대한 자진 상폐, 유상증자 뭐 이런 불측의 지

배주주들의 편법적인 기업 운영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서 지금 미장으로 많이 떠나 있는 투자자들을 다시 한국 증시로 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형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의 보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주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확인하듯이 미국 나스닥하고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그리고 인도, 대만 등 대부분의 증시는 2021년도 고점을 넘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 국내 증시는 저희가 21년 7월 달에 한 3200포인트 정도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며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또 이 표를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 표는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총수익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주식 투자 수익률인 총수익지수(TSR)인데요. 이 TSR에 대한 최근 10년 값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97%로 상승했고요. 미국은 271%, 대만은 246%, 독일은 120%, 중국 상해 지수도 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고작 61% 상승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우리 증시가 헐값 증시라는 것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하는 PBR입니다. 이 PBR은 기업의 장부 가치를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높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판단의 척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PBR은 0.8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3000포인트를 주가가 돌파를 한 최근에도 1.06 정도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업 자산 가치보다 훨씬 싸게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 시장과 비교를 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1.5배이고요, 대만도 2.4배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지수의 평균도 1.8배이고요. 미국 S&P 같은 경우는 약한 5배 됩니다, 5배.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코스피에 상장하면 1만 원 받는 주식이 대만에 상장하면 2만 4000원, 미국에 상장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코리아 저평가의 원인만 제대로 제거한다라고 하면 신흥국 지수의 평균인 PBR이 1.8만 되더라도, 지금 우리 주가가 거의 3200포인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1.8배가 된다라면 5000포인트 달성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소액 투자자들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상법 개정부터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PBR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투자한 주식은 항상 제값을 못 받는가, 내 미래를 걸고 투자했는데 왜 기업들이 정당한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가 상법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박스권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사이에 12배가 넘게 미국 증시로 이동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것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형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분포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이 3인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금융이 7이고 부동산 쪽이 3인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액을 투자하는 부동산은 그야말로 투기이고 불로소득이지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시장 아닙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는 투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주식시장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주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9년도에 600만 명대였던 개인투자자 수가 4년 만에 무려 1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4년 만에 무려 800만 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상당수가 2030 청년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세대들은 주식시장을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청년세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중산층을 향한 꿈과 그리고 기업 투자 활력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국가경제와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지난해에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원인이었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긴축재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오히려 코리아 디

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거꾸로 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작년 11월 6일에 출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코스피 5000 특위가 만들어졌고 현재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7월 1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코스피 500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방향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상법 개정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기업 죽이기 법이다', '재계가 반대한다', '더 숙의하자'라는 등의 논리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히 확인된 것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은, 이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과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주가를 부양해서 국부를 올리는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상법 개정의 주요한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상법이 그동안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은, 사실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독일과 일본 등에서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도 대륙법계, 독일 상법과 주식법에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중 회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법을 다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하고 일리노이주 사업회사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범회사법의 원리를 수용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상법은 한국의 법 가운데 가장 영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 제도들을 도입했는지 그리고 왜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큰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델라웨어주라든지 미국에서는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다시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미법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회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연혁에 따른 미국의 법체계를 따라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나라 상법이 개정된 내용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에 98년도, 200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상법 개정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하고 이명박·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개정된 상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IMF에서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콕 집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를 고쳐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은 총수 1인의 전횡 그리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내부거래 남발로 인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요. 이를 IMF가 보기에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재벌의 권한을 줄이고 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된 것이 바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었고요. 사외이사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권은 여전히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위원도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가 임명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상법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과 OECD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도 재벌 중심 구조가 안 바뀌었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외국의 자본이 없으면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의 자본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안전한 국가로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재명 정부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도 이제는 법으로 주주를 보호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때 만들어진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식적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과 지주회사 구조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상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바뀔 거야라는 시늉만 보여 주는 형식적 개정에 그쳤고 실제로는 재벌 대주주가 경영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개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의 상법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재벌 개혁도 촛불 정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3% 룰이 도입되었고요. 전자투표 의무화를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연루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승계 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11%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찬성한 이유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역시 재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을 재벌 공화국이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조롱하기까지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주권 보호 수준이 낮고 회계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바로 한국 기업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2020년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2020년도 문재인 정부의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미·중 무역 전쟁하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투자 위축까지 겹치면서 기업 환경 전반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행동주의 소액 주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 등 소액 주주로서의 권리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자연스럽게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대면 회의라든지 전자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전자주총과 전자투표제는 비용과 인력 문제로 어렵다라고 했던 기업들의 반론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기업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의무화되고 3% 룰이 도입되었고 또 소수주주권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다만 전자투표제는 여전히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렀고 가장 강력한 법정 견제권으로 거론되던 다중대표소송제는 2020년 상법 개정 때 처음으로 도입은 되었지만 정보 접근성과 소송 절차상의 제약이 많아서 실효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리선출제는 대주주 측이 A, B, C를, 자기 사람을 이사로 뽑아 놓고 A만 감사위원으로 뽑는 식으로 간단하게 우회가 가능했습니다.

3% 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탁회사라든지 친인척 또는 관계사, 계열사 등에게 나누어 보유하게 한 뒤 이들이 각각 별도 주주로서 3%씩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겉보기에는 여러 주주가 참여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기능해서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상법 개정도 제도 도입 자체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기업의 회피 여지를 막는 데는 실패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상법 개정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질적인 병폐로 얘기하고 있는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투자자의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상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7월 결국 1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이 외에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5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7월 22일 개정안이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이 개정된 이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을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차 상법 통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상법 개정 하루 전인 7월 2일 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상법 개정안 통과 임박, 그룹 지주사 주가 급등'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들 주요 그룹 지주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국민의힘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던 지주사에 투자 금액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HS효성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9.93%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한화, SK, 롯데지주, LS, 코오롱, GS 등 주요 그룹의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HS효성은 그간 지주사 테마주 중 하나로 꼽혀 왔던 데다가 최근 들어 배당 여력이 커졌다는 증권가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간 지주사는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라는 특성상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하는 재계가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주가가 가장 급등했다, 그것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을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오히려 지주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지주사들의 주가는 올 들어서 새 정부의 주주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계속 우상향해 왔다. 실제로 한화는 올해 초에 2만 705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10만 8800원으로 4배가 됐다. 코오롱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5만 원대로 오르면서 약 3.8배가 됐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7월 3일 날 한국일보 기사도 제가 제목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5000 시대 재강조·상법 통과에…… 코스피 또 연고점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재차 강조한 3일 코스피가 1% 넘게 올라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거고 특히 지주사의 주가가 더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상법 개정 통과 전후로 우리의 주식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박스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자본시장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는 역대 정부의 코스피 상승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는 표는 역대 정부 취임 후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된 이후 30일, 50일 기준 연속으로 코스피가 우상향한 사례는 역대 정부 열 번 중에 두 번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상승폭이 미미해서 우상향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5000피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만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0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15.46% 상승했고요, 이후 50일까지는 추가로 2.16%가 더 오르면서 총 17.9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0일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3.57%, 문재인 정부 3.92%, 두 차례뿐이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17.96%로 이들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차 상법 개정의 효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 뜨겁게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가 추가되어서 이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계와 국민의힘에서는 소송이 남발되고 또 책임경영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반론을 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증권거래법 관련돼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도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로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경영판단 원칙에 의해서 R&D라든지 또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상법 개정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중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름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소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

리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편법적 지배구조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라든지 연봉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전한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도 그리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제지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그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 것입니다.

원래 사외이사라는 제도—독립이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그것은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아니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그 독립이사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 독립이사, 사외이사들이 결국은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의 거수기로 전락했던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이사가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주주의 이익 보호와 투명경영 실현에 더욱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 이 입법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 3% 룰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3%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3% 룰, 이것을 그전에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가 있었는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영향력이 줄고 감사위원회 구성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대단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주총 병행개최 의무화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전자주총 제도에 따라서 상장회사는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전자출석 주주는 현장 참석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주총이 매년 3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총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전자주총 의무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게 이게 취지고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상법 개정으로, 1차 상법 개정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던 우리 주식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으면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도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계속 잇따라서 시장에서 '아, 이재명 정권하고 정치권에서 정말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을 때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2개 국가 중에 8위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진적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수치로 보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또 주주환원 정책이 미비하고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면 투자자의 주식투자 유인이 감소되고 이는 곧 주식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는 총수 또는 오너로 대표되는 지배주주 경영이 일반적인 대기업 경영 방식입니다.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 중심의 경영으로 인해서 일반주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그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대주주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익을 위해 좌지우지해도 괜찮고 불공정한 합병,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눈더미처럼 커져도 괜찮고 투명하지 않은 경영 관행, OECD 최저 수준의 배당성향 그리고 내부자거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등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일상적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무력화됐습니다.

이사회가 대주주의 손발 노릇을 해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주총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견제가 불가능한 지배주주들의 모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동학 개미들에게만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투명하지 못한 시장, 할인해야 하는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주 발행이라든지 또는 기업 합병 및 계열 분리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고 이익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 사례, 그런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지배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삼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에 재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업 합병 시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책정한다거나 또는 계열분리 시에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를 이용해서 지배주주 지분율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96년도 삼성그룹이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입니다. 96년 에버랜드는 주당 77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나 시장평가액은 8만 5000원 이상으로 헐값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하자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실권주를 인수해서 지분 25.6%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생명 지분 21%를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

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1심에서 박노빈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대법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이지 주주 개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7월 달에 개정했던 상법이 그 당시에도 개정이 되었더라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의 지배주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공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주 보호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입니다.

당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을 하고 삼성물산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의 가치는 제일모직의 0.35배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주는 물론 여기에 삼성물산의 11%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 국민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날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에 따라서 메이슨에게 총 74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9월 13일에 ISDS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에게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또한 메이슨뿐만 아니라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당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내렸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주주로서 합병에 또 반대했습니다.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로 제일모직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라는 주장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개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약 1400억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농단까지 개입된 사례로 ISDS 소송까지 촉발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뇌물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으로 인해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세 명이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 모두 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기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9년과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물적분할 건입니다.

LG화학은 물적분할 후에 기업공개 방식으로 배터리 사업 부분을, 그러니까 LG엔솔을 분할했습니다. 물적분할 후에 기업공개 방식은 LG화학 지배주주인 그룹 지주회사 LG에 아주 유리한 방식으로, 지주사인 LG는 LG화학을 통해서 LG엔솔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의 일반주주들은 LG엔솔에 대한 지분을 단 한 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의 분할을 발표한 직후에 이틀 동안에 LG화학의 주가가 11%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했을 일반주주들은 이런 물적분할을 통해서 큰 손해를, 중복 상장을 통해서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 상장 그리고 쪼개기 상장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소수 주주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이름을 올리는, 상장을 하는 이런 구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업 전문성하고 자금조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모회사 주주의—이 사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지요—가치 희석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떼어 내서 자회사로 만든 뒤에 상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투자자의 관심은 새로 등장한 자회사로 쏠릴 수밖에 없고 모회사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 신세가 되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주주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복 상장은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에는, 이런 중복 상장은 해외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모회사 딱 한 곳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미국의 문화 그리고 강력한 주주권 행사, 집단소송제도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가치를 전체 시총으로 나눈 값인 중복 상장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의 중복 상장비율은 0.3%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4.3%, 1.9%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복 상장을 근절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다 여기에 연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0년 LG그룹의 계열, 이번에는 계열분리 건입니다. 전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승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엘지는 구광모 회장이 그리고 구광모의 숙부인 구본준 회장이 LX그룹을 분리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승계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계열분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LG그룹은 공식적으로 지주사 LG에서 LG MMA 그리고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판토스 등의 자회사를 계열분리의 방식으로 떼어 내서 지주사인 LX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전 LG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구

본준이 LX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열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각을 통한 기업인수였다라면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LG의 주주 가치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분리가 아니라 매각 방식이었을 경우에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을 경우에 LG의 일반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로 인정받았다면 1145억 그리고 50%일 경우에는 2862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LG그룹의 친족 간의 경영권 승계로 인해서 일반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추가에 의한 주주 가치 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것인데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의 합병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와 현안질의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고 제가 두산밥캣 방지법도 지금 대표발의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4년도 7월 달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이 합병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두산밥캣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데요.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회사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한 다음에 상장폐지시킵니다. 두산밥캣을 상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복잡하지요? 그냥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매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합병을 하고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해서 상폐시키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대주주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주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합병 비율을 어떻게 정했냐면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0.3주로 합병 비율을 정했는데요. 이 두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합병 비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산밥캣은 말 그대로 정말 두산그룹 내의 최고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두산인프라코어였는데요. 2023년의 매출을 보면 9조 7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30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산로보틱스는 매출이 고작 530억이고요. 158억의 영업 적자를 낸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규모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업들 간의 합병을 하는데 그것을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의 주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런 상장회사 간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그 합병 비율을 주가로, 시장가격으로 정하도록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합병 사례와도 다 비슷하게 합병할 때에는 그렇게 두산밥캣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서 합병 비율을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그런 편법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편법적 지배구조를 했을 경우에 지주사인 두산은요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13.8% 정도였는데 합병이 되고 나면 42%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 합병

이, 결과론적으로는 합병을 철회했는데 만약에 이 합병이 성사됐다고 하면 두산은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만약에 두산밥캣에서 1조 원을 배당한다고 하면 1380억을 배당받던 것에서 4200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런 합병 방식이 상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결정을 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회의 이사들은 아마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서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현행의 상장회사 간의 합병 시에는 주가로 합병 비율을 정한다라고 하는 자본시장법을 최대로 악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병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정감사와 현안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금감원에서 이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고 계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정정신고서를 반려하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결국은 포기를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런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주가가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라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 발의를 지금 한 상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SK E&S의 합병도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작년 7월인데요 양사가 이사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 대 1.19입니다, SK이노베이션 1, SK E&S 1.19. 그런데 이것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SK이노베이션은 23년 기준 매출이 77조 2900억이고 이익은 1조 9000억인데 SK E&S는 매출이 11조 1700억, 영업이익은 1조 3300억입니다. 두 회사 모두 지주사인 SK㈜가 지분 36%와 9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 대 1.19라는 합병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합병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증가해서 주주들이 이런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례도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고려아연 신주발행도 작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2015년도 사례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상법 개정이나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런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등을 펼쳤지만 그 효과들이 없고 여전히 이러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과 지배주주만을 위한 꼼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 사례가 고려아연 신주발행 사안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려아연도 경영 주도권을 두고 장 씨 일가인 영풍그룹 측하고 최 씨 일가인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MBK라는 사모펀드가 영풍그룹과 손잡고 적대적 M&A 시도를 통해서 지분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고려아연이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유상증자 가격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롯데렌탈 지분 매각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께서도 소개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이상으로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도 함께 개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런 제도들이 있냐면 상법 외에도 소액주주가 불리한 기업 거래에 반대할 경우에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회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 분할 시에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요.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외에,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말고도 더 치밀하고 더 면밀한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압도적인 기업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기업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쪼개기를 막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밸류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패로 귀결되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또 저 말고도 뒤에 네 분이 더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서 마련한 주주보호 원칙이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입니다. 모두 자산 2조 이상 대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3년 말 기준 2조 이상 대기업은 214개에 불과합니다.

먼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통해서 이를 배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은 항상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의중에 좌우되었고 소액주주가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간단히 말해서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이사 3명을 뽑는 상황에서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1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의 힘을 합칠 경우 최소한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한두 명이라도 이사회에 앉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제도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해외에서 이미 확인됩니다.

우리 회사법이 많이 벤치마킹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델라웨어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이미 허용하고 있고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는 그야말로 소액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주요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설립이 가장 많은 주로 꼽히는 델라웨어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투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집중투표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기업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주주의 독점 체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이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방식은 여전히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총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분리선출 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처음부터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이사를 특정해서 따로 뽑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3% 룰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표는 제한이 되고 독립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행법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이 제도의 중요성도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도 초에 엔론 회계 스캔들 이후에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독립성을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이 엔론 회계조작 사태는 세계 상법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엔론사는 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거래 시장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들은 엔론의 부채와 손실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01년 초에 일부 언론과 금융분석가들은 엔론의 이런 복잡한 재무 구조와 높은 부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0월 엔론은 재무제표의 손실을 12억 달러 이상 과소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투자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세계적인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이 엔론의 회계 부정에 협조하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2001년 12월 2일 엔론은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기업의 재무보고 및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회계법인의 책임을 높이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그 유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입니다.

유럽 연합 역시 기업 지배구조 지침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두고 특히 대주주와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단 1명의 독립된 위원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안에 대주주와 무관한 위원이 다수 존재하게 되면 내부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서 투명한 회계와 독립적인 견제를 보장하는 것, 그 자체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적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당연한 규범이 된 제도가 이제서야 도입이 되는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대주주의 전유물이 아닌 주주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는 그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계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8월 5일 날 이 상법 개정이 반기업법이라면서 간담회를 열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험을 초래하고 기업의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혹세무민하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의 내용은 집중투표제를 규정하면서도…… 그러니까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규정하면서도 정관으로 배제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8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364개 중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4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10년간 공시 대상 상장사는 239개에서 363개로 125개 늘어난 반면에 집중투표를 도입한 수는 단 2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어도 실제 활용도는 더 떨어집니다. 최근 5년간에 집중투표제를 시행한 기업도 KT&G하고 고려아연뿐입니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헤지펀드 등 특정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영업 비밀과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총에서 우려대로 표 대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경영 개입이라거나 공격, 침탈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머지 주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영에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와 현재의 경영자만 회사의 주요 사안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 아닙니까?

2013년도 법무부의 정책 검토 자료를 보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집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주주의 전횡이 심하지 않고 경영자의 지배가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탈루와 탈세, 불법 상속 등을 통하여 부를 세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서술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는 2013년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에 법무부의 정책 검토보고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4년 기업경영연구에 실린 논문인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제도가 배당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배당 및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기업 내에서도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기업의 배당 및 기업가치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주주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권 탈취와는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에서 경영권 남용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회의 다양성 증가로 집단사고를 방지하고 창의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집중투표제는 승자독식을 막고 실제 지분율과 유사한 분포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행 제도는 대주주가 선임한 2명이 결속하면 분리선출된 1명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최근 남양유업의 사례처럼 1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만으로는 경영진 견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법제 평가 연구를 통해서 감사는 기업 거버넌

스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으로 경영 및 회계감사를 통해서 주주와 이사 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또 원칙적으로 전원을 사외이사로 또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감사위원을 주총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고 3% 룰도 적용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기 및 연임 제한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진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6년만 동일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고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도 9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임기와 연임 제한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통제 강화나 리스크 관리 개선 등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은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이 남발돼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런 피소당할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개정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상사법연구회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과거의 증권집단소송법 중에 대표소송 등의 시행을 앞두고 남소의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 소송은 매우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집단소송법의 경우에 실제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05년 법 시행 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2건에 불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은 도입 30년 만인 97년에야 최초로 2건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97년부터 2020년까지 24년 동안 불과 139건만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상장사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불과 3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수 주주대표소송은 결국 한 해에 평균 1.4건에 불과한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남발된다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왜 상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자본시장 지표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평가는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의 GDP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글로벌 주요 경제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21년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지표를 보아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발행 잔액 규모는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흥국 수준으로 분류되던 한국 국채시장은 최근에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채시장이 더 이상 신흥국 단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선진국 채권시장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주식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14위입니다.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상장기업 수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저변 또한 넓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적 지표에서는 분명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질적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MSCI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상법 개정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2차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그 정책들이 뒤따라야 하고요. 또 의무공개매수제의 확대와 권고적 주주제안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공시 강화 등의 제도 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정말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 이후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기업의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주식의 숫자가, 주식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 주주들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사주 소각을 기업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폐단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1명인데요. 제가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법안은 자사주는 취득 즉시 소각해야 되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처리하도록,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유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남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에 의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

함입니다.

다음은 의무공개매수제도 확대 적용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M&A 과정에서 상장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소액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에 빅딜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 유도 차원에서 폐지됐습니다. 이후에 대주주만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MM PE가 한샘 대주주 지분 27.7%에만 100%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사례입니다. IMM PE는 21년 10월 조창걸 한샘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27.7%를 1조 4513억에 인수했습니다. 주당 인수가격은 약 22만 원으로 계약일 현재 한샘 주가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7000억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2대 주주였던 미국의 테톤캐피탈은 공개매수 없는 경영권 매각으로 자신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샘 주가는 이런 매각 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약 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12만 원 대비 50% 하락한 것이고 IMM PE의 인수가 주당 22만 원 대비 72.7%가 하락한 것입니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떠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에 일반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크게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주주 공평 대우 취지를 위해서 잔여지분 전체에 대해서 공개매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용은 경영권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면 모든 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매수가격 역시 선행지수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해 공정하게 산정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입법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구조를 해소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장기투자와 기업 환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다음은 5% 룰 추가 적용입니다.

주주환원과 관련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5% 추가 적용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2020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야 간 절충과 재계의 반발 속에 핵심이 훼손되면서 제도의 취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반쪽짜리 룰로 남았습니다. 복잡한 산정 방식과 예외규정에 얽혀 실제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미약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바로 세운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국회는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권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되살려서 모든 감사위원 선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온전한 3% 룰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무력화되어 있던 주주권을 되살린 중대한 입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3% 룰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 룰을 고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낮은 주주환원율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주주환원율은 기업이 이익을 내고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느냐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는 PBR(주가순자산비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 그리고 TSR(총주주수익률) 등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장기간 부진하다면 기업의 성과가 투자자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PBR이나 ROE 그리고 TSR 등이 지속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관련 안건에 한해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5% 룰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3% 룰이 경영 감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장치였다면 5% 룰은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가 주주와 함께 나눠지고 시장의 신뢰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룰이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였다면 5% 룰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국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입니다.

장기 투자자를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및 분리과세도 필요합니다. 2024년 금융위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입니다. 이는 미국의 42%, 일본의 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의 55%, 중국의 31%, 인도의 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에 배당을 장려해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40% 이상 할 경우에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소득세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련 소득세법을 발의했는데요. 저는 배당을 30% 이상 배당할 경우 또는 25% 이상 배당 기업 중에 배당총액이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또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한 경우 2000만 원까지의 최저구간은 14%에서 9%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25%로 낮추는 소득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 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키우자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말 제정된 이후에 9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불평등도 심화됐습니다. 환경과 사회 요소에 대한 고려, 수탁자 책임활동 공시, 이행평가 등 여러 면에서 시대에 뒤처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보고 방법이나 공개 수준 등은 참여기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2차 개정으로 수탁자 책임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GPIF,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매년 평가해서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및 이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기후 등 환경과 사회 이슈를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으로 명시하고 협력적 관여활동, 수탁자 책임활동 의무공시, 이행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에게 수탁자 책임활동 내역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및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시의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참여기관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공시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공시 보완 요구, 참여기관 자격 상실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입니다.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란 주주제안 범위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되 주총의 결의 요건을 충족해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주주제안을 의미합니다.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제안도 반드시 결의하도록 하되 해당 결의는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구체화하고 논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심의제 도입 그리고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도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우리가 이후에 반드시 도입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법제도의 정비로 이어질 때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주가조작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등을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정말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하는,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나라도 많고 그 취득한 금액을 모두 환수토록 하고 징벌적 손배 등도 도입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을 사전에, 미연에 하는 그 제도의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조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게 되는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 금융위, 일반조사반 금감원, 신속심리반 거래소 등 약 35명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각자 떨어져서 했던 것들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긴급 및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을 비롯해서 SNS 허위 보도 악용 사건도 신속 처리하기로 했고요.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다음 발언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의 필리버스터를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집중투표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난 기사가 있어서……

(「힘을 내」 하는 의원 있음)

지도부에서 두 시간만 하라 그래 가지고……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목은 '잠자던 집중투표제, 대주주 중심 이사회 어떻게 뚫었나'입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거둔 승리의 주역으로 집중투표제가 손꼽힌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주주 철옹성과 같은 이사회에 외부 추천 이사를 합류시키는 성공을 거둔 사례가 모두 집중투표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 98년 도입 이후 도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유명무실했던 집중투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119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헌법이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주주도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그중의 2명은 반드시 분리선출해야 됩니다. 지배주주의 견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입니다.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헐값 시장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값 받는 코스피,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바로 상법 2차 개정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긴축을 겪었지만 최근 10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니케이지수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며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소외되고 자본은 떠나고 남는 것은 국민의 허탈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상법 개정 통해서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코스피 5000을 향해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 즉 주식투자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연금과 노후 자산, 자녀 세대의 미래가 함께 커지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꿈과 미래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역사입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바꾸면 시장은 반응한다. 이제 2차 개정으로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바꾼 제도가 국민의 현실을 바꾼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의 약속은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번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 주식은 싸다는 오명을 더 이상 물려받지 않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이 옛일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반드시 2차 상법 개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뒤처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던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멈춤 없이 무소의 뿔처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주진우)

(03시48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무역 질서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 바뀌고 있고 또 정통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화학업종이나 정통의 철강업종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 상법 개정안처럼 기업에 더 부담을 주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 내용은 아시다시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도입

하고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면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많이 뽑힐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에 있어서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3%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도 1% 이상 주식은 있어야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막상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혹은 헤지펀드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소액주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고 또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도 입을 모아서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 지분만 가진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악용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서 아무리 많은 소액주주들과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이사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한다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더 큰 나라에서들조차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했던 국가조차도 되돌아서서 취소를 했었고 현재 이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 주도의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중에 넥스트젠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자와 이사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지분 15%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정보를 이사회에 숨겨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인을 이사회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분 15% 정도 가진 창업자가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 더 최대주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소액주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사를 밀어 넣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영구히, 이 15% 정도 지분이면 영원히 자기의 이권을 반영할 수 있는 이사를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넥스트젠 헬스케어라는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가 결국 표로 대결해서 집중투표제를 무산시키고 이것을 막아 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2조 원 이상의 모든 회사에 강제해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소수주주가 주식을 집중해서 과반수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과반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많이 밀어 넣는 것은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 보호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3% 최대 의결권 제한과 맞물려서 감사위원 숫자도 2명 이상으로 늘리면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 해외 헤지펀드들이 연합하면 경영권도 위협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대주주일수록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오히려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펀드가 힘을 합쳐서 지분을 분산하고 감사위원을 밀어 넣고 또 이사회의 이사들을 다수 선임하게 된다면 결국 과반 이상의 이사회가 소수주주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헤지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재계의 우려들을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6개 경제단체, 모든 기업의 실제 경영자들이 이 부분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조차 노란봉투법과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더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또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어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아시다시피 경영권 관여 등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에 많습니다. 헤지펀드는 아시다시피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기업의 발전이나 장기간 주가 상승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언제든,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혹은 더 짧은 시간이 됐든 그 짧은 기간 내에 만약에 목표수익률이 달성된다면 그 수익률만 달성하고 언제든지 먹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차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해외 헤지펀드들은 실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도 그 발표 내용과 달리 주식을 모두 털고 나가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 상투를 잡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해외 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있는 모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모두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부담이나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각자 갹출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아야 배당을 하더라

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을 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많아야 연구개발 같은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이나 또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를 더 선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투자자들이 갹출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배당이 많이 늘어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망한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성장하는 시기에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당하는 주식은 약세장에서 뭔가 방어하는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배당이 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고 배당으로 인해서 현금이 없어지면 그것을 재투자해서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더 늘리는 것에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배당이 되어야 주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성장을 하는 주식들이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소액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가 결국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했던 회사가 있으면 올해 200억을 하면 그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는 비약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가치까지 합쳐서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데에만 쓰인다면 결국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대형 로펌과 컨설팅 회사들에 TF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형 로펌과 여러 가지 노무법인 등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정부가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자본시장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정부가 성장을 약속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 로펌이나 경영 컨설팅 회사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소액주주들에게는 반드시 손해로 귀결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회사가 아예 해외로 나가 버리거나 성장을 멈추려고 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기준에 자산 10조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 2조 원에 임박한 회사는 더 많은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경영권을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늘릴 동인이 없어집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터팬 증후군은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에서 규제가 많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회사가 해외로 나가 버리거나 특히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해외로 나가 버리는 그런 사례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회사가 해외로 가거나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언론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법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너무 성의도 없거니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지고 해외로 회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이전한 회사가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 천문학적 액수일 텐데 어떻게 법을 바꾼다고 다시 국내로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개수가 몇십 개가 안 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풀면서 몇백 개 단위인데 대한민국은 몇십 개의 기업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다시 개정한다 그러면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규모 정치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특히 조선업계 주가부터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면 기업은 골병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또다시 비용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선을 넘어서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되고 또 가중돼서 결국은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지금 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전부 중첩됐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배당을 못 하고 성장을 못 하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싱가포르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회사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고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 버리면 그 이후에 실컷 국내에서 자본을 모아서 성장을 거듭했던 회사가 결국 그 과실을 따 먹을 때 돼서는 외국으로 진출해 버립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는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장이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의 장입니다. 그런 유망한 기업일수록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어느 선을 넘으면 기업은 본사를 옮기는 방법을 실행하거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유망한 신사업일수록 국내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외국에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외국에 좋은 일자리만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또 저출산과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기업일수록, 빨리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법안은 경영권을 항상 위협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인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무슨 수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

배당만 늘린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배당이 느는 것은 중립적인 이슈입니다. 배당을 대폭 늘려서 어떤 해외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해서 대규모 배당을 해서 먹튀하고 가버렸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회사 주가는 좋을까요? 당장 배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받은 만큼 주가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배당을 한 만큼 회사 자산은 또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인데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시장의 평가 때문에 주식은 오히려 배당 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꼭 반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사회나 감사위원을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실컷 최대주주가 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투자를 해 봤자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면 누가 경영을 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겠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선사업 하듯이 기업을 국내에 유지할 경영진이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투자하고 리스크를 안고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수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영권을, 실컷 회사만 성장시켜 놓고 나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면 누가 그 회사를 국내에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 싶으면 좋은 사업일수록 해외에서 하겠지요.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전도유망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업 상장도 해외에서 할 것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요? 단순히 현재 있는 주식들의 주가만 오른다라고 해서 5000 시대가 올까요? 새로운 유망한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민과 나눴을 때 그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고 코스피 시장의 지수라는 게 결국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합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성장하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다시 상장을 많이 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쿠팡, 네이버웹툰, 이런 국내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장을

해서 해외 주주들에게 좋은 일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들만 그렇게 될까요?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상장하는 사람 입장일수록 기업이, 예를 들어 지금 AI 기업이나 IT 기업처럼 유망할수록 상장하는 그 기업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거든요. 전도유망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상장할지는 전도유망한 기업일수록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자기의 경영권을 위협받아 가면서 국내에 상장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망한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하듯이 해외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규제가 적어서 또 대한민국이 기업을 성장시키기 좋은 환경이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상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법안은 기존의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선진 해외시장에서 다 도태됐던 그 집중투표제를 지금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실패한 것이 검증됐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기업을 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미 떠나간 기업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려면 돌아오는 데 따른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발목 잡기 규제를 풀겠다, 기업에 부담을 안 주겠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 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반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들은 제가 아까 좀 리스트업을 해 왔는데요. 단 하나의 정책도 기업들의 평소 쓰던 비용이나 규제를 덜어 주는 게 없고 전부 다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화수분입니까?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고 기업의 자산이 많은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가치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비용만 늘리면서 배당만 늘리면 결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식을 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딱 싱가포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이 어땠습니까? 홍콩이, 세계 글로벌의 유망한 금융기업들 다 홍콩에서 아시아 금융을 주무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정치가 넘어가고 규제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은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가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왔느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지요.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다른 대체하는 도시들이 있으니까 싱가포르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규제를 풀어서 해외 기업들을 우리가 국내에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국내의 유망한 기업을 쫓아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금융뿐만 아닙니다. 모든 해외 기업들이 국내의 전력 인프라, 전기료가 비교적 선진국들에 비해서 싸지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IT 기술자 많은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걸 공통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또 해외 칼럼에서, 해외 신문에서 언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있던 기업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저께 노란봉투법 통과해서 이제는 내가 채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조선업종만 하더라도 1000여 개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제는 그 하청업체랑 다 교섭해서…… 교섭만 해야 됩니까? 교섭을 한다는 것은 파업권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청업체에만 가서 교섭한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원청업체와 교섭이 안 됐을 때 결국 그 하청업체인 그 중소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한두 달만 파업이 일어나도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이고요. 그 부품 하나, 얼마나 지금 고도화돼 있습니까, 산업이? 핵심 부품 몇 가지만 공급이 안 된다면 전체 조선업종이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노란봉투법만큼은 오히려 일자리를 비약적으로 없앨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법 통과되고 나서 상법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바윗덩이를 올려 놓고 거기다 또 바위를 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 기업은 한계선상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부담 문제 관련해서 한미 관세 협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제대로 다 된 거 맞습니까? 국민들 다 만족할 만큼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까? 우리는 오랜 우방이고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율 15%를 일본과 EU와 똑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문서화된 게 없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부담하지 않던 관세를 15%나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만 하더라도 관세 0%를 물던 것을 15%, 그러니까 한미FTA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던 것을 15%나 물게 되는 것이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미FTA 적용을 못 받는 일본이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가 12.5%의 관세가 오르는 동안 우리는 15%의 관세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업의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또 그만큼 상대적인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관세 협상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기업들 불러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관세 협상에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말로만 지원합니까? 지금은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적응할 수 있고 관세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부가 지원을 아껴도, 지원을 많이 해도 안 될 판국에 지금 이 부분은 기업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업의 노사 관리, 노무 관리 비용과 경영권 유지 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15% 일괄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국에 4500억 불을 사실상 투자해야 됩

니다. 3500억 불은 직접 투자해서 미국 발표에 따르면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고 또 에너지 구매 비용으로 1000억 불을 더 써야 됩니다. 600조에 가까운 돈이지요. 그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기업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 기업들은 다시 또 그 관세 협상과 별도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계획을 아마 쭈르륵 발표하겠지요. 정부가 해야 될 협상을 기업들이 부담을 져 가면서 대신 미국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만큼 투자 발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미국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요 기업들은 다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경영권 유지하는 데 비용도 쓰고 또 하청업체하고도 협상 잘해 봐라, 대화를 통해서 잘해 봐라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도대체 무슨 여력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으며 무슨 돈이 있어서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책 방향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졌는데 확실하게 기업을 지원해야 될 시점에 왜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고 민노총은 입을 모아서 숙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기뻐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시기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법안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 직전에 토론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왜 2차 때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 때도 기업들이 다 반대했는데 지금 1·2차에 걸친 이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2인 확대는 기업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안고 1차 상법 개정안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 보겠다라고 해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1·2차가 전부 다 필수적인 거라면 민주당에서 합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다 같이 할 것을 왜 일부만 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었겠지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알아서 그냥 법안 읽다가 5개를 다 통과시키면 될 것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2인 확대만큼은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하니 우리가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통과시키지 맙시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합시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숙의를 거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법안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기업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1차 때 양보받은 거 가서 합의해서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나마 겨우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결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펴겠다고 분명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또다시 상법 개정안을 낸다?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업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법안도 개정을 해 봤습니다. 상법이나 민법 같은

기본법을 개정할 때는 2~3년에 걸쳐서 매주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전면 개정인 경우에 그렇고 부분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정치색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 상법 같은 데서 문제점이 생겨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시장경제 원리랑 맞지 않으면서 스물몇 번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집값이 오히려 제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은 기본법안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설계된 법안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 뭘 개선하겠다라고 해도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것이지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법과 노란봉투법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노란봉투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6개월 내에 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보완하는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내거나 법안을 낼 때 그 법안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마련하고 시행령도 미리 마련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지 그냥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상황 봐 가면서 합니까?

당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건 기자회견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서 계속 추가 부담이 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왕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봉법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민노총의 숙원 법안이라고 합니다. 숙원 법안이 뭡니까? 말 그대로 꿈꾸는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노사 균형에 있어서 노측에서는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지만 사측과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부담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법안이 갑자기 통과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파업이 분명히 늘게 될 것입니다. 파업이 안 늘리가 있습니까? 교섭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났는데 파업이 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대화가 안 되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그냥 하청업체 노조들은 '대화가 안 됐습니까, 좋은 대화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나요?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 관철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많은 1000여 개의 하청업체들과 누구와는 협상하고 누구와는 협상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권도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불법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빗장을 열어 준 겁니다. 파업이 늘어도 지금 비용이 느는 판국에 생산시설 점거 같은 불법파업조차 늘어난다면 그 비용 다 누가 내는 것입니까? 개미투자자, 소액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파업이 잦은 업종에 있어서 파업 시즌이 되면 주주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올해

파업이 장기화돼서 생산 차질이 벌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그해 주식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에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늘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해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업 면허취소도 검토하겠다, 저는 원칙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국내의 현재 건설업들 대부분이 면허취소 위험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규제적 정책만이 전부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소액주주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더 센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들 중에서도 건설업 자체의 면허를 취소해 버리면 거기 몇만 명의 일자리와 거기에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도 균형점을 찾아서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 주는 부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8·15 사면을 하면서 건폭들에 대해서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건폭들에 대해서 이제는 단속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줬지요. 건폭들 하면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민노총 산하 지부의 민노총 조합원들만 더 취업을 잘 시켜 주기 위해서 공사 현장의 입구를 틀어막고 영업방해를 하고 회사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월례비를 뜯어내고 그래서 공갈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으로 처벌됐던 사범들 아닙니까. 다 민노총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민노총 조합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폭들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폭들한테 주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 비용에 다 녹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분양가 비싸잖아요. 그 분양가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에 소위 말하는 건폭들이 영업방해를 해서 건설 자재들이 못 들어가고 공사 차질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건설회사가 적자 보면서 집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결국 이 상법도 말만 그럴 듯하지 결국은 기업 비용 늘어나고 개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건폭들도 민노총 조합원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노총 조합원들은 크레인이나 이런 것 공사하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 외에 월례비를 추가로 더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수단이 폭행이 되거나 협박이 되거나 공갈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결과로 처벌까지 돼서 대법원까지 다 확정판결이 났는데, 원래 민생침해사범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사범이 민생침해사범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면을 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하는 모

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 대선 이후에 청구서 들이미는 대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됐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상법을 개정하면 주식시장이 부양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래 10억 원 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당일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116조가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 돈은 나중에 주가가 회복된다고 해서 피해가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주가가 폭락할 때 팔았던 개미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날 상투를 잡았던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부터 해 놓고 이제 문제점이 생기니까 기재부와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하고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니까 주가가 바로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그냥 대주주니까 세금 많이 내야지라는 단순한 발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매각할 때 5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지 간에 다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부담합니다.

왜 이것을 소액투자자들이 10억 원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겠습니까? 연말돼서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이 되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개인도 아니고 특수관계인을 다 묶어서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동안 주식에만 투자해서 손해 보는 해도 많이 있다가 어쩌다가 이득을 보는 해도 있어서 온 가족 합쳐서 10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소득세 부담하기 싫어서 그때 되면 다 파는 겁니다.

연말 되면 대부분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내년 신사업에 대한 기대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계속 팔아서 주가를 꺾는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말은 좋지요, 대주주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많이 걷자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10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는 세금을 걷으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팔아서 결국 주가에만 악영향을 미치니까 오히려 피해가 소액주주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은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난 일들, 소액주주가 바라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인하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방침을 정해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정부에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가 왜 정책을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해외 헤지펀드들한

테 경영권 일부 넘어가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그때 돼서 다시 또 제대로 고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전 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의 케이스, 왜 제대로 수사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주식시장을 골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같아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곳입니다. 그 청사진을 그리는 곳에 AI 담당을 했던 이춘석 분과장이 AI 관련된 주식을 사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의심만 했지 한 번도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개인 비리가 아니에요, 구조적 비리입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것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만연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는커녕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의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조사부터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임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다 적발됩니다. 왜 적발됩니까? 누가 제보합니까? 제보할 사람이 없지요. 내부자 정보라는 게 몰래 정보를 알고 미리 사는 건데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다 이득인데.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거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해당 주식을 거래했던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그 회사 건물에서 주식거래를 했으면 주식 IP주소가 딱 남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건물에서 거래를 했다면 IP주소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점검하라고 금감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 주식 관련돼서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엄정하게 진짜 발본색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건물의 IP 다 추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비리가 더 드러날수록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조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한 거라면 주식 반칙, 시세조종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기관들이나, 항상 주가가 미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회사에 호재가 있어도 뉴스를 보고 사면 항상 상투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의 내부자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샀다가 호재가 발표될 때쯤 되면 미리 파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춘석 전 의원이 네이버랑 LG CNS를 샀다가 그 당일에 발표한 것, 당일에 AI 유망 종목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발표가 있기 직전에 파는 것도 다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사안입니다.

그리고 항상 의심만 했지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특히 고위공무원들은 주식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접하고 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만 했지 입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차명계좌를 쓰니까 그렇지요. 권력자일수록 차명계좌를 더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돼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조치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정책만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을 개정하고 나면 또다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법이 그냥 동네 급훈이나 학교의 교훈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바꾸면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이 반드시 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할 때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할 만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 자사주 소각 자체는 중립적인 이슈입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그만큼 자본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기업이 아주 대규모 유망한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내가 자사주를 다른 기관투자자들한테 블록딜로 넘기고 그 돈을 받아서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팔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사주를 파는 경위와 판 자금에 대해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보통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당분간 그 자사주를 기업에서 잘 안 팔기 때문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 수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리고 빚내서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대부분 현금 유동성이 좋고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발표가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성장에 자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발표되면 호재로 인식하고 자사주 매입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자사주를 취득하자마자 소각을 의무화한다, 누가 자사주를 매입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사주 매입이 많은 것은 앞서 토론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황금주라든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차등의결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경영권 위협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 활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사주를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버리면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마자 다 소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 자본시장이야말로 세계 유수의 시장들이 다 가 봤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선진시장들이 갔던 길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학습해 가면서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는데 왜 다른 주식시장에는 도입되지 않은, 다른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왜 우리만 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 설계가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순간 자사주를 매입하는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소각할 것을 매입하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곧 회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소각의 배경과 그 당시 회사의 본질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은 이 회사의 본질가치를 줄어들게 할 수밖에 없고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민주당 의원님은 토론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몰라서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들, 문제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들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거래해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단체들도 다 얘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1차 상법 개정안도 사실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켜보고 보완해 가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지는 순간 지금 있는 투자자들도 국내시장을 떠나고 또 해외증시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7월 3일에 상법의 1차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이 됐고요, 이것은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로 인해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고 그 소송비용까지도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 그럴 우려가 없도록 법원에서도 잘 해석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서 국민의힘도 찬성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3% 룰이 있는데 감사위원 선출할 때 기존에는 대주주가 개별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특수관계인을 다 합산해서 3%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우호 지분까지 다 합친 거지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들 다 합쳐서도 3%밖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서 대주주의 입김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지금 1명까지는 대주주의 입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지요.

감사위원은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서류를 다 제출받아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자회사의 영업 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감사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반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감사위원이 현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감시 체제는 굉장히 촘촘하지요. 금융감독원도 공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거나 회사 분할합병이 있을 때도 공정위나 또 금감원에서 다 들여다보지요. 기업을 감독하는 기관은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것도 회계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기업의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선임되는, 선정되는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많은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부 배임죄에 대해서 특별가중하는 규정을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배임죄 자체는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배임죄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감시받을 수 있는 체계는 저번 1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토대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총 제도도 도입이 됐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개최를 의무화했고 이것은 또 전자주총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독립이사, 예전의 사외이사 개념이지요. 사외이사의 의무 비중도 확대를 했어요. 기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를 하고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개선의 경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7월 28일 바로 한 3주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법사위 소위가 통과되고 지금 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오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안입니다. 집중투표제, 중국과 러시아만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외의 대부분의 주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채택했다가 심지어 취소를 했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누구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다수결이 다 적용이 되니까 감사위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사위원들 2명이, 감사위원회가 3명인데 2명이 마음먹고 혹은 경쟁사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실제 현대차에서 한 번 있을 뻔했던 일입니다. 실제 경쟁사의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무산됐지만 이게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 그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감사위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2명 체제를 유지해서 늘 상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위원의 선의를 바라고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감사위원이라고 전부 다 선의이고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정확히 다 반영할까요? 감사위원은 다음에 또 감사위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임해 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액주주와 상관없이 선임된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의 말을 듣는 감사위원도 있는 거고 3대 주주의, 또 헤지펀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감사위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을 더 늘리든지, 그거 다 비용이에요. 감사위원, 이사회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공짜로 합니까? 전부 다 비용을 들여서 기업에서 일종의 고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 월급을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위원은 이사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급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이사나 감사위원 숫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자영업자고 내가 어떤 조그만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버는 매출이나 이익 대비로 사람 늘리는 것 굉장히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임원은 특히 한번 늘려 놓으면 임원은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만약에 이거를 개미투자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차출을 한다, 미리 돈을 좀 내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주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가에 녹아들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감춰져서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7월 3일에 통과됐던 1차 상법 개정안이 우리가 팔다리 정도 수술하는 거였다라면 이번에 나온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비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 극력 반대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반대토론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까 집중투표제 말씀하시면서 미 델라웨어주 예시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드셨습니다. 거기는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장된다, 그래서 참 모범 사례다, 미 델라웨어주도 하니깐 우리도 하자. 실제 테슬라는 델라웨어주에 있다가 경영권 위협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규제로 작용하니까 최근 들어서 다른 주로 본사를 옮겨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게 모범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있는 그 주는 기업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 중에서도 네다섯 개 주만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 네다섯 개 주의 경제 규모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이 있어도 그 주를 회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EU에서 부유세처럼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왕창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부과하니까 거기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는 다른 유럽으로,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로 본사를 옮겨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국부가 유출된다 싶으니까 세제를 다시 손봤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왜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말씀을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3% 룰이 강화된 상태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감사위원을 어느 정도 선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그게 책임경영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경영을 하는데 경영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려면 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음 이사회 선임 때 그럼으로써 이사를 바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자체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원래는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00억 원어치의 의결권이 있는 것인데 내가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100억 원까지의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나 미국에 있는 100대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 20~30년만 지나면 100대 기업의 순위가 다 바뀝니다. 업종 중에는 사라지는 업종도 있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더 커진 업종도 있고 빠르게 업종전환을 못 해서 도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이 그때그때 기업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회사에 대한 인수라든지 합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2대 주주와 3대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원래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보통 주가에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일단 최대주주는 경영권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잘 팔지 않잖아요. 최대주주가 만약에 시장에서 주식을 판다,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가는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최대주주 지분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잠재적인 유통물량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통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최대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되지 않고 적당히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 주식을 분할하고 있거나 나는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 우호지분을 기관들이 많이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을수록 내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기관 투자자들하고 뭔가 딜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지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우호지분이 많은 주주가 오히려 경영권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 이번에, 아까 예시로 들었는데 이번에 영풍 주식 관련돼서 그 현상이 있었어요. 2대 주주가 있고 최대주주가 있었는데 결국 이사회는 2대 주주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기업들에게 다 적용됐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전략에 따라서, 헤지펀드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에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게 아니라 뭔가 헤지펀드들처럼 이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악용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도가 짜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나 해외 투기자본이 지지하는 위원이 선임되면 기업의 주요 정보가 바로 유출되는 겁니다.

감사 권한을 잠깐 살펴보면요, 회사 영업 관련돼서 모든 보고를 다 받을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와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고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대해

서도 타당성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도 청구할 수 있고요, 주총 소집은 물론이고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감사위원들이 마음먹고 소송을 막 제기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 기업 감사위원이, 예를 들어 2대 주주나 3대 주주나 혹은 좀 악의적인 성향을 가진 해외 헤지펀드가 선임한 감사위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감사위원이 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감사위원이 오죽하면 소송을 제기했겠느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에 들이는 리스크나 비용이나 또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합의를 통해서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합의로 2대 주주나 3대 주주에게 유리한 어떤 이권을 보장하게 되면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소액 주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임 방식이 소액주주가 아닌 소수 주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맨날 괴롭히는 게, 특허괴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허만 계속 사 모으는 거지요. 모든 기업들에게, 그냥 통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사소한 특허부터 다 특허만 사 모아서 실제 공장도 없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특허권만 몇천 개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늘 거기랑 소송하는 게 일입니다. 특허괴물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지요. 특허괴물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받고 물건을 팔아야 될 때 물건을 못 팔도록 제동이 걸릴 수가 있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하니까 늘 협상을 하거나 소송에 대응하거나 계속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이, 만약에 악의적인 소수 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지정했을 경우 또 그 감사위원이 단순히 1명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의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됐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를 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소를 제기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19년도 3월에요, 2019년 3월에 엘리엇이라는 미국계 행동주의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랑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경쟁사의 CEO를 감사위원 후보로 주주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3% 룰이 현재도 강화돼 있는데 분리선출까지 확대되면 이런 외부인사 진입이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데 더 연구해서 더 많은 시도가 되고 더 관철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이런 거예요. 너무 뻔뻔한 전략이지요. 현대차랑 경쟁하는 외국 자동차회사, 수소·전기로 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수소·전기차 회사의 회장을 현대차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겠다라고 주주제안을 한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런 것 막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도 그 부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것을 남기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을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했다 그러면 경영진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늘 갈등

하고 의사결정 뭘 하려고 해도 감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의사결정도 계속 지연되고 그러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주의결권까지 제한하는 나라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1차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1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는 이게 2명이 돼 버리면 글쎄요, 왜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요? 제가 아까 일본도 의결권 제한이 없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외에도 거의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본다수결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거지요, 다수결의 원칙.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 지자체장이 됐으면 그 지자체 구성을 그 1등 한 사람이 하지 2, 3등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제도도 자본다수결 원칙입니다. 주식을 전부 다 쪼개서 한 주씩 분할해 놓은 것도 그 주식을 숫자만큼 표로서 행사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다수결 원칙에 위배돼서 경영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아까 영풍 사례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이지요, 이제 회사로 따지면. 1대 주주가 영풍이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2대 주주 측이 1대 주주인 영풍 측보다 지분율이 적은데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시켜서, 이게 뭐 멀지 않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을 일단 가결을 시켜서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2대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거지요. 보통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주식수대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그냥 자동으로 잃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최대주주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중투표제가 현재 우리나라에 제도는 도입돼 있습니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 안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해 둔 겁니다.

그리고 정관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막은 회사도 쉽게 막은 게 아닙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려면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지분에 따라서 소액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 법안은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게 그냥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거지요. '무조건 집중투표제 해'.

그렇게 되면, 기업은 정관자치주의가 있거든요. 기업의 정관을 정부에서 일일이 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업의 자율성을 위해서 정관에 자치주의를 다 도입해서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발전해 왔는데 이거는 이미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다 해 둔 것을 정부가 법을 바꿔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관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때는 지배주주, 즉 최대주주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대주주 입맛대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3%의 의결권만 있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을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 집중투표제를 정부가 강제하겠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사례가 딱 정확하게 말해 줘요. 집중투표제를 회사법에 의무화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중국, 대만, 칠레, 멕시코, 기본적으로 극소수입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에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한 번 강제를 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기업사냥꾼에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하는 부작용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업이 적은 한 네다섯 개 주에서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 보니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이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어떤 신규 업종에 진입하거나 철수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견이 통일되기는커녕 계속 싸우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주주 간 파벌 싸움만 심각해집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도 누가 의결권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의결권을 위임받았느냐, 아마 이런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보나 마나 난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꼭 소액주주들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중에 40%, 50% 되는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전부 다 뜻을 모아서 이사를 1명씩 선임하겠습니까. 각자 소액주주들 중에 어떤 주주들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인수합병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엄청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 간 파벌 싸움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어요. 멕시코도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뒀고 러시아도 황금주를 뒀습니다.

포이즌필은 독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용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기존의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주식을 싼값에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경영권을 위협받는 순간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아주 비싼 값에 도로 사 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더

인수해서 내 지분을 더 늘림으로써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게 해 주든지. 그래서 포이즌필 제도를 저희가 도입 논의는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정말 논의되려면 경영권을 보장 못 받는 기업은 당연히 신규 투자나 이런 것 안 하겠지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이즌필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지요. 그나마도 해외 국가에서는, 선진국가에서는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더더군다나 포이즌필도 없고.

차등의결권은 그런 겁니다. 그냥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결권을 가중해서 주는 거지요. 그리고 황금주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비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이사진을 막 바꾸려고 할 때 황금주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경영진이겠지요. 경영자가 황금주를 행사함으로써 그 안건을 그 한 주식만 가지고도 부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지 않으면서 경영권만 위협하는 제도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상 부작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건 너무 명확하고요. 현재 많은 컨설팅 회사와 많은 로펌들에서 이미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최대한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둬야 되느냐.

이게 상장사가 됨으로써 생기는 규제거든요. 내가 상장사가 된다는 건 자본을 좀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켜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가 줄을 서 있는 신생 유니콘 기업일수록 기업 법제가 우호적인 미국 증시나 또 다른 곳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지요. 지금 토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많이 쓰고 아직은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경영권과 관련된 주장이 있다면 국내 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다가도 해외 시장으로 상장을 하겠지요. 왜? 현재 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제도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들일 경영진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쓰든지 아니면 회사를 옮기든지, 더 잘될 회사일수록 특히 미국으로 가는.

옛날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들, 창업하는 청년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좋은 능력으로 국내에서 창업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랑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에서 다, 유망한 기업일수록 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정말로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신생 기업이 커서 기업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기도 전에 사회적 책임을 너무 중요시하게 부담을 주고 정부가 다 일일이 관여해서 일정 부분 돈을 벌수록 뭔가를 사회적으로 다 강제로 환원시키거나 내놔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법을 개정할 경우에 상장사의 상장 유지 비용이 현재보다 12.8%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만으로 상장 유지 비용이 12.8% 증가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저는 더 많이, 노란봉투법은 상장 여부랑 상관없기 때문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상장사겠지요, 원청 업체니까. 그랬을 경우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대폭 늘려 놓을 텐데 이 상장사 유지 비용도 거의 1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게 그냥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지요. 기존에 안 쓰던 컨설팅 비용을 몇억 원씩 쓰는 것이지요.

얼마 전부터 기업의 ESG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지고 ESG 관련돼서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평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컨설팅 해 주는데 컨설팅 업체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이제 녹아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ESG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같은 데서 뭔가 제재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건 다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성장 수준과 기업이 지금 처한 현실을 감안해 가면서 비용을 늘려 나가야지 그냥 관세 오르는 건 나는 모르겠고 환경도 중요하고 ESG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니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라. 그러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주식도 올려라. 아니, 그게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네이버웹툰처럼 유망한 회사일수록 미국에 직상장하는 사례가 축적됐고 또 다른 유망한 기업들도 상장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지만 본인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절대, 이래서 이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대한민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갈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가면 법을 다시 바꾸지요,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이지요.

실제 해외에서는 기업 법제가 우호적인 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통 업종들 철강·화학·조선·자동차,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회사들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못 옮겨요.

그런데 AI 기업이라든지 신약 개발 기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이면서 고용 인원은 적고 연구 인력의 어떤 수준과 성과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기업들은 기업을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정도 가야지 신약 개발의 어떤 성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2상 정도 성공하면 상장을 어디서 할 거냐, 어디를 본사로 둘 거냐 그때쯤 되면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커질수록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면 내가 커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좋은 기업일수록 해외로 떠나갈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이탈리아의 페라리 같은 회사도 이탈리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덜란드에는 차등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경영권 유지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대비 경영권 유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사를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것이지요. 본사만 이전하면 됩니다. 거기 이전한 곳에서 법인세를 내겠지요. 그리고 공장은 이태리에 둘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점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 델라웨어 회사법이 지나치게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니까 2024년도입니다, 불과 작년이에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가 개정되면 해외 유망기업들이 국내에 오는 건 원천 차단되는 건 물론이고요.

아까 노란봉투법에서 암참 같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의 대표단체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 중에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현격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우려가 그냥 엄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미국 기업들,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똑같이 규제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규제도 힘들어지고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우량기업이 해외로 상장해 버리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그게 한 두세 번만 반복돼도…… 다 이전할 리는 없지요. 그런데 유망한 기업 몇 군데만 이전하면 시장은 이것을 시그널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번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유망한 기업을 우리 자본시장에 유치해서 키워 나갈 의지가 부족하구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시장에 투자자들이 왜 남아 있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도 줄어드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개인투자자들도, 우리는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내 시장이 투자자가 적은데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규모도 쪼그라들고 미래도 없는 자본시장이 되는 것이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게 되면 개인의 국장 탈출 러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2조 원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성장을 멈추거나 아예 지분구조를 끊어 내고 아예 제3의 기업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겠지요. 그런 것도 하는 데 컨설팅 비용 또 다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이 법제 하나로 다 한 번에 강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규제는 규제대로 허점이 많으면서 기업들만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제도 악용 가능성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가 많은데요. 다수의 펀드들이 지분을 쪼개기 매입해서 3% 룰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외 헤지펀드는 설립이 되게 쉬워요. 자회사 같은 것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자회사 만들어서 15% 지분을 한 번에 가질 것을 2.99%씩 나눠서 5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3% 룰을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재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대주주에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3%밖에 행사를 못 하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은 얼마나 쉽게, 감사위원회는 거의 장악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것이 굉장히 무

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정부로 따지면 외국인에게 감사 업무를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감사관을 정부부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들도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데 지금 쪼개기를, 그런 편법을 썼다가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헤지펀드들이 그런 편법을 쓰면 마땅히 제재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헤지펀드들 몇 개 그냥 모여 가지고 본인들끼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회의하고 실행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감사위원회는 일단 외국계 헤지펀드한테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단기 차익을 얻고 먹튀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히 소액주주들만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저는 요건이 이사나 감사를 추천하려 그러면 추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소액주주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헤지펀드는 쓰기가 너무 쉬운 거지요.

실제로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계 3위예요.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이미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던 이유지요. 또 기업 성장에 필요한 R&D나 시설투자 자금은 경영권 방어에 소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는 이사회가 분열로 인해서 실제로는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대주주 의결권은 3% 룰이 강화됨에 따라 경영권 위협이 기정 사실화됐고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6개를 분석해 봤더니 최대주주 측 의결권 지분율이 절반 이상 감소를 하고요. 지주회사일수록 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 경영권을 위협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영권이 탈취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룰이 확대되는 것에 더해서 집중투표제가 또 도입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2명으로 확대되면 상장사 최대주주가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 못 한다는 건 뭡니까?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사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는 예를 들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3% 정도면 이사나 감사를 추천할 수 있으니까 허수의 이사들이 다수로 막 추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은 집중투표제로 많은 표가 있으면 그 표를 실제 본인들이 임명하고 싶은 이사나 감사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주주 입장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 해외 헤지펀드들이 짜면 짤수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서 들어왔을 때 최대주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도 우호지분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니 다 돈이지요. 다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국기관이 연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0대 기업 중에 4개 회사, 30대 기업 중 8개 회

사가 이사회를 점령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던 것이고요. 50대·100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대 기업 중에 8개, 100대 기업 중에 16개 이럴 정도로 실제 외국 국적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국부펀드, 연기금, 외국인은행 이런 곳들 중에 몇 군데만 연합하더라도 우리가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곧 분쟁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 선임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 3%처럼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가 제도를 활용할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해서 이사회는 최대주주가 우위를 점하더라도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2대 주주, 3대 주주한테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감사권을 이용해서 기존에 선임됐던 이사도 쫓아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권을 이용해서 이사에 대한 축출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법과 함께 같이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교섭의무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업의 63.9%가 하청업체 근로자고요, 건설은 48.3%, 철강·금속은 36.7%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관세에 큰 부담을 받는 업종들이거든요. 특히 조선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 그 업종들에 대해서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다 교섭하고 거기에 따른 파업으로 인한 손실도 부담해야 된다면 결국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게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면 당연히 파업이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만 수십 개를 변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변화상을 많이 반영해서 노사 균형도 고려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 판례 변경에 따라 노사 균형을 맞춰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동시에 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경영권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이 감내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된 사례이기는 한데 지금 상법이 다시 개정되면 이런 사례들이 확 늘 것이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칼 아이칸이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해서 KT&G 주식을 6.59%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분산해서 매입했어요. 다른 헤지펀드와 연합했다는 게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가지고 칼 아이칸 측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요구를 했지요.

그때 KT&G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2.8조 원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투입했고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식도 더 매입을 하고 비용을 쓰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칼 아이칸입니다. 칼 아이칸이 주식을 취득한 게 2006년도인데 그해 연말에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서 1358억 원 그리고 배당금 124억 원을 받아 가서 1480억 원을 받고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헤지펀드들의 일상이거든요. 단기 차익의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먹튀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엇 사례도 현대차·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5명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수소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사인 발라드파워시스템즈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경쟁사의 회장을 여기의 감사로 쓰라고 한 거예요. 특히 또 현대모비스의 사외이사로 제안한 한 후보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카르마 오토모티브사의 CTO로 활동 중인 사람이에요. 여기도 역시 실제 경쟁사지요, 실질적인.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까스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지만 외국인 주주들이 되게 높은 결집력을 보이면서 찬성을 했어요.

그때 엘리엇은 바로 다음 해 1월에 보유 지분이 현대차 2.9%, 기아차 2.1%, 모비스 2.6%였는데 전량 수익을 보고 또 매각한 다음에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튀를 하고 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해외 헤지펀드들한테 우리 시장만 엉뚱하게 개방을 하느냐 이런 거지요.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도 농산물시장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왜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헤지펀드들은 규모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규모도 해외 헤지펀드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대형 해외 헤지펀드들한테 마음껏 본인들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장을 왜 우리나라만 열어 주느냐 하는 거지요, 해외 입법례에도 없는 것을.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사례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KCGI 측에서 개미투자자 편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주식이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보유 지분을 시가보다 12% 높은 가격에 DB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에다가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튀 논란이 일었지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은 주가가 최초에 투자했던 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무슨 선량한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만 얻으면 바로 털고 나가는 거지요.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면서 장기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2% 정도 수익 얻었으면 '아, 몇 개월 만에 높은 수익률 얻었네'라고 하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여러 명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도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여러 명을 넣을 수 있게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들은 겨우 이사회의 과반은 지키겠지만 몇 명은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지요. 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본인이 들었던 영업 정보나 회사 기밀도 신문에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회사가 성장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발표하고 또 추진을 했는데 다 보면 일관되게 반시장적이거나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세 협상부터, EU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GDP 규모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관세율 15% 유지하는 비용으로 우리는 미국에 4500억 달러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무기력하게 끝난 것은 그냥 관세 협상 중간에도 친중 행보를 한다든지 촛불행동이나 민노총 같은 곳에서 대놓고 반미운동을 하면서 협상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도 갑자기 한일정상회담에 외교부장관이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는 돌발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고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10억 원 하향하는 문제도 당정 간에 마치 파워게임을 하면서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또 민노총의 숙원사업인 노란봉투법 바로 통과시키고 영업이익 갉아먹는, 오늘 이 제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더 센 상법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한테도 날벼락입니다. 갑자기 이것도 민노총이 맨날 주장하는 것인데 초단기 근로자, 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지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연평균 수익이 평균 냈을 때 연 20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용 증가를 어떻게 버텨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을 2년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평생고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자영업자가 단기, 초단기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겠습니까? 오히려 2년 되기 전에 그 근로자를 바꾸겠지요.

그리고 실제 인사 난맥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 라인 전부 다 같은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다 앉히면 이게 곧 변호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특권 사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폭주하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법안도 마음대로 사면도 마음대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그런 거거든요.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 전 대표나 정경심·최강욱 이런 분들도 다 사면하고 심지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8·15 때 버젓이 사면했지 않습니까? 윤미향 전 의원은 나오자마자 다시 또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폭도, 아파트값이나 이런 데 건폭에게 지급하는 돈들이 다 전가되는 것인데 건폭에 대해서도 사면을 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법관도 30명 증원하겠다, 수사기관도 중수청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 만들겠다. 이것도 다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급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식 내부자거래 비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마음대로 추진한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채 발행도 남발해 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유독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왜 전부 부담만 가져가냐는 거지요.

한미 관세협상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간담회 하면 뭐 합니까? 간담회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기업들에게 뭔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특별배임죄 관련된 가중처벌 규정, 지금 그 규정은 거의 적용되는 사례도 없는 규정입니다. 그것 하나 개정해 주겠다라고 립 서비스 하는 정도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다 줄여 줄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불러서, 그냥 보여 주기식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또 한미 정상회담 열리면 기업들이 가서 또 쥐어짜 내서 기업들이 투자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어떤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정부의 협상을 돕고 있고 그게 다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있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만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예시를 들 때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폐지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50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입되자마자 경영권이 위협받고 경영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주주들끼리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요. 이사회가 맨날 파행을 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이사가 선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인 1974년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195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은 당시 미 군정체제에서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주총회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들이 도입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받아들인 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원래 정관에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지분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 버리니까 집중투표가 사실상 의무화가 된 것이고 정관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도록 된 것이지

요.

그런데 집중투표제 도입되고 나니까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내부 대립으로 인해서 경영의 속도나 원활한 경영이 저해가 됐고요 노동조합 운동이 이사회에도 막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니까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1970년도니까 일본도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들여오려고 했거든요.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집중투표제를 과거 제도처럼 우리가 역진해서 돌아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막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들어오는 사람들은 건전한 투자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헤지펀드들이 한번 분쟁을 시끄럽게 일으켜서 주가가 올라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유유히 팔고 사라지게 되면 상투를 잡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밖에 없는 거지요.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헤지펀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본인들이 언제 주식을 팔고 어떻게 나갈지를 본인들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가 불균형한데 어떻게 개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당시 1974년도에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기업 지분을 25%만 보유하고 있던 것을 투자 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투자 제한이 없어지면, 똑같은 고민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해외의 투자자들한테 경영권이나 우량 기업들이 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했던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감사위원들은 당연히 외국계 펀드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대거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통계로 딱 나올 거예요. 그냥 지금 해외 헤지펀드들이 안 하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헤지펀드들은 투자해서 들어와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사나 감사를 추천해도, 이사나 감사를 추천할 정도로 지분을 모으려면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데 여러 군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많이 사지 않고 일정 지분만 확보하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사나 감사위원에 대한 확보 시도가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날개를 다는 것이지요. 적은 주식 수로도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투자해서 적당한 지분율을 가지고 감사위원이나 이사를 장악할 수 있는, 적어도 이사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감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는 개미 투자자들은 뭔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뭔가 대행하는 업체나 대행하는 기관이 없고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이사를 추천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에 대비해서 헤지펀드들은 너무 쉬운

일이지요, 이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 지분 가지고는 이사나 감사를 절대 선임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쉽게 선임하고 그것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고 헤지펀드들 불패가 되겠지요,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이상. 지금도 공매도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대비로 압도적인 정보량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이 돈을 벌어 가는 건데 해지펀드들이 돈을 벌어 가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상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을 버리고 미국 증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가중하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지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게 딱 나와요. 그 당시에 연구를 했던 것도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주 간 파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도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몇 명이나 선임할 수 있을지는 너무 불분명해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경영권 보장과의 충돌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일본도 그것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폐지했던 것이고.

이 우려는 다 경험적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겪어 봤던 경험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우려가 아니에요. 이미 다 경험해서 그 제도를 없앴던 경과가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 무려 75년 전에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무려 일본에서 50년 전에 폐지했던 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도입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본 다수결 원칙이 훼손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요. 많이 투자할수록 손해입니다. 자본 기여도가 낮은 특정 주주일수록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유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이 그 회사에서 R&D나 이런 데 쓰여서 영업이익으로 딱딱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역시 제일 문제점은 회사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가 이익집단 간의 이해충돌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소액주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익집단 간의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각자 그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절대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임해 준 그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일본에서 해 봤더니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되더라, 기업 운영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사회가 보통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 사항은 다 하지 않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뭔가 인수합병을 하든 또 신사업에 진출하든 어떤 자본 확충을 하든 대규모 배당을 하든 어느 정도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어느 정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개선 방법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라고, 늘 싸우기만 하는 이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싸우나요? 표결만 하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다 돈인 거지요, 다

비용이고. 그리고 영업 정보도 접하게 되고 감사권도 남용해서 다른 내 뜻에 안 맞는 이사도 축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란만 계속되는 이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운영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제도를 배제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1998년도 상법이 개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업 경영에 대해서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자, 경영자의 책임성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도 주주들이 3분의 2 이상이 특별결의를 하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좀 열어 주고 나름대로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균형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고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1% 이상을 청구 요건으로 했습니다. 완화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무조건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이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결과 대부분 소액주주들도 집중투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배제에 대해서 정관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결국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주주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서 갑자기 강제하면서 깨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은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일본처럼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집중투표제가 비슷한 경과를 통해서 변천을 했습니다. 원래는 20세기 중반 이후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다수의 주에서 주 헌법이나 회사법에서 집중투표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회사 내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비례대표제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학자들도 초기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중반 이후부터 적대적 매수 또 적대적 M&A 시도가 많이 이어지니까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커졌고 집중투표제도는 지분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면 적대적 매수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이지요.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린 해외 헤지펀드나 외국계 기업, 연기금, 국부펀드 할 것 없이 외국계 투자자본이 분산해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연합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주가 도입하고 있던 집중투표제를 정부가 이미 1990년도에 다 임의적 규정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네다섯 개 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제도이다. 그 네다섯 개 주조차도 계속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

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세면장 좀 다녀왔다가 다시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부의장 주호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밖에서 쉬고 계세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거는 좀 아니지요. 아니면 다음 주 자한테 넘기시는 게 맞지요」 하는 의원 있음)

처음 운영하면서 이전 의장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관례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신 게 아니라 밖에서 앉아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자르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특히 해외펀드들에게, 특히 외국기관이 연합했을 때 실제 경영권이 위협받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의 지분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비율도 다 다른데 실제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특히 외국기관 연합이라고 하면 외국 국적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또 국부펀드, 연기금, 외국인 또 외국계 은행 이런 데들이 지분으로써 연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 현재도 30대 기업 중에서 6개 기업 정도는 외국자본에서 이사를 선임한 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국기관 연합이 선출한 이사의 비율이 현재도 현행 제도인데도 40%에 가까운 기업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출한 이사의 비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사회 전체 이사의 40%를 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아까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실제 대주주 3%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외국계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비율이 훨씬 더 늘게 되겠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외국기관 연합에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 10대 기업 중에서는 4개, 40% 정도 비중이고요. 30대 기업 중에서는 8개, 26.7%의 비중입니다. 50대 기업으로 늘리더라도 한 8개 정도 기업은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고요. 100대 기업에서는 16개 기업 정도가 현재의 지분구조로 하더라도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배구조가 아예 변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사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권익만 찾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건데 이건 아예 대주주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어떤 대결 구도라기보다 그냥 외국계 자본과 또 국내 경영권을 가진 국내 기업 간에, 경영자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기관하고 특수관계인 측 이사를 치더라도 외국기관은 만약에 제도가 더 편해지고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외국계 지분이 더 전략적으로 지분을 쪼개기로 매입하겠지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영권에 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협에서 걱정했던 것들 중에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은 첫째, 국부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외국기관 연합이라는 게 어떤 공공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사익만 추구하는 거거든요. 헤지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100명 이하의 거액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레버리지 효과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라면 오로지 그냥 딱 유일한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공매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는데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효과는 미미하면서 오히려 외국계 헤지펀드에게는 큰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만약에 소액주주를 더 보호하려고 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 확인했을 때 외국기관 연합에 이미 40% 정도 이사가 선임돼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하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사회의 다수가 외국기관의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이 거의 600조에 달합니다. 596조 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하면 당연히 배당을 확대하겠지요. 배당을 확대하면 주식이 당연히 오를 것 같지만 예를 들어 AI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 자본을 축적해서 AI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배당만 딱 받고 그 배당받은 걸로 그냥 청산하고 나간다면 결국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좋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결국 국부만 유출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를 짜 주면 외국계 펀드는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일본도 안 하지요. 주요 국가에서 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보장 제도가 있어서 그건 또 다른 규제들이 많아서 이런 방법을 쓰기 힘든데 그냥 경영권 보장 규정은 없고 시장 규모는 큰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적은 돈을 투입해도 이사나 감사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도입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먹튀를 했을 때 우리가 외국계 펀드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객관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ISDS처럼 전부 다 외국에서 중재를 하거나 정부와의 어떤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해외에서, 미국 법원이나 해외의 중재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판단

을 받기 때문에 설사 먹튀를 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적으로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부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비용 증가 부분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금을 소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들과 계약을 통해서 혹은 비용을 지급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서 가급적이면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다 비용을 수반하고 돈을 내야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주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면 기업 밸류가 다운되고 그리고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그래서 저번의 상법 개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감사위원 중의 1명은 그냥 대주주 3% 제한에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3% 제한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더 이상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사회는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감사위원만큼은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감사위원이 왔을 때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그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더 틔워 줬는데, 길을 틔워 준 상태에서 또다시 그것이 시행되기도 전에 더 센 상법을 개정해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문제점을 더 가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경영권 침탈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토론하는 것 제가 죽 봤는데 2차 상법 개정 이후의 과제들도 죽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제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기업에 이렇게 돌만 얹어서 기업이 과연 버텨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진심으로 듭니다.

실제 관세 15%는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안 내던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인데 기업들의 비용을 아끼고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기업에 부담을 주었고 2차 상법 개정 이후에 또 추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착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드렸지만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본질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법에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호재겠습니까? 보통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도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깎이더라도 기존의 자사주를 소각을 해 버리면 발행주식 수도 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 입

장에서는 뭔가 자사주를 팔 수도 있는데 팔지 않고 소각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이 넉넉하다는 걸 보여 주는 거지요. 자본이 그만큼 많이 축적돼 있고 이익잉여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야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호재로 인식되는 것이지 자사주 소각 자체는 중립적인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은 대부분 주가가 오르지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하니까 일단은 수요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을 더 산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이 주가 하락을 할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그냥 소각하느니 그냥 배당을 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그것도 비용까지 내면서요. 주식 취득해도 다 세금을 내잖아요. 기본적인 거래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소각할 주식을 미리 취득한다?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던 수단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외에는 없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 많았느냐? 반대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선진국가의 제도들을 우리는 하나도 도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나 차등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회사에 자금이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 두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호 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썼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경영권 유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설계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사주를 과도하게 매입하지 않고, 또 회사의 자금으로 R&D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성장을 하니까요.

그런 건 필요하지만 이걸 의무화해 버리면 반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자사주를 아예 취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은 더 위협받는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대응적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어떤 제도를 바꿀 때 부작용이 예상되면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뺏길 위험이 있으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열어 놔야 되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없도록, 지키기 더 힘들도록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니까 타 기업에는 불리한 제도인 거지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막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사주 자체를 매입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어요.

보통 법을 만들 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부작용이 없을지 정밀하게 토의도 하고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만들면서 해외 입법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해외 입법례 조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번 시행을 해 봤는데 그때 문제점이 나와서 그 제

도가 폐지됐거나 문제점이 나왔는데 뭔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냈다면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초 제도보다 더 발전된 제도를 한번에 도입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해 봤더니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거나 있었어도 도입했다가 실패해서 폐지된 제도 이거 왜 지금 들여오느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의무공개매수제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경영권이 있으면 그 경영권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영권 행사에 따른 무형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어떤 주식의 1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30%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을, A라는 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B라는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다라고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하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주식들도 다 그 가격에 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의무공개매수를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플러스 된 주식을 다 팔고 엑시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기업을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서 기업 인수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간해서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다 쳐서…… 현재 시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인데 1500원에 모든 주식을 다 의무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가격이 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의 변동이 잘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세계 100대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상장된 100대 기업……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은 계속 바뀌어요, 업종도 바뀌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휴대폰에 차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지만 내비게이션만 차량에 달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가장 전도유망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휴대전화에 그런 기능이 내재되고 쉽게 그 기능이 좀 더 작동할 수 있으면서 지금은 차량에—휴대전화로 다 내비게이션을 보지 내비게이션을—따로 기계를 사서 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산업의 재편 속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업종 전환을 하거나 업종을 통폐합하거나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회사를 사서 붙여서 고도화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기업을 사고팔기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아까 짧게 설명하셔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분은 좋습니다. '왜 경영권을 가진 사람만 주식을 비싸게 팔아? 소액주주들도 다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경영권 붙은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 이제는 소액주주들 것도 다같이 사야 돼'라고 했을 때 그 거래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은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기존의 경영진이 상장폐지하기 위해서 의무공개매수를 해서 다른 주식들을 다 사들인 다음에 상장폐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나머지 주식들도 다 사야 된다, 100% 인수해야 된다 그

러면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 안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경영권이 자꾸 바뀌면 M&A도 일어나면서 회사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극단적으로 전부 경영권이 넘어갈 때는 다른 주식들도 프리미엄을 붙인 채로 다 사야 된다라고 그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그냥 당장 말로 설명할 때는 소액주주들한테 도움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피해가 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업종 전환도 어렵고 사실상 경영권 변동이 계속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경영권이야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경영권을 새로 인수한 쪽에서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면 일반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최대주주조차도 본인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앞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그 최대 주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전부 다 배제하고 의무공개매수화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5% 룰도 말씀하셨는데 주주환원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최대주주도 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겁니다. 기업이 내가 어떤 이익이 있고 기업이 현금이 있을 때 이것 가지고 R&D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매출 캐파를 올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기업의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배당주를 방어주라고 합니다. 보통 약세장에서 배당주가 더 인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배당주는 전통적으로 수익은 꾸준한 대신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주식들에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주 KT&G 이런 것 있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는 있지만 갑자기 담배 수요가 두 배로 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AI산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은 매출이 10억밖에 안 돼도 한 3년 뒤에는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벌어둔 10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아마존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주환원, 배당이 항상 주식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대주주도 5%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행동주의 펀드들한테는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거지요.

어떤 기업도 현금이 좀 쌓여 있다 싶으면 들어가서 최대주주는 5%밖에 지분을 행사 못 하니까 그냥 행동주의 펀드나 몇 군데 외국 투자기관들이 연합해서 5%씩 지분을 분산해서 한 20% 들고 있으면 배당 결정을 외국인들이 하는 거지요. 과연 그 배당을 하고 나갔을 때 배당락이나 그 이후에 회사의 발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식이 항상 좋은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본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따지면 선거 없이 선출된 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가 투표나 선거를 통해 가지고 표를 행사함으로써, 1인 1표제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을 세워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1인 1표가 아닌 1주 1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1주 1표 제도를 안 하려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그것도 제도가 없지만 대주주의 전횡을 좀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대주주에 대해서 3% 룰을 적용해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대주주는 3% 이상은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책적으로 한번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주 배당과 관련해서 회사의 발전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최대주주는 5%밖에 행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누가 최대주주를 합니까? 최대주주를 안 할수록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2등 한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도…… 기업 입장에서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도 사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내 주식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쪽에서 다른 모든 소액주주들의 주식까지 경영권 프리미엄 얹은 높은 가격에 다 같이 매수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주식을 팔 수 없지요.

거기다가 배당이나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의 의결권 행사에서는 내가 주식지분을 50%를 가지고 있든 60%를 가지고 있든 최대주주가 압도적인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5% 룰 때문에 나는 5%밖에 결정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55%를 가진 최대주주는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5%씩 연합해서 20% 지분만 확보하면 배당 결정을 해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배당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기업들이 너무 이익잉여금만 쌓아 놓고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배당을 많이 하는 모든 배당주들이 다 올라가는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성장주랑 배당주가 있을 때 대부분은 성장주를 선호하지요.

성장주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재투자하는 게 회사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 세워서 100억 벌던 것을 그냥 100억 번 돈을 다 나눠 가지면 배당해서 좋지만 그 100억을 가지고 공장만 하나 더 증설하면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된다. 그러면 매출 캐파나 영업이익의 크기를 높여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보게 해서 시가총액을 높이는 게 더 좋은 투자방식이지 않습니까? 다 선호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5% 룰이 적용된다 이것은 저는 제도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관련돼서는 개정 작업에도 여러 번 참여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연기금은 대한민국 주요 기업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분산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인원을 뽑을지 몰라도 회사의 개별 경영에,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10개 기업의 경영에 다 관여한다라고 하면 그 10개 기업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만한 전문성이 있을까요? 기업경영과 투자는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자들은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경영권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수의 금융투자회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이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행동주의펀드라고 합니까? 이사를 추천하는 펀드들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게 그 펀드의 전략이기 때문에 행동주의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펀드들은 그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전문성도 없지만 투자한 사람이 경영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기업의 숫자가 적고 할 때는 대한민국도 성장과정에서는 압축성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민간이 주도하지 정부가 기업경영에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계획경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까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면서 기후환경,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많이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10%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러면 10% 지분이면 상당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태양광 사업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가지고 관련 업체에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영 관여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이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경쟁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인데, 기업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얻고 이윤을 얻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가지고 기후환경, 탄소배출 이런 것들까지, 정책적인 면까지 기업의 경영에 그것을 매개로 관여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말 국민연금의 투자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경우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부를 지키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되는 것이지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을 지원하거나 특정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라는 말은 말 자체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권고적 주주제안도 또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주제안 제도라는 게 민주주의로 따지면 직접민주주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두는 이유는 직접민주주의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취득해서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권고적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주주제안을 계속하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되면 주주제안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서 결국 주주들이 경영권 행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두고 이사를 두고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까지 둬 가지고 감시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주들이 제안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주들 제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M&A 같은 것들은 다 비밀리에 검토되다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A를 하는데 미리 그 정보가 알려지면 M&A 하려는 그 회사 주식도 상승할 수 있고 M&A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최대한 기밀이거든요. 그런데 주주제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주가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하면 그게 상당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안 맞는 것이지요. 자본과 경영의 분리, 투자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5% 룰, 스튜어드십 코드, 권고적 주주제안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는 다 역행하는 제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 심의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대응까지 기업에다가 책임을 미루면 이게 준조세처럼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인세도 기업에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냥 경제적인 상식인데 거기에 덧대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주주 심의제, 그냥 말 자체로 설명이 어떤 제도인지 알겠어요. 주주가 심의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갉아먹는 제도예요.

또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지속가능보고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회계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지속가능성 여부, 실제로 이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기업의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주석에 의해 가지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속가능보고서라고 해서 또 다른 제도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공시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어서 또 제재하고 하면 이게 또 다 비용입니다. 다 돈 드는 일이에요.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그러면 공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제재도 할 것이고, 일종의 규제잖아요. 그러면 공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공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어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컨설팅을 가지고 실제로 공시까지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 실수를 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재받는 과정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2차 상법 개정안, 앞으로 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안들이 열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해외에 제대로 된 전례가 없고 오히려 역행했던 제도만 있고 다 기업들

이 비용만 드는 제도고 다 안 가 본 길이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이것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통하는 것은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념을 투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주환원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 '왜 우리 소액주주들은 대주주만큼 왜 이렇게 프리미엄을 못 받습니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구호적인 것에 그쳐서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이 뭐 때문에 최대주주가 됩니까? 경영권도 하나도 행사 못 하고 이사회도 장악 못 하고 감사위원도 다른 사람이 다 선임하고 배당 여부도 다…… 차라리 그냥 펀드회사 만들어서 5%씩 지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주식회사 제도 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책임경영 그런 거는 아예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온갖 거를 다 의무화시키는 거지요. 전자주총도 무조건 해라, 기업의 의무, 아니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게 국정 목표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 규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상법이라는 범용적인 법안을 통해서 기업 규제를 한꺼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규제를 덜어내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규제만 다 늘리면 지금 그게 균형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은 자사주를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했던 기업의 수요는 뭐냐?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한 거니까 경영권 보장 제도를 같이 도입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은 진짜 정권에 따라서 기업이 계속 정말 화수분처럼 기업에서 돈을 빼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만 다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공공기관이지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후 대응 같은 그런 거지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미한다고 그러면 기후 대응을 잘하는 회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주주가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계획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방향성이 그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지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막 얘기하시는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커지겠지만 반대 급부가 있는 거지요. 그 분들이 전체 모든 소액주주들의 평균된 의사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각자 소액주주들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 반대 급부는 뭐냐? 필연적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이윤 감소, 영업이익 감소, 배당 감소 이런 게 반대 급부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도 이 기업의 성장 속도나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대내외 현실

에 비추어서 이거는 좀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상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반대하는 거를 경제이익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다 반대하는 일을, 그것도 해외 입법례도 다 폐지됐던 그 법안을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안 내고 기업의 비용이 안 늘어나는 무슨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시 부양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시 부양책이 뭔데요? 영업 이익을 늘려서 기업이 더 잘 나가게 하는 게 증시 부양책이지 무슨 말로만 증시 부양하겠다고 하면 부양이 됩니까?

특히 세제 관련해서도 배당을 진짜 늘리려고 하면은 배당소득, 아까 분리과세 부분, 분리 과세하면서 배당소득세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배당을 많이 할수록 기업에게 페이버(favor)를 줘야지요. 그게 어정쩡하니까 이번 시장에 반응이 안 좋았던 거지요.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냥 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 사지 말고, 실수요자조차도 대출 못 받게 했잖아요. 집 사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회사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지 말은 그렇게 해서 다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반시장정책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에 부침이 있겠지만 그 정부의 약속을 믿고 들어왔다가 손절매를 한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이 과도하면 항상 역풍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코스피 5000은 정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정부만 이끈다고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의 산업질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새로 나타나지를 않는데 코스피 5000이 어떻게 바로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구두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증시, 주식을 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건데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어느 선까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교섭해야 되나요, 거기 납품하는 사람들? 조선업종 하면 지금 모처럼 조선업종이 긴 불황 끝에 우리 조선의 기술력이

돼 가지고 조선업종이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에 하청업체가 1000여 개가 넘잖아요. 왜 하청업체가 1000여 개나 되겠습니까? 1000여 개가 전부 뭔가 직접교섭의무를 안 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주기 싫어서 1000여 개 하청업체랑 하나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원래 하청업체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기술을 쓰는 업체로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강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통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주니까 하청업체들이 늘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조선업계의, 업종의 경쟁력인데 1000개의 하청업체 중에 몇 개까지 그러면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 100개 하면 되나요? 200개 해야 되나요? 매출 규모로 잘라야 되나요?

실질적인 지배라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터빈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돛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부품도 있고. 철강제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선업종에 배를 조립하는데 만약에 하청업체가 1000군데면 그 하청업체의 납품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관리감독 안 할 수 있습니까,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배 하나에 몇 조짜리 배도 있는데 그러면 하청업체 품질관리 안 하고 배에서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몇백억, 몇천억 손실을 물 수도 있는데 관리 안 합니까? 그러면 조선업종은 이제 1000개의 하청업체에 대해서 교섭 의무를 지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 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조차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식이에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LG전자도 하청업체 노조가 LG전자에게 원청업체라고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업종은 물론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백화점 물류업종이지요. 업종을 가리지 않아요. 철강업종도 당연히 직접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지부에서 하청업체들 다 모아 가지고 지금 직접 교섭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섭을 그냥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가서 다 하나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다 비용입니다.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관세도 다 올라가는 와중에 모든 게 다 돈 들 일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미국에 또 투자해야 되는 투자 의무까지 지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청업체랑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소송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요.

어떤 하청업체가, 1000여 개 업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교섭 요청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업종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섭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하청업체 직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그냥 물러서나요?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하겠지요. 판례를 형성할 때까지의 그 혼란하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과 이 기업 부담을 한꺼번에 늘리는 부분이 과연 부합하느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건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심해요. 다른 내용에 건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민주노총에서 자기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면서 쇠파이프로 건설현장 입구를 막았고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월례비 같은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도 폭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해요. 그것을 사면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것을 단속하지 말라고 경찰한테 사인을 정확

하게 준 겁니다.

월례비, 급행료…… 공사 빨리하려 그러면, 아파트 지으려 그러면 금융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하루 건설 지연되면 10억, 20억 손해 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막혀서 공기 지연될래 아니면 돈 더 낼래' 이렇게 해서 그게 공갈로까지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처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노조 탄압하고는 무관하지요. 오히려 민생침해사범 아닙니까? 이게 노조 권하고 관여가 있나요? 이거는 노조원들끼리, 노노 갈등과 같은 거예요. 다른 노조에 가입되거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일자리는 뺏고 영향력 행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민노총 노조원들은 일자리를 더 가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 주머니 터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죄명도 공갈, 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아니, 대명천지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사면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공갈, 강요 이런 게 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력범죄들이거든요.

옛날에 시장 상인들 갈취하고 다니는 그 조폭들이 적용받는 범행 내용들이 다 공갈, 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전부 처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지요.

일반 국민은요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멱살 잡으면 이제…… 당연히 잡아서는 안 되지요. 일반 국민들은 다 구속됩니다. 그런데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됩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노란봉투법하고 바로 연결돼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교섭의 범위도 하청업체 1000여 개로 확 늘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존의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끊임없이 제한하면서 노조원들의 권익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 판례가 발전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저렇게 법으로 제한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법파업이나 생산시설 점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그냥 받습니까?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나 불법파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민사 책임 없고 건폭처럼 민노총은 치외법권이니까 형사 책임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까지 막 청구할 수 있고, 그 3개가 전부 다 합쳐져서 시행이 된다면 파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어떻게 대화촉진법입니까? 파업 조장법이지요.

그러면 파업이 늘었을 때 주식시장이 좋으냐?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한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파업권 정확하게 보장해야지요. 하지만 불법파업 할 권리까지 보장해서는 노사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봐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민노총 출신으로 앉혔다면, 민노총 출신이라면 오히려 회사 측 균형을 더 신경 써야지요.

왜 고용노동부겠습니까? 노동만 중시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고용도 같이 생각하면서 노사 균형을 이루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를 같은 부처에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다음에 바로 상법……

이제는 뭐 이름 네이밍할 것도 없어요. 더 센 상법이라고 저희가 했는데 더 더 센 상법이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예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자사주 소각도 의무화하고 배당할 때는 최대주주도 배당 결정에 있어서는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 세네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활성화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거지요.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 차명 AI 주식 걸렸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이삼일 만에 소환조사했는데 그 얘기는 휴대전화나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기 전에 소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 정도 되면 특별팀 꾸려야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실무위원·전문위원들 엄청 많거든요.

온갖 고급 주식 정보가 넘쳐나는 곳에서 AI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이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한테서 드러났는데 그게 한 건일까요? 저는 이것은 들키기 어려운 범죄이고 암수범죄율이 높고 여간해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든 뭐든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저는 국정…… 간단해요. 국정기획위원회 그 건물에서 거래된 IP 주소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열린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간 그 건물에서 주식 거래했던 것만 모니터링해서 걸러 내도 이 정부의 테마주에 걸렸던 주식들을 저는 걸러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대주주 양도세 인하하는 문제도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계속 미적거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은 하나도 안 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길은 다 막아 놨다 저는 그 점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생각이 없구나라는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냉정한 겁니다. 누가 국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시장 친화적인 해외 증시도 많은데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코스피를 PBR 10이라고 했을 때 PER이랑 헷갈렸을 수 있지요. 하지만 왜 소액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했습니까? 이게 단순히 PBR, PER을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방향성이 말한 것과 다르게 간다는 거지요. 시장에 친화적이고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기업이 돈 쓸 일만 만드는 정책만 일관되게 계속하니까.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 재생에너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고 또 급격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릅니다. 비용이 비싸요.

왜 산에 나무 베고 태양광 쫙 설치합니까? 한전에서 손해 보지 않게 높은 가격에 그걸 사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또 전기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 인상은 기업의 부담 아닙니까? 그것도 기업 부담이지요. 법인세 올렸지

요. 배당 많이 하라고 하면서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지요. 거기다가 경영권 유지 비용, 상장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13%나 늘어나고 문제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다 반시장적인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점은요, 짧지만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다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존경하는 고대 김우찬 교수님이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히셨는데 '집중투표제도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되어 선출되더라도 일반주주가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후보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0.5%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 주주들이 모여서 그 지분을 가지고 단일한 후보를 밀 수 있겠느냐, 제안만 그렇습니다. 또 선임되려고 그러면 표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이 30%, 40% 비율이 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아까 저의 우려를 정확히 반영한 지적이지요.

해외 펀드들은 오히려 흔히 3%, 4% 정도 지분을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5% 지분도 취득하고 많아 봤자 6, 7% 정도 지분을 취득하는데 해외 헤지펀드들도 나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집중투표제를 하니까 같은 지분이더라도 의결권이 많아지는 거지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투표제는 일반 주주가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헤지펀드나 2대 주주나 3대 주주, 그러니까 1대 주주와 분쟁을 일으킬 소수 주주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사회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매우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폐지를 했던 것이다.

업종이나 지배구조에 따라서는 집중투표제가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그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이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거지요. OECD 국가 중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뭐 국내·국외 할 것 없이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 보호랑 상관없는 거지요.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소액 주주는 반대로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교수님 주장 중에서 저는 이건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행동주의 펀드가 일반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행동주의 펀드가 다른 일반 주주의 지지를 받아서 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 눈치를 볼 것이다. 일반 주주 전체의 이익

을 대변할 것이다.

이건 일단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좀 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헤지펀드들 그 먹튀에 많이 당해 봤거든요. 행동주의 펀드가 뭘 어떻게 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들어갔는데 본인들만 수익률을 보고 싹 팔고 나와요.

아까 제가 KCGI 그 예시를 한번 들어 드렸지요, 12% 수익률 얻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 다 그냥 없었던 것이고 자기가 샀던 주식의 12% 수익률 보장받고 몇 개월 만에 그냥 다 털고 나와 버렸다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패턴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내세우다가 반짝 주가 상승 이벤트가 되고 나면 털고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행동주의 펀드에 편승해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도 그냥 본인들이 팔기 위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주식을 자기들 수익률만 보장되면 팔고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상투를 잡은 개미 투자자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지요. 실시간으로 파는 게 공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부분 지분이 되고 나면 팔고 나서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나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이 다 주식 거래를 하고 나서 개미 투자자들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법 개정되고 나면 일반주주가 상투를 잡는 이 피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 행동주의 펀드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인다고 그러면 그건 환영할 일이지만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 하고 작전 세력처럼 먹고 빠지는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더더군다나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 지분을 취득한 후에 경영진 교체, 사외이사 제도 도입 요구하고 적대적 M&A 시도하다가 바로 다음에 6300억 원—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한 규모입니다—시세차익을 얻고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한 주도 안 남기고 다 매각했어요. 매각하고 가 버렸습니다.

아까 KCGI가 한 10%, 12% 정도 벌고 블록딜로 주식을 다 털고 나간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소수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봐서 검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뭔가 형사처벌이나 입증이 좀 쉽지가 않지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를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을 하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증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 많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을 추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무 적정 규모 이상의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요구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봐 가면서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익도 같이 보장해 가면서 뭔가 요구를 할 것이다.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을 추구한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단기 실적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 실적을 추구한다는 건, 그랬던 사례가 없어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보통 하는 일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자 기업은 흑자로 전환시켜서 팔고 털고 나오는 방식,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얘기

입니다.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다가 주가가 오르면 그냥 팔고 나와 버리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액션도 많이 해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있으면서 소액주주들 권익도 보장하면서 같이 싸워 주겠구나'……

사실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자금도 있고 정보도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같이 우리 편들어서 싸워 주겠구나 싶어서 주식을 사면 어느새 팔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얼마나 많은데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거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지요.

제일 우려되는 지점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논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하면 그것을 악용해서 기업들 돈을 빼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는 건데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걱정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걱정하는 바고 전문가들도 다 이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나온 전문가분의 견해는…… 물론 견해는 펼칠 수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 실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는 상식에 반하는 명제지요, 뻔히 입증돼 있는 사실인데. 그리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요.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만 추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 이번에 MBK가 유발했던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도 MBK도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쥐었을 때 홈플러스 경영이 그러면 장기적인 발전과 일반 주주와 고객과 거기에 거래하는 상대방하고 또 채권자들의 권익을 다 신경 쓰면서 경영을 했나요? MBK 스스로의 이윤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었던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분 중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 도입 후에 경영 투명성이 개선되었던 실증적 연구가 다수 많다라고 하면서 1999년도 논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대번에 반박을 당했습니다. 1999년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논문들이 이후에 많이 나왔고요. 실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으로 많지 않고 OECD 국가 중에 하나도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어떻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요? OECD 국가 중에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데 OECD 국가와 같이 가야지 우리가 러시아에서 도입한 제도, 그나마도 러시아는 경영권 보장 제도인 황금주 제도도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그곳과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법례가 없다는 거는, 지금 이 제도를 세계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제도에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딱 20년 만에, 1950년도에 도입했다가 이사회가 난리가 난 거지요. 파벌

싸움의 장으로 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그때도 폐지 사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국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가져갈 위험성, 국부가 유출될 위험성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역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집중투표제가 하도 해외 입법례가 없어서 논문도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187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다가 1945년 정도까지는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주의 개수가 22개—강제 채택이요—그리고 임의로 채택하는 주는 15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는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거의 다 바뀌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각 주별로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주에 있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피해서 다른 주로 옮겨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별끼리 경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하니까 경영권이 위협당하기 싫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른 주로 회사를 옮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옮긴……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미국 한 주는 크기도 크고 경제 규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연방제 국가니까 거의 국가에 준하지요, 헌법도 다 따로 두고 있는 것이고. 헌법이나 법제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던 나라는, 미국의 주는 자꾸 우량기업들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 쓴 논문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데, 거기 입법례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에서 다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치환해서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유망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가 버릴 가능성 없습니까? 대기업이 유망한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해외에 가서 일자리 만들 가능성 없습니까? 국내에 뭔가 투자하려는 해외 기업이 있을 때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에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라고 보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철회하는 기업 없습니까? 또 암참이나 EU—대한민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EU 기업이 한 600여 개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현재 진출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철수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게 다 법제가 규제 일변도로 됐을 때…… 우리가 기업 자유화구역도 두고 정책적으로 규제나 세금을 다 낮춰 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페이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법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페이버는커녕 기업의 경영권이나 노무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인데 더더군다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전례가 아예 없는 법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빠져나가기 쉽고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안 들어오기 쉽고 있던 해외 기업들도 철수하기 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별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강제하는 주에서는 기업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긴 경영권을 위협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지역에 굳이 본사를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테슬라가 델라웨어주를 떠난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일이거든요. 2024년도에 텍사스로 옮겼어요, 본사를.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제가 친기업적이지 않아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테슬라 공장이야 뭐 여기저기 다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옮겼다라기보다 기업은 규제가 적고 세금이 적고 법제가 더 편의적인 곳으로 옮기기 마련이지요.

일본은 제가 두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도 시사하는 점을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를 일본이 철회한 이유도 외국 투기자본에게 국부가 유출될까 봐, 일본의 전통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해외 투기자본 내지 투자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을까 봐 그것을, 제도를 74년도에 이미 폐지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논문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그 논거를 죽 설명해 놨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야 맞는 건데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는 오히려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선임하여 준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다수결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 줌으로써, 이사를 그냥 표결에 의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적으로 특정 이사를 찍어서 선임해 줌으로써 이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이질화시킨다. 최대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연적으로 2대 주주, 3대 주주 혹은 분산해서 투자한 4대 주주, 5대 주주까지 이사들이 제각각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구성원을 이질화시키면 당파적 행동을 하도록 유인할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를 선임해 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매번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법적 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유망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한두 분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각주나 이런 것들에 다 언급돼 있는 내용들인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같은 견해를 밝혔지요.

둘째로 주주에게 1주 1의결권 원칙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이것은 주주평등원칙도 위배한 거고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딱 주식회사 본질에 반해요. 주주평등은 그 주식을 산 사람이 누구든, 어떻든 간에 한 주를 가진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 그게 부작용이 있을 때만 아주 한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회 구성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두고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보통은 정관을 통해서 이것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데 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이 배제되니까 이게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헌법 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하고도 배치된다. 그래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고요. 이게 다 공통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겁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의무화를 했을 경우에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칼 아이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 지분을 분산해서 집중투표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좀 더 실질적인 건데요. 회사의 중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고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게 막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주주, 2대 주주나 3대 주주나 일부 힘을 합친 소액주주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가 여러 주주들이 연합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사회가 이질적으로 구성되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사나 감사는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폭넓게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접근된 중요정보를 언론에 노출하거나 그래서 어떤 중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업일수록 채산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주주 전체의 이익도 낮아질 것이다. 당연한 원리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는, 이것도 좀 실무적인 건데요. 출석 주주를 확정하고 투표를 관리하고 투표 집계, 선임에 관한 사무절차도 번잡해지고 빈번하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 투표와 관련된 법률 분쟁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지금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사회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고 그 분쟁 과정에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법률비용이 증가되고 하는 현상이 많은데 현재 제도를 집중투표제처럼 복잡하게 만들면 그로 인해서 집중투표제의 표를 행사할 때 이게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등등으로. 또 이사나 감사나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보유 여건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짜고 같은 사람 지분인데 쪼개기 지분을 행사해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지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지분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투표 관련된 분쟁도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이것 그냥 문제점들 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는 거예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지요.

선진국이, 도입했던 선진국조차 다시 다 원점으로 되돌렸던 제도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채택하고 있지 그나마도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보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집중투표제도 좀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역시 국내 집중투표제랑 문제점은 비슷합니다.

특정 이익집단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집중투표제가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시행했을 때 어떤 이사들이 선임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요. 미국은 이미 제도를 시행해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중투표제를 시행을 해 봤더니 미국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뭔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대 주주나 3대 주주나 그냥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서로 이윤을 추구하는 각자 다른 그룹에서 이익단체처럼 각자 이사를 선임하니까 이게 전체 주주 의사와 반하는……

더더군다나 2대 주주, 3대 주주는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어찌 됐든 경영권을 가지고 대표이사도 선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자를 보거나 그랬을 때 소액주주들한테 질타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응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대 주주나 3대 주주는 이사만 선임하면 그 이사는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냥 최대주주가 예를 들어 회사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비밀리에 대규모 M&A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본인이 반대하면서 그 M&A 정보를 언론에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이고 그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2대 주주만 이익을 보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기편 이사를 선출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사는 정당하게 이사 역할을 하면 노동자, 소비자, 공익, 경영자, 주주 이런 전체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사제도의 본래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만 반영하게 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거지요.

여기도, 미국도 마찬가지 지적합니다. 미국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될 이사회가 특정 소수주주만을 대표하는 이사들 간의 반목과 부조화로 인해서 경영의 원동력을 쓸데없이 소모하게 되고 신속한 경영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결국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안정은 필수적이고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행하는데 경영권이 어느 정도의 안정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경영권이 감사위원이 들어와서 이사를 막 축출하거나 그래서 계속 경영권의 변동이 있다면 과연 그 경영권이 그렇게 잦은 변동이 있는 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대 회사법이 추구하는 것은 유한책임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식만큼, 산 만큼, 투자한 만큼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한 권리를 누리고 그 손해도 그 주주평등권에 기초해서 그 투자 손실에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주평등권이 침해되다 보니까 분쟁이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사의 유한책임이라기보다 서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무언가 회사의 비용만 더 증가되고 유한책임 제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이득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는 개별 회사에서 논의하고 해결돼야지 법률로 채택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힌 외국 학자들도 있고요.

경쟁 회사의 기밀을 탈취하는 수단에 악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중국계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들이 거기에서 CTO를 했던 사람들을 막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간첩죄를 빨리 개정해서 중국의 스파이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기밀 유출에 있어서 좀 더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외국계 기업에는 꼭 미국계 헤지펀드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국부펀드가

있고 중국 관련되는 자본이 많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중국에서 일반 병사에 대해서 군사기밀을 좀 빼내려고 했는데 일반 병사라서 사실 군사기밀,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밀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는데도 중국 정부에서 한 사람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이것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4000만 원 넘게 줬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게 고급 정보도 아닌데 일반 병사를 포섭하는데 그 정도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술탈취 사건 이런 것 보면 그냥 유수 대기업의 임원들한테 월급을 5배 갑자기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부르니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연구직에 있는 일반 회사원도 그럴진대 만약에 중국계 자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투표제 이용해서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줬는데?

그런 것도 꼭 중국을 찍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술탈취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지금 첨예하게, 화학이나 철강 업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좋은 것도 중국과의 어떤 과다 출혈 경쟁도 있고 그런 점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보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중국과 생산의 캐파나 생산 범위가 겹치는 것은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계든 중국계든 어쨌든 외국계 펀드나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사나 감사를 1명은 무조건 선임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게 일반 회사원이 가도 지금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평가되는 마당에 임직원이, 특히 임원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 간다면 그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있느냐.

그 점은 여기서 또 다 지적을 한 겁니다. 회사 내부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사에게 잘못하면 페이버를 줄 수 있다,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딱 예시로 이렇게 해 봤어요. 대주주의 경쟁자인, 그런데 먼저 채택했던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지요. 대주주의 경쟁자인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후에 이사를 통해서 회사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유출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는 이런 식으로 악용도 가능합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할 것처럼 상당한 주식을 매입하면 경영권의 위협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식을 되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까 KCGI와 DB하이텍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 드렸는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DB그룹에서 도로 산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식을. 왜냐하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니까 그 원천적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 주식을 시가보다 10% 내지 12% 높은 가격을 주고 그쪽에는 단기 차익을 보장해 주고 바로 매수를 해 버린 거지요. 따라 샀던 소액주주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중 피해지요. 그게 그런 식으로 기업이 또 인수하게 되면 그 기업의 인수 자금도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블록딜 매매를 할 때 현재 시가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중투표제랑 연계되거나 혹은 행동주의 펀드랑 연계되면서 경영권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 주식에도 프리미엄이 붙는 것입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왜 대주주만 이득을 보느냐, 소액주주도 이득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역으

로 집중투표제가 활용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블록딜 매도를 해도 원래 할인된 가격에 매도할 것을 마치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붙어 있는 주식이니까 이 주식은 더 비싼 가격에 넘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을 봤을 때 생각하는 문제점이 다 똑같고 발생했던 피해 사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 피해 사례가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것처럼 주식을 많이 사서 경영권을 마치 작전을 잘 짜서…… 그런데 당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계 투자자들 몇 명이 이것을 연합해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4개가 투자를 했으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지분율을 한번 보십시오. 최대주주 외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들이 2, 3, 4, 5, 6을 다 차지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한 4%, 3%, 5%대에서 2대 주주 해 봤자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몇 명이 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허수로 이사를 막 추천했을 때 누가 진짜 이 사람들이 선임하려는 이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짜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행동주의 펀드에게 그만한 보상을 주고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주주의 개인 돈으로 매입하면 좋은데 자사주 형태로 매입을 하거나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다른 데 인수를 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이용하는 헤지펀드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 과도한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영권을 위협할 듯한 액션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빼뜨려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공감되는 지적인데요. 이것은 저번에는 지적이 없었던 건데, 집중투표제는 기업 인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집중투표제가 없으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 심플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펄(Pearl), 쉘(Shell)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된 주식을, 우회상장이라고 하지요. 상장된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경영권을 장악해서 내가 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비상장회사를 펄로써 붙여서 회사 가치를 확 높여서 합병을 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거래도 자주 일어나는 건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수합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 중에서도 유망한 회사랑 합치는 게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1대 주주 거 딱 사서 경영권 프리미엄 어느 정도 주고 1대 주주, 최대주주만 되면 경영권은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가 어떤 구도인지도 봐야 되고 그 성향도 분석해야 되고 내가 나 모르는 다른 우호지분도,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우호지분도 있어야지 뭔가 좀 더 유리한 거지요.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회사,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회사를 인수하는 게 훨씬 예측 가능하고 편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있어서 같은 업종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두고 저울질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좀 같이 M&A를 해 볼까라고 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현재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일본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만 확보하면 심플하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중투표제가 다 시행되면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게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 지분을, 충분히 1대 주주 지분을 다 매입을 했는데 경영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것도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초기에 경영권을 확보해서 하려던 M&A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이게 저의 지적이 아니라 논문에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이게 너무 현실성 있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를 매입해야 인수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낫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집중투표제를 다 의무화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영권이 뭔가 새로 바뀌면서, 우리 경영권 변동이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이 아닌 이상 건실한 기업이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주가에는 좋거든요. 호재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경영권을 잡으면 경영권을 지키기도 어렵고 경영권을 지키기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넘기기도 어렵다.

이거는 정말로 뼈아픈 지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져 나올 거거든요. 바로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만약에 강행해서 통과되더라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과가 안 돼야 되는 법안이지만 이때까지 계속 강행해서 통과를 시켜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지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자사주가 있어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며 배당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는 지분율을 5%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권이 없고, 최대주주가.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내 노사 관리에, 노무 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고 파업의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돼야 되고 그랬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미국 델라웨어주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 토론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토론을 저도 반대토론 하기 위해서 쭉 들었는데 델라웨어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가 소액주주들 보호하는 법제가 좀 강하게 구성이 돼 있고 집중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데니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 델라웨어주 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지적을 해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에 투자의 이유가 없게 된다, 이

렇게 되면. 그런 거지요. 이게 그냥 최대주주의 기본적인 경영권을 보장 안 하다 보니까 델라웨어주에서 회사를 차리면 차릴수록 손해인 거지요. 이게 미국에서 집중투표제가 집중적으로 없어졌던 이유기도 합니다. 다른 주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텍사스로 가 버린 거지요. 아까 자료 보니까 '테슬라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델라웨어주, 시간 때문에 테슬라가 옮긴 것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테슬라는 델라웨어주에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델라웨어주가 집중투표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델라웨어주에서 있는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델라웨어주에 회사가 모이고 자본시장이 커지고 거기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거기 있는 주주들이 권익을 누리고 있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테슬라 하나 빠진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얘기합니다. 저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수단들에 의해서 소액주주들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주식에 대해서 처분도 될 수 있지만 공시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사회 행위준칙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든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좀 더 보장한다든지, 최소한 기업의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아예 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는…… 이게 기업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경영권을 위협받아 가면서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그 기업 자체가 없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선명하고 간단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방안을 채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로 얘기하는 효과랑 정반대의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자사주 소각을, 그런 무용한 짓을 왜 합니까? 자사주를 사 봤자 바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배당을 하는 게 낫지요. 지금처럼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안 돼 있을 때나 주가 방어나 주가 부양이나 또 경영권 안전장치나 이런 걸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지 자사주 매입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미국 집중투표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제도에서 다수로 득표한 사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자체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차점자들이 최고 득표자를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책임정치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민주정부하에서도 고위 관료 집단은 원래 다수당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며 소수당은 다수당이 초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국내각 같은 걸 꾸리자고 먼저 제안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관료 집단에서 자리를 차지 못하는 것처럼 회사 이사회도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되려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대주주가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우리 지분율로 봤을 때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게 더 좋으냐 채택하지 않는 게 더 좋으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이것 법으로 강제하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익히 언론의 비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특히 논문에

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이 논의가 있기 전에 수년 전에 다 작성된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지금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런 논문들이 다 생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우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과연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신중해야 된다. 또 해외 OECD 국가 중에 채택한 적이 없는 제도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상법 개정에서 3% 룰이 최대주주 3%에서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3%로 제한된 것도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제도개선입니다.

이사 충실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한테까지 지도록 한 것은 어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조항이어서 여러 가지 법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사외이사도 비중을 늘리고 전자주총도 의무화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의 투표 참여가 훨씬 편해지면서 투표 참여가 늘겠지요.

이 방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겁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방안인데, 저는 여야 합의돼서 이 법안을 할 때도 사실은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관인, 특수관계인까지 다 합쳐서 3%로 제한하는 것, 저는 일단 해외 입법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까지는 모르겠는데 주주 다수결 원칙을 위배해서, 제한을 해서 최대주주일수록 감사를 아예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 유출되거나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거나 이사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약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십시오. 이 제도 시행되는 순간 이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분산해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쳐서 3%밖에 안 쳐준다고 한다면 이제 감사위원은 무조건 펀드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살펴보기 전에 법을 바꿨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더 센 걸 바꿔서…… 훨씬 더 센 거거든요, 집중투표제 이게.

그러니까 그냥 기업협회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지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하게 되면 진짜 이것은 너무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3% 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수용을 한 겁니다, 기업협회에서 어느 정도.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개혁하고자 이끄는 방향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한 것인데 여기서 이 문제점도, 그 당시 소위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미뤄서 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삼 주 뒤에 똑같은 법안을 똑같이 이렇게 강행 처리할 줄 알았다면 이 법안 문제점을 같이 다 지적을 했겠지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을 찬성해 놓고 왜 2차 상법을 반대하느냐? 그게 아니라 1차 상법을 찬성할 때 2차 상

법은 안 할 듯이 한 거예요, 그대로 원안대로는 안 할 듯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보더라도 2차 개정안을 그대로 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1차 개정안은 그나마 기업들이 불만이지만 그래도 좀 감내하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가 최대한도로 보고 한 것인데 이제 그 약속은 어디 오간 데 없고 갑자기 2차 상법 개정 논의를…… 논의도 아니지요. 소위 한 번 하고 공청회 한 번 하고 나서 소위 통과된 게 1차 상법 개정되고 나서 한 19일, 20일 만에, 그러니까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유보했던 법안을 낸 거잖아요.

어떤 법률 규정들이 쭉 있을 때 규정 한 5개, 6개를 개정해야 되는데 3개에는 문제가 있어서 유보하고 2개만 통과시켰다라고 하면 그 2개 통과시킨 것 보고 나서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더 논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통과 안 됐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토씨 하나 안 빼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여야 합의됐는데 왜 이것은 반대하느냐? 그럴 거면 반대로 그 당시에 5개 법안이 다 패키지가 아니면 작동 안 되는 법안이라면 5개를 민주당에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5개 다 통과됐을 경우의 문제점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반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앞에 통과됐던 법안과 2개의 법안은 내용과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들이 왜 그렇게 감내하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위원 1명 정도가 최대주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이것은 감사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이 곧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감사위원 2명에다가 몇 명의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사회의 과반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법안을, 기업의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고요?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거기 소액주주들도 다 있고, 국부가 유출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지금 기업이 엄살 부린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경제 6단체 거기도, 대한민국 경제 위해서 노동자들도 고생하고 권익을 보장받아야 되지만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한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경영권에 위협받는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방안을 하나도…… 그냥 그건 기우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면 그때 가면 바꾸면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너무 뻔히 드러나는데. 하나의 기업이라도, 30대 기업 중에 지금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현재도 외국계 투자자본에서 선임한 이사가 4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여기 집중투표제 해 가지고 한두 명만 더 선임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우려를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시냐는 거지요.

오늘 강행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정확히 남겨 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이 우려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지, 국민의힘의 지적이 만약에 맞으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기업의 경영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집중투표제를 하는 기업은 아무도 안 사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M&A 하기 위해서, 전도유망한 기업은 더 큰 기업에서 막 사려고 경쟁이 붙어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집중투표

제 하는 기업을 누가 사겠습니까, 사 봤자 경영권이 나한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인 물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신규상장 막지요. 해외로 상장할 위험성 커지지요. 국내에 있는 개별 기업들은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어지지요. 거기다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심지어. 소액주주들이 선임을 한다 한들 1명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들을 대변하는 이사를 1명 선임했다고 쳤을 때 외국계 펀드가 선임하는 이사 3명에 소액주주들이 한 이사 1명 그리고 최대주주가 선임한 이사 3명, 7명으로 구성돼서 회사가 운영된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완책을, 그 당시 1차 상법 개정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위도 회의록에 다 남잖아요. 그때 분명히 1차 상법 개정도 기존의 기업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또 상법은 한 번 고치고 나면 일반법이기 때문에 너무 영향력이 넓으니까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고 했는데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하위 법령도 좀 정비를 해 주고 기업의 어떤 규제를 푸는 쪽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배임죄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배임죄 부분만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저도 법조 생활 이십몇 년 했지만 한 번도 적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잘 안 적용돼요, 그게. 형법상 배임죄랑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사실은 거기의 법정형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법상의 특별배임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대해서 그때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한테까지 부여되다 보니까 이사들이 소송에 너무 많이 노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사들이 소신껏 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더 심한 것을 내놓는 게 어떻게,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지요.

증시와 관련된 정책 또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저보다 아마 거기 투자하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시장적인 정책이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주식시장에 정부 얘기를 믿고 들어왔다가 상투를 잡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다시는 대한민국 국장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자들을 유입하려면 고위공직자들이 정보 수집해서 내부자 거래하는 것 확실하게 막고 그래서 반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한다는 것 발본색원한다는 의미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문위원들, 실무위원들, 다른 사람 주식 거래한 것 없는지 금융 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하고 주식 관련해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세제 제대로 개편해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그다음에 실효성 없이 맨날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게 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하는 건 원점으로 되돌리고 이런 것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 제가 아까도 다 읊어 드렸지만 모든 정책이 다 돈 쓰는 정책인데요 당연하지요. 돈을,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현재 흑자, 수출 흑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15%로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 15%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규제를 해소해 주고 기업들이 쓰는 비용을 좀 더 줄여 줘서 그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미국 자동차 기업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나라 국부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FTA에서 보던 무관세 이익도 일본은 2.5% 내고 우리는 0% 내던 것을 똑같이 15% 내게 됐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관세 협상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로 불러서 사진 찍고 밥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하고, 다 요청했잖아요. 노란봉투법·상법만큼은 이것은 진짜 문제니까 기업들 숨통을 좀 틔워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주고 밥 먹고 사진 찍은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요청한 것 중에 들어준 게 뭐가 하나라도 있는지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비용 들 일밖에, 돈 쓸 일밖에 없어요.

이미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컨설팅 비용만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각 기업별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최악의 경우 내 경영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아마 회사별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플랜이 이미 가동이 됐을 겁니다. 그거 다 비용이에요. 기존의 경영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던 거고 비용이 더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R&D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 설비를 늘리거나 해야 될 돈을 경영권 보장에 쓰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파업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경험적으로…… 어떻게 파업이 안 늘 수 있겠어요, 교섭하는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파업이 늘면 그것도 다 비용이지요.

그리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게 되면, 최대주주 물량은 원래 주식시장에서 잠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최대주주는 주식을 팔지 않아요. 주식을 평소에 팔면 회사가 거의 부도날 정도의 위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물량은 유통 물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최대주주 지분이 많은 곳은 유통 물량 수가 적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 물량을 늘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내 우호적인 펀드에서, 다른 펀드에서 내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그 펀드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식의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펀드에 넘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은 언제든지 팔려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계된 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주식시장의 호재와 악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악재성 있는 주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입니다.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재 정관으로써 배제하지 않고 도입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풍과 MBK 측이 최대주주고 사실 2대 주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2대 주주가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2대 주주가 현재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총 19명인데 15명이 2대 주주의 이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개편이 있고, 임기가 있어서 계속 개편되는데 2027년이 돼도 19명 중의 11명이 2대 주주고 8명이, 현재 1대 주주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1대 주주가 41.3%고 2대 주주가 35.4%거든요. 6%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집중투표제 도입되고 2대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1대 주주가 바뀌었는데도 경영권을 그냥 집중투표제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없다면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감사위원회의 의결권 제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풍·MBK의 41.3% 지분은 감사위원이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에 대해서 분리선출을 확대하다 보니까, 최소 2인 이상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그 이상도 분리선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매번 1대 주주는 3% 지분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대 주주는 6%나 지분이 적은데도 아무런 의결권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3% 대 35.4%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선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경영권을 장악한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매번 할 때마다 서로 2대 주주를 하려고 하겠지요, 최대주주가 되는 순간 3%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아주 최근입니다—올해 7월에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동시에 다 추진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본인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시행하면 무려 상장회사의 60.8%가 주주연합의 이사회 장악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8%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경영권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사회가 7명이면 4대 3이 되거나 반대로 최대주주가 3 대 4로 되면서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의 연합이 이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헤지펀드들은 분석에 들어갔을 겁니다. 법제가 다른 자본시장에는 시행되지 않는데 우리 자본시장에만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헤지펀드한테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하겠지요.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 7개사에서 주주연합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32% 거든요? KB금융지주, 넷마블 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들이에요. 한진칼, 크래프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IT 업종, 물류 업종, 항공, 금융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다 10%를 상회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회라는 형태로 설치된 회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까지, 이사회까지 멤버가 된다면 감사위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권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번에 쫙 설명을 드리고 하면 거의 마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정말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1차 상법 개정안 대비 훨씬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훨씬 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2대 주주, 3대 주주가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게 되면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지적했듯이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하려면 최소한 1% 이상 지분을 통일된 의사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추천권을 소액주주들이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사가 통일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뜻이, 설사 이사추천까지 요건이 어렵게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별로 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 소액주주들이 행사하는 투표에 의해서 이사가 선임될 수 있을 확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일본과 미국에서도 채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이사나 감사가 선임되기보다는 2대 주주나 3대 주주 같은 소수주주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변인으로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시행할수록 경영권 유지의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이 언제 어떻게 위협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집중투표제를 22개 주에서 채택을 했다가 1970년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주와 시행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주에서 회사들이 다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에서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경영권 유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회피해서 집중투표제가 채택되지 않은 주 쪽으로 옮긴 것이지요.

최근에도 테슬라가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에서도 경쟁적으로 이 집중투표제를 다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회사로 하여금 정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막은 회사들은 전부 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절대다수의 특별결의를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의결권을 법률의 제한에 따라서 3%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대주주는 지분의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집중투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채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기업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주주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1주 1의결권을 토대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은 뜻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고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일정 지분만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더 보장되면서 일반주주들의 권익은 침해되고 말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하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영국·독일 등 OECD 국가 전체는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회사 선택에 맡기고 있거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조차 황금주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상장기업,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의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서 모두 집중투표제로 선임했을 때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글로벌 기업이 특정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수해서 그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없는 회사와 집중투표제가 있는 회사가 둘 다 있다라고 했을 때 집중투표제가 채택되지 않은 회사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예측 가능하고 간단합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내가 가령 최대주주 지분의 전부를 다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하고 이 주주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사회에 대해서 장악을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사회 장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영권을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용을 들여서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언제든 뺏길 수 있는 회사라면 누가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에 있어서도 지분 15%를 가진 창업자가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집중투표제를 시행 안 하는 쪽으로 가까스로 바꾸어서 이사 선임을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집중투표제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떤 소수주주들의 일탈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모든 기업들,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다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도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대 주주나 3대 주주의 부정한 이윤 추구라든지 이익집단의 어떤 부정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많은 위험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아시다시피 경영권에 직접 관여해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실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단기간에 극도의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에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주의 펀드는 아니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을 불시에 수익만 보고 팔고 소위 먹튀를 했을 때 결국은 상투를 잡는 것은 개미투자자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오로지 단기수익의 극대화만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자신들의 목표 수익률만 달성하면 팔고 나와 버립니다.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계 펀드나 미국계 펀드가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을 해서 경쟁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그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미국의 헤지펀드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중국계 이차전지 업체와 또 미국계 어떤 경쟁업체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중투표제가 없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 저번에 1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3% 지분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은 무조건 2대 주주, 3대 주주가 선임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법안처럼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면 이 감사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감사위원은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습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보를 볼 수 있고, 모든 서류와 모든 회계정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회사와 관련해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이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회사가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경영권 유지와 또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아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인데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깎는 것이고 개미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갹출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영권을 유지하는 비용이나 감사위원을 다수 선임해서 유지하는 비용.

그래서 대형로펌이나 경영 컨설팅 회사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해외로 나가 버릴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유망한 네이버 웹툰이나 또 쿠팡 같은 회사는 미국 증시에 직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열심히 하고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본인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망한 유니콘기업들이 오히려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2조 원 이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봉법이나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해외로 가거나 이탈하게 되면 그때 가서 법을 바꾸면 된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일단 노봉법 같은 경우에 민노총의 숙원 법안이기도 하고 대규모 정치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일단 해외로 떠나가게 되면 이미 많은 기업이 이전비용을 쓰면서 해외로 갔는데 도로 법을 원상복구시킨다고 해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에 가서 거기서 고용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회사 사무실도 내고 했는데 기존의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바꿨다라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1차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추진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왔던 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여야가 뜻을 같이했고 또 1차 상법 개정안으로 통과된 그 법안의 내용조차도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균형을,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방안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없애는 정도예요.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고 1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 부담을 15% 더 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파업 부담과 교섭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경영권 유지 비용조차 더 많이 든다면 기업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국내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선업계 주가부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는데 기업이 골병이 안 들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쳐야 된다는 정책실장의 발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은 국내 상장을 꺼리고 오히려 유망하고 투자자들이 줄을 설수록 본인들의 경영권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업이야말로, 그런 기업의 일자리야말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진짜로 바라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자리는,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일자리를 가져야 본인도 성장하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회사 발전과 함께 본인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진짜 바라는 일자리는 유망한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일과 보람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국내에서 만들 동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저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행했던 제도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반대로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1950년도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

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까 봐 이 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하지 않은 지 1974년도에 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70년 전에 만들어서 문제점이 다 발견돼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법을 폐지하고 그 50년 동안 별문제 없이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데 왜 선진 시장에서 한 번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또다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두 개나 되는 주에서 시행했다가 지금은 네다섯 개도 채 안 합니다. 그나마 네다섯 개 주에서조차도 기업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물두 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다 임의적인 제도로 바꾸고 정관으로 다 위임한 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는 주에서는 기업이 다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그곳에 계속…… 국내에서 유망한 기업일수록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과거에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번 정책도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나 감사가 선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기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이 이사나 감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해가 되고 그분의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데 경영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듯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유망 기업들은 다 미국에 가서 추가 투자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관세도 15% 내고 미국에 투자도 몇천억, 몇조씩 하고 그다음에 노봉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도 다 감내하고 경영권 유지 비용도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기업을 유지한다면 국내에 어떤 여력이 있어서 어떤 자금 여력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유망한 기업을 키워 낼 수 있겠습니까?

꼭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중에 유망한 기업들 싱가포르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규제가 극히 적기 때문에 기업 하기 편한 곳으로 회사가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금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가 규제를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금융허브로서 어떤 기업이, 어떤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노봉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진출한 지 수십 년이 돼서 사실상 한국 기업처럼 활동하고 있는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아예 안 올 수가 있다. 있던 기업도 철수하고 있다, 철수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말로만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장기업 중에서도 외국계 자본이 투입돼서 선임한 이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만 더 넘어가면, 이사 1명만 더 넘어가면 사

실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헤지펀드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서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 왔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만 얻을 수 있다면 6개월, 3개월 만이라도 팔고 전부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헤지펀드들과 행동주의 펀드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심도 있게 저는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장도 해외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웹툰이 왜 미국 증시를 찾았겠습니까? 미국 증시의 규제가 더 적고 또 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더 쉽고 미국의 증시에 상장했을 때 상장 비용이 적게 드니까 한 것이지요. 네이버 웹툰이나 쿠팡은 주요 기반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했고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조차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 중에 성장하는 전도유망한 기업이 어떻게 집중투표제가 유지되고 있는, 경영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키워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유망한 유니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추가로 계속 상장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역동성 있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아예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증시에 대해서 확실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뒷받침되는 정책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 증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냐 여기에 확신을 못 주기 때문에 하루에 116조가 한 번에 날아갈 정도로 폭락하기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로 기업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대한민국에서는 멈출 수 있다는 이 우려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사례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콩이 한때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투자하는 기업들, 아시아의 금융투자를 전부 다 선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이후 규제가 늘어나고 핵심 기업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규제를 늘리면 규제가 없는 싱가포르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과 노봉법은 기업들을 더 못 오게 하는 법안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세금을 강화했다가 기업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이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경영권이 보장이 안 되면 경영권 보장이 더 잘되는 주로 회사를 옮긴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더 비용을 많이 쓰고 기업에 각종 부담이 부여되는데 주식시장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기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더는 법안이나 제도개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기업의 비용과 부담이 늘어나

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관세 15%의 부담을 안고 또 4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또 개별 기업별로 미국에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돈을 벌기도 전에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먼저 부여함으로써 영업이익 자체가 아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차 개정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이 이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어차피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식에 자기주식을 누가 취득하겠습니까? 보통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를 방어하는 의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 회사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당장 주가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회사 중에서도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영업이익이 향후에 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앞으로 또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호재로 작동하고 주가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그 긍정적 기능조차 의무화함으로써 수단 하나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어느 나라도 자기주식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는데 왜 대한민국만 유독 자기주식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게 다 반시장 정책이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 주주들의,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다. 말은 좋지요. 경영권 관련해서 프리미엄 받은 주식을 소액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누가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때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기업 인수에 더 유리하지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 주식을 받고 또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주식까지 의무공개매수 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받은 만큼의 고액으로 모든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누가 자본력이 있어서 대한민국 기업을 인수하겠습니까? 기업의 인수합병 자체를 과도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도 5% 룰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최대주주가 배당에 협조적이지 않을까 봐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5%로 제한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대주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대주주는 그러면 감사위원도 선임 못 하고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인 배당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기업에 신규 설비를 투자하거나 새로운 R&D에 투자해서, AI기업 같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도 배당 한 번도 없었지만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것은 배당하는 것보다 재투자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주환원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결국은 헤지펀드들 5% 지

분 가지고 있는 두세 군데가 마음을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만 많이 하면 기업이 당연히 좋아지느냐? R&D 해서 기업의 가치를 더 성장시켜야 되는 시기에 배당을 해서 R&D를 못 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말은 그럴듯하지만 해외에서도 입법례로서 실행된 적이 없고 이미 해외자본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독특한 제도를 왜 우리나라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 간단히 한두 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2차 개정안까지 이대로 통과된다면 제가 우려한 대로 해외기업,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자본에 우리나라 경영권이 위협받고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09시43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태선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신장식 의원, 정혜경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44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9시5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0시03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일부 의원 퇴장)

투표 결과 보고 가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에 5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3개 방송법과 그다음에 노조법 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5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총 스물한 분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토론인데 1분도 쉬지 않고 여러 분들이 성실히 토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무제한토론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본회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정숙하게 또 토론에 열심히 임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토론을 앞으로 해 나갈 것, 무제한토론이 많이 없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자세로 무제한토론에 임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25일 10시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준석 천하람

○출석 의원(28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3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선민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형동 남인순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 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재봉 신성범
안태준 양문석 엄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상범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임이자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춘생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8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준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청가 의원(3인)

김민석 배현진 진종오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보고사항】

○의안 제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3)

8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이상 3건 8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2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3)

이상 2건 8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이상 9건 8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8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7)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2)

이상 3건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8)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21. 이광희 의원·용혜인 의원·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28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이상 5건 8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8.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4)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9)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8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8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2)

검찰공무원법안

(2025. 8. 22.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4)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8. 22.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5. 8. 22. 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 8. 22.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6)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2025. 8. 22.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8)
이상 2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2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부분공개)

(2025. 8. 22. 국토교통부 제출)

8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5. 8. 22. 행정안전부(부분공개)

2025. 8. 22. 경찰청(부분공개)

2025. 8. 22. 소방청(부분공개)

2025. 8. 22. 지방자치단체(부분공개)

2025. 8. 20. 인사혁신처(비공개)

2025. 8.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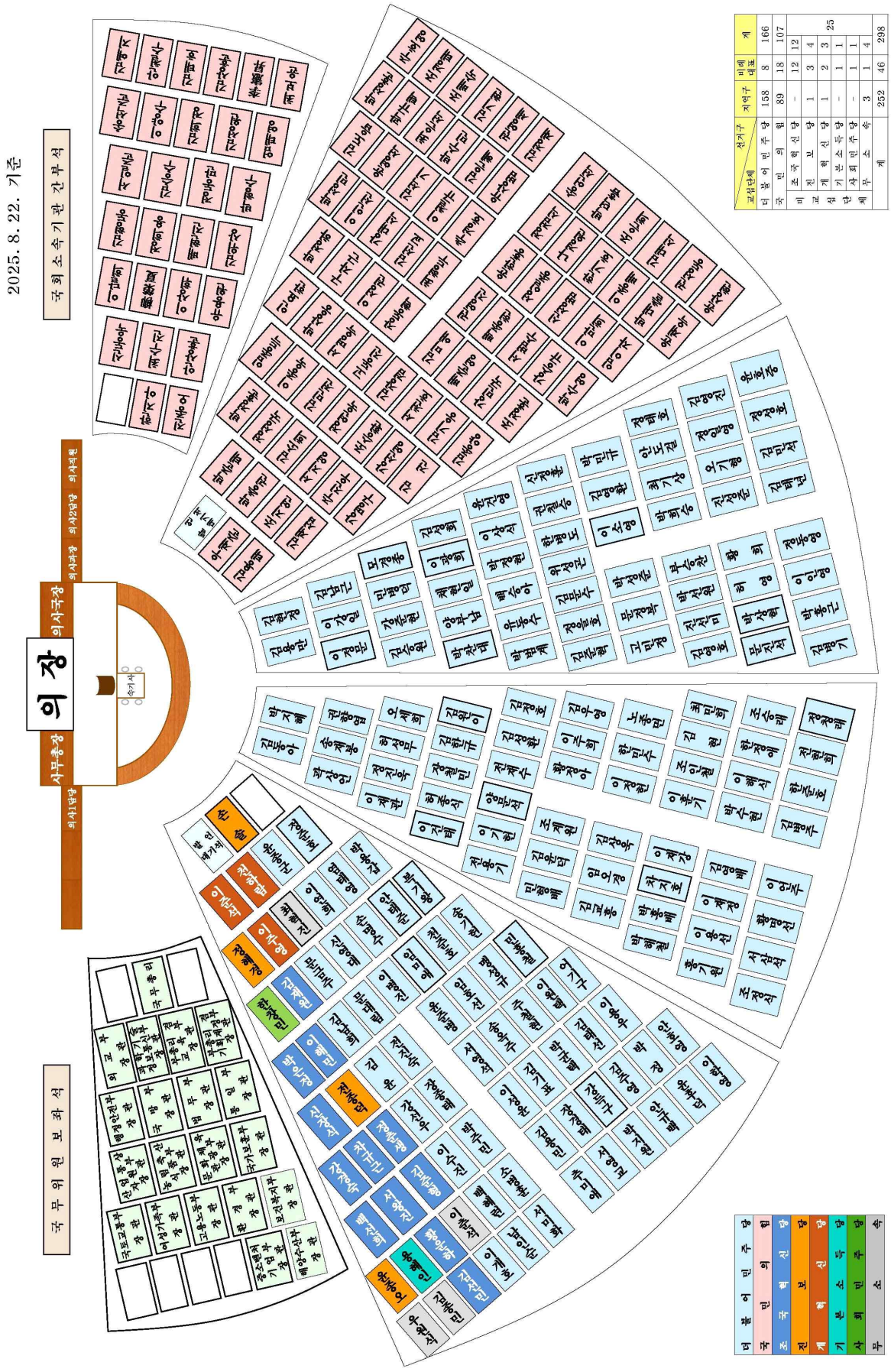
2025. 8. 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 7건 8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5. 8. 22.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의사계원
속기사
국무위원석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계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166
107
8
18
158
89
12
12
3
4
1
2
1
3
25
1
1
1
1
1
4
298
46
252